2011-12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활동결과 보고서

충 청 남 도 의 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목 차

Ⅰ. 연구활동 보고서를 내면서 ---------- 3

Ⅱ. 연구모임 등록

1.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 9
2. 연구모임 제안설명서(심의위원회) ---------- 15
3. 연구모임 등록서 ---------- 16
4. 연구모임 변동신고---------- 17

Ⅲ. 연구활동 결과

1. 발족식 및 워크숍(6.16) ---------- 21
2.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한・중 FTA를 중심으로)------ 25
3.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순회 간담회(7.13~7.25)---------- 55
4. 도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9.5)---------- 130
5. 세계유기농대회장 현장방문(9.29)---------- 145
6.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11.16)---------- 148
7.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12.15)---------- 158

Ⅳ. 연구 자료

1.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간담회 자료---------- 171
2. 한미 FTA 국회비준과 관련한 농업계 선대책 요구사항(한농연) 193
3. 한미FTA 재협상, 무엇이 문제인가?(전농 충남도연맹)--------- 219
4.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 동향(농림수산식품부)---------- 235
5.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부처합동) 289
6. 한・미, 한・EU 협상결과 양허표---------- 318

Ⅴ. 기타 자료

1. 추진공문 사본 ---------- 321
2. 현장방문 계획 ---------- 328
3. 행사・토론회 참석자료---------- 334
4. 보도자료 등 ---------- 339

연구활동 보고서를 내면서

Ⅰ. 보고서를 내면서

정부는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며, 2004년 중남미 칠레와의 체결이후 44개국과 FTA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었고, 대통령이 이행과 관련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만 남게 되었다. 또한, 캐나다 등 12개국과 협상하고 있고, 중국 등 23개국과 FTA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농어촌은 급속한 농어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쌀값 하락, 농어가소득 정체, 농어가부채 문제로 이농인이 늘고 있는 등 위축되고 있다. 게다가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시장 추가 개방, DDA 농업협상에 의해 시장개방 확대 및 국내보조의 추가 감축 등이 진행되고 있어 고향을 지키는 농어업인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우리나라에서 해외수출시장 확보와 개척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드물다. 하지만 문제는 농어업과 같은 경쟁력이 취약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므로 국익의 극대화하는 FTA가 되기 위해서는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폭적이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한미FTA협상으로 자동차 등 공산품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축수산업, 제약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최대 피해업종으로 예상되는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산업의 매출과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어, 결국에는 업(業)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업생산액은 향후 15년간 미국산 수입제품에 의해 매년 8천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축산업의 피해가 심각하여 연평균 생산감소액이 4천 9백여억원에 이르고, 과수부문 2천 4백여억원, 채소특작부문 6백 55여억원, 곡물부문은 2백 20여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자재 가격은 인상되는 반면, 15년째 하락·정체되고 있는 쌀값으로 농업인들은 매년 나락가마를 충남도청 앞마당에 적재하고 시위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이런 농업인들을 볼 때면 가슴이 메어진다.

‘농어업은 ’국민의 생명이요, 삶의 근원이다‘. 농업도라고 자칭하는 충청남도에서는 재정적 한계를 탓하지 말고 말뿐이 아닌 실천력이 있는 정책으로 농어업인들의 생존의 고통을 절감하고,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에 가일층 분발해야 한다.

늘 우리는 이야기 한다. 도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고. 지금은 삶의 질 이전에 농어촌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해 있으므로 이를 논해야 한다.

2011. 12. 30.

충청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연 구 모 임 등 록

1.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연구모임명 :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2. 대 표 자 : 김용필 의원
3. 연구 목적 : 충남농촌의 농업 여건 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 정책 및 대안연구
4. 구 성 원 : 10명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 고
대 표	김용필	농수산경제위원회		010-3379-0162
간 사	박상무	문화복지위원회		011- 424-1608
회 원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010-9461-8111
	이준우	농수산경제위원회		011- 899-7319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011- 209-0921
	송덕빈	행정자치위원회		010-5425-3386
	이진환	건설소방위원회		011- 421-6560
	김 호	단국대학교		041- 550-3612
	안승원	공주대학교		041- 330-1224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010-3348-5152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11년 2월 28일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대표의원 김용필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연구모임명		충청남도의회「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대 표 자		김용필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FTA 대응 충남 농업의 대안 수립에 관한 연구
	목 적	충남 농촌의 농업 여건 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함
연구활동기간		2011년 3월~11월 (9개월간)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5,000천원
	산출내역	「붙 임」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2월 28일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대표의원 김용필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2011년 「FTA대응 충남농업 전략연구회」 사업계획

2011년 2월

충청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2011년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사업 계획

○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는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여 충남 농업의 분야별 실태와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작목별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틈새 농업을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하고자 함.

○ 충남 도내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및 전문 고등학교와 각 분야별 농업 전문가들과의 상호 정보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입개방화 가운데서 충남 농업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이 강한 농업의 축으로 만들기 위한 각종 활성화 도모.

1. 추진 방향

○ 충남도의 16개 시·군 주요 작목별 농업의 여건 분석 및 지원 정책 개발
○ 충남 도내 농업관련 학교 및 연구기관, 현장 선도 농업인과의 농업 토론 및 발전안 마련
○ 연구 성과를 도정에 반영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원들과 상호 정보 공유

2. 사업 개요

○ 사업 대상: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 사업기간: 2011년 3월~11월(9개월)
○ 사업 내용
- 농업 관련 워크숍 개최 및 16개 시·군 주요 농작물 현장 방문
- 충남 도내 주요 농업 전문가 및 농업계 학교와 연계된 연구 과제 수행
- FTA 대응 충남 농업이 강화 될 수 있는 보고서 발간·배포
○ 사업비: 5,000천원

3. 세부 사업계획

[1]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관련 연구 활동 지원

○ 사업개요: FTA가 각국으로부터 체결된 이후 충남농업 발전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모색하는 농업 전문가들과 연구활동을 전개하며 각종 모임 개최 지원
○ 사업 내용: 연구 모임 및 활동비 지원(수시), 연구회 구성 발족 모임 및 정기 모임
○ 사업비: 1,000천원

[2]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워크숍 개최

○ 사업 개요: 충남 농촌과 농업을 분석하고 전공한 농업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사업 내용: 연구 워크숍 개최(4회), 발표자, 토론자 비용, 식비, 유인물 등
○ 사업비: 2,000천원

[3]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 개요: 농업 경쟁력 강화 현장 방문 및 토론회 개최

○ 사업 내용: 현장 방문 및 상호 의견 교환(3회), 현장 방문 교통비, 식비, 토론회비 등

○ 사업비: 1,000천원

[4] 발간 보고서 배포

○ 사업개요: 연구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 사업 내용: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 사업비: 1,000천원

4.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 제출(2011년 2월 중)

○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1차 모임 개최(2011년 3월)

○ 농업 경쟁력 강화 현장 방문(2011년 4월 5일)

○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2차 모임 및 1차 워크숍 개최 (2011년 5월)

○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3차 모임 및 2차 워크숍 개최 (2011년 7월)

○ 농업 경쟁력 강화 현장 방문(2011년 9월)

○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회 4차 워크숍 개최 및 종합보고서 발간 배포 (2011년 10월)

5. 기대 효과

○ 이농현상으로 침체되어 있는 충남의 농촌에 FTA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 방문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정책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길을 제시

○ 충남 도의회가 농업도라 불리우는 충남의 16개 시·군의 농업인에게 선진화된 농업의 길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생산적인 도의회상을 정립하여 나감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구 분	소요액(천원)	산 출 기 초
계	5,000	
연구모임 활동비	250	• 연구모임 발족 및 간담회(250,000원×1회=250,000원)
워크숍 개최	3,000	• 워크숍 개최(750,000원×4회=3,000,000원)
현장방문 및 토론회	750	• 현장방문 답사 및 토론회(250,000원×3회=750,000원)
보고서 인쇄	1,000	• 토론 및 연구과제 종합보고서 발간 (1,000,000원×1회=1,000,000원)

2. 연구모임 제안설명서(심의위원회)

2011. 3. 7(월)
제241회 임시회
제1차 운 영 위

제 안 설 명 서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김용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진 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모임 등록신청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회의 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모임"은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충남 농업의 분야별 실태의 현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작목별로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틈새 농업을 개발하여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모임의 구성원으로는

저를 비롯하여 박상무 의원님, 강철민 의원님, 이준우 의원님, 이종현 의원님, 송덕빈 의원님 이진환 의원님, 7명의 도의원과 관련분야 전문가 3명이 참여하여 총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연구활동 계획으로는

첫째, 각국과의 FTA 체결 이후 충남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문적으로 모색하는 농업전문가들과 연구활동을 전개하는 각종 모임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며,

둘째, 충남 농촌과 농업을 분석하고 농업전문가와 정책담당자 워크숍 개최할 계획이고,

셋째,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장 방문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토론 및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모임"은 충남 도내 농업 전문가들과 상호 정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입개방화 추세 가운데서 충남 농업이 국제적 시장질서에서 경쟁력이 강한 농업의 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FTA 대응 충남 농업 전략 연구모임"이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연구모임 등록서

[별지 제3호 서식]

의원연구모임등록서

등록번호		제 11 호
등록모임명		FTA 대응 충남농업 전략 연구회
대 표 자		김용필 의원
연구과제		FTA 대응 충남 농업의 대안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활동기간		2011. 3월 ~ 2011. 11월(9개월)
연 구 활동비	지원액	500만원 이내
	지원조건	연구모임 등록신청서의 산출내역에 의함
기타사항		

귀 단체를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으로 등록함.

2011년 3월 9일

충청남도의회의장 (인)

4. 연구모임 변동신고

연구모임 의원변동신고서

연구모임명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모임	
대 표 자	김용필 의원	
변동의원	당초	박상무 의원
	변경	유근준 (사)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변동일자	2011. 9. 8.	
변동사유	의원 사직	
기타사항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 제3항에 따라 연구모임 의원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모임 구성현황 1매.

2011년 9월 15일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용필(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충청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구분	성 명	소속	E-mail	연락처	비 고
대표	김용필	농수산경제위원회	refarmm @hanmail.net	010-3379-0162	
간사	안승원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 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부교수	annsw @kongju.ac.kr	041-330-1224	
회원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kk5783 @hanmail.net	010-9461-8111	
	이준우	농수산경제위원회	jw717 @hanmail.net	011-899-7319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0112090921 @hanmail.net	011-209-0921	
	송덕빈	행정자치위원회	syuuii @hanmail.net	010-5425-3386	
	이진환	건설소방위원회	lee6560 @hanmail.net	011-421-6560	
	김 호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hokim @dankook.ac.kr	041-550-3612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 @cdi.re.kr	010-3348-5152	
	유근준	(사)한국농업경영인 충남도연합회장	kaff0400@ chol.com	011- 453-9150	254-1464

연 구 활 동 결 과

1. 발족식 및 워크숍(6.16)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공룡과 꿩의 대결이라고나 할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로에 우리 농촌이 놓여 있고 농업도인 충남의 운명이 걸려있다.

정부는 지금 국가성장전략의 기회로 여겨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을 하고 있다. 이미 5개 경제공동체 17개국과 FTA가 발효가 되어 있고, 미국과 EU, 페루등 3개 경제공동체 29개 나라들과도 FTA가 체결이 되었다. 더 나아가 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터키와 걸프협력회의(GCC)등 5개 경제 공동체와 협상중에 있다. 문제는 우리 충남도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과 협상여건을 조성중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농산물이 있을까를 고민할 때 거의 절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 베트남과도 협상 여건을 조성중에 있다.

이와같은 충남 농업의 위기 가운데 충청남도의회는 이 모임의 간사인 박상무의원,농수산경제위원장인 강철민의원,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산에서 수박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송덕빈의원, 농민회 당진군 회장 출신인 이종현의원, 4선 의정경험을 갖고 있는 보령의 이준우의원, 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진환의원, 국내 FTA연구 전문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김양중연구원,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충남농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공주대 안승원교수,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교수등이 함께 충남농업의 현장을 돌며 토론을 걸쳐 너무나 광범위한 연구이지만 꼭 도전을 해야만 하는 길 이기에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빗물이 모여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어 나룻배를 띄울 수 있는 것처럼 시대적인 현실 앞에서 불평과 탓만을 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FTA를 이겨내는 그 틈새를 반드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충남도의 모든 농업인과 단체들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작지만 강한 함축된 뜻을 도출하여 우리 충청남도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농업부국을 이뤄나가는 충남도의 FTA를 교두보가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대표의원 김용필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 일　시 : 2011년 6월 16일(목) 10:30~ * 장　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회의실 * 주　최 :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 후　원 : 충청남도의회

1.행사목적

FTA체결후 충남도의 농업 피해화를 최소화 하여 충남농업의 강한 경쟁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틈새 작목과 작물을 찾아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 대안을 모색한다.

2.행사개요

* 일　　시 :　2011년6월16일(목) 10:30~
* 장　　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회의실
* 주　　관 :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 후　　원 :　충청남도의회
* 참석대상 :도의원 교수 농업인 단체장 공무원

3. 행사세부일정

시　간	소요시간	행 사 내 용	비　고
10:30 ~10:50	20분	개회식	진행: 간사 박상무 의원
		개회, 참석자 소개	
		국민의례	
		인사말	김용필 의원
		축　사	
10:50 ~11:10	20분	FTA 충남농・어업 대응방안	충발연 김양중 연구원
11:10 ~12:00	50분	지정 및 자유토론	진행: 김용필 의원
12:30 ~13:00	60분	식사 및 토론	

4. 연구위원 소개

* 박상무 의원(충남도의회 의원),　* 강철민 의원(충남도의회 의원)
* 송덕빈 의원(충남도의회 의원),　* 이종현 의원(충남도의회 의원)
* 이준우 의원(충남도의회 의원),　* 이진환 의원(충남도의회 의원)
* 김양중 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 * 김　호 교수(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안승원 교수(공주대 산업과학대학 부학장), * 김용필 의원(충남도의회 의원)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발족식 및 1차 워크숍 회의 요약

○ **일시 : 2011. 6. 16. 10:30~13:00**

○ **장소 : 충남농업기술원 3층 회의실**

○ **회의내용**

- 연구회 발족식
- 1차 워크숍(한중 FTA를 중심으로한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 **참석자 : 9명**

- 회원(의원) : 김용필 대표, 박상무 간사, 이종현 회원
- 회원(전문가)
  -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 안승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부교수
- 농업인단체
  - 임종환 충남쌀전업농연합회장
  - 이선범 예산군 품목별 연합회장
  - 윤동권 예산군 농업인단체 협의회장

○ **기타 참석자**

- 농업기술원 김길환 기술지원과장, 농업정책과 박성걸, 최종윤 주무관, 농경위 한영전 전문위원, 문윤식 주무관

○ **회의경과**

- 간사 박상무 의원 회의 개시인사, 참석자 소개
- 대표의원 발족기조 발언
- 김양중 회원 FTA 관련 프리젠테이션에 이어 회원 토론
- 대표의원 주관 운영방법 협의

○ **주요 발언내용**

- 김용필 대표

- 연구회 발족 기조 발언
- 운영방법 협의에 관한 내용, 7, 8월중 2차모임 제의
- 막거리를 먹으면서 농업인들과 깊이 있는 대화로 농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 김양중 연구원 : 한중FTA를 중심으로 충남농어업대응방안 발표

- FTA 체결의 의의, 양면성, 피해규모, 피해품목
- 농어업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FTA에 대한 대비가 필요
  충남의 비중 1990년 27%, 2009년 5.1%, 국가는 2.7%
  인삼, 고추, 마늘, 양파의 피해가 집중되며, 한미FTA의 3~10배 예상
  충남농어업발전대책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

- 안승원 교수

·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입장. 후손에게 경쟁력 있는 농업을 물려줘야 한다. 껍데기만 물려줘서는 안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농업구조를 갖는 선진국들도 농업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 극단적으로 영국과 비교할 수 있는데 영국은 생산녹지의 부가가치를 살려서 전원도시 형태로 발전. 일본과는 비슷한 환경인데 국민소득이 4만불이면서 영국을 연구

· 기술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연구해 볼 필요 있음.

· 공무원의 책임있는 시스템에 의해 추진하면 효율적인 연구 가능

- 임종환 충남쌀전업농연합회장

· 농업은 정부로부터 천대받고 있고, 아사직적이라고 해도 과언 아님

· 이 자리에서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여 농업도로써 중심적인 역할을 당부. 피해가 피부로 느껴지며, 농촌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음

· 지역협의체를 구성이 필요하며, 농업인 편에서서 지자체에서 의식개혁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농업인도 지원만 바라지 말고 안일한 생각을 바꾸어야 함

- 김호 교수

· 의회에서 고민하는 것이 다행이다.

· 피해액 산출 등이 너무 단순하다. 농촌경제연구원 통계를 인용하여 산출하는데. 독자적인 산출방식을 도입해야

· 대체작목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미흡

· 품목별로만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농민, 농촌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함.

· 전부 잘못임. 공무원, 학계. 등등

· 농정혁신위원회가 무엇하는지 잘 모르겠음.

· 거버넌스를 한다고 되어 있고, 거버넌스 주도를 지자체가 하고있기 때문에 문제.

·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 의원의 역할이 크다.

· 연구회 연구와 일정은 의원 중심으로 잡아달라.

- 박상무 의원

· 시군과 광역의 역할 부분이 있다.

· 중앙정부가 큰 그림에서 파격적인 구조적,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

- 이종현 의원

· 작년도 태풍 콘파스 피해 관련해서 통계청 통계가 현장과 너무 격차가 크다. 정부의 통계에 대해 신뢰가 너무 낮다.

· 이론가 현장이 괴리되어 있어 농업인이 정부를 신뢰 안한다.

· FTA에 대한 피해예상액도 마찬가지다. 더 연구해 달라.

· 정부통계에 대한 신뢰가 생길 때 FTA 대응책도 나오지 않을까?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 한·중 FTA를 중심으로–

충남발전연구원　김 양 중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한·중 FTA를 중심으로-

발표자: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목 차

- 서 론
- 충남 농림어업의 현황 및 특징
- 개방화의 파급효과 전망
- 충남의 대응방안
- 중앙정부 건의사항
- 결론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제1장. 서 론

3

필요성 및 목적

1. 배경

FTA 체결의 의의

- FTA는 해외시장 확보 및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의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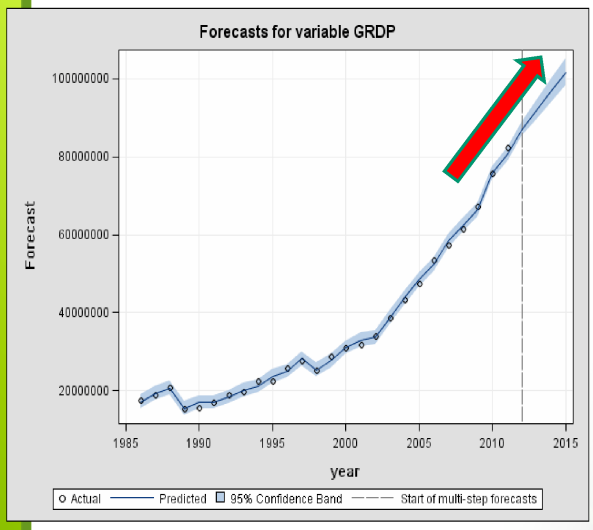
FTA의 양면

- 국가 전체로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지역경제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음
- 충남의 제조업(전자정보/자동차 등)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충남의 농업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4

필요성 및 목적

1. 배경



시도별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순위
전국	4.21	-
충남	9.80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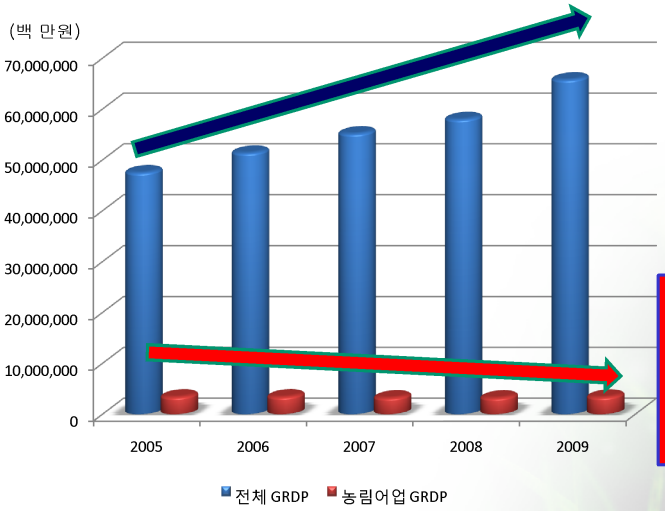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충남의 GRDP는 연평균 9.8%씩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4.2%보다 높음

이와 같은 성장세는 16개 시도 중 1위이며 1인당 GRDP는 2위

2009년 GRDP 67.2조

필요성 및 목적

2.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GRDP 대비 농림어업의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1990년 농업비중 27.0%

2009년 농업비중 5.1%

충청남도 지역 내 총생산 & 농림어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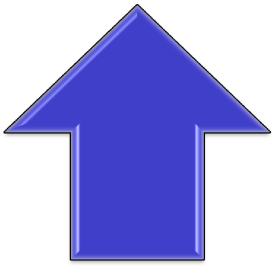
필요성 및 목적

3.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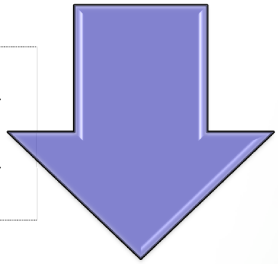
7

필요성 및 목적

3. 목적



2009년기준
식량생산 6년 연속 증가
농민소득 6년 연속 증가
실질 농민 소득 증가율 8.5%



농가수 및 농가인구 지속적으로 감소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고령화, 개방화로 농어가소득 양극화
농가부채 증가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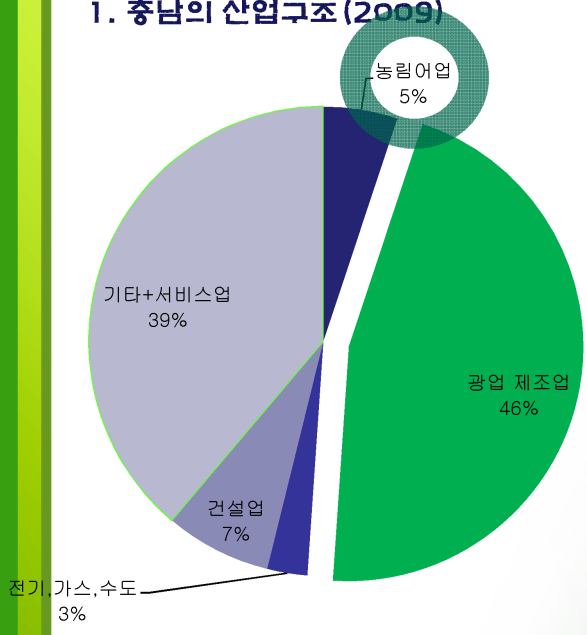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제2장. 충남 농림어업의 현황 및 특징

9

충남 농림어업의 일반 현황

1. 충남의 산업구조(2009)



충남의 지역내총생산 비중

광업.제조업(46.0%)

건설업(7.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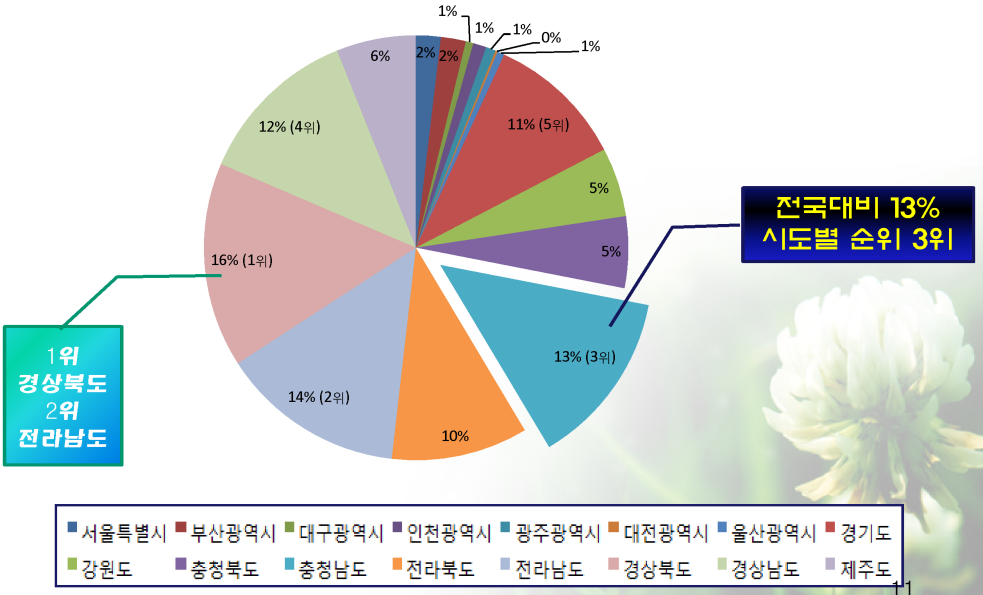
농임어업(5.1%)

교육서비스업(4.2%) 순

10

충남 농림어업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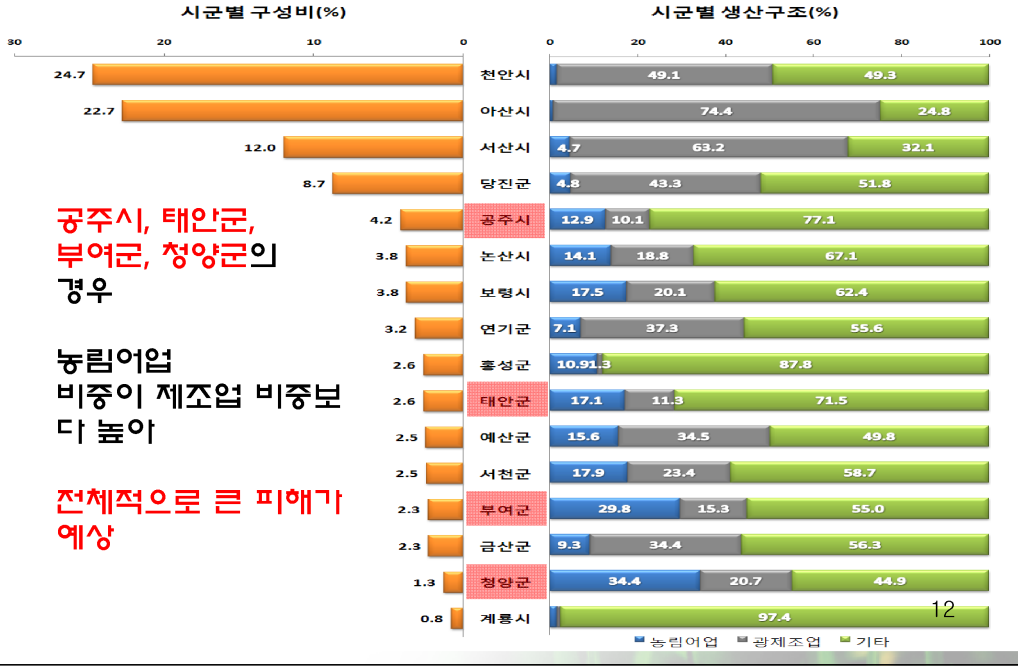
2. 시도 농림어업 생산



11

충남 농림어업의 일반 현황

3. 시군 농림어업 생산



공주시, 태안군, 부여군, 청양군의 경우

농림어업 비중이 제조업 비중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

12

충남 농림어업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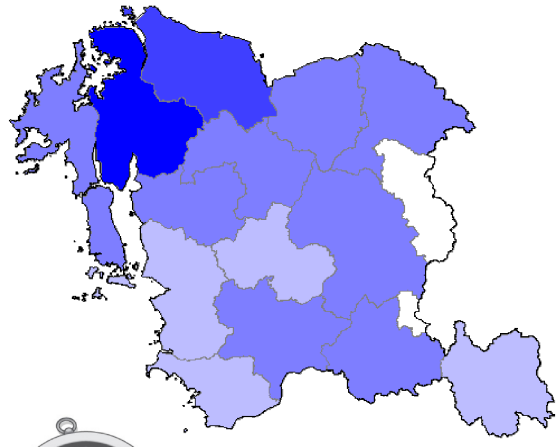
4. 시군의 주요작물(생산량 1위 시군)

시군	생산량 1위	시군	생산량 1위
천안시	배, 포도, 젖소, 산란계	연기군	복숭아
공주시	밤	부여군	토마토, 표고, 육계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마늘, 양파	홍성군	한우, 돼지
논산시		예산군	사과, 육우
계룡시		태안군	보리, 콩, 고추
금산군	인삼	당진군	쌀, 감자

13

충남 농림어업의 일반 현황

5. 경지현황



전국대비 13.7%

연평균 4.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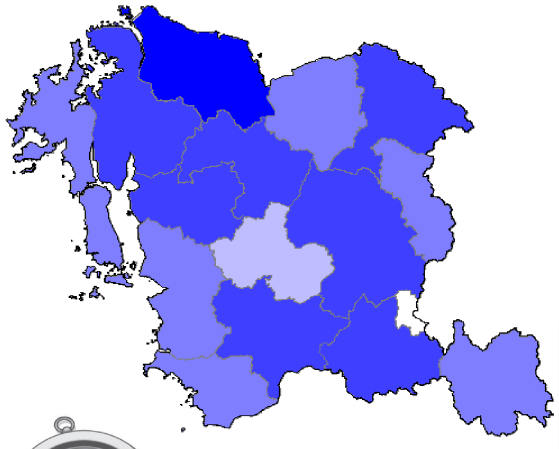
특히 논의 감소가
밭의 감소보다 큼
(논5.4% 밭 0.2%)

경지면적이 많은 지역은
서산시, 당진군, 부여군 순

14

충남 농림어업의 일반 현황

6. 농가현황



전국대비 13.3%

농가수는 연평균
2.9% 감소

농업인구는 연평균
6.4% 감소

농가수가 많은 지역은
당진군, 천안시, 서산시 순

15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제3장. FTA의 파급효과 전망

16

충남 농림어업의 품목별 특성분석

1. 특성 분석

17

충남 농림어업의 품목별 특성분석

1. 특성 분석

– 축산분야 –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 경쟁력			수입 경쟁력			가격 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한육우	×	△	×	×	△	×	○	○	×	×	·
젖소	○	○	×	×	×	×	×	○	○	×	○
돼지	○	○	×	×	×	×	×	○	×	×	·
닭	○	△	×	×	×	×	○	○	·	·	·

축산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안전

그러나 미국, EU와의 경쟁에서 매우 취약

18

충남 농림어업의 품목별 특성분석

1. 특성 분석

– 식량작물 –

구분	[illegible]	경[illegible]정성	경쟁력 분석								
			수[illegible]력			수[illegible]력			가[illegible]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미곡	○	○	×	×	×	×	○	×	×	○	×
보리	×	×	×	×	×	○	○	×	○	○	×
콩	×	×	×	×	×	×	○	×	×	○	×
감자	×	△	×	×	×	×	○	○	×	·	·

미곡, 보리, 콩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취약

19

충남 농림어업의 품목별 특성분석

1. 특성 분석

– 원예분야 –

구분	[illegible]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illegible]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토마토	○	△	×	×	×	○	○	○	·	○	·
고추	×	○	×	×	△	○	○	×	○	○	×
마늘	×	○	×	×	×	○	○	×	·	·	×
양파	×	×	×	×	○	○	○	×	×	○	×

고추, 마늘, 양파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취약

20

충남 농림어업의 품목별 특성분석

1. 특성 분석

– 인삼분야 –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인삼	○	○	○	○	○	○	○	×	○	○	×

인삼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취약

충남 농림어업의 품목별 특성분석

1. 특성 분석

– 임업분야 –

구분	특화도 (2009)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출경쟁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밤	○	-	○	×	○	○	○	×	×	○	×
표고	○	-	×	×	×	○	○	×	○	·	×

밤, 표고버섯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취약

충남 농림어업의 품목별 특성분석

1. 특성 분석

– 과수분야 –

구분	[illegible] (2008)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illegible]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사과	×	△	×	×	×	○	○	○	·	·	·
배	○	△	○	×	○	×	○	○	○	·	·
복숭아	×	×	×	×	×	○	○	○	·	·	·
포도	×	△	×	×	×	×	○	○	×	○	×

과수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비교적 안전

그러나 미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취약

23

충남 농림어업의 품목별 특성분석

1. 특성 분석

– 어업분야 –

구분	[illegible] (2008)	경영안정성	경쟁력 분석								
			수[illegible]력			수입경쟁력			가격경쟁력		
			미	EU	중	미	EU	중	미	EU	중
어류	×	-	×	×	×	○	○	×	·	·	·
갑각류	○	-	×	×	×	○	○	×	·	·	·
연체동물	×	-	○	×	○	○	○	×	·	·	·

어업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매우 취약

24

FTA의 예상 파급효과

1. 한미/한EU FTA로 인한 생산 감소액(단위: 억원)

순위	품 목	생산액(2008년)		생산 감소액(발효15년차)	
		전국	충남	전국	충남
1	쌀	93,796	17,332		
2	양 돈	40,853	7,570	3,088	567
3					477
4					241
5					223
6					88
7					83
8					77
9	밤	1,394	543	113	47
10					14
11					14
12					8
13					6
14	마 늘	3,439	273	49	4
15	양 파	2,804	49	96	2
	총 계	465,731	63,176	12,870	1,924

한미/한EU FTA로 인한 충남 주요농작물 생산감소액: 1,924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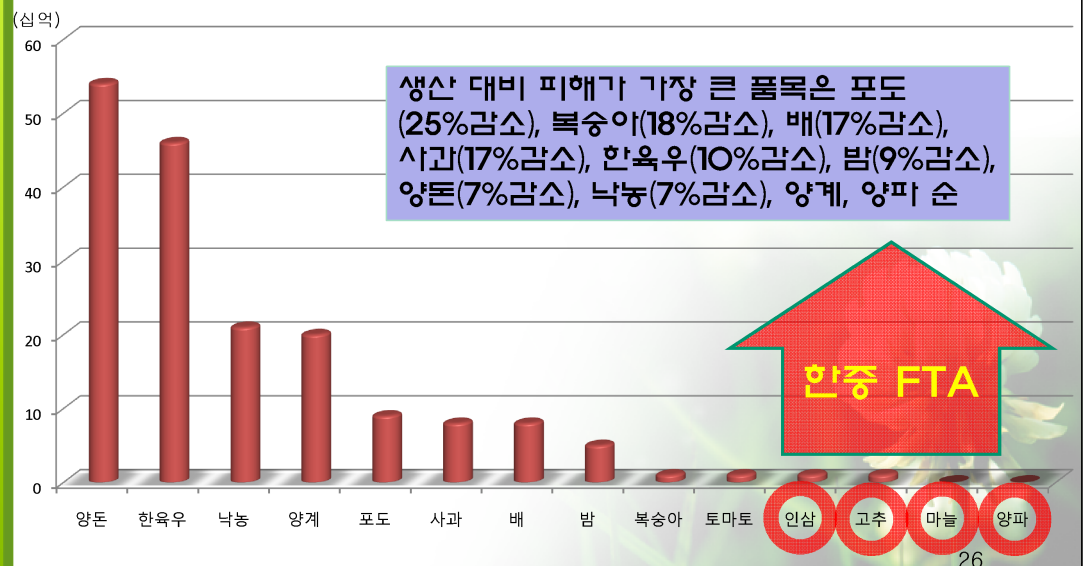
농업 종사자 감소: 5,797명

한중 FTA가 타결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클 것

25

FTA의 예상 파급효과

1. 한미/한EU FTA로 인한 생산 감소액(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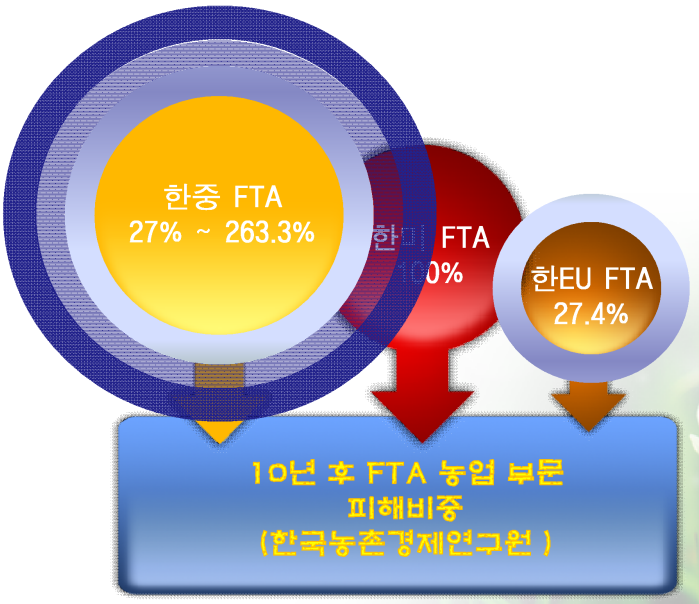
생산 대비 피해가 가장 큰 품목은 포도(25%감소), 복숭아(18%감소), 배(17%감소), 사과(17%감소), 한육우(10%감소), 밤(9%감소), 양돈(7%감소), 낙농(7%감소), 양계, 양파 순

한중 FTA

26

FTA의 예상 파급효과

2. 한미 & 한EU & 한중 FTA로 인한 생산 감소액(추정)



27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제4장. 충남의 대응방안

28

대응방안

1

한·중 FTA의 피해품목과 시군에 대해 파악

주요 피해품목

미곡, 보리, 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밤, 표고

주요 피해시군

공주시(밤), 서산시(마늘, 양파), 금산군(인삼), 부여군(표고버섯), 태안/청양(보리, 콩, 고추), 당진군(쌀)

29

대응방안

2

FTA로 인해 피해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충남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는 피해조사 전담 TF팀 구성이 필요

피해품목의 파악은 중앙정부 또한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충남의 피해품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

특히 언젠가 이루어질 한/중 FTA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피해품목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책을 마련한다면 가장 큰 위협인 한/중 FTA를 최소의 비용으로 극복

중앙정부의 자료나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대화채널확보가 중요

30

대응방안

FTA효과는 시군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보다 피해가 큰 시군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

3

농어업 비중이 높은 시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별도의 지원방안 필요

농업의 특성과 구조가 다른 시군에 적합한 정책을 찾아야 함

시군별 특화품목의 육성방안 마련이나 시군별 농림어업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향후 시군의 특성과 활용자원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시군별 연구의 진행이 필요**

31

대응방안

중앙정부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

4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농어업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고 경작지와 농가수 또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효과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체질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중

⇨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자원순환형농업, 로컬푸드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지역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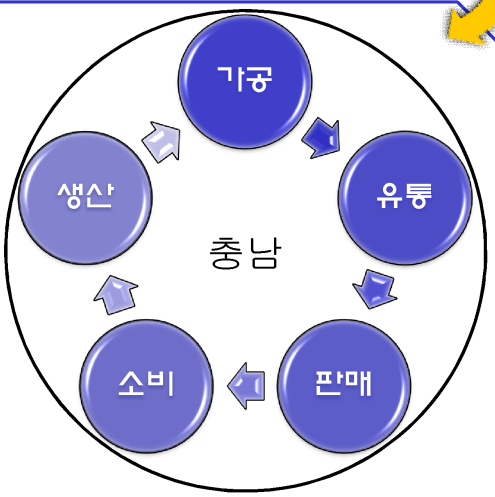
32

대응방안

5 충남 농산물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

충남도 스스로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함

충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충남에서 가공/유통/판매 되고 소비되어 다시 충남의 소득으로 귀착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함



33

대응방안

6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

농어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이 어려운 농가는 폐업지원, 대체작목 전환 등 농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아울러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 스스로도 자립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컨설팅이 필요

충남도 뿐만 아니라 농민 스스로도 자구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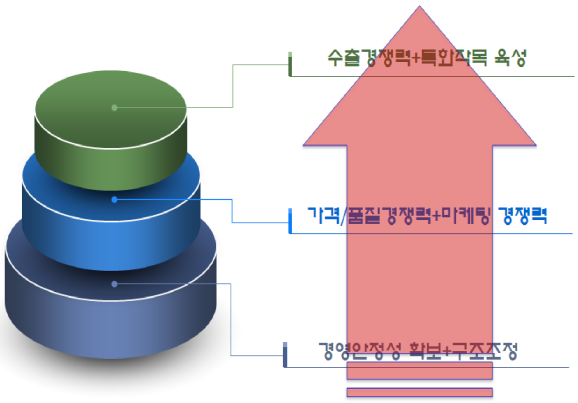
34

대응방안

7 충남 주요품목에 대한 마케팅 정비 필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품질에서 보강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마케팅으로 보강하여
종합경쟁력을 제고



35

대응방안

8 경쟁력 제고 대책과 더불어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

유지강화해야 하는 지원분야와 중점강화해야 하는 지원분야를 품목별로 파악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지속유지 해야 하는 지원분야는 예산을 동결

특히 충남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수출/인력/유통/가공의 지원이 필요

⇨ 충남도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

36

대응방안

9 농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역농업은 서로간의 연대를 통해 생산,유통 등에서 공동대응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농민들이 해결하기 힘든 전략품목개발, 초기시설 투자, 생산자조직 육성, 판로개척 등을 지원

획일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충남, 시군, 생산자단체, 생산자, 소비자간 대화채널이 필요

도내 농업주체, 공무원, 연구원, 소비자까지도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필요

37

대응방안

10 내재적 자원에 근거한 지역경쟁력 확보가 필요

지금까지 지방농정은 산업적 측면에서 농업생산과 농산물유통에 관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역 내 농업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함

향토음식 및 지역특화산업의 발굴 및 육성 필요

38

대응방안

11 대체작목 개발과 가공식품 지원강화

맥문동과 다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맥문동은 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로
주목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낮은 인지도
때문에 일부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음

청양은 다래재배에 적합한 청정지역으로
칠갑산 등 크고 작은 산과 기후, 토양을 갖춤

맥문동, 다래 등 FTA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작목을 육성하고,
가공식품 개발/판매에 주력하여 소득을 창출

39

대응방안

12 FTA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노력 증대가 필요

농민들의 FTA로 인한 불안심리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보의
부족 임

FTA가 지역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전체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경제주체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함

⇨ FTA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필요
농업인들 스스로도 이해도를 높여가야 함

40

대응방안

13 충남 농어업/농촌종합대책의 지속적 업그레이드가 필요

농어업/농촌종합대책의 재검토라는 말보다는 **수정계획**이 더 정확한 표현임

하루하루 변화하는 시대에 농어업/농촌종합대책은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어야함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과의 FTA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1

대응방안

14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 필요

지자체장의 의지는 새로운 정책추진의 원동력

아무리 좋은 정책제안도 지자체장의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와 더불어 농/축협, 농업인 모두의 인식전환이 절실

충남은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농민단체 및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함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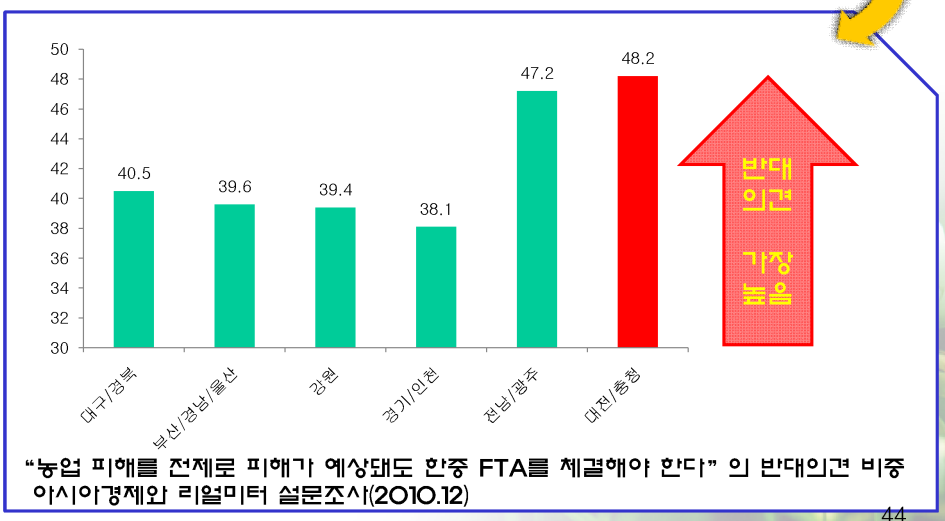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제5장. 정부 건의사항

43

건의사항

농업도인 충청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해 달라



"농업 피해를 전제로 피해가 예상돼도 한중 FTA를 체결해야 한다" 의 반대의견 비중
아시아경제와 리얼미터 설문조사(2010.12)

44

건의사항

보안대책 마련시 포괄보조 예산을 배정해 달라

현재 품목별 기능별로 사업이 세분화 되어 있어 충남의 여건에 적합한 사업추진이 어려움

따라서 한·중 보안대책만이라도 도에서 독자적 사업추진이 가능한 예산을 배정한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이를 통해 지역의 내발적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음

친환경 농산물, 로컬푸드 등 중국과 경쟁에서 충남이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를 키워나가야 함

45

건의사항

대화채널을 확보해 주고 정보를 공유해 달라

지방정부의 정보력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는 다양한 정보채널과 수탁용역의 결과물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정부와 공유하지 않고 있음

일부 내용은 발표하나 대외비 용역보고서는 검색자체가 안됨

비록 대외비라 할지라도 지역과의 파트너쉽을 인정한다면 지방정부와 용역보고서를 반드시 공유해야 함

46

건의사항

계량적으로만 피해액을 산정하지 말아 달라

기존의 정부발표와 대부분의 연구결과가 과거 통계치를 통한 계량적 접근만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농어업 피해액 산정은 농어민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이제 대부분의 국민도 받아 들이지 않음

따라서 피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농어민 설문조사 및 농어민과의 인터뷰 조사 등을 포함 해야 함

또한 농림어업 단체장들, 농림어업 전문가 등과의 심층인터뷰를 포함하여 보다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야 함

47

건의사항

하나의 통일된 피해액을 산정해 달라

한 · 중 FTA 관련 보고서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으며 피해액도 보고서 마다 천차만별

중앙정부 차원의 용역을 통해서 모든 기관이 참여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연구결과를 내 놓아야 함

- 삼성경제 연구소(2011)는 농산물 생산감소를 1.2%로 추정
- 농촌경제 연구원(2006)은 농산물 생산감소를 14.7%로 추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은 농산물 생산감소를 20%로 추정

48

건의사항

피해품목과 피해액을 정확히 언급하고 명시해 달라

한 · 중 FTA 정부발표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피해액을 언급하면서도 정확한 피해품목에 대한 언급을 회피

농어민의 이해를 구하고 지역차원의 신속한 대응방안을 위해서도 반드시 피해품목에 대한 언급이 필요

식량자원, 축산, 과수, 원예, 과수, 임업, 특작, 어업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 세부품목에 대한 피해액을 명시

49

건의사항

농림어업에 대한 명확한 통계작성이 필요

현재까지 농림어업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농림어업 통계가 있으나 지역별로 별도로 가공하여 사용함으로써 통계청 수치와 다른 시도별 통계가 난무

이와 같은 시도별 통계의 차이는 정확한 피해액의 산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혼선을 초래

두수, 면적, 생산량(톤) 등 분야별로 집계기준이 틀려서 나는 혼선으로 생산액으로 통일해서 공표해야 할 것임

50

FTA 충남 농•어업 대응방안

제6장. 결 론

51

결 론

우리나라는 한 · 미, 한 · EU FTA 발효를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한 · 중 FTA는 우리나라 농업에 있어 치명타가 될 것임

중국은 농림어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다 인접국이라 우리나라와 기후도 비슷함

52

결 론

전국의 지차체는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야 함

그렇지 않는다면 즉 중앙에서
대책을 세워주기만을 기대한다면

충남 농업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음

53

결 론

충남부터 이런 변화에 먼저
눈을 뜨고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야 함

충남 공무원, 농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임

54

결 론

감사합니다.

CDi 충남발전연구원

Heart of Korea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55

3.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순회 간담회(7.13~7.25)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시군 순회간담회 추진결과

충남 농촌의 농업여건 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충청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 농업전략연구회'가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1. 일　　정 : 7. 13 ~ 7.25(8일간)
2. 지 역 별 : 16개 시·군
3. 장　　소 : 시·군 농업기술센타 회의실 또는 농업경영인 회관 등
4. 참석인원 : 123명
5. 추진결과

일정	지역별	개최장소	참석인원	비고
7. 13(수) 10:30~12:00	서산시, 태안군	서산시농업경영인회관 (서산시 예천동 1074-10)	17명	
7. 14(목) 10:30~12:00	당진군	당진군농업경영인회관 (당진군 읍내리 299-30)	25명	
7. 18(월) 10:30~12:00	예산군, 홍성군	홍성군 농업기술센타 (홍성읍 옥암리 420-4)	15명	
7. 19(화) 10:30~12:00	천안시, 아산시	아산시 농업기술센타 (염치읍 염성리 186-2)	14명	
7. 20(수) 10:30~12:00	부여군, 청양군	부여군 농업기술센타 (규암면 노화리 325-1)	16명	
7. 21(목) 10:30~12:00	보령시, 서천군	보령시 농민회관 (보령시 죽정동 418-13)	11명	
7. 22(금) 10:30~12:00	공주시, 연기군	공주시 농업기술센타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12명	
7. 25(월) 10:30~12:00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농업기술센타 (부적면 덕평리 40-8)	13명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시·군 순회간담회 회의록(요약)

1. 서산시, 태안군 지역(7. 13, 서산시 농업경영인회관)

○ **참석자 : 17명**

- 회원 : 김용필 대표, 박상무 간사
- 농업인단체
  - 김선호 한국농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장
  - 문건동 전국농민회총연맹서산농민회장
  - 장순택 전국농업기술자협회서산시지회장
  - 전용자 서산시농가주부모임연합회장
  - 김진영 한국화훼협회충남지회서산분회장
  - 박문식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
  - 박의열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 유영철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
  - 구호섭 서산시난연합회
  - 문규선 한국농업경영인태안군연합회장
  - 김현동 한국쌀전업농태안군연합회장
  - 김윤수 한국화훼협회태안군연합회장
  - 명헌식 태안군축협낙우회장
  - 김유진 전국농업기술자회서산시지회
  - 이성순 한국쌀전업농태안군연합회 부회장

○ **기타 참석자**

- 농업정책과 농수산물수출담당 임헌필, 박성걸·최종윤 주무관,
  농수산경제위원회 한영전 전문위원, 이연수 주무관

○ **주요발언 내용**

- 김용필 대표

· 농업인단체 대표와 토론하여 농업인들의 뜻을 집행부와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하려는 것임

· 8월에 미국과의 FTA 비준을 앞두고 있고, FTA는 대세라고 하고, 이제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해 가고 있음

· 그러면 농업 전부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작목이 없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 농업인들이 몇 천명 움직이는 것보다 충남도 의회의 공식 모임인 연구회에 의견을 주시면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파산된 농업인에게 보상을 해주던지, 살길을 열어 주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중앙에 전달 하겠음

· 필요하다고 하면 이후에 공무원을 통해 걸러내서 충남 농업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가겠음

- 박상무 의원

· 의회 차원에서 FTA에 대한 대응이던, 대책이던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

· 편안한 마음으로 지역현장의 목소리,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귀중한 의견을 가감없이 주시면 도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임

- 김용필 대표

· ‘92년 UR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세계가 WTO에 의해 관세가 철폐되고 자유무역주의가 열리게 되었음

· DDA협상, 특히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리멸렬하게 진행되면서 국가간에 협상인 FTA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됨

· 벌써 6개 국가와 체결되서 진행되고 있고, 7. 1부터는 EU와 FTA가 발효되었고, 8월부터는 미국과의 FTA 비준이 예정되어 있음

· 현장 농촌을 다니면서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감은 대단함

· 배추가 부족할 때 산동성의 배추가 들어오니 그냥 완벽하게 해결된 것을 볼 때, 체결되었을 때 상황을 가정한다면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위기임

- 문규선 농업경영인태안군연합회장

· 한·미 등 FTA를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농업부분 피해대책을 수립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까 밀어 붙이고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 ‘92년 UR협상이 진행되면서 전세계가 WTO에 의해 관세가 철폐

· 한중FTA는 다른 FTA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부문 피해가 예상되는데, 자료는 상당히 미미하게 표현됨.

· 충남 농업피해액을 생산의 5%로 추산했는데, 사실 축산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부문이라고 생각함

·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땅하고 자본의 싸움임. 자본을 가지고 양손에 칼을 가지고 있음.

· 좁은 면적에서 단위생산량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음. · 그렇다면, 농업을 세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산체계를 바꿔서라도 규모화, 체계화하기를 바랬는데, 지금은 농업보조, 농업인보조, 농촌보조에 의해서 농업이 나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임

- 명헌식 태안군축협낙우회장

· 우직한 소가 천리를 간다는 철학으로 태안에서 낙농을 27년째 하는데, FTA 체결로 가장 큰 타격을 축산부분이 보고 있다고 생각함.

·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비중이 쌀이 1순위라고 한다면, 쇠고기는 2위, 돼지고기 3위, 우유 4위, 계란이 5위로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있다고 봄

· 쌀이나 다른 품목은 경제성장에 맞게 올리기도, 내리기도 하는데 우유값은 7년동안 한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반해, 사료값은 거의 30~40% 올라가 있음.

· 생산비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1kg에 24%정도가 올라야 맞는데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2~5%대를 얘기하고 있으니, 현실성이 없음

·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데 가격이 작년 동기대비 40% 정도가 내렸음에도 태안의 고급식당, 서산의 한우 전문점에서 먹어보면 쇠고기 값을 내린 곳이 없음. 4인이 가서 먹으면 30만원 나온다고 봄.

· 그런데 4인 기준 먹을 쇠고기가 불과 6~8만원 밖에 안되니 생산비에 맞게 정부에서 소비정책도 병행해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식당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 없음

· 이력추적제와 원산지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임. 더 연구해서 강화해 주시기 바람

· 30년 동안 일군 목장이 집밖에 없음. 현실적으로 농업이 살아나가기 어려움. 고령화되고 후계 인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축산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람

- 유영철 직전회장

· 세계가 하나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나 농업인에 대한 대책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쌀은 직불제를 통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지만, 축산이나 원예부분도 정부차원의 보상제도가 필요함. 충남도만이라도 배추값 하락 등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농업인에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함.

· 자체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서산은 8개 품목에서 최저생산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너무 어려움.

· 그걸 개선해서 농작물을 로터리 쳐서 버리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 자체예산을 세우면 될 거라고 생각함. 쌀뿐만 아니라 축산이나 모든 작물분야에서 준비하면 더 낫지 않을까

- 김용필 대표

· 서산, 논산, 아산, 예산, 당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수도작 분야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FTA가 한발 한발 가는데, 완전한 자유무역주의가 되는 시점에서 그것들이 버틸 수 있겠는가?

· 시우량이 엄청날 때 배수가 감당이 안되지 않는가?

· 미국하고 멕시코하고 나프타협정을 맺었는데 멕시코가 발전됐다고하는 사람이 없음. 칠레하고 FTA협정이 체결되어 거리에 나타난 현상이 상가, 결혼식장 가면 국산포도, 제주밀감 구경하기 어렵다는 것임.

·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 농업의 모든 것이 붕괴될 수 있음.

- 김현동 태안군쌀전업농회장

· 전에는 충남쌀이 서울로 올라가면 1위, 전라도가 3위를 했는데, 지금은 똥쌀로 이름이 나 있음. 그래서, 태안쌀을 맛있는 걸로 하기 위해 삼광을 재배했음.

· 서태안이 작년까지만해도 근 60%이상 주남을 재배했음. 원래 밥맛이 좋은데 질소질을 많이 쓰다보니 그렇게 됐음.

· 삼광을 재배하겠다고 하면 삼광종자를 보급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주남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보급종을 공급해서 농민들이 헷갈림.

· 일본처럼 밥맛에 승부를 걸어야 함.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한가지로 쭉 밀고 나갔으면 함

- 문건동 전국농민회서산농민회장

· FTA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정부에서 끌려 다니듯 급하게 추진하는게 문제임

· 세계경제가 자유주의에서 보호무역주의, 다시 국경없는 FTA를 추진하는데, 선진자본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전 준비없이 성과물인양 막 FTA를 체결하는게 일단 문제임

· 한칠레 FTA 체결시 포도 등 과수농가에 적절한 피해대책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받은 것은 전혀 없고 붕괴만 됨.

· 중국산 마늘 들여올 때 핸드폰 등 공산품 수출해서 농민한테 환원한다고 했는

데,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정부의 약속이나 발표를 믿을 수 없음.

· 사전 정지작업이 되어야 함. 일본, 미국의 경우 생산보조금, 가격지지보조금이 우리의 2~3배임. 그러면서 우리가 농업보조금 주려면 규제함.

· 서태안이 마늘이나 생강의 주산지이고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조금만 가격이 오르면 중국에서 곧바로 수입하여 가격이 폭락함. 6쪽마늘, 생강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도차원이든 시차원이든 피해를 예상해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기 바람

- 이상순 태안쌀전업농사무국장

· 정부에서는 논휴경 또는 대체작물 재배사업으로 벼재배면적을 줄이고 있는데 쌀값이 안정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찰벼가 가격이 높으니까 수입을 해서 가격이 떨어졌음. 따라서 농지를 줄인다고 해서 될 상황은 아님. 수입을 하니까 쌀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임.

· 도에서 고품질로 한다고 하는데, 고품질이던 중질이던 간에 가정에서 소비되는 쌀량이 많지 않고, 대량으로 소비하는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단가면에서 불리한 우리나라 쌀을 안쓴다고 봄.

· 벼 생산비가 자꾸 올라가고 있고, 임대료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 정부에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음

· 일시적으로 재배면적을 줄이고 안 줄이고 문제가 아니고, 수입함으로써 쌀값이 뚝 떨어지는 건 뻔한 사실임. 농기계 값 비싸지. 면세유 없앤다고 하지. 비료농약값 올라가는데, 생산비를 줄이는 수 밖에 없음. 생산비가 높다고 하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전용자 농가주부모임서산시연합회장

· 농민단체 입장에서는 FTA 협상 자체를 반대해야 되는 입장에서, 결국 FTA 협상을 받아들이는 꼴임.

· 올봄에 배추값 하락으로 로터리쳐야만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농산물 수급이 중요함. 조금만 남아도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음.

- 김용필 대표

· 지난해 통계수치 잘못돼서 시위하고 그랬는데 정부통계 믿지 않음. 수박, 배추 등의 종자에 대한 농협의 전산화 정보를 활용하여 수급을 조절하는 법을 만들어야 함.

· 1995년 보령 농민회 이대해 열사가 돌아가실 때부터 시위하고 다니고, 생각하

고, 고민하고 피맺힌 사람들인데, 여의도나 도청가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온 것임.

· FTA 반대지만 무작정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것보다는 일단의 대안을 한 번 찾아보자는 것임.

· 농업인구가 300만명도 안되는 것 같음. 자꾸 농업종사자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음

· 언론에서 물가인상요인이 다 농산물이라고 하니까 국민들 인식이 농업은 살만하다, 귀농하는 사람이 많은데 농사짓는 사람은 다 부자인줄 안다.

- 김선호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

· 농업인 자녀들이 대학교 진학할 때 옛날에는 소 팔았는데 지금은 땅 팔아야 함. 농업인 자녀에게 기숙사를 우선 배정하도록 건의를 해주시고, 장학금도 성적순으로 준다고 하는데 성적과 관계없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학교문제가 제일 큰 문제임.

- 김윤수 태안군화훼협회장

· 풍수해 보험이 빛좋은 개살구 형식임. 일회성에 지나지 않다보니 농가가 선호하지 않음. 원예부문의 경우 뼈다구만 가지고 보고 내부의 작물 내지는 시설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음.

·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겨울 난방을 위해 보온다겹이라고 해서 두꺼운 것을 하는데 가분수 형식으로 골조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보온덮개만 올려 놓으면 결국은 태풍이나 폭설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주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중국은 사용금지 농약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건강이나 검역문제에서 열악함. 검역주권을 강화하되 국내법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음. 식용으로 들어온 생강이 종자용으로, 가공용으로 들어온 쌀이 식용으로 둔갑하고 있음에도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통제 검역기준이 강화되어야 함

· FTA를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별도의 기금이라든지 자금을 마련해 아주 필요한 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 박상무 의원

· 도 조례를 제정하여 재원을 마련해서 FTA 문제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할 때 적시에 대응해야지 얘기로는 필요 없음

-

· 논농업, 밭농업, 과수, 축산 다해서 직불금으로 보상해 주는 쪽으로 가야함. 태안군에서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보전방식으로 주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충남도 차원에서도 지원해 달라.

- 임헌필 농수산물수출담당

· FTA 관련해서 농업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4월 30일 용역발표를 마쳤고, 이 책자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분야별 조치사항이 해당과, 분야별로 있음.

· 중앙에서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해당부서로 넘겨서,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투융자계획을 만들어 실과별로 분석을 해놓은 상태임.

· 직불제와 기금문제는 해당부서별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음.

·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미국, EU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테니 지켜보고 격려를 부탁함

2. 당진군 지역(7. 14, 당진군 농업경영인회관)

○ **참석자 : 25명**

- 회원 : 김용필 대표, 이종현 의원
- 농업인단체
  - 최장욱 한국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장
  - 이희조 전국농민회총연맹당진군농민회장
  - 이수호 당진군축산단체협의회장
  - 김봉규 당진연구회 품목협의회장
  - 정우찬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 권순선 여성분과장
  - 김창선 정책회장
  - 양명세 경종분과장
  - 배병서 송산면회장
  - 서인원 원예분과장
  - 정재일 대호지면회장
  - 홍성윤 합덕회장
  - 김용태 새농민회당진군지회 부회장
  - 정회숙 여성부회장
  - 김은호 대한양돈협회 당진군지부 사무국장
  - 이종섭 농민회 사무국장
  - 최호묵 당진읍회장
  - 김학용 한국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 감사
  - 송낙원 유통분과장
  - 최종웅 고대면회장
  - 한성현 직전회장
  - 장태연 쌀전업농 사무국장

○ **기타 참석자** : 김동완 전 행정부지사, 농업정책과 박성걸 주무관, 농수산경제위원회 한영전 전문위원, 이연수 주무관, 당진군 손종천 농정팀장, 김건준 원예특작팀장

○ 주요발언 내용

- 김용필 대표

· 연구회 발족 및 앞으로 진행방향, 일정 등 기조발언

- 이종현 의원

· 여러분이 낸 의견을 도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도에서 소화시키고, 중앙정부에 전달할 의견이라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음.

· 기대를 갖고 토론에 참석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염려됨. 맡은 바 위치에서 받아들일 부문을 정확히 파악해 농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겠으니 귀하신 말씀 부탁함

- 김동완 전 행정부지사

· 어떻게 보면 FTA가 국제경쟁에 있어서 게임의 규칙인데,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

· 금산군수로 재직하던 '94년도에 WTO에 대한 내용이 언론에 집중되었지만, 이해가 잘 안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WTO에 대한 보완대책이 봇물같이 쏟아질 때, WTO 규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지훈련을 한들 국제경기를 해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 금산군 공무원들에에 WTO 규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했고, 마지막 날 시험을 같이 보았고, 간부들과 공부도 함께 했음

· 그후 10년 뒤 기획실장으로 도에 왔더니 금산군민들이 WTO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선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

· WTO는 일반규약이고 FTA는 국가간에 특별규약을 맺으라는 것

· FTA는 WTO보다 농업분야에서 훨씬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찬하고 공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임.

· 어떤 토론회를 갔더니 국가의 근본이 되는 농업과 농민을 이렇게까지 희생을 시키겠느냐는 원성이 있는데,

· 그문제로 들어가면 우리의 대외경제 의존도가 80%가 넘는 국가 인데 이 시점에서 농업은 농업만 살아가겠다는 입장이 가능할까. 20%로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가지고 과연 우리가 2만불, 3만불 소득수준으로 갈 수 있는가라는 국가의 생존문제가 걸린 것임.

·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러한 규약속에 정부가 무엇을 해줘야 되고, 우리 농민이 갖춰야 할일은 무엇인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음.

· 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도 보조금의 총량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되는 보조금에다 추가로 보조금을 달라고 할 경우 WTO 규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슬기로운 대안을 찾지 않으면 정부와 농민간에 충돌만 생기지 않겠느냐고 했고,

·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농민들이 분명히 살길을 찾자는 것이 오늘의 토론회가 아닌가 생각함. 앞으로 공부 많이 하면서 국가정책쪽으로 어떤 점들을 손을 대야 하는지 연구를 해보겠음.

- 김용필 대표

· 어제 서산·태안지역 간담회에서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대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음.

· 하다못해, 논농업직불금 신청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꼭 바쁠 때 신청하라고 하는데 변동사항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설원예하는 분들은 재해시 골조만 보상해 주는데 안에 있는 시설, 장비에 대한 보상을 왜 하지 않는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음.

- 홍성윤 합덕회장

· 도에서 향후 농촌의 부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농촌의 실정을 아시니까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기본생각은 충남도가 농업도로서 수입개방화 가운데서 식량안보 주권에 대한 기본적인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겠다는 것임.

· 두 번째, 수입개방의 대세를 거스를 수가 없으므로 틈새 농업의 길을 찾아야만 되겠고, 세 번째, 기존의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저리 사료구입자금 지원이나, 한우판매점에서 외국산 쇠고기가 판매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임.

- 이종현 의원

· 기본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감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정책적 제안을 축적하여 집행부 정책에 접목시키는 일을 하겠음.

- 이종섭 당진군농민회 사무국장

· 도에 가시면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접지불금에 대한 예산을 조속히 세워 전체

충남농가가 받았으면 좋겠고요,

·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국립종자원에서 공급한 주남벼 보급종 종자 피해조사를 행정이나 이장들을 통해서 하는데, 설문지 종이쪽지 하나 내미는 형식으로 상당히 탁상행정이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함.

· 또, 충남지역에 키다리병이 만연되어 있는데 기술센터에 도의회에서 예산을 투입해 연구사업으로 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람.

- 이종현 의원

· 이번에 지원된 것은 태풍곤파스 피해에 대한 긴급 지원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된 시군이 있고 안된 시군이 있음.

- 김용필 의원

· 주남벼, 키다리병 등은 시간관계상 인터넷 기사을 참고

· 어떻게 보면 충남도의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문제이지만 종자원 충남지원장과 접촉을 해서 실태조사에 들어갔고,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종현 의원

·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집행부하고 조율도 했는데, 이번에는 지원자금성격이고, 내년부터는 직불금으로 지원됨.

· 전남도 수준으로 직불금을 집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도 거의 확정된 것임. 내용적으로는 다만, 친환경비료지원사업하고 도에서 오는 직불금하고 두개가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친환경비료사업예산 227억과 직불금 199억해서 아마 450억 수준으로 가기가 쉬울 것임

- 최장욱 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장

· 여기 올 때는 의견만 청취하려고 하지 말고 의견을 들은 만큼 어느 정도의 답변을 내주셔야 함.

· FTA가 체결되면서 농업농촌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는 실정인데 보조되는 것을 중단하면 농업이 어려워지는 현실

· 전에, 공산품을 팔아 이득되는 것을 농업에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이고, 농업인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하고 다 맡겼음

· FTA가 체결되면 피해가 몇조로 엄청난데, 도나 중앙정부차원의 극복계획안을 100%는 아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용필 의원

· 이 자리는 FTA가 농업부문에 많은 아픔을 주는데 어떻든 간에 명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마련된 것임.

· 정부가 FTA와 관련해서 농업구조조정과, 폐원한다고 하면 보상해주고, 다시 한다고 하면 경영안정을 위해 현대화 시스템 개선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함.

· 당국자에 요구했던 것은 보상을 해주려면 확실하게, 사업지원을 해주려면 확실한 사업지원을 해줘라. 예를 들면, 경영안정직불금도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도는 생색만 내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굉장히 어려움.

· 충남도가 FTA에 대한 피해상황에 대응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서산간담회에서 제안되었음.

- 이희조 전국농민회총연맹당진군농민회장

· 기금보다는 더 앞서가는 걸 해주어야 함. 기금조성은 어차피 농가들이 부담하는 것임.

- 김장환 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데, FTA는 어차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서산인삼조합에서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인삼의 질이 좋은데 금산쪽으로만 들어가 판매가 되고 있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서산, 당진, 태안 이쪽에도 수삼센타 판매장을 도차원에서 건립해 주기 바람..

· 강화, 증평 같은 경우 수삼센타가 있음. 충남지역에는 금산만 있어 질 좋은 인삼을 헐값으로 내버리고 있으니,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건립해 주시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FTA가 체결되면 인삼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충발연 연구내용을 확인함. 충남도에서 인삼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인삼엑스포도 추진하고 있고, 인삼국제화, 세계화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스큐 조례도 제정함. 당진 '해나루쌀'이 고가치로 인식되어 있듯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삼의 유통이 금산으로 가는 것이라고 봄.

· 예를 들어 서산인삼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면, 전략적으로 가치향상이 부족하다고 볼 것임. 브랜드가 난립하면 승산이 없음. 금산에 금홍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당진 등 서부쪽과 부여쪽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 낭비일 가능성이 많음.

· 군에서 나온 분도 있는데 서산수삼센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한 번 올리시면 의원님도 계시고 어려운 문제 아닐 것 같음.

- 김용태 새농민회 부회장

· 쌀농사를 지켜야 하지만 정부에서 대응을 안해 주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풀어달라고 건의해 주시기 바람. 왜냐하면 최악으로 몰렸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해주시기 바람.

· 친환경비료가 복합비료 성격으로 바뀌고 있는데 모노타일식으로 해야함. 모노타일은 비료 알갱이 속에 여러 가지 성분을 넣은 형식인데, 복합비료는 성분을 환산하여 그냥 섞어 놓은 것임. 내년도에는 복합비료보다는 모노타일 형식으로 비료를 바꿔줬으면 좋겠음.

- 이수호 축산단체 연합회장

· 어제 농민신문을 보니 농업예산 100% 삭감이라는 타이틀로 29개 품목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간 지원되고 있던 모든 품목이 삭감될 위기에 있다는 기사를 봄

· 삭감 대상에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시설현대화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자료에서 보면 FTA 대응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기계화, 현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도의회가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요구

- 김용필 대표

· 정부가 FTA로 인한 지원을 약화하는 사실은 없음.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도 구제역 발생을 보면서 일반적인 축산형태보다는 구조적으로 친환경쪽으로, 경쟁력 강화 쪽으로 나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음. 도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지 절대로 축소하고 농업인들을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게는 하지 않을 것임.

-

· 평상시 도지사든지 읍면에 와서 하는 얘기가 FTA 대응책이라는 것이 장관들도 골치가 아프고, 공부 숱하게 한 교수님도 머리가 빠개지는데,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음.

· 기본적으로 FTA라는 것이 수많은 농산물이 물밀듯이 오는 건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 농산물을 얼마만큼 공급하고, 경쟁력 있는 농사를 짓느냐의 문제이며, 일본에서는 수십년 전부터 대응했는데 우리는 준비성이 없어서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는 해봐야 언발 오줌누기임.

· 당진군이 단호박, 배, 사과, 감자 등 육성하려고 5개년 계획으로 군청하고 기술

센타하고 계획을 짯는데, 해마다 예산이 삭감되어 계획했던 종목들이 시체가 되었음.

· 당진에 두내외가 딸기농사를 짓는데 몇 명 쓰고 다 내외가 함. 물건이 없어 못 팔음. 농촌에 인력이 없으니 소규모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니 규모화만 생각할게 아니라 경쟁력 있는 품목을 선택하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함.

-

· 당진에서 벼종자 보급종으로 피해를 보았는데,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에서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이종현 의원

· FTA가 좋던, 싫던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왔음. 어차피 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마련되고, 고민하는 것임.

· 가장 좋은 것은 정치권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데, 농업인구가 적다보니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함.

· 국민소득 2만불이라고 하는데 농업인, 서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가 않음. 그렇게 때문에 부의 분배가 잘 되어야 하는데, 우리 농업현실 속에서 수출을 해서 경제성장이 되었는데, 기업의 이익중 일부를 환수해서 농업에 투자하는 혁신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함.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할 부분임.

· 이것은 운동해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힘을 합쳐 끌어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함. 뭐 안된다고 하는 것보다 한번 붙어보는게 낫다고 생각함. 어쨌든 농업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임.

·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농업 현실이 당장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맞게 대응하면, 언젠가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봄.

3. 예산군, 홍성군 지역(7. 18, 홍성군 농업기술센타)

○ **참석자 : 15명**

- 회원 : 김용필 대표
- 농업인단체
  - 윤종순 생활개선회홍성군연합회장
  - 이대열 예산군농민회장
  - 장철세 예산군새농민회장
  - 문태화 예산군생활개선회회장
  - 이선범 예산군품목별협의회장
  - 조정기 예산군비육우협회 부회장
  - 김종실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부회장
  - 유미애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총무
  - 전용란 농업경영인연합회 감사
  - 김재원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 이애란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 박명숙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
  - 송미나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 김만동 예산군농촌지도자회 사무국장

○ **기타 참석자**

- 농업정책과 박성걸 주무관,
  농수산경제위원회 한영전 전문위원, 이연수 주무관

○ **주요발언 내용**

- 김용필 대표

· 연구회 발족, 중국과 비교한 농업현실, 목적세신설 등 기조발언

· 13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국 FTA 추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정부는 중국과의 FTA체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결국에는 체결을 위해 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임.

· 체결전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물품이 대부분 중국산임

· 고추 1kg이 6,456원인데 중국은 416원, 사과는 3,268원 대비 330원으로 거의 10배 수준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현실적으로 위기임.

· 공업 부문의 이익을 농촌으로 돌려달라고, 돌려준다 할 것임. 그러면, 목적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

· 여기가 여의도 광장,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중앙연단에 마이크 잡았다 생각하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문태화 예산군생활개선연합회장

·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계절을 뚜렷이 느껴져 살기가 너무 좋음. 농사짓는 이들이 이 좋은 경관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행복인데 행복감을 느끼기도 전에 생활에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좋은 환경속에서 사는 자신을 못느끼고 살음.

· 어차피 수입을 안할 수는 없음. 돌아가는 것은 잘 모르나 거기에 대응해 뭔가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함. 작지만 강한 농업인라고, 강도농이라는 말이 유행함.

· 인삼농사를 짓는데 해마다 많이 느낌. 땀범벅, 흙범벅이 돼 가지고, 사람같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반면 받는 값은 너무 쌈.

· 수확철마다 느끼는 것인데, 중간상인이 마진을 너무 많이 남김.

·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데, 안전한 농산물을 가공해서 중간상인을 안거쳐도 직거래하면 소비자도 안전한 먹거리가 될 것이고, 농부도 어느 정도 댓가가 있을 것임.

· 늘 중국산 안먹는다고 하면서 알면서도 먹고 모르고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농사진거 가공해서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농촌경제도 나아지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되고 있음. 어렵고 마음뿐이어서 어디가서 말을 해도 통하지 않고 되지 않아 안타깝고 답답함.

- 윤종순 홍성군생활개선연합회장

· FTA 대응방안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세운다는게 정말 힘들고 어차피 당해야 될 것 같음.

· 질과 가격면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큰 차이가 없으면 국산을 이용할 것임. 전국 소비자들이 협조해줘야 하는데, 그럴려면 전량 예약수매를 해서 수요공급을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작년도 배추만 해도 공급이 부족하니 가격이 예년에 없게 하늘같이 뛰었는데, 올해 배추를 많이 심어 배추값이 하락해서 피땀흘려 심은 배추를 갈아엎는 일이 벌어졌음. 옆에서 본 어느 회장님이 메주팔아 배추갈았는데 돈한푼 못건지고 갈아엎게 되어 울상을 지었음.

· 공급을 적정하게 조정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해야될 일이라 생각함. 담배처럼 미리 계약을 해서 어느 정도 가격면에서 안정이 되어야 함. 그래야 열심히 농사지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함.

- 김용필 대표

· 질과 가격의 문제, 통계의 문제인 것 같음

· 지난해 통계가 잘못되 농민회 회원들이 고생했는데, 통계청의 수치를 농업인들이나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것임.

- 윤종순 홍성군생활개선연합회장

· 통계는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고, 각 면에 담당공무원들이 있어 회의를 하면 통계부문도 그렇게 안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함.

- 장철세 예산군새농민회장

· 중앙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농민들 생각을 너무 안함.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 농민들 숫자가 적어서 그런지 말이 없어서 그런지 농민들 대접을 안함.

· 공산품을 수출해서 들어오는 돈을 어려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환급을 해줘야지 보탬이 될 수 있을 텐데, 정치하는데 쓰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푸대접하니 참작하여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람.

- 김재원 여성농업인부회장

· 한우를 사육하고 있음. 며칠 전 4마리를 출하했는데 못받아도 2천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1,500만원 밖에 안됐음.

· 소값이 하락하여 우리가 kg당 5,100원, 5,500원씩 출하를 했는데 사먹는 사람은 한근에 1만 8천원~2만원에 먹는다고 하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좀 더 저렴하게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음.

· 쇠고기 사먹는 사람은 비싸고, 파는 사람은 너무 싸고, 사료값은 비싸고, 참 해도해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수입코너 하는 친구 말이 수입고기를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거기는 엄청 바쁘다고 함.

· 전에는 송아지 한 마리당 200이다 250이다 해서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송아지가 낳으면 낳는가 보다, 설사하면 설사하는가 보다하고 가장이 신경도 안씀. 뭔가 대책이 없는 것 같음.

- 김용필 대표

· 국경 없는 전쟁으로 KBS 특집으로도 방송되기도 했는데, 이완구 지사 때 이우

창씨가 해외자원개발공사를 만들었고, 건조시설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예산 집행이 미뤄지고 있었는데 풍파를 겪으면서 집행될 수 있는 길을 열었음. 지난해 당진과 천안 축협으로 옥수수 일부가 들어왔고, 올가을에 시설이 완공되면 옥수수를 생산해서 한국으로 들여옴. 캄보디아에서 옥수수를 생산해서 사료값 안정을 꾀해야만 함.

· 100마리 이하의 소사육 농가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키울수록 밑지고 마이너스 되니까 2년안에 도산하여 줄을 서게 될 상황

- 박명숙 여성농업인사무국장

· 한우·과수를 하고 있음. 강은리 물한농장을 가봤는데 파리가 없을 정도로 청결하였음. 우리 같은 경우 짚 같은 것을 갈아야 하는데 갈기도 어렵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정부에서 배합기 보조사업을 저렴하게 해주고, 한동네 묶어서라도 TMR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기 바람.

· 논에 옥수수를 많이 심는 보조사업으로 그것을 TMR 가루를 먹여 사료 비용이 적게 들어갔으면 좋겠음.

· 배추값이 조금 오르다가 떨어지고 다시 오르면 그게 오른게 아니고 원가로 돌아온 상태임. 장마져서 과일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품질이 저하되서 오히려 팔려고 해도 아예 못 팔음. 기자들이 그런 것을 잘해 줬으면 좋겠음.

· 사료배합기를 축산농가에 보급하면 논에 벼대신 옥수수를 대량으로 심을 수 있고, 배합해서 먹이면 사료값이 그만큼 덜 들어감.

· TMR로 만든 배합사료를 창고식으로 해놓고 하면 다 알게 됨.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이든 정해놓고 지원하면 축산하는데 좋겠음

- 김용필 대표

· 정부나 광역지자체는 개인에게 지원을 하지 않으니, 최소 5농가 이상 열농가 정도로 법인을 구성해서 계획서류를 홍성군을 통해 도로 제출하시면

- 유미애 홍성군 생활개선연합회 총무

· 젖소 사육농가임. 원유값 인상 문제로 26일 여의도 집회가 있어 가야 하는 시점임. 사료값은 비싼데 원유값이 3년전 가격으로 너무 힘들음. 숫송아지 가격은 10만원씩 밖에 안나와 팔아야 되나 고민중인데, 아파도, 설사해도 약값이 더들어가니 전혀 신경쓸수 없는 상황

· 그래도 햇썹인증을 처음 받았는데, 굉장히 까다로움. 햇썹시설을 보편화해서 축산물, 농산물 제품이 수입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 까 생각하고, 보조사업을 통해 활성화시켜 도움을 주었으면 함.

· 축산부문에서 햇쌀이라는게 젖소의 경우 원유에서 해가되는 물질을 제거하는 것인데 농산물이나 축산물도 확대해서 햇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음. 그러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함.

· 교육비용을 10만원 냈는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도 좀 그렇음.

- 김용필 대표

· 축산과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상의를 하겠음. GAP도 그렇지만 햇쌀인증 비용과 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농가들이 많이 말씀하시고, 농가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봄.

· 잔류농약 검사비용도 14만 4천원인데. 그 비용도 가능하면 지원이 되면 좋겠음. 소값이 좋을 때는 똥을 치워도 기분이 좋은데 소값이 떨어지면 나 그만하고 말지 하고 아무 신경도 안쓰는데, 키울수록 경영이 안좋아지니까 그런 말도 하였는데, 그런데 FTA가 파도처럼 밀려오면 다 같은 생각일 것임.

- 이선범 예산군품목별협의회장

· 인삼농가인데 한 10만평 재배하는데, 논에는 5만평 심었음.

· 논에 타작물재배사업이 생긴지 2~3년 됐는데 인삼은 안주고 6년근을 심어도 안줘서 건의를 한바 6년근 심어도 1년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매년 줘야 형평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임.

· 농약 때문에 속을 많이 썩혔는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는 수출을 하지 못함.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니까. 우리나라 기준치가 일반 주식은 0.4ppm이라고 하는데 인삼은 0.04ppm로 봄. 주식보다 약 100배 이상 더 낮아야 한다고 봄. 그런데도 선진국에 가면 걸림.

· 농사를 질적으로 잘 지어서 선진국과 비슷하려고 노력해야함. 중국물품 들어온다고 우리가 막을 수 있나? 그것은 어려움.

·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잘 짓는거라고 생각함. 쌀문제도 사실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1등가는 쌀을 농사지어야 함. 중국산이 들어와도 겁내지 않는 쌀농사를 지으면 되겠다고 생각함.

· 쌀이 전국민이 먹고도 남는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싼 것은 갖다 먹고, 비싼 쌀은 선진국에 팔고, 친환경쪽으로 농사짓는 방식으로 바꿔 땅도 살려서 그야말로 청정지역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함.

· 인삼심고 타작물재배사업비를 받으려고 보니 농업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세 군데를 가야 함. 지방세 과세증명, 농지원부를 떼오라고 하는데, 간소화 해야 함. 공무원이 책상앞에서 이거 저거 떼오시오 라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대면 자기

네들이 직접 확인을 하든지 해야지 도민보고 해오라고 하면 행정이 농민을 괴롭히는 것 아닌가.

- 김용필 대표

· 일반적인 농업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끌어 가기는 매우 어려움. 그래서 인삼이라든지, 국화, 체리 등 다양한 틈새작물을 찾아가고 있음.

· 사실 쌀 80kg에 20만원은 되어야 하는데, 쌀값이 오르면 물가당국에서 벼락을 치는데, 휘발류값은 정부가 잡는다고 하는데 잡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지 않는가

· FTA를 주관하는 과장님이 농업현실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감당 못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대신 적어서 협의를 할테니 그런 방법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음.

-

· 나무로 치면 농촌이 뿌리임. 농사지으면서 이것을 해서 진짜 먹고 살아야 하나, 다 집어치우고 다른데 가서 직장을 구해야 하나 그런생각을 많이 함.

· 다른 공산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기름값 등 모든게 다 올라가는데 그나마 면세유 같은 것을 팍팍 밀어줘야지 농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데 자꾸 줄어서 살길이 너무 막막하고, 농촌사람들을 왜 스스로 망가지게 하는지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음.

· 요즘는 인삼이 싹이 나서 캘 때가 아니고, 한참 자랄 때인데 누가 손을 댔음. 그래서 CCTV라든지 카메라 같은 거 달아주는 걸 지원해서 집에서도 감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람. 들어줄지는 몰라도 진짜 너무 어려운 실정에 있어 하소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림.

- 김용필 대표

· 인삼절도 대책으로 경기도는 CCTV 자금 지원하고 있지 않나? 충남도도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음. 이선범 회장이 제안해서 추진중에 있음.

- 김종실 부회장

· 정부에서는 농업 지원에 주력한다고 말씀하지만 없어진 사업이 많은 상황이라 농촌이 참 어려운 상황임. 농업인이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농업쪽에 소득이 적기 때문에 줄어가는 것 같음. 그래도 힘들지만 대책은 수입산보다 질을 높여야 한다고 봄.

· 친환경농법으로 할 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농산물을 상품으로 만들어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음.

·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인력이 고령화되어 일손이 너무나 부족해 도움받을 기회가 없었음.

· 개인적으로 하는거 말고 정책적으로 보조사업 차원에서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충북이나 경기도는 있다고 들었음.

- 김용필 대표

· 논산에 가보니 몽골, 중국, 조선족 등 외국인들이 와서 숙소도 있어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음. 농업분야가 손을 대면 댈수록 가도가도 끝이 없음. 장담은 못하고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음.

- 이애란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 귀농을 해서 하우스를 많이 받아 처음에 아삭이 고추를 심었고, 올봄에 배추를 다섯 동인가 심었는데 없애야 한다고 따가라고 하였음.

· 계약재배를 했는데 가보니 배추는 잘 됐는데, 논에 물이차서 사람을 들여 작업하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임.

·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걸 없애고 다른 작목을 심어야 하는데, 상인이 안가져가면 피를 보는 것은 농민임

· 귀농하는 사람들이 귀농자금 갖고 농사를 지면 빚을 갚을 수 없음. 몇억 받아 인건비 들여 하우스 짓고, 소소하게 푼돈이 들어감. 귀농자금 받은 사람들이 100% 잘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음

· 기존의 농민도 빚에 허덕이고 있음. 농민은 사람도 아님. 일할 때는 노가다꾼들보다 더 불쌍한 현실임. 거기에대 애들 대학교 가르칠려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농촌은 없을 것임.

- 김용필 대표

· 대한민국 최초로 10년 가까이 있는돈 없는돈 갖다가 예산귀농학교를 설립해서 한 600가정 정착을 시켰었음.

· 귀농자금이 3년거치 5년 상환인데, 금방 10년됨. 3년 동안은 돈을 만지지 못함. 제대로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도 없음.

- 전용란 여성농업인연합회 감사

· 수도작을 하는데 콤바인 8천, 트랙터 5천, 이앙기 3천만원 정도로 농기계 값이 너무 고가임. 요즈음은 백작업을 하기 때문에 1톤차 가지고는 안됨. 백드는 기계, 싣고 다닐 5톤차도 필요하고. 농협에서 임차대를 하기도 하는데 손쉽게 구할 수 없음.

· 노령화되다보니 인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음. 외국인 노동자 용역을 많이 쓰는데 시골 품값은 3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 쓰려면 6만원을 줘야함. 6만원중 5만원 근로자가 가져가고 1만원은 용역담당자에 준다고 함. 시간되면 딱 퇴근하는데 가끔 쓰는 인력으로는 쓰기 어려움.

· 콤바인·이앙기는 1년중 작업기간이 길어야 20일이고, 그냥 창고에 묵혀 두는데, 워낙 비싸서 돈버는가 싶으면 새기계를 또 구입해야 되는 악순환이 되니까 보조를 확대하던지,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었으면

- 김용필 대표

· 농업의 전선에 여성농업인들이 있음. 지금은 최전선을 사수하며, 보병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림.

- 김만동 예산군농촌지도자회 사무국장

· 여성단체 회원님들께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림.농민들의 아우성에 대해 정부에서 눈하나 깜짝않고 있어 농촌이 이런상태가 됨.

- 이대열 예산군 농민회장

·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선 사먹는 시스템이 되어야 함. 지역의 농산물이 중간 유통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을 하면, 지역간의 유대가 공고해지고 지금보다는 먹고살기가 나아질 것임.

- 김용필 대표

· 꼭 필요한 말씀임. 지산지소, 충산충소 그 말씀을 이안에 담겠음.

- 조정기 예산군비육우협회 부회장

· 논농사 3만평 짓다가 지금은 2만평하고, 한우 270마리 키우고 있는데, 요즘 같으면 정말 힘듬. 농기계 보조사업, 기름값, 사료값 등 제가 할 말씀 다하셨는데, 꼭 반영이 되서 농촌에 보탬이 되면 좋겠음.

- 김용필 대표

· 농기계, 사료값, 면세유, 조사료 배합기, 영농법인을 통한 딸기사업 문제, 귀농 가슴 아픈 이야기, 등등의 문제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이어져 있음.

-

· 10년 내지 15년 전에 정부에서 수입해서 특정업체를 통해 농민에게 보급했던 농약이 있는데 요즈음에도 검출이 됨. 이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고 있는데 벌금까지 부과함. 친구가 700만원 벌금물은 사례도 있어 누구한데 하소연 할지 몰라 농수산부에 찾아가 얘기한적 있는데 씨도 안먹히는데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음.

· 폐기처분하려면 먼저 보상을 해주고 해야되지 않나.

4. 천안시, 아산시 지역(7. 19, 아산시 농업기술센타)

○ **참석자 : 14명**

- 회원 : 김용필 대표
- 농업인단체
  - · 이기순 한국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장
  - · 박현희 전국농민회총연맹천안농민회장
  - · 채희성 친환경생산자협의회장
  - · 윤용순 천안시4-H회장
  - · 윤해자 생활개선아산시연합회장
  - · 김병대 아산시농촌지도자회장
  - · 김재길 아산시농민회 사무국장
  - · 이연재 아산시농민회 간사
  - · 김홍자 생활개선아산시연합회 부회장
  - · 김정렬 생활개선아산시연합회 총무
  - · 이성근 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부회장
  - · 김금희 한국여성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사무국장
  - · 신상만 농업경영인천안시연합회 부회장

○ **기타 참석자** : 문화복지위원회 장기승 의원
농수산경제위원회 이광열 의원
교육위원회 이기철 의원
농업정책과 박성걸 주무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성백서 전문위원, 문윤식 주무관

○ **주요발언 내용**

- 김용필 대표

· 연구회 발족, FTA 진행과정, 1948 GATT, 1995 WTO협상, 2001 DDA협상, FTA 추진 가운데 전라북도 의원 이경해 의원의 자결과 2005년 홍콩에서의 해상시위 등 언급

· 중국과의 FTA 체결시 당면현실 - 고추, 과일 등의 사례를 듬

- 장기승 의원

· 좋은 의견 주시면 충남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집이 송악인데, 아버님이 80정도 드셨는데 농사를 짓고, 젊은 사람이 65세 수준이며, 젊어서 농사짓던 사람은 지금은 할 수 없음.

· 시골에 계신 어른들이 편안하게 살다 가실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자의 길인데 정치한다고 다니면서 남의 농사는 고사하고 내땅 농사도 못 짓고 있는 불효자식임. 죄송하고, 존경스러움.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삼. 힘들더라도 함께 부딪쳐서 많은 발전해 주시길 부탁드림.

- 윤용순 천안시 4-H연합회장

· 개방도 문제지만 품질 향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 배추값이 싸다고 하는데 마트가보니 2,500원함. 산지에서 농민들은 몇백원 밖에 못받음. 늘 나오는 말인데 재주는 농민이 부리고 돈은 상인이 챙기는 유통구조가 개방에 앞서 개선되어야 함.

- 김용필 대표

· 시군을 돌다보니 배추값 얘기는 떨어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메뉴

· 배추계약재배를 했는데 가격이 하락하니까 뒤돌아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제도화하여 정책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달라고 하는 얘기임.

- 채희성 천안시친환경생산자연합회장

· 각 지자체에서 그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함. 서울지역 전철타서 보면 도단위에서 지역 농수산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시군단위는 소비자에게 홍보나 교육하는게 없음.

· 우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아파트 부녀회 등 소비자에게 지역농산물이 좋다는 교육을 시키거나, 지역농산물을 사먹도록 홍보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음.

· 예전부터 우리국민들은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자라왔는데, 외국산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농산물에 여기에 맞지 않는 미생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건강상에 문제가 됨.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차차 50년, 100년 이상 걸려가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것임.

· 지금 50대, 60대들은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어 왔는데 지금 청소년들은 전국에서 나는 것, 나아가서 외국에서 나는 것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도 있고 모든 병이 초래된다고 생각함.

- 김용필 대표

· 우리는 미국 등 어떤 지역보다도 중국과의 FTA를 두려워함

· 중국의 채소단지가 산동성이고, 곡물단지가 동북지역인데 FTA가 체결되면 아침에 수확해서 저녁때면 들어옴. 신선류 수입은 아직이지만, 지금도 김치수입량이 1억달러 정도, 냉동 오리와 닭이 일부 들어옴.

· 중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10%정도를 민간부문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과수, 신선한 돼지고기, 쇠고기 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농사지을 필요없음. 상상할 수가 없음

- 김재길 아산농민회장

· 우리 단체는 FTA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이유는 공산품을 팔려고 농업부문의 피해를 담보해가면서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이며, 농업부문에 대한 앞으로의 피해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임.

· 농민들에게 그 대책을 물으러 오신 건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한 거 같음. 농업부문의 대책이 없음으로 해서 피해를 감수하고 가라는게 아니면 그쪽의 대책을 오늘 좀 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함.

- 김용필 대표

· 시군을 돌면서 나오는 공통분모가 예를 들면 1년중 농기계 사용기간이 15~20일에 불과한 이앙기를 비롯해 트랙터는 가격이 높으니 저가로 살수 있는 방안, 면세유 공급량이 줄어드는 문제, 사료값 문제임.

· 충남 16개 시군에서 요구하는게 있으면 기록을 해서 우리 충남 농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생존을 위한 부분이 나올 것이다 생각함.

· 도시에 사는 자식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와 자식의 입장이 있듯이 대통령만 탓할 수만은 없음. 먼저 정부의 대안이 나와야 우리도 얘기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안할 수도 있지만,

· 여기 농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왕따가 되가면서 이모임을 만든거고, 보고서를 채택하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충남도와 정부에 전달하고 함께 투쟁한다는 것임.

- 김병대 아산시농촌지도자회

· 면세유 18리터를 가지고 뭐를 얼마나 하겠나. 그 사람들이 농업인들을 알긴 잘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음. 면세유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문제를 연구하여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음.

· 물가 물가하는데 안오른 물가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쌀밖에 없음. 그런데 쌀값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2006년산 벼를 50%에 시장에 내놓는 정부가 농업인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쌀을 주식이라고도 하는데 2006년 평균소비량이 69kg임. 정부가 농업인들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해결해야 함. 요새 계속된 장마로 농산물 값이 오르는 것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와 대화할 상대는 아님.

· 중소대기업에서 공산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면 다소 얼마라도 일정의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그네들이 농수산물을 수입하니까 농업인, 수산업인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함.

- 박현희 천안시 농민회장

· FTA는 사실 농어민들이 밤을 세워서 하더라도 할 얘기가 많음.

· 현재 농업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WTO 체제, FTA 체제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부분임.

·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다 농사지은 지 15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진짜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요즈음 자꾸 진행되고 있다고 느낌.

· 한칠레FTA를 시작으로, 투쟁이 심화되면서, 국회의원, 시의원 들이 여러 경로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었고, 농림부의 대책 아닌 대책, 대안이라고 당시 말했던 것들이 거의 10년이 흘렀음.

· 사실 대안 아닌 대안을 가지고 농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 또 현실임. 수출농업을 육성해야 한다.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농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그 포커스가, 중심이 많이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낌.

· 안전한 농산물이고 뭐고 간에 이건 이차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농사를 지은 소득으로 교육시키고,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형평성이 맞아야 하는데 갈수록 빚만 늘어난다는 것임.

· 그러면, 정부에서 FTA로 인해 농민들의 소득이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소득을 보전해 줄 것이냐는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대부분 시설을 하는데 융자를 해 주겠으니 시설보완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라고 하는 것임.

· 그러니까 화두는 '경쟁력'이더라고요. 맨날 집에서 생각해봤는데 과연, 우리 농민들이 경쟁력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중에 몇퍼센트가 될 것이냐? 취미농, 고령농 빼버리고 진짜 농사만 짓고 먹고사는 사람들, 전업농들로 봤을 때 과연 경쟁력을 갖고 수입농산물하고 맞서서 과연 살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 벤처 농업인 등 특수한 몇몇 분야에 대한 부분들로 자꾸 호도하지 말라. 친환경농업이다 뭐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그게 대안이 될 수 없음. 그게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잘 안되고 있는게 현실임.

·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서 먹고사는 나라들, 즉 000라고 하는 농산물 수출국가들의 농민들도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그런게 없는데 우리한테 경쟁력을 가지라고 함.

· 자연환경조차도 대한민국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즉, 하늘이 준 경쟁력도 없는 상황에서 토지가격 비싸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 비싼 상황에서 그런 나라에서 나온 농산물하고 경쟁력을 가지라고 함.

· 그래놓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서 모든 정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놓고, 지금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대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무슨 대안을 내 놓나. 면세유 조금 더 받으면 뭐할 것인가.

· 예를 들면, 작년 겨울 배추 한포기 만원 넘는 상황으로 파동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정부가 수입하지 않았나. 그래서 대안으로 계약재배 형태로 가서, 집안 형님이 중간업자하고 계약재배 했는데 가격이 폭락하니 안가져 갔음. 인건비, 운반비를 감안하니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버릴 수는 없고 해서 일부 처리를 해줬는데, 한달이 지나서 비가오고 하니 채소값이 오른다 뭐다 하는 상황임.

· 작년에 배추값이 폭등할 때는 정부가 팔 걷어부치고 물가안정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별짓을 다했는데, 폭락하니까 거들떠도 안봤음. 언론에 이만큼도 안났음. 이게 우리 농민들의 현실임.

· 별것 아닌 대책들만,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유기농업도 하고 몇가지 부분들로 그냥 계속 세월만 죽이고 있는 상황임.

· 이제 떠드는 것도 사실 지쳤음. FTA 관련된 부분들이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 경제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고 운명이라고 하면, 피해받는 농민들에 대한 먹고 사는 문제의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임.

·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정부차원에서 FTA를 막아주던가. 이제 농민들 숫자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책임은 다 농민들에게 넘겨버리고, 몇가지 보조금 몇푼주고, 도시민에게는 농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몇 명 조금 경쟁력이 있는 농민들에 대한 것들은 부각시키고, 못따라가는 농민들은 바보 등신 만들어 버리는 그런 형태의 어떤 농업정책들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함.

- 이성근 천안시농업경영인연합회부회장

· FTA는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인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참견을 하고 있음. 가격이 오르면 누르고, 떨어지면 그걸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안을 못하고 떨어진 채로 방치하여 결국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민들의 적이 된 것임.

· 낙농시장도 원래 자유경쟁체제로 나둬야 함. 어차피 민주주의는 자유경쟁체제이기 때문에. 낙농을 하다가 뭔가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2005년도에 정리했고, 오늘날과 같은 원유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했음. 낙농으로 도저히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음

·유업체에서 우유생산조절제를 시행하면서 유업체에서 우유량을 관장하고 있는데, 밀리면 낙농가에 압력을 가해 생산을 줄이고, 모자라면 또 한없이 풀어주고 함. 그런 불합리를 개선하지 못하고 헤메고 있는지 낙농가들을 보면 답답함. 우유생산조절제라는 것을 빨리 타파해야 되고, 얼마 전에 그게 깨질 상황에 있었음.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민간 개인유업체에 납품하는 우유를 보이콧하여 거래처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우유생산 조절제를 빨리 폐지해야 할 농림부가 알아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했음.

· FTA 관련해서 농어민의 삶의 질, 경제적 보장을 해주어야 책임이 있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정책을 거꾸로 하고 있음. 앞으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상해 주는 것이 원안이라고 봄

· 철저하게 생산비를 감안하고 적정 이윤을 붙여 최저가격 보상제를 실시한 후에 FTA도 FTA임.

· 식량은 국가 안보라고 하지 않나, 국방예산은 엄청나게 지출하면서, 농업예산은 인색하게 하며, 농민의 삶의 질은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공식적으로 식량안보니 뭐니 하는 것은 위정자들이 국가정책의 들러리로 이용하는 국가정책으로 안타까움.

· FTA 관련 제일 책임있는 단체, 참 거대하고 막대한 조직이 농협임.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음

· 농협의 설립목적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가소득을 높여 조합원의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했는데 과연 농협이 얼마 만큼의 역할을 하는가.

· 우리나라에서 제일좋은 직업이 농협직원임. 은행에 비해 보수가 적지도 않음. 은행들은 BIS 때문에 보통난리가 아님. 엄청나게 공부하고 살아남기 위해 굉장히 애쓰는데 농협직원들은 그짓 안해도 됨. 자리지키고, 날짜 채우면 월급은 나오는데 그러한 형태는 농민들의 피와 땀을 너무 손쉽게 착취하기 때문임.

· 일부 농협은 농협의 취지에 맞게 살림을 잘하여 농민들이 농협 때문에 살고 있음. 농협이 농협의 역할을 잘하면 FTA와 관계없음.

· 농협중앙회나 농협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자각을 한다면 FTA 걱

정할 것 하나도 없는데 이미 손을 놓았음.

· 지금 00코리아카드나, 아니면 외국 곡물기업에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 FTA 체결되면 농산물시장부터 외국지사에 넘어가면 농협에서는 할 게 없음. 외국 농산물이 선점하고 이미 시장이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나라 농협에서 뭐를 할 것인가.

· 중요하게 역할을 할 농협이 수면밑에 가라앉아 제역할을 안하고 있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손으로 두드려 가지고, 인식을 시켜야 함.

· 작년에 8일 동안 일본농협연수를 다녀왔는데, 잘아시다시피 일본하고 미국하고 FTA협정하면서 쌀값 때문에 굉장히 고민해서, 결국은 쌀시장이 무너지지 않았음. 그것은 농협에서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품질 아니면 경쟁력을 위해 굉장히 노력했기 때문이며, 선진국으로 갈수록 농협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큼.

· FTA 관련해서 농민들 의식도 깨어나야 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과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농협임. 농협이 개혁되어야 함. 중앙회의 신경분리도 중요하겠지만 농산물유통에 책임을 져야 함.

· FTA 관련해서 만약에 농산물 가격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농협책임이라고 할 수 있음.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안하고 있는 사이에 어처구니 없게도 FTA 걱정을 하고 있음.

· 농민과 농림부, 그 다음에 정부야 당연하겠지만 농협도 그 역할에 충분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 윤해자 생활개선아산시연합회장

· 전업농은 아니나 얼굴을 얘기하고 싶음. 아이들 얼굴이 해맑은데 정말 깨물어 주고 싶을 정도로 귀엽고, 도시의 사람들도 다 각자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있다.

· 중국 서안의 농업현장을 가서보니 기업화가 되어 농사를 많이 짓더라. 농가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편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서 그런게 아닌가 함.

· 농민들의 미래보장이 안되어 있다는 말에 공감함. 농사를 조금 짓지만 주변에서 연로하신 분들의 얼굴이 굳어져 있는 모습, 여기 계신 회장님들의 얼굴도 그리 밝지 않고 굳어져 있는 얼굴이 우리 농업현실을 반영하는 것임. 농민들의 얼굴이 어렵고 힘들어 보이며 너무 많이 굳어져 있음.

- 이기순 천안여성농업인회장

· 낙농을 하고 있는데 이번 구제역으로 걸리지도 않은 소를 다 갖다 묻었는데 아직까지 보상을 못받고 있음. 새로 입식을 하려보니 450~500만원 한다고 하고, 소를 외국에서 수입한다고도 하는데 FTA 할 때 정부에서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음.

· 그전에 젖짜는 소가 300만원 조금 넘어갔는데, 지금 젖도 안짜는 돼지가 200만원이 넘어감. 보상이 너무 적어 피해가 굉장히 심하니 그런 것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 이성근 천안시농업경영인연합회부회장

· 지금 낙농이 이사태까지 온 것은 유업체의 000우유생산이 미루어졌다는 얘기임. 2003년도부터인가 우유생산조절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2005년도에 kg당 20만원으로 그거를 했는데, 지금은 2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그 제도를 빨리 철회시켜야 됨

· 그래야 낙농가도 우유값을 제값 받을 수 있음. 유업체를 자유경쟁체제로 해야됨. 어떻게 보면 낙농가들이 조건 좋은 외국회사라도 빨리 왔으면 함. 그래야 우유값이 오르니까. 그런데 원유값이 답보상태에 있음. 우유생산조절제라는 것을 빨리 풀어줘야, 없애버려야 함. 우리나라 유유 질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정도로 질이 좋아졌음.

- 김용필 대표

· 정부는 1조 5,000억원의 FTA기금조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농업인단체의 생각은 해마다 1조씩 5조원은 확보해야 한다는 것임.

· 정부차원의 기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남도 차원의 50~60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해야된다는 이야기가 서태안에서 나왔음.

· 우유생산조절제 철폐에 대해 관계부서에 파악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중앙정부에 촉구나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 채희성 천안시친환경생산자연합회장

· 오기전에 FTA와 관련해서 농사 안짓는 국민여론을 봤더니 여론이 안좋았음. 농어촌특별세까지 있는 나라에서 도대체 뭘 더 바라느냐, 밑빠진 독에 언제까지 물을 부을거냐는 의견이 많았음.

· 농사짓는 입장에서 화도나고, 한편으로 부끄러웠는데 저부터 의식을 바꿔야 함.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고 있음.

· 농업은 이렇게 많이 챙겨주는데, 개방한다고 벌벌 떨 때는 뭔가 바뀌어야 함.

국제화시대에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하다못해 농기계 말씀하였는데 오다보면 몇천만원 하는 콤바인을 포장도 안 씌워놓고, 청소도 안해놓는 농민들 의식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 김용필 대표

· 충남은 15만 4,000여가구 정도, 농업인 숫자는 약 41만명임. 천안, 아산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업인구는 안늘고 있음. 당진시내 땅한평이 1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것임, 이것은 농사짓는 것보다 자영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임. 쌀값은 평당 2,000원, 3,000원 밖에 안되는 비싼 땅을 매입해서 만원도 안되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는 현실임

- 김재길 아산농민회사무국장

·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이 26% 조금 넘고, 일본은 42% 정도됨.

· 우리나라가 FTA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한번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알고 있음.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는 이점도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우리나라 식량자급율을 높이는 법제화라든지, 식량안보차원에서 보호되는 장치가 있어야 함.

- 김용필 대표

· 일본의 기계성능은 골프장을 바로 로터리가 가능하도록 해서 식량위기시 바로 생산체제로 돌입한다고 할 정도임.

· 식량위기시 우리가 골프장을 수용한다고 하면 난리 나는데, 식당들어갈 때 우리는 신발벗고 들어가면 종업원들이 바로해 주는데, 일본사람들은 뒤로 가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감. 근본적인 의식상황이 틀림.

- 김홍자 생활개선아산시연합회부회장

· 한우 350두를 사육하는데, 사료값이 월요일부터 700원이 오름. 쌀값이 안오른다고 하는데 요즘 한우가격이 반토막으로 폭락되어 있음. 그렇다 보니 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밭에 풀이나면 그걸 뽑아 여물로 갖다 줄 정도임.

· 저희는 그래도 건초라든지 반 이상은 자급하는 편인데 한달에 한 3,000만원 들어감. 작년같은 경우 한 7~8천원 정도 나왔는데 고급육으로 키워 A+가 95% 정도 나오는 그런 농가로 한 마리당 1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반토막임.

· 옥수수, 밀 같은 곡물가격이 감당이 안될 정도로 많이 올라 있는데 체계적으로 사료값을 보조해주는 것이 전혀 없음.

· 고급육을 키워 A+가 나오면 예전에 3천만원 정도 주고, 20만원씩 보조해 주던 이런 정책들이 다 없어졌고 50%까지 보조되는 것이 지금은 20%도 안되는데 이런 것은 300마리 키우면 30마리 밖에 안나옴.

· FTA로 인해 칠레산, 캐나다산을 비롯해 수입쇠고기가 들어오면 설자리가 없음. 고급육으로 키워나도 먹는게 한계가 있음. 돼지고기 삼겹살 한근에 1만 8,000원인데 한우고기 9,000원이 되도 안먹음.

· 한우자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직접 발로 뛰어야만 학교에 납품이 되고, 우리나라 먹거리를 아이들한데 줘야되는데 그게 안됨.

· 이런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함.

· 사료값이 너무 올라 정리를 하려고 한다. 차라리 구제역이 걸려 다 죽었으면 보상이나 제대로 받지. 초창기 경상도 지역은 한우 보상이 거의 나왔는데, 룰루랄라 놀러 다니다고 하더라.

- 신상만 천안시농업경영인연합회 부회장

· 천안에서 낙농 100여두를 하고 있는데, 30년 전에는 공급선을 자유롭게 옮길 수가 있었음. 유업체에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냐면, 우유가 조금 상하면 빨간 물감을 타서 보내고 값을 깎아 놓는 식으로 축산농가를 울렸음. 낙우회장도 겸하고 있고 더 좋은 조건의 유업체가 있어서 23농가가 다 같이 다른 유업체로 옮기기로 했는데, 집유차가 왔을 때 23농가가 뜻을 같이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농가만 옮겼음.

· 여기계신 분들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을 것임. 경험해 보니 앞장서서 이런일을 해야할까 하는 회의도 있었음.

· FTA를 슬기롭게 견뎌내기 위해서는 농민 개개인의 손해를 감수하시고 전체적인 농민의 이익을 위해 다가설 때 뭉쳐줘야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정책보다는 농민의 자세도 변화되어야 함.

- 이금희 천안시 여성농업인연합회 사무국장

· 낙농을 하고 있었는데 구제역 때 다 묻었음. 초창기 구제역에 걸린 돼지를 매몰할 때 나라에서는 무관세로 수입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양돈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취할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했음.

· 한 마리당 남는 이문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대량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에 양돈 2,000두 규모로 하고 있는데, 제 궤도에 올라가자면 보통 2년이 걸림.

· 지금 돈가가 묶여 있는 상태로 높은 종가에다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많이 올라 있어서 출하시기가 되면 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인데, 또 FTA협정을

맺는다면 과연 우리나라 축산을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될 건지, 이참에 다른 것을 해봐야 되는지 고민중인데 실질적으로 포기상태고, 한숨만 나옴.

· 정부에서는 이런일이 있을 때마다 융자해준다고 하고, 3년거치 연이율 3%, 5%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은 거의 안되고, 막상 그 자금으로 운영하다 보면 3년 내에 그걸 갚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함. 나중에는 더 높은 이율이 형성되는데, 결국은 어려울 때 돈을 내줘서 정부에서 농민을 상대로 돈놀이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니 처음 생각했던 대로 보조로 지원되었으면 좋겠음.

- 이연재 아산농민회 간사

· 국회에서 예·결산과 청문회시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의문이 생김.

· 국방부는 나라를 지키려고 국방비 올리려고 싸우고 있고, 복지보건부는 나름대로 자기들 특성에 맞는 주장을 하는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민과 관련된 것을 좀더 축소시키고, FTA 등 국가정책에 순응만하고 있지 실제, 장관이 나와서 농민을 위해 싸우려고 이러는 것이 없음.

·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해마다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해 농민을 위해 이런 것은 이렇게 해달라 누차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업이 주가 아님. 정부의 정책만 얘기하려고 하고, 실제 농업이 축소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앉아 있음.

· 식량자급율과 관련해 진흥지역이 얼마인지, 한우, 낙농가들이 한미FTA를 많이 걱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연구소 등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고 그 속에서 대안과 정책을 내어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보고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음.

- 박현희 천안시농민회장

· 3~4년전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일반자영업자 등, 실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고 직불금을 신청해 난리가 난적 있음.

· 현재, 헌법, 농지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는데 무늬만 농사짓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사정을 보면 세법하고 연관되어 있음.

· 투잡 목적이든, 은퇴하여 귀농을 목적으로 하던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데, 실제 농사를 안지으면 임대를 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임대계약서를 안써줌. 지금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농협이나 정부로부터 많은 세제혜택이나 기타 보조, 융자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 점점 기피하고 있음.

· 그래서 수도작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많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기업도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듯이, 농지도 소유와 경작이 분리되었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농사짓는 사람에게 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혜택을 확대했으면 좋겠음.

· 지금 현장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계약서 굳이 요구하면 농사짓지마, 다른 사람 줄섰어 이런 형태임. 중요하게 생각할게 뭐냐면 실제로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짓는 농민수가 해마다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 이유가, 힘드니까 농지를 팔 수밖에 없는 것임.

· 농협이 제역할을 못함으로 해서 전체 농지 절반이 농협거임.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니까 대출받아 생활함. 작년에 비로 포도 열과로 절반밖에 못 따고 등록금 모자라니 농협에서 대출받고 그게 몇 년 쌓여한귀퉁이 정리해서 갚고, 또 정리를 하다보니 농지가 줄 수밖에 없고, 임차라도 해야 되는데 임차농지에 대한 부분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이므로 소득을 감안한 정책을 항상 기본으로 깔고 생각해 주기 바람.

·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늬만 농사꾼인 사람들에게 가는 부분은 되도록 없애는 것이 맞음. 당진은 심각함.

5. 부여군, 청양군 지역(7. 20, 부여군 농업기술센타)

○ **참석자 : 16명**

- 회원 : 김용필 대표, 안승원 교수
- 농업인단체
  - 유승종 한국쌀전업농청양군연합회장
  - 황인동 청양군임업후계자회장
  - 전동수 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장
  - 이강수 청양군한우협회장
  - 정한용 청양군양계협회장
  - 서병옥 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장
  - 박성애 한국여성농업인부여군연합회장
  - 김태환 부여군4-H연합회장
  - 김기석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장
  - 이진구 부여군농민회장
  - 김순성 한국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자협의회부여군지부장
  - 조성훈 한우협회 부여지부장
  - 이관호 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부회장
  - 노승호 사무국장

○ **기타 참석자** : 유병기 충청남도의회 의장
농업정책과 박성걸 주무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성백서 전문위원, 문윤식 주무관
부여군농업기술센타 유호석

○ **주요발언 내용**

- 김용필 대표

· FTA 진행과정, 중국과의 FTA 체결시 당면 현실, 연구모임 진행과정 및 앞으

로 보고서 작성 등 언급

- 유병기 의장

· 정부가 FTA 협상하기 전에 농민단체와 약속하기는 공산품 수출이 잘되면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지원금은 줄어들고 농민부담을 늘고 있어 상당히 어려움.

· 그래서, 충청남도의회 차원에서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에 대한 연구모임을 구성했고, 농업인들의 의견, 앞으로 어느 부문에 피해가 많을 것인지 등을 파악해서 FTA를 체결했을 경우 농업인의 국제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단위에서 건의할 것, 중앙에 건의할 것 등을 구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찾으려고 함.

· 정부가 1년에 3~400억 무역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만 투자하고 농민에게는 별로 투자가 안되고 있음. 정부가 약속을 지키면 농업인들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파악하니까 기탄없이 좋은 의견 내주셔서 정책입안하는데 도움주기 바람.

- 안승원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부교수

· 3년전부터 농사를 해보니 생각대로 안되어 어려움이 많이 있음. · 단체장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전체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의 토론이 되었으면 함.

- 김순성 부여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자협의회장

· 중국과의 FTA가 타결되면 엄청난 타격으로 농민들은 그야말로 살길이 없을 것임. 막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함.

· FTA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은 친환경쪽에서 전국에서 하위권임. 친환경농사를 지어도 판로가 문제이며,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에는 물류센타를 지원해 주기 바람..

· 우선 발판이 되려면 지원사업이 뒤따라야 되는데, 전라도나 강원도의 친환경지원사업예산이 적게는 2천, 많게는 3천까지인 반면 충남도는 지원이 미미하고, 친환경 후계자들은 말만 친환경이지 대외적인 것은 세우지도 않고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 아쉬움.

· 친환경농자재 지원이라고 도에서 1억 2천정도의 예산을 부여군에 지원하고 있음. 실제 충남도에서 9,500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고 부여군에 약 2,050호 친환경 인증농가가 있는데, 인증 농가수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음. 1억 2천 도비로 2,000호 지원하려면 택도 안됨. 힘들어도 친환경이 가야할 길을 관심가져 주시기 바람.

- 이진구 부여군 농민회장

· FTA 체결되면, 농업부문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체결하면 안됨. 식량자급율이 23, 24%라고 하는데 자주국가라고 하면 50%이상은 되어야 함. 한시적으로 자급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쌀이라든지, 모든 식량생산 기반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볼 때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보니, 열의를 갖고 FTA 체결이 안되도록 결의문 보내고 하는 것 등등을 농민단체와 함께 진행하기를 바람.

- 김기석 부여쌀전업농회장

· 우리쌀도 친환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더구나 FTA가 타결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품질로 승부를 해야함.

· 친환경으로 하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음. 미생물, 액비 등 자재가 다 주위에 잔뜩 있는데 모르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지시켜서 농사짓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함.

· 당면한 쌀문제는 키다리병인데, 관계기관에서 키다리병 하나 제대로 못잡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니 적극적인 검토를 바람.

· 충남쌀은 하위권으로 전라도 보다도 더 싸다고 인식되어있기 때문에 밥맛을 좋게하는 퇴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람.

- 안승원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부교수

· 친환경은 처음에 어렵지, 체계가 갖추어 지면 쉽게 할 수 있고 자재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 활용하면 됨.

· 품질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 NPK를 원료로한 비료공급 시 과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 적합한 지원이 필요.

· 개개인이 살기 위해서 농민들이 노력해야 하는데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예를 들어 세 농가에서 다섯 농가 정도가 품앗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 2~30명 정도의 친숙한 연구회, 수백명의 연합회에서 각자 해야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함.

· 너무 멀리 있는 정책보다 품앗이 단위에서, 연구회 단위에서, 연합회 단위에서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알찬 농업으로 소득증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자재를 한명이 다 만들어서 농업경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몇 명이 원자재를 공동구매하고 좋은 자재를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면 윈윈하는 조직형태가 될 것임.

- 김용필 대표

· 키다리병 관련 언급(5.2 보도, 5.9 대책회의, 6. 14 불량볍씨 시인, 6. 17 종자원 현장확인 등)

- 전동수 청양농촌지도자 회장

· 친환경농업을 2002년도부터 했고, 지금은 무농약 인증을 받았는데 첫째는 판로가 문제임. 제값을 못받고 있어서 지금 어려움.

· FTA가 나라간 무역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지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수출하고, 감세도 하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 쌀에 대한 말을 정부에서는 한마디도 않음.

· 일정의 돈을 버는 업체, 예를 들어 핸드폰 하나 팔면, 다만 10원씩이라도 떼서 농민에게 보상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이관호 부여군쌀전업농연협회 부회장

· 농어촌공사에서 대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논을 사주는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농사를 지어 보니 벼가 워낙 안자라다 보니, 그 벼를 팔아가지고 그것 갚기도 어려움. FTA를 타결한다면 이자부문이라도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면 좋겠음..

- 유승종 청양군 쌀전업농연합회장

· FTA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집회를 해보았지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생산비를 절감해야 함.
생산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노동력이 고령화되어 상당히 어려움.

· 요즈음은 기계나 모든 사업이 50% 자부담으로 하는데 그걸 갚을 능력이 없어 죽으라는 것과 똑같으니 이전처럼 20% 정도로 해주시고, 논에 콩을 심으라고 하는데, 쌀전업농을 육성해 놓고 콩을 심어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를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부여나 청양 지역은 맞지 않으니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음.

· 지금 소값이 하락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기금이라고 해서 17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더 떨어지고 있는데도 어떤 대처방안이 없음.

· 뭐 구제역으로 돈을 다 썼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한우농가 도산문제가 상당히 심각함. 쌀직불제처럼 한우직불제같은 것으로 사료비를 지원해서 한우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 조성훈 한우협회 부여지부장

· FTA로 과연 앞으로 농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축산이 이 땅에 존재할 것이냐

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해 보았음.

· 한우농가가 곤란에 빠져 있는데 구제역도 구제역이지만 80% 이상이 정부정책 잘못임. 구제역이 발생되니 FTA협상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축산선진화방안이라는 것을 꺼내 놓았는데 거의 100% 규제임. 법을 만들어서 하고있던 것을 하지마라. 하면서 500만원 벌금이다. 3년형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있음.

· 축산농가가 잘못해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나. 방역을 잘한 분은 피해갔겠지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듯이 접촉뿐만 아니라 공기를 통해서도 발생이 되는데, 잘못은 전부 축산농가로 지적되어 있음.

· 정부대책도 친환경임. 햇썹이라 해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컨설팅비가 900만원인데 이게 애들 장난인가? 컨설팅이 별거 아니고 서류만드는 것임. 금전출납부, 축사주변환경정리, 이런 것임. 정부에서 장려금으로 350만원 지원해주는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임.

· 축산선진화방안은 내년부터 허가제로 한다고 것으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허가받기 위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감. 최근 지은 축사는 별개이지만 최소한도 10여년 전에 지은 노후화된 축사를 양성화도 않은 상태에서 허가제로 맞춰 개조하고 투자한다면 많은 돈이 들어감.

· 1kg을 먹여 살로 얼마나 가느냐는 것을 사료효율이라고 하는데 거의 85%~90%임. 그래 약 10% 정도는 적자가 나는 것임. 7. 12 시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규제하지 말라는 것임.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게 경쟁력임. 도태되는 것은 도태되게

· 3년전 한미FTA 시작될 때 많은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해 걱정을 했고, 촛불집회가 심할 때 대통령이 사료값 지원해 주고, 폐업보상해주고, 축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와서 쑥 들어감.

· 그 당시 대통령이 미국 다녀와서 미국산 쇠고기 아주 맛있고 질 좋다고 국민들에게 쇠고기 먹으라고 홍보하여, 지금 미국 쇠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오는데 한우가격은 반토막이이고 한우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런 정부를 믿고 뭐하자는 것인가

· 결론적으로 규제 일변도로 몰지말고, 경쟁을 위해서 내버려 두면 스스로 하는 것임. 그게 자생력임.

· 한우사육농가도, 쌀농가도 전부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 칠팔십대임. 한미FTA 시작될 당시 폐업보상제가 거론됐었는데 제대로 실시하라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손털고 나올사람 굉장히 많음.

· 이 정부 들어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 축산이라든지 농업관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나. 이렇게 되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도 규제일변도로 농업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임.

- 이강수 청양군 한우협회회장

· 자료를 보니 축산피해율이 73%임. 청양군 소득은 쌀이 1위, 한우가 2위인데 한우값이 반토막 나서 안타까움. 사육두수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시가하락은 작년 7월부터 예견되었고 정부도 알고 있었지만 대책이 없었으며, 지난번 금융위기시 한우농가에 사료자금을 지원해줘 지금 상환기일이 도래되었는데 연장해 주기 바람.

· 언론에서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서 흑자인데 투자는 않고 돈이 쌓여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이 굉장히 아팠음. 농촌경제가 FTA 때문에 다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돈 쓸데가 없어 참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함. 농업보조액을 대폭 증액해야 함.

·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분명히 제공해줘야 소비가 되고 우리도 살 수 있음. 정부정책에 호응을 했으면 써줘야 함. 친환경농축산물에 대해 분명한 예우가 있어야 함. 이번 구제역 발생농가에서도 인증농가와 안받은 농가와 사료를 똑같이 부담 해 줬음.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라 이행한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당한 것임.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에 대해 질타를 하고 싶음.

- 김용필 대표

· 정부정책을 쫓아가면 망하고 반대로 투자하면 부자되는게 우리 농업의 현실아닌 현실로 자리매김했음.

· 미국같은 경우 직·간접적인 보조가 상당히 많으면서, 후.개발국가에는 그런 부분을 하는 것에 규제를 하고 있음.

· 1948 GATT, 1995 WTO, 2001 DDA, 2003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 자결, 2005년 홍콩에서 해상시위 등 언급

· 문제는 FTA협정시 보조금에 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것임.

· 우리나라 어업인의 약 48%가 면세유를 통해 출어하고 있는데, 중국과 여러나라와 협상시 가장 중요한 부문이 어가들에 대한 면세유 지원을 중단하라는 것임. 수산업이 무너지는 것임.

·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특혜와 보조를 주면 관세가 없어진 가운데서 자국의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와도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임.

· 이러한 가운데도 5월 26일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 회의에서 첫 번째로 보조금의 대폭증액을 요구했고, 두 번째로 FTA 진행과정에서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 시군비 하지말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부금 형태로 아무 조건없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라고 하였음. 농업인에게 지원시 융자를 하면 담보댈 능력이 전혀 없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전달함.

· 세계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저농약인증을 지난해부터 안하니, 농가들의 시위로

2015년까지 유예함. 충남의 무농약이상 농가가 2000호 미만, 농가수가 15만 4,000호인데 약 1.8%수준임. 유기농은 1%도 안됨.

· 친환경농업육성법이 통과되면 충청남도친환경농업육성조례를 수정해서 비단 쌀뿐만 아니라 과수, 원예, 특작, 한우까지 전체적으로 충남도가 빨리빨리 육성해서 계약재배를 통해 물량을 확산시켜야 함.

- 서병옥 부여군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

· 한우와 2만 5천평 정도 수도작을 주업으로 하는데, 쌀생산과 관련해서 농자재나 기름값, 비료값이 모든게 상승함. 모를 이앙기로 심으면 3일이면 끝나는데 3일 쓰려고 3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사야 되는가?

· 농업기술센타에 농기계대여제도가 있어 작업기는 어느정도 갖춰 있는데 이앙기가 두 대 밖에 없음. 1개 읍면에 1대, 안되면 2개 읍면에 한대라도 있으면 농기계 구입자금이 줄어들고 생산비가 낮아질 것임.

· 또 면세유 공급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음. 쌀이 싸더라도 약 7~8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함. 쌀이 남아 돌아서 타작물재배를 하면 1ha에 300만원씩 주는데, 직불금 100만원주면 400만원임. 여기에 청보리를 재배하면 약 100만원 정도 지원하게 되어 약 500만원 정도됨.

· 축산농가들이 청보리 한번 갈아내고 조사료용 벼재배 하면 쌀 과잉생산을 막을 수 있겠고요, 조사료 수입의 대체효과로 달러나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임.

· 한칠레 FTA를 추진하면서 포도하고 과수농가들은 폐업보상금을 줬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음. 축산도 미적거리지 말고 건의해서 축산폐업보상금제도를 실시하면 일정부문 도태될 것임.

· 3년전에 지원한 사료비 갚을 때 됐는데 올해 한우가격이 하락되었음. 인권위원회에 건의를 해보니 어렵다고 함. 그러면 당시 사료비 지원은 한우값을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임.

- 김용필 대표

· 시군 간담회 여러군데서 하다보니 도의원이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음.

· 실제적인 보고서를 채택하여 국회의원에게 한권씩, 정식으로 청와대에 전달을 하고, 도 차원에서 촉구결의, 건의문을 만들고, 충남에서 선택한 내용이 타 광역자치단체와 어떤지도 비교, 분석해서 전달하겠음

· 소값이 kg당 8~12천원 하다가 4~5천원으로 하락했는데, 600kg에 4,000원씩이면 240만원이고, 송아지 살 때 가격으로 한 15개월 키웠을 테고, 보나마나 키우면 키울수록 밑지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 가슴이 메어짐.

-

·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지난번 송아지 유·사산이 많이 일어났음. 저부터 예방접종을 했는데, 조·사산이 여덟마리였고, 접종 후 폐사를 해도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공문이 있었음.

· 법정전염병을 정부에서 행정적 책임이 없는 상태에서 약을 공급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하나. 예방접종을 해서 피해받은 부분이 있다면 수의검역원에 상의를 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주었으면 함.

· 축산을 하다보니 축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함. 분뇨처리를 지자체나 축협같은 기관에 보조를 해줘서 고급 유기농비료를 만들어서 순환농법이 되게 과수, 원예, 벼농사 짓는데 활용하면 분뇨문제도 해결되니 분뇨처리시설, 바이오퇴비시설을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시길 건의함.

- 정한용 청양군양계협회장

· 양계를 하고 있는데 면세유를 갑작스레 15리터로 너무 줄여 놓아 걱정을 많이 함.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도 그 부분을 발의중에 있고, 시군에 다니다 보니 참 뜨거운 문제임. 강사용 농민회 의장이 강력하게 말했는데 공감을 하는 부분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이제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그렇게 하겠음.

- 박성애 한국여성농업인부여군연합회장

· 20, 30, 40대 때에는 우습지 않게 일을 벌였고, 일을 했음. 여성농업인 모임에 가니 병신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음. 남자들도 하지만 그 안에서 제일 많이 일한 사람이 농촌여성이라고 생각함.

· 여성농민회를 제외하고 농민단체는 한국여성농업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30대, 40대가 없음. 50대가 넘어가서 몸이 말을 안들으니 이제 무서워짐.

· 의원님 그 옷을 한 번 사려면 쌀 한 가마 주면 되지만, 내옷은 못사도 식구 다섯명 것을 사려면 하우스 반동값은 줘야함. 보험을 들려고 보니 보험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함.

· 여자들이, 농민들이 40대가 넘어가면 오다리가 된다고 함. 앉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벌어져서 오다리가 많음. 거기에 허리가 굽으면 00한다고 함. 기계는 임차하든지 고치면 되지만 우리 부녀자들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는 여자 농민이 없음.

남자들이 기계라고 한다면 여자는 아마 호미라고 생각함. 실정이 그러함.

· 엊그제 수해를 많이 당했는데 이파리가 파랗다고 피해를 인정해주지 않음. 농민들은 장마를 대비를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수초작업 등을 할 때 하자 없이 앞질러 공사를 한다면 부여군이 피해가 많지만 덜보지 않을까 생각함.

· 보험도 들 수 있게끔, 농민들에게 특별한 보험을 들게 해서, 아니면 싹쓸이로 보험을 들도록 해야 함. 왜냐면 5,6,70대 죽고나면 우리 이런 것 소용 없음. 면세유 갖고 지금 장난하는 것인가. 소용없음. 40대 인력도 없음. 5,6,70대들이 오다리 안되고, 허리, 등 굽지 않고, 허리 뒤로 안넘어가고 그래야지만 모든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

· FTA가 어쩔 수 없이 체결된다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식량자급율임.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7~8만원이 아니라 70만~80만원 주고도 쌀 사기 어려울 것이므로 반드시 생산기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적자만 보고 지을 수는 없으므로 모든 농가에 월급주는 방안을 제안을 함.

· 최저임금이 시간당 4,750원 정도인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함. 하다 못해 100만원씩이라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음. 월급 100만원씩 주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는 모르나 1년에 3조 5천억이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고, 농민들을 더 불러들일 수 있고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봄.

- 김용필 대표

· 아산에서 나온 말씀인데, 도시민들이 지적하기를 농업인들은 왜 달라고만 하냐고. 만약 농가들에게 최저 월 100만원씩 준다면 난리가 날 것임.

· 농업경영인회, 농민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직불제임. 논농업직불제라든지, 폐업지원이라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직불제 등을 정책부회장이나 정책단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

- 황인동 청양군임업후계자회장

· 주로 딸기와, 표고 밤농사를 짓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 충남의 임업쪽에서 3%만 피해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97%는 아마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인지 의심됨.

· 자꾸 친환경쪽으로 판로를 얘기하시는데, 우선 제일 걱정되는 것이 FTA가 체결되면 특히, 중국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밤이나 표고는 아마 시장에도 못 나갈지도 모름. 이 정도로 가격경쟁력이 떨어짐.

· 똑같은 논에서 짓지만 생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감. 또, 자기가 먹을 것은 농약을 덜치고, 파는 것은 예쁘게 하느라고 농약을 많이 쳐서 파는 농민들도 사실 있음.

그런데 앞으로 환경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데, 올해부터 저농약 인증을 없앴음.

· 농약을 개발했는데 화학비료를 안주고 액체로 주려고 보니 통당 50만원이 들어감. 비료값은 20만원이면 되는데, 농약을 안치니까 친환경으로 인한 비용이 밤농사 1년 소득의 70%가 생산비로 들어감.

· 그렇게 친환경으로 농사를 지어놓았는데 농약 많이 친것이나, 안친 밤이나 실제 판로에서는 구별이 잘 안돼요.

· 공산품 팔아서 남는 이익의 1%라도 농민들에게 지불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음.

- 김순성 부여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자협의회장

· 충청남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는 지역별, 품목별로 군단위로 , 부여는 원예, 홍성,예산,당진 쪽에서는 딸기 주문량이 많고, 벼수매는 그 쪽에 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여군 RPC에서는 5만 4,000원으로 도에서 가장 낮은 가격에 수매를 했음.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전에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음.

· 학교급식이 발단이 되서 쌀부터 시작해서 시설채소, 과일까지 전부 내가고 있고, 도 친환경협회에서도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도지사도 여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판로가 지금 당장은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친환경농사를 짓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박성걸 팀장님. 사료값에 관련된 인권위 건의내용을 파악해 달라. 농가들의 상환문제, 고통이 뭔지 파악헤 주시고, 예방접종 후 폐사율을 책임질 수 없는 공문이 실제로 어떻게 농가에 전달됐는지도. 그래서 임신한 소들 접종후 조산하는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안승원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부교수

·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듬. 자재값이 많이 올랐음. 농업소득으로 상환해 나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음. 특히, 유류비가 상당히 오르다 보니 잠깐 나갔다 와도 몇만원씩 소비되는데 농업소득에서 창출되어야 하므로 기술을 정확히 실천하고 지식경영으로 꼼꼼히 챙겨봐야 함.

6. 보령시, 서천군 지역(7. 21, 보령시 농민회관)

○ **참석자 : 15명**
- 회원 : 김용필 대표, 이준우 의원
- 농업인단체
  - 신의식 한국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장
  - 김명자 한국여성농업인보령시연합회장
  - 오무광 한국쌀전업농보령시연합회장
  - 권기석 농촌지도자보령시연합회장
  - 나창균 농업경영인서천군연합회장
  - 박성자 한국여성농업경영인서천군연합회장
  - 채규서 한국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감사
  - 추세환 한국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부회장
  - 이규태 한국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감사

○ **기타 참석자** : 행정자치위원회 명성철 의원,
농업정책과 박성걸 주무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성백서 전문위원, 문윤식 주무관
보령시농업기술센타소장 박성제
보령시농정과장 백태호

○ **주요발언 내용**

- 김용필 대표

·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WTO 신자유무역이 농업과 농촌, 농민의 삶의 질을 붕괴시킨다고 해서, 전라북도의회 3선의원인 이경해 전 농업경영인연합회장이 자결 했고, DDA, FTA협상에 대한 농업인의 자각과 위기의식의 도화선이 되었음.

· 미국과의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7월 1일부터 한EU FTA가 발효되고 있고, 정부가 중국과의 FTA체결협상 분위기조성에 들어가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국과의 FTA가 국가발전에 기여한다고 했을 때 농업경영인연합회, 농민회 등 농미단체들이 지난 15일 대안없는 중국과의 FTA를 반대하는 시위도 있었음.

· 이 시점에서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가 도의회 차원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찾기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25일까지 시군을 돌면서 진행하고 있음.

- 이준우 의원

· 태어나 살아왔고, 후손에게 물려줄 농촌이, FTA라고 하는 위기로 약소국가인 한국의 농업이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지만, 단체대표 여러분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과연 지금 농업으로만 자식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현실이 어려움. FTA문제는 농업뿐만 아니라 임업, 수산업, 농업관련 공사까지 광범위하게 토론하고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해야 됨.

· 식량자급률이 26.1%밖에 안되어 많은 양의 농축수산물 수입을 해야 먹고사는 나라가 됐는데, 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음.

· 쌀이 지금 남는 것 같지만, 수 년 안으로 쌀문제도 결판이 나고, 쌀을 잘 지키면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위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생명인 쌀, 농업을 지키는 것을 보람, 사명으로 여기고 오늘 진지한 토론과 대안으로 충남농업발전방안을 제시하고 FTA에 대응하는 좋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바람.

- 명성철 의원

·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모임이 충남농업발전의 계기가 되기 바람.

- 박성제 보령시농업기술센타소장

· 예나 지금이나 농촌은 어려우나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으며, 개방될수록 농업하시는 분들은 걱정인데, 농업인들이, 농업자원이, 전체 국민을 먹여 살릴 입장이 안되니 수긍하기 싫어도 일정부분은 어차피 개방될 수 밖에 없고, 해야 되지 않나.

· 농산물의 품질과 식품의 안정성만 잘해도 개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함. 중국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오고 있지만, 품질 좋고 안정성 있는 것은 수출되고 있음. 오늘 사무실에서 친환경인증 50명 계획에 신청자가 70명 오셨는데 품질과 친환경 농산물 안정성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산·지도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림.

- 권기석 보령시농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 FTA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농업에 굉장히 불리한 것만은 분명함.

· 일본에서 일주일 동안 홈스테이하면서 느낀 것은 세계에서 농산물 신뢰도가 높다고 함. 토마토 재배하는 사람은 토마토 농가에서, 소 사육하는 사람은 소사육농가에서 자면서 관계자와도 의견교환을 했음.

· 하사시라는 사람은 토마토를 5천평 정도와 호밀을 재배하는데, 마지막 과정으로

실어오는 것을 못봐서 가져다 팔아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농협에서 다 실어다 팔아서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얼마에 팔았는지 알지 못하고, 팔고난 뒤 값을 안다고 했음.

· 그런 정도로 일본농협은 유통을 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집회나 데모라는 것을 구경하지 못했음. 농산물 수입할 때 집회하지 않는가 물으니, 정부에서 토마토를 수입해서 판매가 되면,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이 토마토농가에게 환원된다고 함. 그래서 가격에 상관하지 않고 농사에만 전념한다고 함.

· 농촌진흥청 폐지한다고 해서 이 정부 들어서서 처음 집회를 해서 간신히 살려놓았는데, 2009년산 쌀이 2만 6천원 나갈 때 갖다가 버렸음. 보령지역은 농업소득의 70%가 쌀에서 얻어지므로 쌀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임.

·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과의 FTA를 위해 농업을 포기해야 하는가. 한미 FTA 진행이 중단됐는데 8월에 비준한다고 함. 마늘 값이 폭락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전혀 안해주니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은 뭣들하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면 도대체 농민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대응을 해 주시길 건의함

- 김용필 대표

·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일본농협의 역할, 유통을 도맡아서 하고 있는 모습, 시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농업에 대한 보호대책이 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는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많은 사람이 시위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랬음.

· 우리는 철저한 대비를 요구하고, 또 잘 되어간다고 하는데, 결국, 농업인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생존권을 위해 전국에서 서울 여의도로 버스를 타고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상존함.

· DDA는 여러 나라들과의 다자간 협상이고, FTA는 국가간의 협상임.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보조를 맞추고,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서로 국가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 우리 국가에 있어서는 취약한 부분이 있음. 예를 들면 농업분야의 경우가 있고, 배제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상대국가 역시 그 부분을 파고들어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KTX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인데, 앞으로는 수학여행을 경주가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시대가 됐음. 무한경쟁시대에 받아 들여야 한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각 지역을 돌아 보니 아예 폐업해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보상을 해달라는 것임.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못살게 만들었으니 폐업을 시켜달라고 요구함.

- 오무광 한국쌀전업농보령시연합회장

· 40년 넘게 농업을 했지만 농업이 돈버는 직업은 아니다, 먹고사는 직업이다라고 말하고 싶음.

· 보령 농가의 소득원의 70%인 쌀이 질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는 고민끝에 공공비축미용을 삼광벼로 대체하여 보령쌀의 품질을 한단계 높이자고 농민단체, 행정기관 토의하고, 결의한 바 있음.

· 실제 고품질로 가는 길로 10여년간 해 왔지만 결국 올해서야 두가지 품종으로 이루어지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음.

· 이정부 출범시 첫각료 회의서 기획처 장관이라는 사람이 농업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말한 것을 보면서, 한국 농업이 어렵고, 농업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비참하고 암담하였음.

· 이 시기가 쌀값이 한참 오를 때인데 2009년산 40kg을 2만 6,700원에 파는 것은 이정부가 농업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닌가.

· 매년 쌀 문제로 농민단체는 가을에 조합장들과 매일 싸우면서 2,000원 올리자고 했지만, 결국 이정부는 올여름에 쌀값을 죽이므로써 가을에 생산되는 벼를 일반도정업자나 RPC 조합장들에게 싸게 팔 수밖에 없는 현실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 마늘같은 경우도 7~8월 수확할 무렵에는 수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지금 이미 마늘이 들어오고 있어 산지에서 가격은 높지만 팔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 FTA를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이런데 FTA가 체결된다면 피해는 더 크리라 봄.

· 어쨌든 쌀이 지금 15만원 하지만, 5만원해도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음. 친환경 쌀, 농산물을 얘기하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봄. 농민자체도 없으니. 보령시 전체가 해야함. 친환경 포장 옆에 다른 분이 농약을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임.

· 유기농업하는 분들이 있지만 농산물에 농약이 적발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고, 농사짓는 분들이 어떤 때는 야근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임. 보령시 주도하에 친환경농업으로 간다면 일부만 하지 말고, 전체가 하면 농민들은 어렵지만 따라갈 것임.

· 중국과의 FTA도 어차피 필연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우리 의도로는 안되고, 정부에서 피해보는 쪽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선행되아야 농민들이 수긍할 것임.

- 라창균 서천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적인 농업현실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안해 볼 수가 없고, 책임이 무겁고 많이 부담됨.

· 이 자리에서 농업을 어떻게 지키느냐하는 것은 큰 어려운 문제.

FTA 체결과정에서 농업에 관련된 모든 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사실은 의회가 하는 것임. 여기 앉아 지역에서 농민들과 백날 얘기해 본들 안되고, 정부에 요구할 사항은 윗분들이 하시고 필요하면 힘은 언제든지 실어 드리겠음. 불편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람.

· FTA체결에 따른 보완대책을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인가에 대해 제안을 드려보겠음. 전라남도의 친환경단지가 50%가 넘어섰는데, 이것은 박준영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해서 7년 정도가 지나났는데 50% 인증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 농가들은 보조금이나 타고 그냥 농사 돈들이고 지으면 됨. 의식자체의 교육이 안되고 있음.

· 충남에도 친환경단지 보조사업이 활성화되가고 있음. 사실 2015년에는 현시점으로 봐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 농가들에게 왜 그게 필요한가를 먼저 교육시켜야 한다고 봄.

· 2015년 안에 미리 친환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방법을 가르쳐서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보조금만 받아 1년 농사 지으면 땡임. 나중에 보조금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무분별한 제초제, 농약, 화학비료 살포로 땅이 다 죽어 있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함.

· 산업폐기물을 버릴데가 없으니까 논에다 뿌리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서 무슨 농업을 살리고 어떻게 지켜 나가겠는가. 사실 난감하니 도에서도 농업의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각 지역의 공통적인 말씀이 농협이야기임. 농업인들이 생산만 하고, 농협이 유통을 잘해 무조건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FTA가 됐던, 뭐가 됐던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농협이 제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 신의식 한국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장

· 엊그제 서산가는 휴게소에 들렀는데, 호두과자, 소시지, 팥의 원산지를 살펴보니 비싸서 그런지, 생산이 안돼 그런지 우리나라 것이 하나도 없는걸 보고 깜짝 놀랐음.

· 농사를 27년동안 지어와서 우루과이라운드, FTA를 겪어왔지만 어떻게 보면 색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음.

· 삼성의 이익이 우리나라 농업이익보다 더 많은 걸로 얼핏 들은적이 있는데, 휴대폰이든, 텔레비전이든, 차를 하나 팔면 이익의 일부를 적립해서 농민에게 줄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풍요롭지 않을까 생각함.

- 김용필 대표

· 5. 26 충발연에서 FTA 회의시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부본부장이 한말이 있는데, FTA 관련해서 대농민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 용어자체가 외국말이 너무 많다, 농업인들에게 친근감 있게 해야 된다. 쌀시장접근, M&A 이런식의 표현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용어를 쉽게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대안도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이해가 됐음.

- 이규태 보령시연합회 감사

·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얼마전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인들이 큰 아픔을 겪고 있음. 한우가 10년 전후로 굉장한 호황을 누렸는데, 구제역으로 약 13만두 정도가 매몰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적정두수가 한 200만두 선으로 알고 있는데 300만두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 구제역으로 많이 묻었지만, 소비심리가 굉장히 위축되는 바람에 소비가 안되고 있음.

· 엊그제 신문에 보니 캐나다에서 수입이 많은데, 비육사료 한포대가 1만 2천원 정도하는데, 좋은 수놈 1마리에 평균 5,000원을 밑돌고 있음. 사료 한포대 먹여서 1kg 생산을 못함. 사료값이 안나옴.

· 정부에서 지금 해줄 일이 정육자 부담임. 식당에서 고기값을 내려줘야 하는데 안내리고 옛날 그대로 받고 있음. 대전 모 정육점으로 한우 등심을 먹으로 갔는데 150g에 3만원이더라구요. 암소 600kg짜리 도축했을 때 지금 생체 1kg 6,500원 정도임. 그러면 얼핏 따져도 400만원짜리 잡으면 식당에서 200만원 이상 남음. 소비자가격 인하를 해서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2년전 사료자금 1%로, 2,600만원 받음. 사료자금 갚을려고 보니 그때 600만원 하던 소가 지금 300만원까지 떨어짐. 무이자로 준다해도 상환하기 어려움. 지금 상황은 다팔아도 못 갚으니 상환연기를 건의함.

· 젊은 사람들은 예방백신 주사 놓고 하고, 작년에도 방역단체에서 맞춰줌. 노인들은 맞추지 않고 맞출지도 모르며, 소 간수를 못하니 예방백신 정도는 정부에서 놔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나창균 서천군연합회장

· 정부에서 FTA를 추진하는데 농민단체장들이나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뭐를 해야 할지도 사실 모름. 솔직한 현실임. 정부에서는 FTA 협정시 분명히 농업분야, 어업분야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을 것인데 그걸 우리는 모름. 그 부분은 사실 우리한데 물어보면 뭐 여기서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도 못드림. 여기서 방법을 찾자고 하면 FTA체결 안해야 됨.

- 추세환 보령시연합회 부회장

· 앞에서 일본사례를 말씀하였는데 정부에서 농업에 대한 보호대책을 다른나라와 비교를 해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음

· 충남쌀이 다른 시도에 비해 싸다고 하는데, 저는 소비자와 직거래하고 있어 시중가를 잘 모름. 20kg에 7~8만원, 한가마에 20만원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는데 한번 드신 분은 와서라도 가져가고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고, 판매량은 느는데 작년에 흉년으로 확보를 못해서 회원들 것을 20% 이상 사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양에 의존하지 말고 미질로 나가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함.

-

·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점점 확대될 것으로 봄. 충남에는 친환경쌀이 없기 때문에 충남도의 친환경 쌀을 갖고 친환경무상급식을 못하는게 현실임. 자체 브랜드로 서울로 파는 사람도 있고 전남에서 사와야 됨. 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 김용필 대표

· 무농약 이상 농가가 2천 농가가 되지 않음. 그 중에서 80%가 사실 순수한 농가임. 농업인이 42만명 되고, 가구수로 15만 정도되는데 그중 2천 농가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 인증서가 나간 뒤에 인정서에 적합하게 생산량이 나오지 않음. 병해충으로 수확량이 감소되고, 부족한 부분은 타지역에서 옴. 보통 홍성 홍동에서 수확량이 가장 많고, 서천, 아산 영인·음봉 지역 등에서 나오는데 충남이 소비처가 아님. 대부분 계약재배해서 서울로 올라감.

· 친환경은 사실 유기농업인데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저농약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 친환경농업은 아니며 어떻게 보면 양심을 속이고 있는 것이 빚 좋은 개살구격임.

· 전남의 친환경농업은 전략적,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박준영 도지사가 3선째

와서 33%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음.

· 국회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도 차원에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시군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만 됨.

· 어제 FTA 대응 관련 토론회 할 때 FTA는 중앙정부가 할 일이라고 충남도는 나오지 않는 상황임. FTA 대응 작물로 국화육성을 해서 일본에 국화 한송이 수출될 때마다 450원씩인데 충남에 국화 수출전문업체가 하나도 없음. 구미의 시설공단이나 경북, 김해 이런곳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이 답답한 현실임.

- 나창균 서천군연합회장

· 도차원에서 친환경농업에 적극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단지를 지금보다 몇배이상 추진하는데 당분간 보조를 확대하고,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나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게 100%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시군별로 유통센타을 건의함.

- 김용필 대표의원

· 충남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원산지만 충남이지 사실은 전남 농산물이 대부분임. 전남에서 과잉 생산된 것이 물류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대전, 충남 이쪽으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음.

· 시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자체에서 소비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생산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친환경무상급식이 국비를 통해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비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됨.

- 나창균 서천군연합회장

· 생산자는 팔기만 해서는 승산이 없음. 친환경무상급식은 일단 정해진 가격이 아닌가. 정해진 양, 정해진 가격으로 도에서 농민에게 제시했을 때 안할 사람은 없음.

· 한농연에서는 맹목적인 타결은 안되고 수용할 건 수용하되, 우리가 가질건 갖자는 취지이며, 그런 대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봄.

- 김용필 대표

· 현장에 다니다 보면 빠른 대안을 달라는 등 곤란한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의견이 달라 감정이 상하기도 하는데, 농업을 사랑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멱살잡이를 당하더라도 대화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함.

· 그 가운데 태풍과도 같고 핵폭탄과도 같은 것이 바로 FTA라고 생각함. 방송토

론회를 통해 각 단체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접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임. 돈을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측정이 가능한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임. FTA가 농민들의 동의없이, 농민들의 대안없이 진행이 된다면 큰 위기임.

7. 공주시, 연기군 지역(7. 22, 공주시 농업기술센타)

○ **참석자 : 12명**

- 회원 : 김용필 대표
- 농업인단체
  -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장
  - 이영희 공주시여성농업인회장
  - 박금수 대한양계협회공주시지부장
  - 박봉규 부회장
  - 민광식 연기군농민회장
  - 홍순직 쌀전업농연기군연합회장
  - 오홍교 농업경영인연기군연합회장
  - 유일근 조치원복숭아연합회장
  - 한석수 연기군한우협회장
  - 유병찬 연기군낙농연합회장
  - 김기윤 연기군 농촌체험관광회장

○ **기타 참석자** : 농수산경제위원회 조길행 의원
공주부시장 김갑연
공주농업기술센타 소장 노상호
농업정책과 박성걸 주무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최욱환 수석전문위원,
문윤식·권재용 주무관

○ **주요발언 내용**

- 김용필 대표

· 간담회 개최 경위, 연구모임 구성 경위, 간담회 후 진행계획 언급, 중국산 농산물의 시장유통상황 개략 설명

· 시위현장에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허무하다는 생각임.

· 여기서 논의되는 것이 공신력 있는 글로 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에게, 타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에도 전달되니 중요한 모임이고 단체장들이 참석하는 자리라 상징성이 있음. 위기상황 가운데 도의회가 도민의 의견을 문서화하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모임이 진행되었음.

- 조길행 의원

· FTA가 이미 발효된 것도, 협상이 체결된 것도, 협상이 진행되는것도 있는데, 사실 우리 농업의 미래가 걱정됨.

- 김갑연 공주부시장

· 여기 와보니 농촌이 너무 어려움. FTA에 대비한 기탄없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중요한 과정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점이 많을 것임.

· 작은 목소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주에서의 소통의 장이 충남이 정점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농민의 어려운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함.

- 최욱환 수석전문위원

· FTA로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잘 내 주시면 취합해서 정부요로와 도에 건의하고 정책으로 삼겠음.

- 김용필 대표

· 먹지않으면 정치도 할 수 없고, 예술, 문화, 창작활동도 할 수가 없음에도 농촌으로 시집올 여자가 없어서 외국인이 오고 있는 현실, 도시빈민운동을 하다 세상을 떠나면 열사칭호를 받는데, 농업농민운동하다 떠나면 열사라는 말도 내뱉지 않는 것이 농업의 안타까운 현실임.

- 한석수 연기군한우협회회장

· 한우의 과다사육으로 가격이 떨어져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농민들만의 탓이 아님. 구제역으로 인한 소비위축이 계속된 여파인데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 선진축산방안이라는 것을 보면 자세히는 모르나 축산인들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 내년 1월 1일부터 100두 이상은 허가제로 규제하고 1년에 몇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불합리함.

· 1종 가축질병 같은 것은 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임. 구제역이라는 것도 교수들 말이 베트남으로부터 왔느니, 어디 지역이니 그것도 명확하지 않음. 농업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야 한다고 봄.

· FTA가 국가적 일이니 해야 된다면 피해가는 농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은데, 보도를 보면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FTA천국이라는 말이

있음. 자국민 특히 농민들의 대책은 세우지 않고 타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안타까움.

· 축산선진화방안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현재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력제시스템이 완전히 갖추어져 있어서 핸드폰으로 6626만 쳐서 네이트에 들어가면 생산이력이 나오는데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백신을 접종했는지를 거기에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한데, 소를 팔려면 신청서를 써가지고 행정에 전화해야 하는 등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행되기 전에 시정되어야 함.

· 쌀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에 타작물재배하는 거 보면 겨우 콩심고 묵힘. 축산농가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조사료가 가장 필요한데, 논에다 사료효율이 높은 옥수수를 재배한 다음 봄에 보리갈고 해서 2차로 수확하는데 고령화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움.

· 장비 한대에 2억 8천만원하는데 두가지를 수확할 수 있음. 앞에다 작업기만 부착하면 파쇄해서 랩으로 말아가지고 나중에 풀어서 이용하는 기계인데 보리도 수확할 수 있음. 정부나 도에서 예산을 세워 시군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해주시기 바람. 지금 조사료장비 지원하는게 1억 6천만원가 있는데 50%보조, 50% 자부담임. 기존에 공급이 많이 된 것이라 계속한다면 공급과잉현상이 나옴.

· 옥수수 전문수확기는 1년에 한번 쓰는 것이고, 비싼기계를 놔두면 예산낭비가 되므로 재배면적을 파악해서 한우협회나 1개 시군에 한두대 정도 보조해서 실효성 있게 공급하면 타작물재배 시책과 축산을 연계하는게 가장 효율적일 것임.

· 도에서 캄보디아의 땅을 빌려 옥수수를 수확해 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용할 땅이 많이 있음. 논에 타작물재배사업 해봐야 콩심고 수확도 못하는데 축산농가에는 장비만 있으면 됨. 하고 싶어도 장비가 없고, 노령화되어 엔실레이지 1년내 파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함. 그런 부분을 살피는게 FTA 대응방안이라고 봄.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비가 떨어져야 되니 기반을 조성한 다음 FTA를 하면 상관없음.

- 김용필 대표

· 시군에서 배합기, 조사료 수확기 건의를 많이 하였는데 집행부와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챙기겠음.

- 유병찬 연기군낙농연합회장

· FTA는 정부적으로 세계적으로 안할 수는 없음.

· 우리 현실은 생산자와 소비자만 봉임. 생산자가 닭을 키워 kg당 2천원 받기도 힘들고, 2~2.5kg이면 3~4천원 받는데, 소비자까지 가면 1만 6천원을 봐야됨. 우유도 kg 당 800원인데 소비자는 2,500, 2,800가량으로 이걸 개선해 주지 않으면 생산자는 싸고, 소비자는 계속 비싸게 먹어야 함. 우유 남을 때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줬는데, 생산자한테는 안주었고, 어떻게 보면 공장만 이득을 보았음.

· 하림이나 주원 같은데서 농가에게 위탁사육을 무지 많이 하고, 전라도쪽도 한우를 위탁하고, 우리지역에도 한 마리 키우는데 2만 5천원 주고 위탁사육함.

· 농민들이 나이먹어 공장은 못다니고 살 길이 없으니까 위탁사육하는 것을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한 생산도 어렵다고 봄.

· 돼지고기가 부족하다고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물론 소비자가 싸게 먹기 위해서인데, 그러면 기존 농가들은 그동안 손해보아 가격을 높이려고 하다 무관세로 들어오면 계속 손해볼 수 밖에 없음. 설령 무관세로 들어오면 이익의 일부를 농민들에게 주든지 해야지 농민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되고, 이런 문제를 정부가 과감하게 손을 대지 않는한 소비자나 생산자는 계속 죽을 수 밖에 없음.

· 조사료를 수입하는데 쿼터가 있음. 한우도 낙농도 있는데 이 쿼터를 실제 소비자들에게 직접 내려야 함. 이게 다 중간에 감. 풀이름도 모르는 위에 정책하는 사람들이 사무실 놓고 중간에 다 떼어먹는다면 생산자는 비싸게 살 수 밖에 없음.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생산비를 줄일 수 있어야 살아날 수 있다고 봄.

- 김용필 대표

· 연구모임 구성을 위한 운영위원회의에서 어떤 의원이 도차원의 할일인가라는 말씀을 했을 때, 시청, 여의도 아스팔트 현장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오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으니, 정치하는 입장에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농민들의 피맺힌 소리를 담아서 중앙정부에 우리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보고서를 만들고 싶다고 했음.

- 홍순직 연기군 쌀전업농회장

· 종자원에서 공급한 종자가 발아가 안되었고, 키다리병이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벼재배 농업인들에게 친환경비료를 전량 지원해주고, 시군에 농기계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지원을 확대하여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농업기술센타 보관농기계는 쓸 수 없는게 많음. 이왕 지원해주신다면 70~80% 보조해 주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시군 농업기술센타에 농기계 임대은행 농기계 수량이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인지와 키다리병과 볍씨 발아불량 관련 언급, 피해방지를 위한 온탕소독기 지원에 관해서 집행부와 상의하도록 하겠음.

- 김기윤 연기군농촌체험관광협회장

· 쌀문제는 볍씨 온탕소독발아기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친환경농업을 하다보니 걸림돌이 많음. 단지 가운데 외지분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으면, 전체가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도차원에서 검토 바람.

· 전남도에 가서 논농사를 짓는데 그쪽의 지원체계는 처음 농민들이 친환경 자재를 구입해다 쓰고, 두 번 검사를 하고 70%를 지원함. 자기가 잘하면 싼 농사를 짓고, 잘못하면 비싼 농사를 짓는 시스템임.

· 충남도가 다수확 1위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반면 질소함량이 많아 나쁘다 이런 것은 생각해야 됨.

· 체험관광, 가공분야에 대해 일본 연수 경험을 말씀드리겠음.
일본은 농촌관광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음. 78세된 노부부와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했는데, 한국의 민박 풍토는 건너방을 내주고 우리 내면의 모습은 안보여주는데 반해 일본의 모습은 잠을 같이 자고, 살을 맞대고 밥을 같이 해먹는 게 상당히 공감이 있었고 한번 만나면 이웃이고 두 번 만나면 형제라고 함.

· 그후 지난해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왔다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음. 민박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했는데 7~8번 경험한 사람들이 실상한국의 내면을 보았음. 그래서 지금까지 다녀가신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고 있으며, 10~11월도 두분 그분들을 초청 계획임.

· 우리 농촌의 모습을 관광상품화하고 농촌관광벨트를 조성해서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으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주로 인터넷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데, 지방지 기자들도 중요하지만 파워블로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좋음. 예를 들어 파워블로거 한 10~20명을 연기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농업생산쪽에 초대를 해서 현장취재를 하게하면 파급효과가 상당히 큼. 접속하는 인원수가 보통 1만~10만명되는 파워블로거가 상당히 많은데 실례로 홍성인가 당진인가 거북이 마을에 네이버블로그 파워블로거가 와 취재를 하라고 해서 저희가 옆마을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상당히 업되가지고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고 함. 이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람.

· 충남농촌체험협의회에서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는데 네이버 파워블로거를 초청해 강의를 들어보니 왜목마을이나 00마을중 하나를 선택해서 취재를 했는데 비용은 많이 요구하지 않고 원고료로 한 20만원정도 들음. 신문지는 그냥 한번 지나가 버리지만 인터넷의 블로거는 취재해가면 네이버에 올라와서 파워블로거 효과가 큼.

- 김용필 대표

· 파워블로거가 요즘 세무조사에 들어갈 정도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나 효

과가 크니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충남쌀의 홍보로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면 좋은 그림이 될 것 같음.

·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농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농협에 대한 농업인들의 불만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 FTA가 체결되더라도 일본농민은 시위하지 않는다. 농협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것임.

농협이 경제사업을 하고 유통과 판로를 책임져 주면 FTA 그 이상의 파도가 달려와도 걱정이 없는 것인데 그 역할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

· 농협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말로 농업인을 위해, 유통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하고, 파워블로거를 이용한 충남 농산물, 가공품에 관한 부분은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음.

-

· 예를 들어 같은 등심고기이면 여기 정육점에서 2만원에 팔리면, 저쪽에서도 2만원에 팔리는 줄 알았더니, 낮춰파는 데는 낮춰팔고 높여 파는 데도 있었고, 소고기 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안되는 쪽은 안되고 잘되는 쪽은 상당히 잘 됨. 잘되는 곳에서는 올려 받아도 사러가기 마련임. 소고기 질이 좋다는 논리로 정육업자가 값을 높게 받는다고 봄.

· 생산자는 지금 가격을 낮춰 팔고 있는데 소고기 값이 비싸다고 했을 때, 물론 농산물이 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따라져 있지만 특히, 축산물은 규제를 해도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함.

· 얼마전에 지사가 교육원에서 충남농정방향에 대해 강의한 적이 있는데 농협이 상당히 중요하고, 농협행정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최고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농정정책을 수립하더라도 뒤에 받쳐주는 교육이 중요함.

· 지금의 농업정책의 90%가 아니라고 생각함. 쉽게말해 영농조합에 우선 어떠한 기반시설을 해 준다고 해놓고 자본력이 약하다든지.

- 민광식 연기군농민회장

· 한칠레 FTA협정시만 해도 농촌에 젊은 세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세대가 60이 넘고 가깝다 보니 투쟁율이나 보급률이 좀 떨어짐.

· 밥상은 거의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고 있으니 우리 농산물 살려내기운동을 한다든지, 우리음식 먹기운동 차원을 고려해 주기 바람.

- 이영희 공주시여성농업인회장

· 실제로 농촌의 모든 사람들은 현실이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농촌이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는 않음.

· 해결책은 전문가와 나라와 농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울려서 대응책을 개발해 줘야지 농민들 스스로의 힘만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농촌의 평균연령이 59세인데에 대해 정말 희망을 가졌음.

- 박금수 대한양계협회공주시지부장

· 지금 각 단체의 소망사항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현재 방향이라면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됨.

- 김용필 대표

· 사실상 FTA를 반대함.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정부가 우리의 얘기를 듣는 차원은 아니고, 국가가 조선, 화학, 자동차 등 공업을 주축으로 경제발전하고 있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생존권을 위해 충남도의회에서 과연 농업인들이 살길이 무엇인가? 농민들의 요구 그리고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가 여론을 수렴하는 것임.

- 박금수 대한양계협회공주시지부장

· 처음에 정부에서 FTA말할 때 기업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경쟁력이 없는데다 보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

· 농촌에서 경쟁력 제고라는 것이 농민의 한사람으로 참 답답한 현실임. 외국정부는 농민들에게 그만큼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안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경쟁력 제고를 언급하고 있음.

· 우리도 하는데 까지는 하는데 도저히 안되는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함. 현재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주시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젖소원유회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움. 이익을 주고 대우를 잘해 주는 회사로 옮길려고 뜻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거쳐 공증까지 거쳤는데도, 밤사이에 회사에서 방해공작을 하니까 45농가중 5농가만 협조하였던 사례가 있었음. 그러면 어떻게 되나

· 하우스도 마찬가지임. 출하하지 않기로 했으면 출하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도매인들이 와서 뭉텅이 돈을 얹어주면 바로 또 출하를 함.

· 덤프트럭도 단결이 됨. 대한민국에서 파업이 안되는 단체가 농업인단체임. 숫자가 적으면 적을 수록 똘똘 뭉쳐나가야 됨.

· 예를들어 삼성반도체에다가 이익금의 5%가 됐던 10%가 됐던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어 농업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관련 목적세가 만들어 져야함. 아니면 고향세가 만들어지든지. 정부도 도시민들에게 명분있게, 논리있게 근거를 갖고 설득해야 함.

· 도비 15%, 나머지 85% 자부담하면 사업할 수 있는 사람 없음. 5월 26일 정부측에 확실히 전달했는데, 주려면 확실하게 경쟁력차원에서 달라고 했음. 이런 부분에 관해 여러 의견을 취합해 전달하려는 것임.

- 유일근 조치원복숭아연합회장

· 복숭아 품질이 떨어지고 있음. 연기군에서도 몇 년전 FTA사업자금 받아서 암거, 방충망 이런 시설을 했는데 이장들의 전문성이 떨어져 많이 보급이 안되어 많지도 않은 예산을 반납했음. 차라리 전문성이 있는 작목반 쪽으로 사업신청을 받았으면 제대로 했을 것임.

· 반납을 하고 지금 필요성을 느껴 농가들의 신청이 많아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 받납예산은 예산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다시 지원해 주었으면 함.

· 생산기반은 조성해야 되고, 최고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유통, 마켓팅이라고 하는데, 유통쪽의 공무원수가 최고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함.

· 농협에서 구조개혁하면서 유통분야를 안하려고 하는 이유가 돈이 안되기 때문임. 돈이 된다면 벌써 했는데 대기업을 상대하려면 농협이 대기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임.

· 농민회가 잘 쓰는 말이 대동단결인데 농업계 사람들이 대동단결하지 않으면 안됨. 농업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농협, 우리 농민단체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됨. 힘을 합치는 방법이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서 논의를 해나갔으면 좋겠음.

· 우리가 필요로 하는게 항상 돈임. 편히 쓸 수 있게 돈을 줘야 하는데 너무 제재가 많음. 돈쓰기 정말 어려움. 농신보가 어떤 방법이 됐던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농민들은 어려움. 담보가 있어야 주므로 생활이 더 어렵고 열악한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음.

· 지금 축산쪽에서는 자조금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과수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기금으로 통합하여 만들어서 신용기금에 일정부분 출연했으면 하고, 기금조성시 도나 정부에서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음.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쓰는데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함.

· 농협도 물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신용불량자가 되어 더 이상 돈을 빌릴 데

도 없고, 한 번 망하면 구제에 대한 대책이 너무 부족함.

- 김기윤 연기군농촌체험관광협회장

· 각 시군에 녹색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깔아주고 그 동네 여자분을 군에서 지원해서 지역 농산물을 팔게 해주고 있음. 연기군 청라리가 대표적인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시장바구니 들고 시내에 안사러 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함.

· 가능하면 농민이 하면 좋은데 하루종일 일하다 지쳐서 할 시간도 없고, 잘 못하고 해서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농민의 삶을 편하게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임

- 최욱환 수석전문위원

· 제가 마침 정보화 담당을 했었는데, 추부에 깻잎마을, 연기는 청라리 정보화마을을 지정해서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했고 호응도가 좋았는데 저희가 다시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겠음.

8.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지역(7. 25, 논산시농업기술센타)

○ **참석자 : 13명**

- 회원 : 김용필 대표, 송덕빈 의원, 안승원 교수
- 농업인단체
  - 노세운 논산시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장
  - 이부석 논산시친환경인증자협의회장
  - 송인석 한국농업경영인계룡시연합회장
  - 김둘자 한국여성농업경영인계룡시연합회장
  - 장양수 계룡시작목별연구협의회장
  - 김화중 금산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 박영란 금산군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장
  - 김민수 금산군4-H연합회장
  - 곽영선 금산군청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김기수 금산군청 농업정책과

○ **기타 참석자** : 건설소방위원회 박문화 의원,
신도식 논산시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정책과 박성걸 주무관
농수산경제위원회 최욱환 수석전문위원,
문윤식·권재용 주무관

○ **주요발언 내용**

- 김용필 대표

· 국민들 여론은 국가경제차원에서 FTA는 체결돼야 한다고 함. 우리가 공업중심국가인데 수출하려고 하면 무역관세가 너무 높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관세장벽을 뚫을 수가 없다는 것임. 그 안에 희생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농업조직인데 누가 나설 수가 없음.

· 지난 12일 여의도 축산인생존권궐기대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의원, 민주당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3분동안 연설을 했음. 농업의 소리

를 아무리 외쳐도 산봉우리에서 야호하고 올리는 산울림 결과 밖에 없는 상황

· 지난 1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중국과의 FTA협상분위기 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모임도 있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거 우리 농업인들은 모름. 농민신문에 간단한 보도 나온거 밖에 없음.

· TJB 좋은세상열린토론 프로그램에서 FTA관한 문제제기를 했음.
충남은 중국의 인접한 백제지역인데 중국의 채소단지가 산동성이고 아침에 수확하면 오후에 우리 밥상에 올라감. FTA 위력이 그 정도임.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의 김치가 고춧가루와 김치상태도 그래서 먹히지 않았는데 딱 머릿속 느낌이 이거 중국산 같다고 느꼈음. 지금 중국산 김치가 들어오고 있는데, FTA가 체결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위기감이 올 것임. 이게 집결되면 금산 인삼, 논산딸기, 서·태안의 마늘, 생강, 고추 농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임.

· 모든 국민들이 FTA를 찬성한다라고 하면 피해를 겪고 있고, 겪게될 농촌,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다해주던지, 대안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는 걸 알아야 되겠음

· 관련되는 분명한 의견을 담아 보고서를 채택하고 16개 시군 농업인단체장과 더불어 언론에 알리고 청와대에 직접 전달을 하려고 하고, 그게 여의도, 시청에 가서 1만명, 2만명 시위하는 것보다, 칼보다 글로된 보고서가 낫다고 생각하고, 또, 공식적인 모임에서 하는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어려운 가운데 FTA 대응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니 취지를 이해하여 주기 바람.

- 송덕빈 의원

·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도 우리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 도정에 반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 박문화 의원

· 오늘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 농업이 더욱 발전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바라며, 좋은 결과를 내서 도정의 농업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기대함.

- 신도식 논산시농업기술센타소장

· 논산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다 보니 농업이 발전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고 느낄 수 있었음. 논산의 농업은 다양성이 있고 대략 51가지 작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재배나 사육되고 있음.

· 논산의 농업생산규모가 약 6,015억원 정도, 농가는 1만 3,500호 정도, 농민은 3

만 6,000명 정도로 전체의 27%밖에 안되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농가연간소득은 약 4,500만원, 그중 농업소득은 2,230만원 정도 올리고 있음. 전국 평균 농가소득은 3,000만원 규모, 농업소득은 1,100만원 수준에 비하면 논산은 각각 약 147%, 230%로 2.3배로 농업의 생산성이 우수한 지역인데 농업 통계상의 의미임.

· 상대적으로 도시근로자소득이 최근 3,500만원~4,000만원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비해 농민들은 재산 투자를 하고, 노동이 상당히 어려운 3D 업종의 하나라고 생각함. 농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내 자본을 투자하고 육체노동을 통한 소득이 도시 근로자와 대비했을 때 월등히 높아야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생각함.

· 현 수준을 보면 상공의 나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FTA를 체결하고, 글로벌 경제쪽으로 내닫고 있는 것이 국민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미래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겠으나

·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리 국민의 먹거리는 가능하면 우리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해서 해결해 주는 것이 기본이고 그게 식량안보가 아닌가 생각함.

· 그런차원에서 농업이 발전해야 되는데 농업외의 사람들이 인색함. 농가에 보조금 주는거, 농업인의 편익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국가 예산투자가 상당히 소홀하고 부족하다고 느낌.

· 토론을 통해 어떤 분야에 얼마만큼 더 좋은 투자를 요구할 건지에 대해 연구를 하겠지만 10년후에 농업수준은 선진농업국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농업쪽에 막대한 SOC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게 문제가 있음.

· 전에 김영삼, 김대중 정부시절에 45조를 투자했다고 했는데 농업인들 피부에 와닿지 못했음. 말은 엄청나게 투자했다고 하는데 말로만 투자했고, 실제로는 쥐꼬리만큼 나타나지 않았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느낌임.

· 세계각국과 FTA협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불원간 중국 또는 일본, 중남미와 급진적인 변화가 예상함. 외부적인 변화에 대하여 우리 농민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좋은 토론의 기회임.

- 김화중 한농연금산군연합회장

· 한농연에서는 FTA 대응을 위해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걸 강력히 요구해 왔는데도, 지난 한EU FTA가 공식적으로 발효됐음. 농업인들의 의지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견이 정부에 전달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음.

- 김용필 대표

· FTA에 대하여 농업에 있어서 생존권 차원에서 그 대안을 요구하고 있음. 의회는 집행부에 FTA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데, 그러나 중앙정부가 할 일이기 때문에 중앙의 계획이 나오면 매칭적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임.

· 그러나, 의회는 충남도 농업인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감소시키고, 생존을 위해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스스로 의용군처럼 일어났음.

· 예를 들어 한EU FTA가 비준된 이후 강원도는 그 대안으로 약 7조 4,000억원의 강원도 차원의 예산계획을 세웠음. 한우브랜드 활성화라든지, 생산기반 확충, 더 나아가서 과수, 원예, 특작, 밭작물 계약재배 실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실제 농업인에게 직접지불될 수 있는, 직접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음.

· 정부가 대안없이 나가고 다른 도는 앞서고 있는데 반해 집행부의 느슨한 방향에 대해 사실 분개하고 있음.

·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의 농업을 사랑하는 분들이 똘똘 뭉쳐서 김화중 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다 더 철저하게 바닥에서 요구하는 대안을 찾아서 청와대에 직접 가서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임진왜란때 관군이 무너지니까 의병이 일어나 활동했던 것처럼 일어난 것이 바로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라는 사실을 말씀드림.

- 노세운 논산시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장

· FTA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아직까지 한가지도 세우지 않고 추진했던 것임.

· 가장 큰 문제가 가격경쟁력인데, 가격경쟁력이 있는 채소류, 질좋은 친환경농산물 육성, 활성화를 통한 국산 먹거리를 국민들의 밥상에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수입품이 아니라도 국산으로 가격도 싸고 품질도 우수하고, 우리체질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원가를 줄여 생산하도록 정부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농가에 지원해주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런 정책을 빨리 만들어 농민들이 기대를 갖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농업인은 살 수가 없으니 그 길을 연구해야 함.

- 김용필 대표

· 국가와 국가간 협상인 FTA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농수축산분야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다른분야는 이익이 창출된다고 함.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FTA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많이 쫓기듯이 하다 보니 그 사이에 우리 농업부분에 피해가 많이 있었음.

- 안승원 공주대학교 교수

· 작년에 들깨를 사려고 하니 한말에 3만원~3만 5천원임. 그 가격에 생산할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음. FTA가 어려운 것이, 농업을 하면 수확이 안나오기 때문임.

· 중국에서 FTA 형태로 수입하더라도, 보통 몇 분의 1에서 십분의 1까지 저렴한 단가로 수입이 된다면, 우리 농업현장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당히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함.

· 앞으로 5~6, 10년 후에 4만불을 목표로 모든 정책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과 어떤 품목이 경쟁력이 있으며, 될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 정책적인 부분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인식해야 되거나 의식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간과될 수 있음.

· 저렴한 농산물이 수입됐을 때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보다는 품목별로 얼만큼 경쟁력이 있고, 주변국에서 수입했을 때 얼만큼의 비율로 타격을 받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시급함.

· 통계치에 따르면 농민들의 주 소득원이 수도작, 양돈, 한우, 양계 등해서 축산의 네다섯 분야가 올라가고, 다음에 감귤이나 고추 등 원예부분이며, 우리나라도 이제 원예쪽으로 간다고 생각함. 이런 형태로 30~50위 정리를 해보면 긍정적으로 순위를 올릴 수 있는 품목을 농민들이 정확히 판단해서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됨.

· 축산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논산하면 딸기가 유명하듯 경쟁력 있는 작물들은 앞으로도 기술발전을 시키면 상당히 비젼이 있는 부분이 있음.

· 지금까지 해오던 대부분의 농작물들이 경쟁력이 없게 됐을 때 대응방법은 농업현장에 있는 여러분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여러분에 의해 현재 농산물의 가격이나 생산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진 현실적인 대응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됨.

- 김민수 금산군4-H연합회장

· FTA는 어쩔 수 없이 밀려오는 파도이며,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우는 입장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듬. 영농한지 10년 정도 되는데, 건삼같은 경우는 한약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거의 중국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조금씩 밀려오고 있음.

· 금산같은 경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격경쟁이라기 보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해 준다면, 인삼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 FTA를 막으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팔 수 있는 생각을 해야함. 축산같은 경우 50% 보조사업이 늘고 있다보니 시골마다 논이니 밭이니 축사가 다 들었음. 소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쇠고기를 수입한다고 소값이 하락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음.

· 다시 재입식하는 과정에서 농민들과 주변의 마찰이 커서 재입식을 못하는 수가 있고, 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 정부에서 수입을 하는데, FTA가 되던 안되던 삼겹살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임.

· 수요에 맞춰 생산을 해야지, 수요가 딸릴 경우에는 국가가 안정차원에서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아님.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그 효과를 바라는게 아니라 농민 스스로 그 돈을 어떻게 이용할까 먼저 생각해야 함.

· 그러니까 정부가 100원 줄때 농민이 100원을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해야함. 어떤 지원이 오던 그 지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그런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

- 송인석 한농연계룡시연합회장

· FTA 협상에 앞서 피해 당하느냐, 고사하느냐? 피해대책을 제대로 추진하면 FTA를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함. 어떤 작물이 얼마나 심어졌는지 통계가 미흡한데, 농민들이 시시각각 알 수 있게 해주기 바람.

· 친환경농산물은 단위당 생산량도 적고 생산기술도 어려운데 시장에 나가면 일반농산물과 가격차이가 없으니 제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 스위스는 관광산업이 주인데, 관광수입을 피해보는 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작물목록이라고 해서 심하면 50%까지도 농민에게 지원하면서 국외시장을 공략하는데, 우리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FTA를 추진하고 있어 농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계기로 자그만 보상책이나 아니면 피해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희망적인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음.

- 김용필 대표

· 지금 전자상거래, 전자보고시스템 다 갖춰져 있는데, 배추 가격 파동 같은 경우 각 종자회사나 지역농협을 통해 배추씨앗 판매량자료만 확인해도 농민들이 그렇게 많이 파종하지는 않음. 종자회사 등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법률을

정해 보완하면 될 것임.

· 목적세를 신설해서 생산농가들에게 수출장려금 같은 것을 통해 보전을 철저히 해주면서 우리는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당하고 있음. 국화 같은 경우 수출장려금이 너무 빈약함. 일본에 국화를 수출할 때 콘데이너 박스 10개가 나간다하고 하면 한박스는 바이어들 이익으로 빠져나감.

·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을 받지 않으면 수출에 들어가는 물류비용, 바이어 비용을 농가 스스로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이며 이런 부분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임.

- 노세운 논산시친환경인증농가협의회장

· 원예쪽에서 생산원가를 낮추려면 연료비가 가장 문제임. 경상남도 진주를 다녀왔는데 경상남도에서는 도차원에서 농가에게 보통 40kw, 50kw 승압을 시켜주고 있었음. 석유가 아니라 전기온풍기 400kw짜리를 200평 동당 40개를 다는데 실외기온이 -10℃로 떨어질 경우에 7~8℃까지 유지할 수 있고, 비닐하우스 4동의 지난 겨울 전기요금이 한달평균 50만원 정도라고 함.

· 저 같은 경우 하우스 7동을 하는데 작년에 유류비만 한달에 60만원 정도 지출했고, 25kw 전기를 쓰고 있는데 보일러 등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또 전기요금 60만원을 냈음. 유류는 면세유를 사용했는데도 1,500만원어치를 썼음.

· 이런 비율로 봐서 기름비용만 없어도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남. 그래서 승압문제도 도지사 숙원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오고가다 말았는데 도차원에서 농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람.

· 전기승압은 몇 십년도 가고 그러니 도차원에서 승압을 한다든지 해주시고, 축산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경상남도와 같이 도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전기승압공사지원이라고 봄.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원가를 낮춤.

· 작년에 전기료가 6~7개월 동안 700만원, 유류비가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약 2,000만원이 연료비로 지출되니까 싸게 농사지어야 한다고 해봐야 사실상 엄청난 연료비가 큰 부담임

· 정부는 에너지 절약한다고 예를 들어 면세유를 주네, 안주네 하는데 사실상 대책이라는 것은 없음. 차라리 면세유 줄 돈으로 발전소를 하나 더 만들고, 발전을 풍부하게 해서 밤중에 산업전기 많이 이용하지 않을 때 농가들에게 심야전기 지원을 도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음.

- 김민수 금산군4-H연합회장

· 전기승압은 저도 공감이 많은 부분이고요, 그런점에서 집에서 심야보일러를 활용하고 있음. 승압을 하면 대단한 효과를 볼 것으로 봄.

· 지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자녀조차 농업종사를 꺼려하고 고령화로 유지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상관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농업에 참여할 인구는 없음. 그렇기 때문에 4-H연합회가 60여 단체인데, 다른 농업인단체에 비해 혜택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구가 줄고 농업계 고교조차 몇 군데,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책들은 단지 농가에게 아부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생각됨. 앞으로를 위한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 김둘자 한여농계룡시연합회장

·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데 방송에서 굉장히 싸다고 나오는데, 일반소비자가 사먹기에는 안싸다고 생각함. 어떠한 정책을 세워서 몇 년에 한번씩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2008년도에 사료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원료인 옥수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었는데, 중국이 수출 중단선언을 하니까 미국산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린에너지 옥수수 등의 생산에 집중하다보니 곡물가격 상승이 발생했던 것임.

· 당시 이완구 지사시절 충남축산인들 열두분이 주축이 되어 재단법인 충남해외자원개발을 만들고, 캄보디아에서 지난해 옥수수 원료를 들여와 당진, 천안 축협을 통해, 가공해서 소량이나마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지난달 24일 안희정 지사께 우리 축산농가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옥수수를 재배하는데 현장을 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8월 22일 회기 시작되면 다시 물어보려고 함.

· 충남에서 토바우 생산하고 있는데 사료값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9,660여 농가가 초지를 이용해 발효하여 먹이고 있는데 생산농가들중 구제역이 한농가도 발생하지 않았음.

- 송인석 한농연계룡시연합회장

· 다른 시도를 보면 저온창고, 저온저장고가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계룡시의 경우 작은 규모의 저장고만 있지, 저장시설 같은게 없는데, 계룡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많이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음.

- 장양수 계룡시작목별연구협의회장

· 농업을 하다보면 보온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 가격이 비쌈.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런데 우리가 유사한 것을 직접 사려고 하면 엄청 싼데 센터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며 시설하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함.

- 김용필 대표

· 보온덮게 문제, 농업인들이 에너지절감을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는 농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함.

· 우리 도의 농업예산이 8,000억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음. 그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국비와 관련되어 투자하는 것 빼놓고, 도 순수재원으로 하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15%정도를 부담하고, 시군부담률이 높은 것인데, 그러다보니 시군에서 여러 가지 답답한 그런소리를 많이 듣고 있음.

·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FTA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하겠고, 여기서 논의되는 것을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그러므로 인해 충남농업의 체질이 개선, 강화되는 것임.

- 곽영선 금산군농업정책과농정담당

· 농산물의 피해가 요즘에는 계절적 때가 없는 것 같음. 특히, 농업생산자단체나 농가의 사업비를 요청할 때 건설, 토목 등 다른 부분에 예산을 빼앗기는 것 같음. 농수산경제위원님들께서 농업부분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람.

· 농수산경제위원님들의 건의사업비가 포괄적이더라도 100% 농업부문에 투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김기수 금산군농업정책과

· 마을에서 생산되는 사과는 그 마을에서 판매가 가능한데 다른 품목은 그게 어렵다고 함. 생산되는 품목은 마을과 도농교류를 맺은 자매결연단체 등이 오셔서 유통의 문제점을 상의도 하고, 그쪽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다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좋겠음.

· 예를 들어 귀농인이 1천만원 투자하면 1천 5백만원을 벌 수 있겠다고 예상해서, 1년 농사를 지어보니 5백만원 밖에 소득이 안생겼음. 그러면, 5백만원 손해를 보았는데, 이런저런 영농기술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해에 또다시 5백

만원 손해를 보아서 연속 2~3년하다 보니 귀농이 쉬운게 아님을 느꼈다고 함.

· 심야전기, 심야보일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작물을 재배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초기 귀농자들과 공유하면 좋겠음.

- 김용필 대표

· 귀농도 쉽지 않고, 3년간 투자하여 소득을 볼 수 없고, 4년째 가서 조금씩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이 귀농이라고 함. 그 부분에 있어 농촌에서 견디기가 참으로 쉽지 않음.

· 지금, 한우가격이 구제역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 가격폭락 상황 앞에서 어떤 분이 2년만 버티면 또 돈을 번다고 함. 200마리 이상 가진 농가는 자본을 통해 버틸 수 있는데, 한 마리, 두 마리 늘려서, 참고 참아서 50~60마리 만드시분들은 대부분 너무나 어렵워 도산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도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농촌이라고 생각할 때, 나중에 중국과의 FTA가 우리의 뜻과 달리 체결되면 결국에는 우리 농업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이모임을 갖게 됨.

· 시군을 돌면서 면세유 문제, 농기계 문제, 소값 하락에 따른 경영안정대책 등 공통적인 이야기가 많았는데 건의사항, 정부에 촉구할 사항,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대로 정리해 나가겠음.

· FTA가 대안없이 체결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모임을 통해 뭔가 발생의 효과를 만들어 낼 때 비록, 몇만명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여기 참석한 분들과 더불어서 청와대 앞에 가서 퍼포먼스를 할 예정임. 저만 올라가게 하지 말고, 꼭 시간들 내주셔서 그곳에서 우리 농민들의 의견이 전달,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김화중 한농연금산군연합회장표

· 22일 농업인신문기사를 보면 6월 기준 3% 쌀값인하를 해야만 지원금을 주겠다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문이 전국 RPC에 보내졌다는 기사를 보았음.

· 무엇 때문에 정부에서 현지 쌀값을 인하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처구니없는 이런 농업정책과 대통령과 전국시군농업기술센타소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농업지원금을 전면중단해야 된다, 그런 문제를 도와주면 앞으로 우리 농업은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 우리 농업미래에 대해 선대책, 보완을 강력히 요구해서 농업인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 김용필 대표

· 대안없는 FTA는 꼭 막아내야 함. 정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인구수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고, 명분과 논리와 근거를 가져야 함. 농업인구는 적지만 대한민국 국토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농촌이 FTA를 이겨냄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선진화되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서 꼭 이끌어 갈수 있기를 바람.

4. 도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9.5)

도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추진계획

충남 농촌의 농업여건 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충청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가 도 농업인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함.

1. 일　시 : 9. 5(월) 13:30~16:30
2. 대　상 : 도 농업인단체 대표, 시·군 순회간담회 참석자 중 희망자
3. 장　소 : 예산국화시험장 회의실(예산 오가 역탑리 37-52)
4. 예상인원 : 20~40명
5. 주　재 : 대표의원
6. 주요내용
   - 시·군 순회간담회시 건의내용 토의, 검토
   - FTA 협상진행과 농림어업 파급 영향
   - 충남 농림어업 현황 및 특징과 농업정책 방향
   - 정부의 보완대책과 충남도의 FTA 대응 농림어업 투융자 계획
7. 진행계획

시간 계획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3:30	13:35	5'	◦ 인사말씀	대표의원
13:35	13:55	20'	◦ FTA 관련 농업인단체 브리핑(1)	한농연충남도연합회
13:55	14:00	5'	◦ (예비시간)	
14:00	14:20	20'	◦ FTA 관련 농업인단체 브리핑(2)	전농충남도연맹
14:20	14:50	30'	◦ 휴식	
14:50	15:30	40'	◦ 질의응답	농업인단체
15:30	16:30	60'	◦ 자유토론 및 마무리 말씀	대표의원

8. 조치사항
   ❍ 회의자료〈시·군 순회 간담회 회의록(요약)〉 인쇄 50부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도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요약

○ **일시 : 2011. 9. 5. 13:30~16:00**

○ **장소 : 예산국화시험장**

○ **회의내용**

- 시·군 순회간담회 내용 토의
- 기타 보고서에 담을 과제내용 선정요령 등 협의

○ **참석자 : 7명**

- 회원(의원) : 김용필 대표, 송덕빈 의원
- 회원(전문가)
  -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 안승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부교수
- 농업인단체
  -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 이선범 예산군 품목별연구협의회장
  - 윤동권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의장

○ **기타 참석자**

- 최욱환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농업정책과 박성걸 주무관, 예산국화시험장장 최병준, 농경위 문윤식 주무관, 충청투데이 김동근 기자

○ **회의경과**

- 대표의원 개회인사, 참석자 소개, 취지 등의 발언
- 송덕빈의원 연구모임 필요성 등 언급
- 안승원회원 일본과의 사례 등을 들어 대응방법 등의 의견 제시
- 시·군 단체대표 간담회시 주요 내용 토의 및 과제선정, 보고서에 담을 내용 등을 토의

○ **주요 발언내용**

- 김용필 대표

· 새벽부터 배추정식을 했는데, 바깥으로 돌다가 중요한 시기에 일을 하려고 하니 농사가 굉장히 쉽지 않고, 이렇게 소중하게 재배된 농산물이 헐값에 판매되고, 판로가 불안정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 아픔.

- 송덕빈 의원

· 우리 농민의 현실은 천 길, 만 길, 벼랑 끝에 서 있음. 언제 우리가 떨어져서 죽어야 할지 하는 심정속에 살고 있음. 어려움을 겪다보니 가구당 3천만원 이상의 빚을 갖고 있는데, 정부는 농민들에게 조금도 신경쓰지 않고, 안일하며, 어떤말을 하던 간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농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에,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분함.

· 오늘 농민들에게 와 닿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지사, 나아가 대통령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전달이 되서 농민의 시름에 대해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임.

- 김용필 대표

· 장애우는 400만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농업인구는 300만명도 채 안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65세 이상 고령화 된 인구가 굉장히 많음. 이 상황가운데에 지금 정부는 미국과의 FTA 국회비준을 앞두고 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언론을 통해서 중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앞장서고 있음.

· 어떻게 보면, 도시민들에게는 FTA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지 모르나, 농업, 농민, 농촌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될 것임. 우리농업이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약하기 때문임.

· 대표적으로 배추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임. 지난해 가을에는 비쌌는데, 지난 2~3월에 배축값이 폭락되어 갈아엎었고, 비가 계속 내리니 5월에는 또 올랐음.

· 중국과 작부체계 등 농업환경도 비슷한 우리는 날씨에 영향을 받으면 전체 한반도가 가격이 폭락하는데, 중국은 워낙 광대한 땅을 갖고 있어 그렇지 않음. 이런 상황에서 FTA가 체결된다면 농업은 이미 관속에 들어간 흔적까지 파헤쳐져서 화장하여 강물에 뿌려져야만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름.

· 자료에 16개 시·군 농업인단체장의 많은 의견이 담겨져 있는데, 이와 같은 연구회 모임을 시도했다라는 자체는 농업에 있어서 희망의 불빛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임.

- 안승원 교수

· 농민의 아들로 농업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학을 통해 생물학을 전공하고, 원예학과에 취임해서 10년차임.

· 약 20여년 동안 일본에서 생활해서 비교되는 사례가 농업소득, 면적 등 모든 면에서 우리입장은 축소되는 것이 사실인데,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농업에서도 해야될 일이 많은 것 같음. 1, 2차 산업쪽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부 3차 산업도 줄어가는데, 그 이유중에 하나가 외국에 수출입 관계를 떠나서 대부분 사람이 줄

게 되어 있기 때문임.

· 핵가족화와 아이를 적게 낳다보니 유치원의 수요가 줄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점점 없어지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산업도 무너지게 됨. 예를 들어 일본의 디즈니랜드는 성황을 이루어서, 관광지로써 가족들이 즐기는 명소였는데, 어린이가 없다보니 입장객이 급격히 줄게 되었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활성화 노력을 하고 있음.

· 모든 산업분야에서 인구감소로 인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음. 앞으로 경제구조의 변화가 있고 실버산업의 비중이 신장될 것임. 젊은층에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충당이 되면서 역삼각형의 형태로 변화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됨.

· 정보화사회로 흐르다 보니 일부 산업쪽에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산층이 없어지고, 극단적인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분리되었음. 중산층은 우리사회의 안정적인 구조에 기여하는데, 비중이 적어지다 보니 중앙관청에 중간층을 살찌게 하자라는 부서별 캐치프레이즈도 있음.

·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60대는 청년회에 들어 있음. 70대가 기계화의 도움을 받아 이전의 50대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자녀 교육을 마친 60대나 70대가 귀향이든 귀농으로 농촌에 돌아와서 연봉으로 1~2천만원 소득을 올리면 농촌사회에서 충분히 정착이 가능하다고 봄.

· 부부인건비를 포함하여 1~2천만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특용작물의 경우 500평~1,000평 정도면 가능하고, 노지작물도 2천평 정도면 충분함. 1ha 정도의 간척지 등의 임대료가 보통 백여만원 정도인데, 농지은행의 형태로 해서 관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함.

· 연금없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금생활자도 있음. 농촌에서는 생활비가 적게 드는 장점도 있음. 도시에서는 정기적으로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은퇴자들이 월 3백만원, 1년에 3천만원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농촌에서 경조사도 있지만 부부가 1~2천만원으로 절약해서 산다면 부담없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농촌생활에서 문제되는 것이 병원인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큰 병원까지 어려운 데를 제외하고는 한 시간내에 웬만하면 접근이 가능함.

·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인데, 농업인구도 줄고, 농업 관련 산업도 상대적으로 줄었지만, 전원도시화하여 겸업하는 농가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함. 농업경영과 겸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 부촌형태가 가능함.

· 6~70대로 증가하는 연령층을 농촌사회로 흡수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국가적 측면에서 큰 이익이 될 것임. 일을 함으로 해서 경제적 도움과 질병이 없어지고, 복지예산이 절약되는 등 부가가치가 높음.

· 농업을 겸하다 보니 부채가 많고, 농업지원자금 중 융자금 이율이 7~8%로 너무 높음. 한달에 5~6백만원 정도 이자를 내고 있는데, 농업수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

· 일본은 거의 30여년간 제로금리임. 어떤 산업이든지 2~3% 수준이면 모든 일을 할 수 있음. 농촌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 정도로 해준다면, 정착해서 일어날 때까지 지원하게 되면 낮은 금리가 아님. 국가차원에서 보면 이윤이 발생하는 것임. 귀농·귀촌 희망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농촌을 활성화하여 생산녹지를 유지하게 되면 생태계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FTA 관련, 중국이 가장 무섭게 다가오는데 다들 그럴 거라 생각함. 높은 농업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대만의 고품질 농산물과도 경쟁해야 되고, 저품질의 중국 농산물과도 생사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샌드위치적인 반도의 숙명임. 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지원, 육성이 필요함.

· 국가전략상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산녹지를 조성하는 측면과, 6~70대의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농업경제를 살린다면 희망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함.

- 김용필 대표

· 일본에서 전문적으로 미생물분야, 친환경농업분야를 연구하신 안승원 교수님은 EM미생물연구에 전력하고 있고, 농민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사업도 직접하느라 500만원 이자를 쓰시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안타까움.

· 연구회에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중앙정부나 타도와 연계하고,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등 농민단체들과 연계하면 시위 때 참석한 뒤 공허한 것을 바닥에 잠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음.

· 서산·태안지역 간담회시 FTA에 대비해서 충남도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금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만들고, 재원을 마련해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토의했으면 좋겠음.

- 최욱환 농수산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박상무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안교수님이 말씀하신 50대 귀농·귀촌인에게 저리 농자금을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인구도 늘고, 농업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함. 각계각층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음.

-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 지금 예산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함. 그런데, 기금

이라는게 원금을 쓰지 못하고, 이자로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자로 피해액을 보전해 주려면 기금액수가 상당해야 되므로, 기금이 아니라 아예 직불금 형태로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음.

· FTA비준안이 갑자기 상정된다고 해서 중앙회장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좀더 대책을 마련한 후에 상임위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기습적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무산되었음. 집회도 못했는데 기자회견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 자리에서 연행되어 8시간 유치장에 있었다고 함. 시위에 지쳤다고 했는데 아스팔트 농사 정말 저희는 지쳤음.

· 90년대부터 농민운동을 해왔는데, 그 때는 집회가 정말 많았음. 고속도로 막고, 타이어 불태우는 등 8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농민단체가 어 떤 집회를 하기 위한 경비 마련도 어려운 실정임.

· 버스 대당 백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그런 비용조차 마련하기가 어려움. 그래서 FTA 관련 어떤 집회도 이제까지 한번도 못하고, 형식적으로 기자회견한다든지 이런 정도 밖에 못한게 정말 아쉬움

· 정부에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아직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것들이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그 속을 제대로 알 수가 없음. 제가 도연합회장이면서 그런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을뿐더러 예측된 내용을 믿을 수도 없음.

· 여당에서는 피해규모를 자꾸 줄이려고 하고, 진보정당에서는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함. 한농연의 기본입장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책이 마련되면 거기에 동의하고, 기업에서 이익금이 났을 때 그 이익금을 농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어떤 법안이 마련된다면 좋겠음.

- 김용필 대표

· 도의원이지만, 같은 농촌에서 운동을 꾸준하게 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시위에 지쳤고, 아스팔트 농사에 지쳤음.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농사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러한 모임에서 의견을 나타내고, 이것을 성문화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고,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오늘 같은 모임이 의미가 있음.

· 전에는 50만원이면 차비 냈었는데, 지금은 물가가 상승해서 차한대에 100만원 가져야 하고 정말 계획잡기 어려움. 슬픈 내용임.

· 기금 문제에 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듯 싶음.

· 다음은, 당진군지역에서 농민회 이종섭 사무국장이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을 지속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음. 쌀이 과잉생산되다보니 벼재배를 축소하기 위해 간척지에 옥수수를 재배하도록 권장하는데, 간척지는

옥수수가 맞지 않는다고 함.

· 지엽적인 의견도 있지만, FTA 체결되도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관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봄. 도에서 8. 31 농업기술원에서 3농에 관한 부분을 발표했는데, 경영안정직불금은 빠져 있었음. 17,000여명이 청구한 조례가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그게 빠질 수가 있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식으로 촉구했는데, 다음날 언론에도 안나와 상당히 안쓰러웠음.

·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은 충남도만 실시하는 것이지만, 고령화된 농업인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기본적인 끈을 지탱해 주는 농촌복지와 연관되는 중요한 부분임.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복지는 국가의 몫이지 충남도의 몫은 아님. 충남도는 농업인들이 원했던 경영안정직불금이라는 이부분은 꼭 관철되어야 만이 벼를 재배하더라도 기본적인 농가들의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줘야만 된다는 것임.

· FTA에 관해서 우리가 왜 불안하게 생각을 하냐면, 생존권이 위협받기 때문임.

- 윤동권 예산군 농업인단체협의회 의장

·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어 왔는데, 정치권이나 도지사의 홍행에 따라 농업정책이 바뀌었음. 이전에는 식량생산에만 역점을 두다가, 중간쯤에는 품질, 최근에 와서는 대안도 없는 실정임. 알아서 먹고 살아라 하는 식임

· 이전에는 시골에서 농민이 1년에 쌀 10가마 받아서 농촌생활을 했음. 지금은 100가마도 적다고 함. 지금 농사짓는 분이 대부분 고령자이다보니 할 수 없이 무필지로 짓는 형태임. 논농사 짓는 분들은 1인당 400마지기는 지어야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임.

· 어렸을 때는 논 20마지기만 농사를 지으면 머슴을 두고 농사지었음. 지금은 부부가 400마지기를 지어야 애들을 가르치고 살 수 있음.

· 그러니, 중요한 것은 FTA도 좋고, 기금도 좋지만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더 중요함. 농업은 분명히 보호되어야 하고, 보호정책을 써야하는데, 보호의지가 없음. 그렇지 않고는 농업이 살수가 없음. 요새 가을에 배추파동이 또 예상된다고 함.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비가 많이 왔어도 하도 많이 팔려나가서 무·배추를 파종하려고 해도 종자가 없다고 함.

· 그러니까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든, FTA가 어떻든 따지지 말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그렇지 않은데, 방송에서 하도 떠드니까 종자가 없다고 함. 지금 정부든 이전의 정부든 농업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농업을 얘기하다보니 안 맞음.

· 경제논리로만 따지면 농사 안짓고 사먹어야 함. 그런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혹시나 하는 희망과 또, 배운게 농업이다 보니 할 수 없이 짓고 있는데, 농업인들은 진짜 정부의 희생양임.

· 아까 FTA 대응 기금조성을 위하여 조례제정이 거론됐는데, 그런 것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고, FTA 대응, 아니면 농업보호, 농업특별세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특별세 걷자고 하면 또 표와 관련되어 안할테고, 결국은 농민들은 앞으로도 계속 어렵게, 힘들게 살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함.

- 김용필 대표

· 큰 배도 결국 움직이는 것은 선장에 의하듯이 리더들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일본 식량자급률이 50% 정도 된다는데 우리는 20% 정도임. 그 중에서 쌀 부분이 무너지면 밑으로 더 내려갈 것임.

· 쌀생산면적을 지켜야 하는데, 간척지 논 등에 지금 타작물 재배전환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느껴짐. 그런 가운데 벼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조례는 타도에 비해 선진화된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임.

- 안승원 교수

· 우리나라는 경종쪽에서 수도작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음. 세계 곡물가를 보면 옥수수, 콩 등의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부분도 있음. 최근 1~2년새에 쌀가격이 폭등하고 있고, 농업형태가 비슷한 일본은 밀이나, 콩, 옥수수도 일부 재배를 하지만, 순환농업형태로 돌려짓기를 하는 형태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휴경을 시켜서 80% 정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써서, 콩이나 밀, 옥수수 등을 장려하고 있음. 잘 짓는데를 예로 들면 작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1/5에서 1/10가격 밖에 안됨.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비에 비해서 쌀 가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다 보니 콩을 재배하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절대로 아닌 것 같음.

· 당분간 유기농이라고 친환경 콩 가격이 높은 점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인 우리나라 쌀은 다른 곡물에 비해 변동 폭도 상당히 크고, 지키지 않으면 주식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음.

· 농사를 하기 전까지는 농업인이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농업인의 노력이나 기술이 조금 부족하고 불성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니, 비현실적인 것이 너무 많음.

· 일본이 비슷한 나라라 예를 많이 드는데, 일본에서는 FTA가 이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 수입 등의 컨트롤을 잘함. 농업쪽에서 수출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예를 들면, 4년전인가 생강작황이 않좋아서 오를것으로 예상하니까 농민들이 수확하기도 전에 수입하는 바람에 수확비용도 안나올 정도롤 가격이 폭락해서 갈아엎을 때가 있었음. 이건 엄청난 문제인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

도 없음.

· 고추가격이 올라가니 언제 또 수입해서 풀게되면, 어느정도 하락이 예상되는 점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앎. 중국의 고추,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 특히 월남고추, 캡사이신 농도도 청양고추 5배 정도 매운고추들이 있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면 또 폭락하게 됨.

· 유통단계까지 1년 동안에 어떠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되어 있음. 농민의 잘못도 있고, 정책의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가가 비싸다면 수입해서 풀어놓으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가격이 폭락하는데,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음.

· 그래서 또 다시 실망하게 되고, 유통기간이 짧은 배추 등의 품목이 있는데, 그런 것은 농협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저장하여 수급안정을 꾀하여야 함. 안정적인 수급 속에서 경영수익,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수출입 관계가 조정되어야 함.

· 누가 안된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서 고추가 들어온다고 할 때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많음. 어떤 성분이 검출되면, 협상관계에서 몇 개월을 얼마든지 미룰 수 있는 것이고 컨트롤이 가능한 일임.

· FTA가 이행된다고 해서 컨트롤이 안되고, 자유무역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님. 안전성 문제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틀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농업도 살리고, 소비자들의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해 놓고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지, 내부적 조정만으로는 이미 많은 농산물이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함.

-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 아까, 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이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방법이 낫다고 봄. 이자보전을 해주면 큰 예산 안들여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함. 이자율이 6~7%된다면, 4~5% 정도 이자보전을 해주고 개인이 1.5% 정도 부담하면 농업인에게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 김용필 대표

· 농업 이 부분,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도 그렇지만 많이 지쳤음. 90년대 초반 처음 휴경지를 경작하면 지원금이 있었음. 간식도 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휴경지만 있으면 농사를 지었음. 정말 이제 지친 것 같음. 여러 가지 현상가운데, 그렇지만 이 땅, 이 농업, 이 농촌, 우리 농업인이 관계된 이 부분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음. 어머니 품 같고, 고향과도 같음

· 평상시 아이들 기저귀 하나 걸쳐져 있지 않는 곳에 추석 때면, 시멘트 포장된 그 농로에 교통순경이 있어야 됨. 설날이나 추석 때면 농촌의 작은 지역도 차량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주차공간이 꽉차 있음. 그곳에 온 사람들은 도시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분도 많음

· 농업 문제, 농업이 예산 문제가 아닌가. 재원문제가 아닌가. 서산 쪽에서의 기금문제, 당진지역에서 벼재배농가경영안정직불금 등 다 돈 문제임.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서로 설득되고 이해되어서 잘 접근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임.

· 예산·홍성지역 간담회에서 김재원 부회장님 말씀이 전에 송아지 금이 좋을 때는 새끼나면 그렇게 좋아 했는데, 지금은 송아지 낳아도 그냥 낳았나 보다 이거고, 설사하면 죽지 한다고 함. 키우면 키울수록 밑진다는 것임. 축산에 대한 소득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FTA를 중국이든 미국이든 체결하고, 피부에 와 닿는 정도가 되면 정말 축산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절감하고 있음.

· 여성농업인 사무국장 박명숙씨는 논에 옥수수를 많이 심는 보조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사료가격이 비싸니, 그래서 TMR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효율적 축사관리을 위해 사료배합기를 쓰면 노동력이 절감되는 등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인 성과물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천안의 이성근 부회장이 강조했던 부분은 도데체 농협이 일을 하지 않는 다는 것임. 농협만 제대로 일을 하면 FTA고 뭐고 간에 이런 것을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함. 일본은 데모하지 않는다는 것임. 농협이 생산한 농산물을 다 알아서 판매해 주는데 우리 농협은 그 일을 않는 다는 것임. 지역농협을 통한 농업인들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대책, 경제활성화 이런 부분도 반드시 중요한 부분으로 채택되어야만 할 것임. 충남도 농업인들의 중요한 생각이 아닐까 함.

-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농협의 이사임. 저는 농협에서 감사를 2년차 하고 있는데. 농협이 어떻게 됐던, 신경분리가 되서 국가로부터 자산을 얼마나 받아낼 거냐를 가지고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농협에서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안하려고 함.

· 농사짓는 것 자체도 돈이 안되지만, 농산물을 판다, 농기자재를 취급한다는 자체가 돈이 안됨. 개인사업자들을 이길 수 없음.

- 안승원 교수

· 일본에서는 농협의 역할이 우리나라와 같이 크지 않음. 작음. 상당히 단위적으

로 일을 함.

- 유근준 한국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 농협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가공·유통부분임. 그런데 그들이 안하려는 이유가 돈이 안되기 때문임. 전국 대의원 모임에서 대형마트와 경쟁하기 위해 이번에 농협에서 수입농산물을 취급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유가, 농협마트에 왔는데 수입농산물, 예를 들어 바나나를 사러 왔는데, 그게 없으니 매출액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함.

· 단순한 수입과일 한 두 품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축산물도 팔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임. 첫 번째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중요함. 직원들은 매출액이 많아도 별로 안 좋아함. 왜냐면 일만 많지, 많이 판다고 월급 더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논리는 고객을 더 확보하기 위해 수입농산물을 취급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사실은 경기도 연합회와 충남연합회가 성명서 발표를 한번 했음. 농협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는 것임.

· 직원이, 조합장이 조합원 위에 군림하고 있고, 사업도 자기네가 원하는 사업, 자기네가 필요한 사항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임.

· 유통사업을 하려면, 뼈를 깍는 구조조정을 통해 그런 경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자본금을 만들어서 안해주면 말고 해주는 만큼 가지고 하겠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저는 농협에 대해 분명히 불만이 많음.

· 항상, 도 차원에서 농협지역본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관하고 가까운 그런문제도 사실 있음. 금고 때문에, 금고가 갖는 어떤 금융의 힘 이런 것 때문에 가까움. 군수하고 지부장과 결속이 되어 있는데 금융 쪽에서는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음.

· 경제사업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농협을 상대로 정말, 집회를 하든 뭐를 하든 한 번 화끈하게 해 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말로 해 가지고 설득되는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함.

- 안승원 교수

· 일본의 경우 농협과 소비자 중심으로 발달된 생협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아이포크라는 생협이 소비자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생산자도 포함됨.

· 대학내에 서점, 문방구점, 식당, 그 외 음료수 가게, 생필품점 등이 학교내에 들어가 있는데, 학교급식은 대부분 생협에서 담당을 함. 생협이 전국규모형태는 아닌

데 다 연결되어 있고, 지역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음. 생협에 가입하면 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하나로마트 같은 형태로 지방 또는 도심지에 슈퍼마켓 형태로 위치하고 있음.

· 소비자와 직접 관련되어 움직이므로 신뢰성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이 농협이라고 봄. 농협을 비판도 해야 되지만 잘 활성화시켜 감당하게 해야되는데, 경영적으로 손실부분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 떠나는데 이건은 뭐 경제논리로 당연한 것임.

· 농협에게 그동안 너무 쉽게 어떤 지원금이나 혜택을 주어 왔다는 게 문제될 수도 있음. 그렇다보니 금융부분에서는 속말로 누가 집권을 해도 농협중앙회를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어 있음.

· 그정도로 튼튼한 조직하에서 이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안무너지는 것임. 이윤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금방 무너짐. 그만큼 농협으로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우리도 경제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실제 경제사업을 잘 하는 농협은 많이 성공했음. 대표적인 농협이 많이 있음. 그런데, 일 잘하는 상무급 직원들이 조합장 선거시 반대편에 섰다는 게 알려지면 그 순간 농민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업은 무너짐. 그러다 보면 결국 피해는 농민에게 돌아감. 현실적으로 일하는 사람 한 둘만 바뀌면 잘 나가는 사업도 다 무너진다는 사실임. 뒷받침을 농민들이 해 줘야 하는데 어렵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많이 있음.

- 김용필 의원

· 천안·아산 지역에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구가 적지 않음. 농업인들이 집단활동에서 어려움을 겪다보니 생산물을 가공하고 유통하는데 뭔가 조금만 도와주면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아쉬움.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농협인데,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주력을 하다보니 거기에 관련된 개혁의 목소리가 나옴.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인데 임직원들을 위한 역할을 더 하는 현실이 안타까움

· FTA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기구로써 완전한 변화를 요구받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이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데 이부분에 관해서 천안·아산지역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음.

· 부여·청양지역 서범욱 부여농촌지도자연합회장은 3일 쓰려고 3천만원짜리 농기계를 사야하는데, 각 농업기술센타의 농기계은행을 통해서 더 많은 농기계를 보유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수리해 달라고 하였음.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경쟁력을 강화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임.

· 서천·보령지역 나창균 경영인연합회장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시대적인 추세인 것 같음.
그러나 친환경 농업인들이 보조금만 타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을 걸러낼 것은 걸러내서 실제로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FTA 이후에도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고, FTA에 대응한 종합대책에 중요한 부분으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느꼈음.

· 연기·공주지역에서 특이한 내용으로 김기윤 농촌체험관광회장님은 체험관광과 가공분야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득도 중요하지만, 농촌이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도시민들이 소비하게 하는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음.

· 일종의 농협이 추진하는 팜스테이, 산촌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분야가 앞으로 개방화 이후에 충남도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활로로 꼭 한번쯤 점검하고, 채택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함.

· 복숭아 품질향상을 위한 FTA 대응사업자금으로 암거, 방충망 등의 시설을 하기 위해 이장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작목반으로부터 받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칠레와의 FTA이행 이후에 과수원 폐원에만 지원이 있었고, 과수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 결여되었다고 했는데 이런부분도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함.

· 금산·계룡·논산지역에서는 금산군연합회 김화중 회장님이 선대책, 후비준을 주장하면서 대책없는 FTA는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하였음. 농업에 대한 예산이 충분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FTA를 통해서 공업화, 수출화를 통해 발생된 이익이 농촌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는냐는 의견이 있었음.

· 계룡시연합회장 송인석회장 역시 스위스 예를 들면서 관광산업으로 인해 피해보는 산업에 돌아갈 수 있는 수출작물목록이라고 하여 50%까지 농민에게 지원해서 국외시장을 공략하는 의견이 있었음. 보고서에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함.

· 김민수 금산군4H연합회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음. 수원농업전문학교에 가면 병역면제혜택이 있는데 충남 공주·청양에도 농업계통 학교가 있는데 우수학생을 유치해서 장학금을 주고, 병역혜택과 졸업시에 전공한 분야의 사업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토해서 농업을 위한 인력육성의 길을 찾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좋은 의견이 아닐까 함.

· 16개 시·군을 돌면서 나타난 결과물을 가지고 10대 과제를 책정한다든지 구체적인 실천과제, 세부과제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충남만이 아니고 농업인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보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완전을 보상을 요구하는 것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음.

· 우리 스스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FTA를 체결했고, 그래서 농업이 어려워진다면, 차라리 농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폐업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완벽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음.

·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군에서 나온 좋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에 대한 생각을 듣고,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보고, 다시 정리하여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해서 FTA에 대응하므로써 이후에 농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되어 왔음을 분명히 말씀드림.

- 이선범 예산군 품목별연구회협의회장

· 품목별 연구협의회장을 2년째 맡고 있음. 이전 방식으로 농업을 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유도자고자 하는데 농촌인력이 노령화되어 친환경농업에 대한 애착심이 없어 농업인단체장들이 리더역할을 해주었으면 바램이 있었음. 그런데 지원없이 각자 자비를 들여 운영해야 함.

· 선진지견학을 한번 가더라도 기술센터에서 차 한 대 내주고, 한대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서 매년 갔고, 갈 예정임. 뿐만 아니라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회장들이 개인적으로 자비를 들여야 하는 부분을 짚었으면 하는 생각임.

· 저는 잘 못하지만 단위품목별 회장님들도 지금 컴퓨터시대에 컴표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함. 기술센타에서 많이 하지만, 품목회원들끼리 나름대로 받고 싶어하는 교육도 있음. 우수농산물 품평회라든지, 직거래라든지 어떤 좋은 행사를 하고 싶은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주셨으면 좋겠음.

· 29개 단체를 운영하면서 애로점이 많았음. 그래도 첫해는 열의를 갖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늘상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음.

- 김용필 대표

· 버스 두 대 갈 때 한대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 시·군에 돌다보니 도비를 많이 배정해 달라고 하는데 농업인단체 운영에 관련된 경상비 지원이 좀 풍족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함. 돈 없는 회장님을 단체를 이끌어 갈 수 없는데 안타까운 일임.

· 농업·농촌 지역에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단체에 지원을 확대해서 선진지견학, 전자상거래 교육, 컴퓨터 교육을 많이 받게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력을 육성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을 통해 강한 농업으로 체질전환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함.

·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농민회 그 외 많은 분들이 아스팔트 농사를 지었어도 큰 수확이 없었고, 그러한 우리의 외침을 정부는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충남도의회에서 유일하게 이러한 외침을 듣기 위하여 모임을 만들

었다는 것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을 함.

· 또, 이것을 기점으로 단체 사무실이나 도청, 도의회의 공간을 통해 임원들과 더불어 FTA에 대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또는 단체별로 토의를 해서 의회와 더불어 의원들과 토론도 하는 것으로 투쟁방향이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봄.

· 충남도의회 FTA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가 출발의 테이프를 끊고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길이 하프인지, 단축인지, 42.195km 풀코스 장기전인지와 육체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그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함.

· 그 길에 많이 동참해주시고, 지켜봐주시고, 좋은 의견과 생각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올해 정해진 시간 안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서 충남농업이 붕괴되지 않고, 아름다운 농촌에 귀농·귀촌할 수 있는 작은 토대위에 벽돌을 쌓아 나가도록 하겠음.

도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2011.9.5)

5. 세계유기농대회장 현장방문(9.29)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현장방문 추진계획

농촌의 농업여건 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충청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가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지를 방문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연구 역량 제고

1. 일 시 : 9. 29(목) 08:00 ~ 17:30, 〈9. 30일(금)은 개인별 참가〉
2. 대 상 : 김용필 대표의원 등 10명
3. 방문지 : 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장(경기 남양주시 팔당지역)
   ① 9. 29 : 부대행사 중 'G Food Show', '유기농박람회', '유기농테마파크' 참관
   ② 9. 30 : 학술대회 제3주제 '유기농업과 자연생태의 복원'(08:30~18:00) 참가(희망자)
4. 내 용 : 유기농 재배·운동·체계·가치·방법,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학습

※ 행사개요
- 주관 :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한국조직위원회 대표 김문수)
- 주제 : '유기농은 생명이다'(Organic is Life)
- 일정 : 9.26~9.27(사전학술대회), 9.28~10.1(본대회 컨퍼런스), 9.28~10.2(부대행사), 10.3~10.5(총회)
- 장소 :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타, 청소년수련관, 제2청사

5. 일정계획

시간 계획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08:00	09:00	60'	◦출발 및 천안 IC 부근 합류	천안소방서
09:00	10:30	90'	◦행사장까지 이동	
10:30	12:00	90'	◦부대행사 관람 1	
12:00	13:30	90'	◦이동 및 오찬	
13:30	15:00	90'	◦부대행사 관람 2	
15:00	16:30	90'	◦천안 IC 부근 도착	천안소방서
16:30	17:30	60'	◦사무실 도착	

6. 조치계획
   차량 배차신청, 오찬장 등 세부사항 검토, 추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농수산경제위원회 합동 현장방문 요약

○ 일시 : 2011. 9. 29. 10:00~18:00

○ 장소 :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장(남양주시 체육문화센타)
- 경기도 남양주시 종합운동장로 65(이패동 산95)

〈세계 유기농대회〉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이 '77년 이후 3년마다 대륙별로 개최하는 행사 (전세계 108개국), 아시아는 금회 최초개최(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 주관 : IFOAM(한국조직위원회 대표 : 김문수)

○ 주제 : '유기농은 생명이다'(Organic is Life)

○ 행사 : 학술대회, 박람회, 자재전시 등 부대행사

○ 기간 : 9. 26~10.5(10일간)

○ 참관내용

- 유기농박람회장(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 부스
→ 각 광역·기초자치단체 부스 → 업체 부스)
- G Food Show(경기도내 자치단체, 업체 전시 부스)
- 이벤트 광장, 휴게존, 슬로푸드 체험, 마켓페스티벌, 대화·간식존
- 유기농테마파크

〈충청남도 친환경농산물 전시판매전〉

- 기간 : 9. 28~10. 2(5일간) 10:00~17:00
- 규모 : 판매부스 5동 (부스규격 3m×3m)
- 출품 : 20여 품목(친환경 쌀, 과일, 채소, 가공식품 등)
- 운영 : (사)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주형로)

※ 부스 임차 및 홍보비 지원 : 10백만원

○ 참석자 : 9명

- 회원(의원) : 김용필 대표, 강철민, 이준우
- 농경위원 : 조길행
- 회원(전문가)
  ·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 안승원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부교수
- 집행부 : 친환경농산과장 이건호

○ **기타 참석자**

- 전문위원 성백서, 문윤식・권재용・이양호 주무관
  TJB 전영수 기자

○ **일기 상황** : 일정중 가는 비

6.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른 농어업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11.16)

2011. 11. 16.

수 신 : 충청남도의회 의장

제 목 :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발의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 및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을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1부. 끝.

발 의 자 : 김용필 의원

찬성 의원 수 : 10인(서명 별첨)

찬 성 의 원 서 명 부

□ 안건명 :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 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의 원 명	서 명(인)	비 고
권 처원		
김 장욱		
송 덕빈		
강 석고		
유 익환		
강 기동		
김 기방		
조 길행		
이 르으		
김 홍열		

제247회 정례회
제 1 차 본회의
2011 . 11. 16

제 안 설 명 서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김용필 의원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김용필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열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어업은 지난 1994년 UR협상 이후, 급속한 농어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쌀값 하락, 농어가소득의 정체, 농어가부채 문제 등으로 위축되고,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시장 추가 개방, DDA 농업 협상에 의해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 및 국내보조의 추가감축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성장전략으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년 칠레와의 FTA 등 9개가 발효되고 있고, 미국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캐나다・중국 등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여건 조성중에 있는 것이 17개나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운명이 걸려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수출시장 확보와 개척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농어업과 같은 취약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나 대폭적이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 24.1조원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농업인들은 정부의 보완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데, 그 대책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으며, 피해액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입

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118만호 농어가의 고통을 절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농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FTA비준에 앞서,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보다 근원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열가지로써,

첫째, FTA 추진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둘째, 정부의 대응방향과 전략, 관련 자료의 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에 반영

셋째,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전액 감면

넷째, 보조금 지원규정에서 '영농법인 우선 지원 조항'을 제외

다섯째, 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의 현실화와 감척사업을 확대

여섯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국비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일곱째, 과수 생산·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개선

여덟째, 후계 농업인력 육성방안 마련

아홉째, 농어업 정책자금 융자금리를 1%로 인하

열번째, 전면적인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입니다.

건의하고자 하는 곳은, 국회,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 주무부장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3당 대표 등 11개소입니다.

주요 건의사항과 건의처 등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 내용은 도내 농어업인들이 의원들에게 요청한 사항이니 만큼, 충청남도의회가 우리 농어업인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김용필 의원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1. 11 16.

발 의 자 : 김용필 의원

찬 성 자 : 이준우 의원외 9인

1. 주문

우리의 열가지 건의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고, 또한, 한미FTA 비준안 처리전에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보다 근원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함.

2. 제안 이유

○ 정부가 FTA 등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총투자 규모 24.1조원의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을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농어업인들은 정부의 보완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현실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으며, 피해액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임

○ 따라서,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이 대한민국 118만호 농·어가의 고통을 절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전에 FTA 등으로 점차 확산되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의 근원적 마련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FTA 추진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산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나. 정부의 대응방향과 전략, 관련 자료의 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에 반영

다.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전액 감면

라. 보조금 지원규정에서 '영농법인 우선 지원 조항'을 제외

마. 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의 현실화와 감척사업을 확대

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국비지원비율을 상향 조정

사. 과수 생산·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개선

아. 후계 농업인력 육성방안 마련
자. 농어업 정책자금 융자금리를 1%로 인하
차. 전면적인 밭농업직접지불제 도입

4. 건의 대상 기관

○ 대한민국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150-7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150-701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청와대 대통령실(농수산식품비서관)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대통령실)

○ 국무총리실(농수산국토정책관)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기획재정부장관(대외경제국장)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농림수산식품부(통상정책관)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37-747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한양빌딩

○ 민주당 손학규 대표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영등포동 6가 133)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3~4F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

우리 농어업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급속한 농어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쌀값 하락, 농어가소득 정체, 농어가부채 문제 등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쌀 관세화 유예에 따른 쌀 시장 추가 개방, DDA 농업 협상에 의해 예상되는 시장개방 확대 및 국내보조의 추가 감축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004. 4. 1 칠레와의 FTA 이후, 페루 등 이미 9개가 발효되고 있으며, 2007. 6. 30 미국과는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 비준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등 협상중인 FTA가 7개이며, 중국 등 협상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10개나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룡과 꿩의 대결로 비유할 수 있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승부에 우리 농어업·농어촌·농어업인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수출시장 확보 및 개척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농어업과 같은 취약산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FTA가 되기 위해서는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폭적이고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07년 'FTA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21.1조원(농업 20.4, 수산 0.7), 2010년 11월에 발표한 한·EU 보완대책에서는 '20년까지 2조원, 그리고 한·미 FTA 비준을 앞둔 2011년 8월의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는 1조원을 늘려 총투자규모 24.1조원을 농수산업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농어업인들은 정부의 보완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으며, 피해액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 118만호 농어가의 고통을 절감하고 다음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농어업인이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

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FTA 추진으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재원을 마련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로 자동차 등 공산품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농업분야 특히,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31.7억달러의 수출증가가 예상되나, 농수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8,44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공산품 수출액 중 일정비율을 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은퇴농가에 대한 대책, 농촌활력화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FTA 대응사업이 품목별, 기능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일반 농정과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부족한 예산과 부채증가로 가용예산이 부족하여 좋은 아이디어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지역 농어업인의 의사를 반영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FTA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의 대응방향과 전략, 관련 자료의 공유를 위해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양한 정보채널과 연구결과를 보유하고 있지만 협상진행과정상의 장애를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FTA 체결에 따른 정부를 수집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동향 설명회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보완대책 중심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농·어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영구적으로 전액 감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제도로써 2012년 6월 31일 까지 연장 운영 중에 있는 면세유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을 유예하여 75% 감면 운영한 뒤 폐지될 것이라고 하였고, 수정보완대책에서 2015년 12월말까지 일몰기한을 다시 연장된다고 하였습니다. 농산물 개방확대로 쌀값은 하락 혹은 정체된 상황에서 농수산물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농수산물의 대외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 면세유 지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여 농업인의 장기적인 영농설계를 가능하게 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여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어경비의 43%를 유류비가 점유하고 있는 어업에서도 면세유공급이 중단되면 어업경영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대상을 한시적 면제에서 영구적으로 면세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금 지원규정에서 '영농법인 우선 지원 조항'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일부 국비사업의 경우 '영농법인'을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농법인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회원간 불협화음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비 보조금 사업에서 '영농법인'을 우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어선 감척사업 지원금의 현실화와 감척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수입증가로 어업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허가정수 보다 어선수가 많은 업종의 어선감척사업을 확대하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방식을 저가 입찰방식에서 실거래 가격 지원방식으로 개선하여 감척사업 지원금을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국비지원비율을 20%에서 50%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국비지원비율을 30%에서 40%로
상향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가,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농가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FTA 대비 시설원예 경쟁력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농가부담 경감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과수 생산·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에는 2004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지원된 생산단지와 이후 조성한 수출단지에 한하여 지원대상을 한정하여 선정하고 있어, 유망 수출단지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품질 과수생산과 가격안정을 위해 유망 수출단지의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후계 농업인력육성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에서는 신규 후계 농업인이 유입되지 않고, 고령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후계농업인에 대한 병역 대체복무제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만약 이제도가 폐지될 경우 신규 후계 농업인의 유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복무기간 중에는 영농이 단절되는 등 농업경영에 많은 차질이 예상됩니다. 증여세 감면범위 확대 등 후계 농업인 유입정책과 병역 대체복무제 지속 등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농어업정책자금, 영농·영어자금(농기계포함) 융자금리를 1% 이하로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 농지구입자금 등 각종 정책자금 융자금리 3%는 아직 취약한 우리의 농업경영 현실에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경영 기반유지를 위하여 융자금리를 1%로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전면적인 밭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밭도 논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식량창고이며, 삶의 터전이자 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이며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이 큽니다. 세계적인 곡물가격의 가파른 상승추세에 대비하여 식량자급율을 제고하고 밭농업 농가의 소득이 일정수준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밭농업직접지불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은 위의 열가지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고, 또한, 한미FTA 비준 전에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보다 근원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11. 11.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7.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12.15)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동의

의안번호	제 호

발의연월일 : 2011. 12. 5.
발 의 자 : 유병돈 의원
찬 성 자 : 김용필 의원외 7인

1. 주문

○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FTA가 일부가 아닌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성장으로, 다수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임.

○ 현재, 대다수 농어업인들은 정부의 현실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보완대책에 대해 반발하면서 피해액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 되었어야 한다는 것임.

○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은 열세 가지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또한,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등 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에 대한 대비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 지난 11월 16일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국회와 대통령, 정당대표에게 보낸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전에 피해보전대책을 보다 근원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 되었고, 11월 29일 대통령이 이행과 관련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만 남게 된 상황에 이르렀음.

○ 특히, 한미FTA는 국민의 생존과 산업 전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민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움.

○ 이 뿐만이 아니고, 현재 캐나다 등 12개국과 FTA를 협상하고 있고, 중국 등 23개국과의 FTA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

○ 정부는 총투자규모 24조 1천억원의 3차례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면세유 일몰기간을 연장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FTA 발효전 축산발전기금 등 추가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공표하고 있음.

○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음.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FTA가 일부가 아닌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성장으로, 다수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임.

○ 현재, 대다수 농어업인들은 정부의 현실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보완대책에 대해 반발하면서 피해액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 되었어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의 열세 가지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또한,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등 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에 대한 대비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 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 내용

1. 피해 산업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기금을 조성하라.
1.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폭 지원하라.
1. 거점 도축장 육성에 따른 구조조정사업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1.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기준을 조정하라
1.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1.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1. 고품질 인삼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라
1. 농산물 품목별 생산조정 매뉴얼을 마련하라.
1.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수산물 직불제를 도입하라.
1.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에 정한 일몰제를 폐지하라

1.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1. 농어촌 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라

1. 상권 활성화사업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4. 기타

가. 결의안 : 붙임

나. 결의안 보낼곳

○ 대한민국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여의도동)

○ 청와대 대통령실(농수산식품비서관)
110-820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대통령실)

○ 국무총리실(농수산국토정책관)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기획재정부장관(대외경제국장)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
110-78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지식경제부(산업경제정책관)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 농림수산식품부(통상정책관)
427-71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정책국장・소상공인정책국장)
302-701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150-871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한양빌딩

○ 민주당 손학규 대표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영등포동 6가 133)

○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3~4F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

지난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 이후 44개국과의 FTA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 되었고, 11월 29일 대통령이 이행과 관련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만 남게 되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한미FTA는 국민의 생존과 산업 전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민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현재 캐나다 등 12개국과 FTA를 협상하고 있고, 중국 등 23개국과의 FTA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총투자규모 24조 1천억원의 3차례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면세유 일몰기간을 연장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FTA 발효전 축산발전기금 등 추가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대책을 그때 그때 추진하는 것이다.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다.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FTA가 일부가 아닌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성장으로, 다수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농어업인들은 정부의 현실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보완대책에 대해 반발하면서 피해액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대한민국 118만호 농어가의 고통을 절감하고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농어업인 등이 희망을 갖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에 대한 대비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피해 산업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기금을 조성하라.

FTA로 인하여 제조업 부분은 이익을 보는 반면 농업·농촌부분은 축산과 과수중심으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한칠레 FTA는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 FTA발효에 따른 기금조성목표나 조성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농업과 제조업과 불균형, 농업인 소득감소와 신규 투자 위축으로 농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의 농가 경제 지지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마련이 필요하며, 기존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입법으로 수혜산업에서 피해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1.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대폭 지원하라.

축산은 한미 FTA 발효시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이지만, 국비 부담비율이 27~32%에 불과하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고, 축산농가는 신청물량 대비 국비 44%~69% 배정으로 지원 규모가 미치지 못해 사업효과가 미흡하므로 축산부문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양질 조사료 자급화, 가축분뇨 자원화, 가축방역과 관련된 국비사업을 대폭 확대하라.

1. 거점 도축장 육성에 따른 구조조정사업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축산물 유통 선진화를 위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공감하나, 현재의 도축장 구조조정 자금지원 규모로는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 거점 도축장 시설현대화 자금지원이 융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초기 시설투자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투자비용 대비 폐업보상금이 매우 낮아 구조조정에 미온적이다.

따라서, 건물 및 시설장비에 대하여 전액 현시가로 폐업보상하고, 거점 도축장 시설현대화를 위하여 현행 융자 70%에서 보조 50%, 융자 30%로 국비를 대폭 상향조정하여 지원하라.

1.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기준을 조정하라

과실생산시설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하여 생산시설,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지원대상 농가를 2004. 5~2010.

12월에 조성된 과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출유망단지조성에 한계가 있으며, 미지원 농가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원대상 농가를 2010. 12월 이후에 조성한 과원까지 확대하여, 신규 조성 과수 농가에게도 시설현대화, 품종갱신 사업 등을 지원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된 고품질 과수생산으로 농가가 자생력을 확보하라.

1.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사업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원예전문단지로 기 조성된 단지를 대상으로 유리온실, 자동화 비닐온실 증·개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20%를 지원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10a 이상 시설원예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겹보온커튼, 수막시설, 보온덮개 등 지열 냉·난방시스템, 목재팰릿난방기 지원을 추진하는데 국비 30%를 지원하고 있는 바 농자재 가격 상승 등 생산비 증가로 농가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국비 지원율을 40%로 상향 조정하여 농가 시설투자비 경감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라.

1. 농작물 재해보험 국비지원을 확대하라.

농작물 재해보험은 국비 50%로 지원하고 지방비는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도비 15%, 시군비 15%를 부담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재해보험 가입 폭증 및 품목 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여름철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멜론, 상추, 고추 등은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태풍·우박은 주계약 대상이나, 동·상해·집중호우 등은 특약가입 사항으로 농가의 가입비용 증가로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보험사업인 만큼 국비 부담률을 7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 함으로써 예산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지역특성에 알맞은 재해보험 가입품목의 조속한 전국시행과, 보험료의 추가인상 없이 전 품목을 '종합위험방식'을 전환하여 안정적인 영농여건을 조성하라.

1. 고품질 인삼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국비를 지원하라

우리 충청남도는 소비자의 소비 트랜드인 웰빙 등 고품질의 청정인삼의 생산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해 2010년부터 GAP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상존하고 외국산과의 차별화와 안전한 인삼생산을 위한 GAP 사업으로 국제경쟁력 확보와 주요 소비처인 대 중국의 수출 경쟁력의 선점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삼 GAP 사업에 국비를(50%)를 지원하라.

1. 농산물 품목별 생산조정 매뉴얼을 마련하라.

농산물 수입개방 정책에 따라 외국산이 국내 시장에 반입되므로써(예, 포도) 일부 품목의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 품목 재배 농가는 경제성이 있는 다른 품목으로 이동 재배함으로써(예, 사과) 수요를 초과한 생산량 급증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농촌경제 붕괴요인이 되고 있는 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산조절 시스템이 전무하고, 피해예방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FTA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소비량을 감안 적정 재배・생산량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품목별 생산조절이 필요하고, 연간 소비량 예측, 농산물의 적정 생산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대체작목 이동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배면적, 생산량, 소비형태(생식, 가공 등), 연간 적정 생산량, 품목간 예상 이동 작물, 이동에 따른 생산자 보호대책 등 정부 차원의 '생산조절 매뉴얼'의 마련하라.

1.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수산물 직불제를 도입하라.

국내외 어업경영 여건악화 등으로 침체되어 있는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기초산업의 육성과 균형있는 국민복지 실현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FTA로 인한 수산물 수입개방시 어가하락과 어업인 소득감소가 예상되므로 어업인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어획물의 가격이 평년보다 낮을 경우 가격차의 일정부분을 직접지불로 보전할 수 있도록 수산물소득안정직불제를 도입하라

1.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에 정한 일몰제를 폐지하라

유통업의 경우 글로벌 쏘싱능력, 가격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간의 경쟁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와 미국 최대 도소매유통기업인 '슈퍼밸류' 진출이 예상되어 FTA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자명하다.

따라서, 지역상권 보호 및 영세 소상인 보호를 위해 시행중에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실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일몰제(2015.11.23)를 폐지하고 허가제를 도입하라.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시장정비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특별법」에 정한 일몰제(2016.12.31)를 폐지하라.

1.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 완화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미국 등의 기술·가격 경쟁력이 우세한 의료기기, 일반기계, 화학업종 등 피해가 우려되는 바 정부의 피해기업지원 정책인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 감소율 10%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하라.

1. 농어촌 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라

2004년부터 국가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수도권 이전기업, 신·증설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농수축산식품 제조업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기업 종사자 이주정착 지원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지역의 농수축산품 원자재 사용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구축하여 지역순환경제가 실현되도록 FTA 피해업종 농어촌 이전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라.(지역특산품 관련 식품제조업종의 기업 이전·신·증설 보조금, 주민정착 보조금)

1. 상권 활성화사업 국비 지원을 확대하라.

상권활성화사업은 개별시장 및 상점가만을 지원하는 현행방식을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주변상권에 대한 기반인프라 구축 및 경영개선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중 기반인프라 사업비는 시도별 시설현대화사업 한도 금액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시설현대화사업 한도 금액에 지원하던 방식을 별도 국비로 지원하라.

2011. 12. 15.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

제247회 정례회
제 4 차 본회의
2011 . 12. 15

제 안 설 명 서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농수산경제위원장 강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과 유병기 의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247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보다 4일이 늘어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의 심사와 처리 등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6일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일동은 국회와 대통령, 정당대표에게 보낸,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를 통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전에 피해보전대책을 보다 근원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되었고, 11월 29일 대통령이 이행과 관련된 부수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발효만 남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한미FTA는 국민의 생존과 산업 전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국민의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고, 현재 캐나다 등 12개국과 FTA를 협상하고 있고, 중국 등 23개

국과의 FTA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투자규모 24조 1천억원의 3차례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면세유 일몰기간을 연장하며, 국회와 정부에서 FTA 발효전 축산발전기금 등 추가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FTA가 일부가 아닌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성장으로 다수의 힘이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 농어업인들은 정부의 현실적이지도 않고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보완대책에 대해 반발하면서, 피해액 이상의 대폭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대비책을 마련하고, 추진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도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의 결의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등 경쟁력 제고와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에 대한 대비를 먼저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재촉구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 사항은 열세 가지로써,

'**1. 피해 산업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기금을 조성하라**.' 등 입니다.

주요 결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대한민국 118만호 농어가의 고통을 절감하고, 충청남도의회가 우리 농어업인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2월 15일

농수산경제위원장 강철민

연 구 자 료

RENOVATE Chungnam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1. 7. 13~7. 25

-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

시·군 순회 간담회 자료

충 청 남 도 의 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의 출범에 즈음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공룡과 펑의 대결이라고나 할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기로에 우리 농촌이 놓여 있고 농업도인 충남의 운명이 걸려있다.

정부는 지금 국가성장전략의 기회로 여겨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체결을 하고 있다. 이미 5개 경제공동체 17개국과 FTA가 발효가 되어 있고, 미국과 EU, 페루등 3개 경제공동체 29개 나라들과도 FTA가 체결이 되었다. 더 나아가 호주,뉴질랜드, 콜롬비아,터키와 걸프협력회의(GCC)등 5개 경제 공동체와 협상중에 있다. 문제는 우리 충남도와 인접하고 있는 중국과 협상여건을 조성중에 있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중국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아마도 살아남을 농산물이 있을까를 고민할 때 거의 절망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 베트남과도 협상 여건을 조성중에 있다.

이와같은 충남 농업의 위기 가운데 충청남도의회는 이 모임의 간사인 박상무의원,농수산경제위원장인 강철민의원,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논산에서 수박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송덕빈의원, 농민회 당진군 회장 출신인 이종현의원, 4선 의정경험을 갖고 있는 보령의 이준우의원, 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이진환의원, 국내 FTA연구 전문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김양중연구원,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충남농업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공주대 안승원교수,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교수등이 함께 충남농업의 현장을 돌며 토론을 걸쳐 너무나 광범위한 연구이지만 꼭 도전을 해야만 하는 길 이기에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빗물이 모여 냇물이 되고 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어 나룻배를 띄울 수 있는 것처럼 시대적인 현실 앞에서 불평과 탓만을 하기 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FTA를 이겨내는 그 틈새를 반드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충남도의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충남도의 모든 농업인과 단체들 집행부가 함께 연구하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작지만 강한 함축된 뜻을 도출하여 우리 충청남도 농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고 농업부국을 이뤄나가는 충남도의 FTA를 교두보가 형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대표의원 김용필

목 차

Ⅰ. FTA 협상 진행과 농림어업 파급 영향

Ⅱ. 충남 농림어업 현황 및 특징

Ⅲ. 충남 농업정책 방향

참고 1. FTA 협상 진행 과정

2. FTA 대상국별 교역규모[2010]

3. 정부의 국내 보완대책 요약

4. 충남도 FTA 대응 농림어업 투융자계획

5. 시·군 순회간담회 추진계획

6. 충남농업전략연구회 구성현황

7. 시·군 농업인단체 현황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간담회 자료

정부의 FTA 협상진행과 국내 보완대책 추진상항, 그리고 FTA 대응 충남도 농림어업종합대책중 중요사항 요약내용임.

Ⅰ FTA 협상 진행상황과 농림어업 파급영향

□ FTA 협상 진행상황

○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 다발적 FTA 추진중

- 발효 5개 경제공동체, 협상 추진중 5개 〃, 여건 조성중 9개 〃

○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10.5), 정부간 사전협의중(1차 완료)

- **중국측 강하게 협상개시 요구중**, 국내 농업외 다른 업계도 협상진행 희망

○ 한일 FTA 는 협상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중

-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수준, 비관세 장벽개선에 대한 입장차로 중단상태

⇨ 파급영향이 큰 한중 FTA 조만간 협상개시 전망, 협상전략과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마련 필요

□ 농림어업 파급영향 (충남)

○ 한·미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15년차 1조415억원/충남 1,415)

- 피해율 : 축산 73%, 과실 18%, 채소특작 5%, 임업 3%, 곡물 1%

○ 한·EU,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15년차 3,032억원/충남 509)

⇨ 한·미, 한·EU FTA 발효후 15년차 우리도 생산감소 1,924억원

○ 한·EU, 한·중 FTA로 인한 파급영향(한·미 FTA 100 기준시)

- 한·EU 체결시 27.4%, 한·중FTA체결시 27~263.3% 수준

○ 취업유발계수표 이용 농업종사자 감소 추정 : 6,000여명

○ 피해가 가장 큰 시군(농업비중 기준) : 홍성, 예산, 천안, 부여

Ⅱ 충남 농림어업 현황 및 특징

□ 충남 농림어업 현황

○ 전국 농림어업생산중 충남 농림어업 13.16%(경북 15.02, 전남 13.56)

○ 道 GRDP 대비 농림어업부문 비중 5.11%로 매년 감소(전국평균 2.4%)

- 지역내 총생산(GRDP) 65조 7,596억원중 3조 3,624억원

○ 경지면적은 237천ha로 전국 경지면적 1,736천ha의 13.69%

- '06년~'09기간중 4.0% 감소, 전국 평균 감소율 3.4% 보다 높음
- 경지가 많은 지역은 서산(11.51%), 당진(11.35%), 논산(8.25%) 순

○ 농가수 15만 8,528가구, 농가인구 41만 7,312명(전국의 13.27%, 13.39%)

- 농가수 연평균 2.86% 감소, 농가수 전국 비중은 13.27%로 증가
- 농가인구가 많은 지역은 천안(9.53%), 당진(8.59%), 공주(8.34%)순

○ 농가소득은 3,286만원으로 전국 평균 3,081만원보다 7% 높음

- 농업소득 1,003만원, 농외소득 1,410만원(전국 평균보다 높음)
- 농가부채 규모는 2,711만원(전국 평균보다 3% 높음)

□ 충남 농림어업 특징

○ 품목별 생산비중 : 축산 32%, 미곡 27.4%, 채소 16%, 과수10%, 그 외 3% 내외

○ 특화도 : 미곡(식량작물), 토마토(채소), 인삼, 배(과수), 젖소, 닭, 돼지(축산)

○ 경영안정성 높은 작물 : 쌀, 고추, 마늘, 인삼, 젖소, 돼지, 육우

○ 품목별 경쟁력 분석(미국, EU, 중국)

- 수출경쟁력 높은 품목 : 배, 인삼, 밤, 양파
- 수입경쟁력 (위험군) : 축산·과수(미국, EU), 원예·어업(중국)
- 가격경쟁력(有) : 미국(배, 인삼, 표고 등), EU(쌀, 밤, 인삼, 토마토, 포도, 고추, 양파), 중국(젖소)

Ⅲ 충남 농업정책 방향

□ 충남 농업정책 기본방향

○ 기본방향 : 구조조정, 경쟁력 제고, 소득보전, 근본적 체질개선

○ FTA 대응 핵심은 경쟁력(가격 및 품질)제고로 소비자 기호 부응

- 가격경쟁력(유) : 기계화, 자동화, 규모화로 경쟁력 지속적 강화
- 가격경쟁력(무) : 고품질 안전 생산체계 구축, 유통체계 확충 등

□ 품목별 정책방향

○ 축산분야 : 방역체계 구축, 식품 안정성 강화, 가축분뇨 자원화, 유통구조 개선, 명품브랜드 육성 등

○ 식량자원 : 수입산과 차별화, 쌀전업농 육성, 가공육성을 통한 지속적 국내 소비기반 확충, 농가소득 안정

○ 과수분야 : 안정적 소비층 확대, 생력화 기술개발, 수출증대 등

○ 인삼분야 : 품질제고, 유통경쟁력 제고, 수출촉진, 가공육성 등

○ 임업분야 : 자생력 확보, 생산기반정비 및 유통구조개선, 소득안전 등

○ 어업분야 : 지속가능 생산기반, 유통기반 구축, 품질제고 등

□ 지원분야별 정책방향

○ 수출 : 수출경영체 조직화, 규모화, 안정적 해외마켓팅망 구축, 수출지원시스템 최적화

○ 인력 : 후계인력 및 품목별 전문인력 양성, 수출선도 인력 및 유통시설 관리전문가 육성

○ 가공 : 1,2,3차 산업간 네트워킹 강화로 6차산업화, 표준화와 차별화 투트랙, 지역내 시장수요 토대 해외시장개척 등

○ 유통 : 유통구조 개선 및 시설 현대화, 주체간 네트워킹 강화를 통한 지역내 유통 촉진

〈 충남발전 연구원 연구용역중 정책제안 〉

통계분석	○ 지방정부 주도 농정체계 전환대비, 지역농업·농촌 개발 전략과 실천과제 수립(친환경 농업, 로컬푸드 등) - 실질적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책 강구
	○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시·군 적극적 지원으로 지역균형 발전 도모(특화품목 육성, 지역별 문제해결 등)
설문조사	○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이를 위한 구조조정 필요 - 농어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경영이 어려운 농가는 폐업지원, 대체작목 전환 지원 등
경제분석	○ 주요 품목에 대한 마켓팅 기반정비 - 가격, 품질, 마켓팅을 망라 종합경쟁력 제고노력 - 안정성 담보기준 마련, 검증(인증)제도 수립후 엄격 관리
영향력분석	○ FTA로 피해가 큰 품목중심 지원강화와 모니터링 - 피해조사 전담 TF팀 구성(피해지역, 품목) - 독자적 대책강구 및 중앙정부 지원요청
정책중요도 분석	○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원정책 효율성 극대화 - 지원분야를 품목별로 파악, 예산 확대, 축소, 유지 등
분석일반	○ 농업계 지방자치단체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개별 농업주체 유기적 연계, 공동마켓팅 조직화, 지역 농업 지도자 육성 - 지자체, 생산자 단체, 생산자, 소비자 대화채널 확보
	○ 향토산업, 지역특화산업 등 내재적 자원 활용 지역경쟁력 확보
	○ FTA 이해와 활용을 위한 노력증대 - 파급영향을 공유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여함

참고 1 FTA 협상 진행상황

구 분	상대국	추 진 상 황	비 고
발효 ; 5개 경제 공동체 (17개국)	칠레	○'99.12. 협상개시→'02.10. 타결 ○'04.4. 발효	
	싱가포르	○'04.1. 협상개시→'04.11. 타결 ○'06.3. 발효	
	EFTA (4개국)	○'05.1. 협상개시→'05.7. 타결 ○'06.9.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	○'05.2. 협상개시→'06.4. 상품타결 ○'07.6. 상품협정 발효 ○'09.5 서비스발효, ○'09.4 투자타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06.3. 협상개시→ ○'08.9. 12차(실질 타결) ○'10.1. 발효	○'09.2월 가서명, 7.2 인도 내각 승인 8.7 정식 서명, 8.26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협상타결 (완료);3개 경제공동체 (28개국)	미국	○'06.6. 협상개시→'07.4. 타결 * '08.7.1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 ○'10.11. 추가협상개시→'10.12. 타결	○18대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08.10.8) - 외통위 통과('09.4.22)
	EU (27개국)	○'07.5. 협상개시, '09.3. 8차, '09.10. 가서명 * 7.13 타결(한-스웨덴 정상회담) ○'10.10. 6 정식서명	○ 유럽의회 승인('11.2.17) ○'11.4.6. 국회 비준안 제출 ○'11.7.1 예정
	페루	○'09.3. 1차(서울), '09.5. 2차(리마) ○'09.6. 3차(서울), '09.10 4차(리마) ○'10.8. 30. 5차(리마) 협상타결 ○'10.11. 가서명	○'11년 3.21(월) 정식서명
협상 중 ; 5개 경제 공동체 (11개국)	GCC (6개국)	○'08.7. 1차(서울), '09.3. 2차(리야드) ○'09.7. 3차(서울)	*GCC(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호주	○'09.5 1차(캔버라), '09.9 2차(서울), '09.11 3차(캔버라), ○'10.3 4차(서울), '10.5 5차(캔버라) ○'10.10.(회기간,캔버라), '11.1(회기간, 서울)	○ 6차 일정 미정
	뉴질랜드	○'09.6. 1차(서울), '09.9. 2차(웰링턴) ○'09.12 3차(서울), '10.5 4차(웰링턴)	○ 5차 일정 미정
	콜롬비아	○'09.12 1차(서울), '10.3 2차(보고타) ○'10.6.14-18 3차(서울), '10.9.6-10 회기간(워싱턴), '10.10.4-8 4차(칼리), '11.2.7-9 회기간(LA)	
	터키	○'10.4.26-30 1차(앙카라),10.7.19-23 2차(서울), 3차(앙카라)11.3.7-11	
협상중단 또는 준비중 ; 10개 경제 공동체 (17개국)	캐나다	○'05.7. 협상개시 ○'08.3. 13차(오타와)	○ 14차 회담 일정 미정 - 쇠고기 제소, 한EU FTA 등과 연관
	멕시코	○'07.12. 1차(멕시코시티) ○'08. 6. 2차(서울)	○'06.2월 이후 3차례 SECA 협상 후 '07.7월부터 FTA로 변경, 협상재개
	일본	○'03.12. 협상개시 ○'04.11. 협상중단	○협상 재개를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 6차례 개최 ('08.6월, 12월, '09.7월, 12월 '10년9월, 11월)
	중국	○'05~'06년 : 민간공동연구 ○'07.3. 산관학 공동연구(공동5, 전문가3) ○'10.5.28 산관학 종료 ○1차 사전 협의('10. 9. 28~29)	○2차 사전협의 미정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09.10. 산관학 공동연구 격상 합의 ○산관학 1차('10.5.6-7, 서울), 산관학 2차('10.9.1-3, 동경), 산관학 3차('10.12.1-3, 웨이하이), 산관학 4차('11.3.28-4.1, 제주)	
	러시아	○'07.10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 '08.7. 제2차 회의	
	MERCOSUR (4개국)	○'05.5.~'06.11. 민간공동연구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09.7 무역협정(TA) 추진 MOU 체결
	이스라엘	○'09.8.17 민간공동연구 개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08.12.9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5개국
	베트남	○'10.3.23 공동연구 개시 합의 ○'10.6.23-24 공동연구 1차(서울) ○'10.10.12-13 공동연구 2차(하노이) ○'11.3.16-17 공동연구 3차서울)	○4차 일정 미정

참고 2 FTA 대상국별 교역규모('10)

(단위 : 백만불, %)

협상 경과	FTA대상국	전체상품 수출	농림축수산물 수출(비중)	전체상품 수입	농림축수산물 수입(비중)	전체농수산물대비(소계/농수산물수입)
발효 (5개)	칠 레	2,947	4.5(0.15)	4,221	667(15.80)	
	싱가폴	15,244	91(0.60)	7,850	85(1.08)	
	EFTA	3,522	7.6(0.22)	5,699	149(2.61)	
	ASEAN	53,195	719.8(1.35)	44,099	3,422(7.76)	
	인 도	11,435	17(0.15)	5,674	393(6.93)	
	소 계	**86,343**	**839.9(0.97)**	**67,543**	**4,716(6.98)**	**18.29**
타결 (3개)	미 국	49,816	518(1.04)	40,403	5,959(14.75)	
	E U	53,507	332.6(0.62)	38,721	1,955(5.05)	
	페 루	944	0.3(0.03)	1,039	76(7.31)	
	소 계	**103,323**	**850.9(0.82)**	**80,163**	**7,990(9.97)**	**30.98**
협상 진행 중 (5개)	GCC	12,530	246(1.97)	66,441	27.7(0.04)	
	호 주	6,642	82(1.23)	20,456	2,212(10.81)	
	뉴질랜드	918	93.9(10.23)	1,176	846(71.94)	
	콜롬비아	1,389	0.4(0.03)	432	74(17.13)	
	터 키	3,753	7.0(0.19)	516	54(10.47)	
	소 계	**25,205**	**429.3(1.70)**	**89,021**	**3,213.7(3.61)**	**12.46**
협상 중단 (3개)	캐나다	4,102	52.5(1.28)	4,351	1,062(24.41)	
	멕시코	8,864	9.6(0.11)	1,521	103(6.77)	
	일 본	28,176	1882.6(6.68)	64,296	658(1.02)	
	소 계	**41,142**	**1,944.7(4.73)**	**70,168**	**1,823(2.60)**	**7.09**
향후협상 대비 (6개)	중 국	116,838	787.3(0.67)	71,574	4,323(6.04)	
	러시아	7,760	235.6(3.40)	9,899	738(7.46)	
	MERCOSUR	8,952	14.8(0.17)	5,543	2,018(36.41)	
	남아공	1,668	8.6(0.52)	2,272	131(5.77)	
	이스라엘	1,059	15.1(1.43)	769	12(1.56)	
	베트남	9,652	153.1(1.59)	3,331	623(18.70)	
	소 계	**145,929**	**1,214.5(0.83)**	**93,388**	**7,845(8.40)**	**30.48**
총 계		**401,942**	**5,279.3(1.31)**	**400,283**	**25,587.7(6.39)**	

※ 농수산물 총수입액 25,587백만불, 발효국가 농산물수입액/농산물총수입액
(산출법 : {18.29=4,716(발효국 총농산물 수입액) / 25,587(농산물·총수입액)}*100

참고 3 정부의 국내보완대책 요약

자유무역협정 체결 ⇨ FTA 활용대책(수출신장), 국내보완대책(수입대비)

□ 국내보완대책 수립과정

① FTA 체결전 사전 연구로 지원이 필요한 산업 예측

② 협상과정에서 미양허, 계절관세, 관세철폐 장기화 등 제도적 장치 도입(개방의 정도, 속도조절)

③ 협상과정 대응이 불충분한 경우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수립

④ 피해분야 평가 및 지원규모를 국회, 생산자 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확정

□ 최초의 보완대책(한칠레 FTA 보완대책)

○ 협상타결 : 2002년 10월

- 400여개가 넘는 농업품목 미개방으로 직접피해 미미하나, 과수부문 생산액 감소 **10년간 3,032억~5,860억 추정**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과수분야 생산자 의견수렴, 설명회, 정책협의회를 거쳐 시장개방하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농가 경영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대책안 마련

○ 보완대책 수립

- 직접적 피해보전 2,262억원, 폐업지원 1,368억원 **총 1조 5,000억원**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한 9개 사업 선정 추진

○ 보완대책의 효과

- FTA 발효후 5년간('04~'08년) 8,194억원 투입, 피해보전 및 경쟁력 강화
- 국내 생산량, 가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고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
- 칠레우위의 포도, 키위의 생산량, 재배면적, 가격 등 안정적 추세 유지, 대체관계의 배, 사과의 생산량도 '03년 대비 49%와 30% 증가하였으며 가격도 안정적 추세 유지
- 동기간 과수농가 19.1%, 재배면적 11.2% 감소하였으나 호당 평균재배면적이 10.1% 증가하여, 과수산업의 구조조정 및 규모화·전문화 진전되었으며, 생산 기반정비에 따라 경영비가 절감되고 노동투입량이 감소

□ 한미 FTA에 따른 보완대책

○ 협상타결 : **2007년 4월**('12년 1월 발효 목표로 국회비준 절차 중)

○ 보완대책 수립 : 1차 (2007년 6월) 발표후 농민단체의 추가요구 및 재정계획 반영하여, 2차 보완대책 마련(**2007. 11월**)

※ 농수산업뿐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으로 향후 추진될 **여타 FTA에 적용될 수 있는 포괄적인 성격**

- **기본구조** : 직접적인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

- **지원규모** : **10년간 21조 1,000억원**(생산액 감소 15년간 1.05조원)

구 분	지원규모	지원 방향 및 세부내용
단 기 적 피해보전	1조 3,000억	· 소득보전직불제(수입증가로 조수입 감소시 하락폭의 85%를 FTA 발효후 7년간 지원) · 폐업시 지원금 지불
품 목 별 경쟁력강화	7조 4,000억	· 축산, 원예, 식량, 수산으로 구분(기존정책 +신규) · 축산 : 사육~판매까지, 음식점 원산지표시, 이력 추적확대, 생산성 향상, 품질고급화 · 원예 : 과실중심 생산시설 현대화, 가공시설지원 · 식량 : 콩,감자 중심 브랜드경영체 육성, 유통구조개선 · 수산 : 원양,연근해,양식으로 구분, 품질경쟁력 향상 위한 유통설비, 시설현대화지원
체질개선	12조 4,000억	· 고령농(50%) : 경영이양 직불제 보완·확대 · 전업농(40%) :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 경영규모 확대 · 취미농(10%) : 지원대상에서 제외

※ 1. **농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창출** : 종자산업, 첨단지식·기술산업에 대한 R&D지원 확대, 광역식품클러스터조성등 식품산업육성

2. **농어촌지역 활성화 시책** : 향토자원발굴, 낙후지역개발, 농촌관광확대, 전원마을 조성지원 추진

□ 한·EU FTA에 따른 보완대책

○ 협상타결 : 2009년 7월 타결('11년 7.1일 잠정발효)

○ 보완대책 수립(피해가 큰 축산부문 추가대책 마련)

- 가장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을 위하여 TF구성(농식품부 제2차관), 양돈, 낙농, 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전문가의견 수렴(110회)후 국내대책위원회에서 대책확정(2010년 11월)

※ 생산자단체에서는 직접피해보전보다 가축질병 근절, 축사시설 현대화, 유통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둔 대책을 요청

- **기본구조** : 경쟁력 강화, 축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하여 가업상속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세제지원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여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도를 EU와 FTA 발효후 7년, 5년 운용키로

- **지원규모** : '11년부터 **10년간 2조원**(생산액 감소 15년간 3,172억원)

(단위 : 천억원)

구 분	생산성향상	경영지원	수급안정	유통개선	위생안전	합 계
기존 계획	32	24.8	4.6	25.5	0.9	87.8
추가 지원	6.3	3.2	2.5	7.8	0.3	20.1
계	38.3	28	7.1	33.3	1.2	107.9

* 기존계획 : 한미 FTA 4.7조원, 축산업발전대책 2.1조원, 중기재정 계획 등

- '11년 예산반영(안) : 9,973억원 반영(당초 계획 대비 684억원 증)

○ 보완대책(재정지원)외 대책

- 유통구조개선 : 축산물가공·유통 전문업체 육성, 도축장 구조개선, 쇠고기, 돼지고기 등급제 개선(++1. +1등급 도입), 오리,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 세 제 개 편 : 축산농가 영농상속공제액 상향조정(2억원→5억원), 축사 감가상각 내용연수 단축 40년→ 20년 등(**2012년부터 시행**)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 지원

※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융자계획에 기반영('11년 865억원)

참고 4 충남도 FTA 대응 농림어업 투융자계획

□ 재원별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단 위 사업수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계	388	1,120,183	357,281	143,848	285,473	99,553	240,136
2011	97	275,908	94,572	36,131	70,896	16,885	57,624
2012	97	271,474	86,776	33,542	68,723	23,974	59,659
2013	97	284,335	87,608	36,885	72,158	28,974	60,618
2014	97	288,466	88,325	37,290	73,696	29,720	62,235

□ 분야별

(단위 : 백만원)

년도별	단 위 사업수	재 원 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합계	97	1,120,183	357,281	143,848	285,473	99,553	240,136
축산분야	24	269,161	81,262	30,436	95,091	16,096	46,276
과수분야	5	97,050	14,020	10,174	23,741	13,600	35,515
원예분야	13	251,391	70,780	26,640	55,616	39,610	64,852
식량작물	4	45,700	1,200	6,670	16,410		21,420
인삼분야	5	41,124	10,480	9,740	13,232	-	7,672
임업분야	5	44,093	13,753	4,067	6,939	2,247	17,087
어업분야	14	136,204	83,790	24,970	20,595	-	6,849
인력육성	5	68,828	21,392	6,614	13,218	24,000	3,604
유통분야	3	8,945	876	2,401	1,675	-	3,993
가공분야	9	137,957	59,728	14,714	29,668	4,000	29,848
수출분야	10	19,730	-	7,422	79,288	-	3,020

참고 5 시·군 순회 간담회 추진계획

충남 농촌의 농업여건 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충청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가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함.

1. 연구회 구성현황 : 붙임
2. 일 정 : 7. 13 ~ 7.25(8일간)
3. 지역별 : 16개 시·군
4. 장 소 : 시·군 농업기술센타 회의실 또는 농업경영인 회관 등
5. 전체 예상인원 : 160~220명
6. 세부 추진계획

일정	지역별	개최장소	예상인원	비고(장소협조)
7. 13(수) 10:30~12:00	서산시, 태안군	서산시농업경영인회관 (서산시 예천동 1074-10)	20~30인	김선호 회장님 (010-4424-4141) **사) 663-4777** F) 663-4776
7. 14(목) 10:30~12:00	당진군	당진군농업경영인회관 (당진군 읍내리 299-30)	20인	최장욱 회장님 (011-434-5396) **사) 352-4832** F) 352-4835
7. 18(월) 10:30~12:00	예산군, 홍성군	홍성군 농업기술센타 (홍성읍 옥암리 420-4)	20~30인	기획운영과 김종만 주무관 **(630-9104)** F) 630-1689
7. 19(화) 10:30~12:00	천안시, 아산시	아산시 농업기술센타 (염치읍 염성리 186-2)	20~30인	기술지원과 이상표 주무관 **(537-3831)** F) 544-5955
7. 20(수) 10:30~12:00	부여군, 청양군	부여군 농업기술센타 (규암면 노화리 325-1)	20~30인	지술지원과 정종관 주무관 **(830-2473)** F) 830-2479
7. 21(목) 10:30~12:00	보령시, 서천군	보령시 농민회관 (보령시 죽정동 418-13)	20~30인	신의식 회장님 011-405-4021 **사) 934-4793** F) 935-0478
7. 22(금) 10:30~12:00	공주시, 연기군	공주시 농업기술센타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20~30인	농업육성과 류승용 지도기획담당 **(840-2329)** F) 840-2382
7. 25(월) 10:30~12:00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농업기술센타 (부적면 덕평리 40-8)	20~30인	사회개발과 김종원 기술기획담당 **(733-0853)** F) 733-9591

참고 6 충남농업전략연구회 구성현황

구분	성 명	소속	E-mail	연락처	비 고
대표	김용필	농수산경제위원회	refarmm @hanmail.net	010-3379-0162	
간사	박상무	문화복지위원회	psm5321 @chol.com	011-424-1608	
회원	강철민	농수산경제위원회	kk5783 @hanmail.net	010-9461-8111	
	이준우	농수산경제위원회	jw717 @hanmail.net	011-899-7319	
	이종현	농수산경제위원회	0112090921 @hanmail.net	011-209-0921	
	송덕빈	행정자치위원회	syuuii @hanmail.net	010-5425-3386	
	이진환	건설소방위원회	lee6560 @hanmail.net	011-421-6560	
	김 호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hokim @dankook.ac.kr	041-550-3612	
	안승원	공주대학교예산캠퍼스 산업과학대학 원예학과 부교수	annsw @kongju.ac.kr	041-330-1224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kyj0509 @cdi.re.kr	010-3348-5152	

참고 7 시·군 농업인단체 현황

시 · 군별	단체명	대표자(회장)	비고
천안시	(사)한국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김연응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 천안시연합회	이기순	
	전국농민회총연맹천안농민회	박현희	
	한국쌀전업농천안시회	김주열	
	(사)친환경생산자협의회	채희성	
	농촌지도자회 천안시연합회	최병하	
	생활개선회 천안시연합회	김경숙	
	천안시 4-H회	윤용순	
공주시	농업경영인 공주시연합회	이상권	
	여성농업인 공주시연합회	이영희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주농민회	서승열	
	공주시설채소연합회	김석순	
	충남수의사회공주지부	오병부	
	축산기업조합공주시지부	이영철	
	공주시한우협회	윤용국	
	대한양돈협회 공주시지부	이해룡	
	대한양계협회공주시지부	박금수	
	한국양록협회 공주시지부	남상택	
	대한양봉협회 공주시지부	맹영섭	
	공주시친환경인증밤생산자연합회	김보영	
	(사)공주밤재배자협의회	심재정	
	공주시임업인후계자협회	정목영	
	농촌지도자 공주시연합회	강원석	
	생활개선 공주시연합회	임재숙	
	공주시 4-H회	이연근	
	공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강원석	
	친환경쌀생산자협의회	전용주	
보령시	(사)한국농업경영인보령시연합회	신의식	
	(사)한국여성농업인보령시연합회	김명자	
	(사)한국쌀전업농 보령시연합회	오무광	
	보령농민회	이용복	
	농촌지도자 보령시연합회	권기석	
	생활개선회 보령시연합회	이상례	

시・군별	단체명	대표자(회장)	비고
아산시	생활개선회	윤해자	
	여성농업인회	장미진	
	농민회	장석현	
	농업경영인회	이홍섭	
	농촌지도자회	김병대	
서산시	(사)한국농업경영인서산시연합회	김선호	
	전국농민회총연맹서산농민회	문건동	
	(사)전국새농민회충남도회서산지회	이유찬	
	전국농업기술자협회서산시지회	장순택	
	(사)한국쌀전업농서산시연합회	이덕준	
	서산시농가주부모임연합회	전용자	
	한국유기농협회서산시지회	이학주	
	서산시난연합회	상우심	
	(사)한국화훼협회충남지회서산시분회	김진영	
논산시	농업경영인 논산시연합회	김종권	
	한국여성농업인 논산시연합회	김희숙	
	전국농민회총연맹논산시농민회	최영규	
계룡시	(사)한국농업경영인계룡시연합회	송인석	
	(사)한국여성농업인 계룡시연합회	김둘자	
금산군	금산군농촌지도자연합회	양현철	
	금산군농업경영인연합회	김화중	
	금산군생활개선회연합회	김유순	
	금산군여성농업인연합회	박영란	
	금산군4-H연합회	김민수	
연기군	연기군농민회	민광식	
	생활개선회	이순자	
	쌀전업농연기군연합회	홍순직	
	농업경영인연기군연합회	오홍교	
	여성농업인연기군연합회	표숙자	
	조치원복숭아연합회	유일근	
	한우협회	한석수	
	낙농연합회	유병찬	

시・군별	단체명	대표자(회장)	비고
부여군	(사)농업경영인부여군연합회	최병국	
	농촌지도자부여군연합회	서병옥	
	(사)생활개선부여군연합회	이금자	
	(사)한국여성농업인부여군연합회	박성애	
	부여군4-H연합회	김태환	
	(사)한국쌀전업농부여군연합회	김기석	
	부여군농민회	이진구	
	(사)한국친환경인증농산물생산자협의회부여군지부	김순성	
서천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나창균	
	서천군농민회	이재롱	
	쌀전업농협의회	남택주	
	농촌지도자회	강홍구	
	생활개선회	오세인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박성자	
청양군	(사)한국농업경영인청양군연합회	김희연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청양군연합회	김기숙	
	(사)한국쌀전업농청양군연합회	유승종	
	청양군임업 후계자회	김관동	
	농촌지도자 청양군연합회	전동수	
	청양군4-H연합회	박태휘	
	청양군생활개선회	한규섭	
	청양군농민회	최명복	
	청양군한우협회	이강수	
	청양군양돈협회	배용식	
	청양군양봉연구회	이영우	
	청양고추연구회	한만희	
	청양군양계협회	장창훈	
홍성군	홍성군농업경영인회	주정산	
	여성농업경영인회	백미자	
	농촌지도자 홍성군연합회	고중섭	
	홍성군4-H회	강현병	
	생활개선홍성군연합회	윤종순	

시・군별	단체명	대표자(회장)	비고
예산군	한농연	이성종	
	한여농	이금숙	
	농민회	이대열	
	새농민회	장철세	
	농촌지도자회	이은재	
	생활개선회	문태화	
	4-H회	윤동권	
	쌀전업농	김해호	
	작목별연구회	이선범	
	한우협회	최영목	
	양돈협회	김동협	
	비육우협회	최경선	
	양계협회	조복형	
태안군	(사)한국농업경영인태안군연합회	문규선	
	(사)한국여성농업경영인태안군연합회	이희숙	
	(사)한국쌀전업농태안군연합회	김현동	
	(사)한국화훼협회태안군연합회	김윤수	
	전국한우협회태안군지부	현영주	
	태안군 낙협낙우회	조한설	
	태안군 축협낙우회	명헌식	
당진군	(사)한국농업경영인당진군연합회	최장욱	
	(사)한국쌀전업농당진군연합회	정혁모	
	전국농민회총연맹당진군농민회	이희조	
	(사)새농민회 당진군지회	최성태	
	농촌지도자 당진군연합회	조봉현	
	당진군생활개선회	허영희	
	당진군축산단체 협의회	이수호	
	당진연구회	김봉규	

정 책 자 료

한-미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농업계 선대책 요구사항

- 10대 요구사항 및 35대 핵심관철 과제 -

2011. 9

한국농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

- 목 차 -

1.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1-1.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1-2. 관세 수입 전액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 전환

2.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2-1. 현실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
2-2. 밭농업직불제를 골자로 한 농가단위직불제 도입
2-3. 쌀 목표가격 10년 동결 및 보전율 상향조정
2-4. 고령농 특별소득보조직불제 도입

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

3-1.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
3-2.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 보조 확대
3-3. 출하촉진자금 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4. 후계농업인력 육성 대책 마련

4-1. 후계농업인 유입 및 육성 대책 마련
4-2. 청년 후계농업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화

5. 농・축산물 소득 안정 및 생산기반 시설 확보 방안 마련

5-1. 조사료 정부 지원 확대 등 사료가격안정제도 대책 마련(한・육우)
5-2. 청정화 사업, 한계농가 폐업지원제도 마련(돼지)
5-3. 학교급식 및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낙농)
5-4. 종자보호안 마련 (韓닭)
5-5. RPC시설현대화 사업량 및 정부 지원금 확대(쌀)
5-6. 축산 및 원예시설 등에 대한 자부담금 폐지 및 융자금리 인하 필요
5-7.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6. 농산물생산비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6-1.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6-2.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 정부 지원 대책 마련
6-3. 농기계구입자금 금리 인하

7.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7-1. 농어촌 현실에 맞는 의료체계 개선
7-2.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개선
7-3. 농촌형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입
7-4. 농촌 복지 관련 법안의 일원화

8. 농업인 노동 및 농작업 재해보험제도 개선

8-1. 산재 수준의 농업인 노동재해보상보험법 도입
8-2.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정부 지원 확대

9. 농업계 의견이 반영 된 농협 신경분리 완수

9-1. 농협 신경분리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
9-2. 농협 시군지부 폐지 및 금융지점화
9-3. 사업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회사 통폐합

10. 농업 금융 경색 완화 및 농업인 세제 개편

10-1. 농신보 심사 시스템 및 지원 체계 개선
10-2. 농지은행 양도소득세 감면
10-3. 협동조합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유지

1.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가. 현황 및 문제점

□ WTO체제하에서 농업강대국과 FTA 추진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 수혜산업은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는데 반해, 피해산업인 농축수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 실제, 6대 대기업들은 당기순이익은 2007년 33조 8천 억원에서 2011년 66조 6천 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났으며, 한미FTA 타결시 자동차 산업 등 제조업 분야는 매년 1조 5억원의 수출 증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

○ 이에 비해 350만 농업인들의 소득은 2009년 농업소득은 9,689천원으로 2004년 12,050천원보다 19.5% 감소했는데, 더욱이 한미FTA가 타결 될 경우 농업인들은 2조 2천억원에서 8조 8천억원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

- 이와같이 FTA로 통해 이득을 본 산업이 자본의 재분배를 통해 피해 산업에 지원을 강구해야 공정한 FTA, 산업간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부합될 것임<목적세>

□ 또한,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수입 증가 및 FTA 확대 등으로 국내 농업과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세 수입의 농업 부문 지원액은 낮은 수준 임

○ 특히, 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농축수산농가들의 소득 인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농특회계가 아닌 농축수산농가 소득안정화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타당 함<농가소득안정화기금>

<연도별 축산물 수입관세의 축산부분 지원액>

(단위: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추정
농특회계 전입 축산물수입관세	6,990	7,996	9,450	10,300
축산부문지원액 (비율)	**2,049 (29.3)**	**1,469 (18.4)**	**2,121 (22.4)**	**2,734 (26.5)**
농특회계사업	2,049	1,469	2,121	1,629
FTA기금			(유보: 1,091)	1,105

※ '06년 대비 '09년 현재 수입관세 증가액(율): 3,310억원(47.4%)증가

※ '06년 대비 '09년 현재 축산부문 지원액(율): 685억원(33.4%)증가

<자료:농협중앙회>

나. 요구사항

1-1. 무역조정을 통한 공정한 FTA 체결

□ 무역조정지원법 재개정을 통해 FTA체결로 수출이 증액(체결 전후 증책분) 된 부분 만큼 목적세를 신설하여 피해산업구제에 대한 기금으로 사용

1-2. 관세 수입 전액 농어가소득안정화기금 전환

□ 농축산물 수입관세 중 50% 수준을 해당 품목 가격안정화기금으로 전입하여 농축수산분야의 경쟁력제고에 안정적으로 사용 될 수 있도록 목적세화 해야 함

- 물론, 농특회계로 관세 수입이 전입되고 있지만 농특회계는 일반 세수입으로 확충하고 관세 수입은 농어가소득안정화 기금으로 전환하여 특정 목적기금으로 활용해야 함

2. 직불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안정망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피해보전직불제는 매우 까다로운 발동 요건으로 인해 발동한 사례가 전무하여 사문화 되고 있음. 실제, 한·칠레 FTA 체결 이후 도입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한 사례가 없어 관련 예산이 모두 불용 처리됨

○ 이와 같은 결과는 피해보전직불제가 우선 7년이라는 한시성, 그리고 점진적 관세 인하 등을 감안하면 조수입이 20% 이상 줄어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20% 가격하락에 대한 농가 부담은 매우 클 수 밖에 없음<피해보전직불제>

<가격 20% 하락시의 소득감소율>

품목	소득률	소득감소율	품목	소득률	소득감소율
한육우	33	61	포도	73	27
낙농	47	43	사과	68	29
양파	74	31	대두	72	28

자료 : 농촌진흥청, 표준소득자료

□ 미국의 농업법, 유럽연합(EU)의 공동농업정책(CAP)은 수십년 전부터 다양한 소득 보전장치를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여 왔음

○ 특히 1990년대 이후 이들 농업보호정책의 개혁이 이뤄지던 시기에도, 미국과 유럽연합은 과거의 가격지지 수준을 인하하는 대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소득을 직접지불방식으로 보전하여 왔음

- 특히, 미국은 농가소득의 약 35%가 각종 명목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 중 쌀농가소득 중 보조금은 75%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직불금 예산이 농림예산 대비 10%로 미비한 수준이고 그나마도 쌀 직불금에 95%이상 집중되어 있음<농가단위직불제, 쌀 목표가격>

□ 농업계에서는 한·EU FTA, 한·미 FTA 및 다가올 한·중 FTA와 관련, 각종 직불제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인데

○ 농가소득안정직불(도상연습 중)은 일정규모 이상의 주업농에 대한 소득안정 장치이므로, 다수의 고령영세농에 혜택 불가

나. 요구사항

□ 직불제 예산의 대폭 확대를 통한 쌀 직불제 유지 및 목표가격 10년 동결, 농가단위직불제 도입,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함 (대전제)

2-1. 현실적인 피해보전직불제 제도개선

□ 기준가격 : (현행) 85% => (변경) 100%,
□ 소득보전율 : (현행) 90% => (변경) 95%,
□ 유효기간 : (현행)7년 => (변경) 관세 철폐와 연동하여 폐지

2-2. 밭농업직불제를 골자로 한 농가단위직불제 도입

□ 밭작물 및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직불제를 도입하는 농가단위직불제를 도입해야 함

2-3. 쌀 목표가격 10년 동결 및 보전율 상향조정

□ 쌀 목표가격 : (현행) 2012년도 하락 예상 => 쌀 목표가격 10년 동결
□ 보전율 : (현행) 85% => (변경) 100%

2-4. 고령농 직불제 도입

□ 고령농에 대해 ha 당 300만원 특별소득보조직불금 지급
- 직불금은 생산중립적으로 하고 임대·매매한 경우에는 경영이양직불금 추가 지급. 단, 쌀 직불금은 지급하지 않음

3.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해당 도매시장에서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공영도매시장이 대도시에 위치하여 있어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권자인 소비자 편향적으로 모든 행정이 이뤄 질 수 밖에 없어 산지를 대변하는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대변하는 기관이므로 공정한 행정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농업 관련 전문성, 농업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유리한 측면이 있음<도매법인지정권>

□ 32개 공영도매시장 중 19개소가 10년 이상 노후화 된 시설이며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고 지원(보조율 30%)을 통해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임<시설현대화>
○ 대부분 도매시장에서는 저온창고 부족, 매장저온화시스템 미비 등으로 상온 유통시켜 상품성을 훼손 할 뿐만아니라 대형소매점 등에서 상품화를 요구해도 관련 시설 미비로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도매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노후시장 현대화의 경우,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행 국고 보조비율(30%)로는 지자체의 부담이 커서 사업추산의 문제가 발생

□ 정부는 도매시장 상장거래 정착 및 산지집하, 대금결제 기능 강화를 통해 출하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소비지유통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법인에 대해 출하촉진자금을 금리 4%에 1년 거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음<출하촉진자금>

○ 그러나 이같은 출하촉진자금은 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음

- 급변하는 소비지시장에서 산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발전과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출하촉진자금의 확대와 금리 인하가 필요함

나. 요구사항

3-1. 도매시장법인 지정권 농림수산식품부 환수

□ 중앙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환수해야 함

3-2.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정부 보조 확대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정부 보조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야 함

3-3. 출하촉진자금 자금 규모 확대 및 금리 인하

□ 출하촉진자금의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4%에서 1%로 인하해야 함

4. 후계농업인력 육성 대책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농촌은 신규후계농업인이 유입되고 않고 고령화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의 실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후계인력육성>

○ 실제, 농촌은 65세이상 고령자 34%, 부녀농가 52%로 고령화·부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 될 경우 식량안보 위협은 물론 농촌의 어메니티 보존에도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됨

- 이에 농업에 종사하겠다는 신규후계농업인에 정부와 지자체가 전향적으로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 할 필요성 있음

□ 청년 후계농업인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가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될 예정. 만약 병역대체복무제도가 폐지 할 경우 신규후계농업인 유입의 걸림돌로 작용 할 뿐만아니라 군복무기간 중 영농 단절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됨<병역대체복무제도>

- 또한, 농협에서는 농작업 대행 및 생산비 절감 등의 목적으로 농기계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특히, 대형농기계) 부족으로 정책 시행 효과 달성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 함

나. 요구사항

4-1. 후계농업인 유입 및 육성 대책 마련

구 분	항 목	제도개선 건의사항
후계농업인 유입 정책	지원 자금 관련	· 금리 인하 1% 인하 ·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 · 부분보증 폐지 · 자금 지원 용도 분야 확대
	선정 및 절차	· 농업인단체장 추천서 포함 · 선발시기 개편 및 홍보 강화
	영농 승계	· 증여세 감면 범위 확대
후계농업인 육성 정책	지원 자금 지원	· 2·3차 지원 금리 1% 인하 · 농신보 특례보증 한도 확대 · 철저한 관리 체계 구축
	선정 및 절차	· 자금 선정의 현장성 강화 · 신청 절차 간소화
	병역	·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화
	육성 기구	· 후계농업인 육성 전담 조직 설립

4-2. 청년 후계농업인력 병역대체복무제도 영구화

□ 농기계 운전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신설

5. 농·축산물 소득 안정화 방안 마련

1) 한·육우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미FTA 쇠고기 협상 내용
○ 한육우(40%) 관세를 15년 후 철폐
- 쇠고기 관세 철폐 기간 중에만 농산물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가능

□ 쇠고기 세이프가드
○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이 비현실적임
- 발효 1년차에는 27만톤이 넘어야 가능하고, 15년차는 36만톤이 넘어야 발동, 이는 국내 연평균 소비량(35만 8천톤)을 넘는 수치라 세이프가드 발동은 불가능

□ 미국산의 가격경쟁력
○ 국산과 미국산의 도매 가격차는 40%가 넘게 차이남
- 관세가 철폐될 경우, 한우고기 중하위등급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됨.
* 미국은 풍부한 곡물사료로 비육하는 등 낮은 생산비로 쇠고기 생산이 가능하기에 가격경쟁이 불가

나. 요구사항

5-1. 조사료 정부 지원 확대 등 사료가격안정제도 대책 마련(한·육우)

□ 사료가격 안정 대책
○ 조사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 배합사료의 효율적 공급을 통한 사료가격 안정화
-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규모 증액 및 지원조건 개선
  * (08)지원규모 823억원 → (개선)2,400억원
  * 지원조건 1년, 연리 3~4% 무이자
- 배합사료 수입원료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기존 항만의 부두 일부를 사료원료 전용 부두로 지정하여 운영

2) 돼지고기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미FTA 돼지고기 협상 내용
○ 냉장 삼겹살, 갈비, 목살을 10년 후 관세 철폐
-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2014년부터 관세 폐지(도체와 이분도체, 전·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 2년 연장하여 냉동기타(목살, 갈비살 등) 2016.1.1 관세폐지

□ 미국산 가격경쟁력
○ 가격 격차 및 대체관계로 인한 피해 우려
- 국산 삽겹살 대비 미국산 냉장쇠고기 가격은 60%, 냉동쇠고기는

  40% 수준
- 삽겹살, 목살의 경우 국산 대비 미국산 가격은 각각 32%, 38% 수준

□ 양돈농가 수 감소, 농가 어려움 가중
○ 2006년 12월: 11,300농가 → 2009년 12월: 7,962농가(30% 감소)
- 양돈농가 사료가격 급등과 생산성 악화로 3,300농가 폐업, 도산

나. 요구사항

5-2. 청정화 사업, 한계농가 폐업지원제도 마련(돼지)

□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품질 향상 지원책
○ 안전성강화를 위해 사료검사기관 검사장비 지원

- 농협, 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검사연구소: 20억 × 5년 = 100억

○ 도축장 및 유통시설 집중화 지원

-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금 마련: 10억원 × 50개소 = 500억원
- 우수도축장 및 육가공장 30개소 × 10억 = 300억(무이자 3년 지원)

□ 한계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 경쟁력 없는 소규모 영세 농가의 폐업 및 전업 지원

- 10년간 영업 이익 보상
- 농장 판매시 양도세 면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면제

3) 낙농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미FTA 낙농품 협상 내용

○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유는 현행관세

- 176%/TRQ 20~40%유지하나 무관세쿼터 5천톤 제공(매년 3%증량)

○ 치즈와 각 유제품 10~15년 후 관세 철폐

- 치즈 무관세쿼터 14년 7천톤 제공(매년 3%증량), 밀크와 크림 10~15년 후 관세 철폐, 버터와 유장 10년 후 관세 철폐

□ 치즈산업 피해

○ 무관세 쿼터 제공량 과다

- 분유, 치즈, 버터, 유장의 무관세 쿼터량이 원유환산 15만톤 수준으로 과다하다는 분석
- 치즈류 관세 철폐 및 무관세 쿼터 제공으로 국내 치즈산업 성장 가능성이 막힘

나. 요구사항

5-3. 학교급식 및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 확대(낙농)

□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 중·고등학교 급식율 향상 필요
- 우유 급식률: 초등학교 77%, 중학교 23%, 고등학교 16%

- 우유 보조급식 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등 → 도서·벽지 학생 등으로 확대
○ 최적생산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

□ 육우(젖소수소) 대책 마련
○ 육우 군급식 물량 확대 및 대량수요처 발굴을 통한 수요처 확보

□ 안정적 낙농생산 기반유지
○ 간척지, 농지 등 일정지역에 낙농단지를 지정하여 목장 이전이 가능토록 제도화 필요

4) 토종닭(한(韓)닭)

가. 현황 및 문제점

□ 국산 종자인 토종닭 보호안 미흡
○ 향후 FTA 관세철폐로 인하여 순계(P.L)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산 종자의 경쟁력 약화 우려

□ 토종닭 종자보호 법적 보호 미흡
○ 축산관련 법안 “토종닭”이란 품목은 그 어디에도 없는 현실

□ 토종닭자조금 미시행
○ FTA에 대비하여 소비촉진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토종닭자조금 미시행
- 현재 육계의 틀안에 함께 있기에 발전의 한계

나. 요구사항

5-4. 종자보호안 마련(토종닭)

□ 토종닭 종자보호 법안 마련

○ 향후 식량안보 확보 및 종자전쟁에 대비한 우리종자 보호법안 확보를 통한 경쟁력 향상

□ 국산 종자인 토종닭의 브랜드 활성화 지원

○ 국산 종자 사육 시 육성지원금 마련 (15억×2개업체=연 30억원)

○ 지역별 브랜드화 조성 지원 (8개도×30억 = 연 240억원)

○ 수출을 통한 경쟁력 향상 (수출장려금 : 연 10억원)

□ 소비홍보촉진을 위한 토종닭 자조금 조성

○ 한우와 같이 토종닭이 국산 종자로서 하나의 품목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갖고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자조금관련 법안 마련

5) 양곡(쌀)

가. 현황 및 문제점

□ 처리능력 : ’10년말기준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저장능력은 41.9%임

< ’10년말 전체 벼 유통량 대비 처리능력 >

(단위:천톤/조곡)

유통량 (A)	소속	시설능력(B)		비율(B/A)	
		건조능력	저장능력	건조비율	저장비율
4,295	농협	2,568	1,237	59.8%	28.8%
	민간	826	564	19.2%	13.1%
	계	3,394	1,801	79.0%	41.9%

※ 유통량 추정(조곡기준) : 4,295천톤 (벼 생산량 5,965천톤의 72%)

□ 정부지원 : 건조저장시설 정부지원은 매년 감소

- ’08년 110개소 지원에서 ’11년 29개 지원으로 74% 감소

(단위: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예산(국고)	258	253	239	207	89
사업량	110개소	110	72	80	29

※ ’12년 건조저장시설 정부예산 반영 : 29개소 (농식품부 → 예산처)

□ 부족시설

○ ’20년까지 800톤 기준 총 750개소(매년 80개) 확충 필요

(단위:천톤/조곡)

생산량	유통물량	필요물량 (유통물량의60%)	부족시설
5,555 (쌀4,000)	4,000	2,400	600 (750개)

나. 요구사항

5-5. RPC시설현대화 사업량 및 정부 지원금 확대(쌀)

□ 사업량 : (’11) 29개소 → (’12～’20) 매년 80개소

□ RPC 시설현대화 및 구조개선대책 마련 (쌀)

○ 사업량 : (’11) 29개소 => (’12～’20) 매년 80개소

○ 보조비율 확대 : (’11) 일반 : 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 (’12) 일반 :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

- 국고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해야 함

6) 종합(생산기반 시설 현대화)

가. 현황 및 문제점

□ 한EU FTA 발효 및 한미FTA 비준, 다가올 한중FTA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가 시급

○ 중국, 일본 등 거대시장을 겨냥한 수출산업・고부가 식품산업으로 도약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 필요

- 세계 시장규모(10) : 식품 4.4조 달러, IT 3.5, 자동차 1.6
- 축산시설・원예시설 등 현대화에 대규모의 투자 소요 전망되며 현대화에 약10조원 자금지원(재원은 약2조원, 기존 계획 범위내) 필요

나. 요구사항

5-6 축산 및 원예 시설사업 등에 대한 정부 자부담금 폐지 및 융자 금리 인하 필요

□ 현행 시설사업의 융자금리(3%)를 1%수준으로 낮추고 자부담금을 폐지하여 시설 현대화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 (현행)30%<정부 지원>, 50%<융자 3%>, 20%<자부담> => (변경) 전액 1% 저리 융자 지원

7) 수산업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통한 국내 수산물로의 인증은 국산 수산 물의 부가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

○ FTA로 수산물이 값싸게 공급되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수산물의 원산지는 단지 “생산지가 어디인가”의 문제가 아님

□ 수산물의 적정 어획량 유지 및 가격지지를 위해 감척사업 도입

○ 감척을 통해 어선수가 감소하게 되면 척당 생산량이 높아져 어업인들은 어업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시장에서 공급 또한 적정수준 유지 가능

○ 현재 감척사업은 근해어업의 경우 어선감척시 지원율이 80%로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최저가가 낙찰되는 입찰제라는 제도의 특성상 실제 낙찰가격은 낮아질 수 있음

나. 요구사항

5-7)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 수산물 원산지에 표시제의 확대 및 제도 정착

- “국산 수산물”은 자원을 보호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어획 하고, 어획물을 위생적으로 보관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 즉 먹거리의 안정성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 수산물 적정 공급 방안 및 감척사업 현실화

- 어업경영체의 경영여건 개선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감척의 기준이 되는 감정가를 어업인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6. 농산물생산비 가격 안정화 방안 마련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림어업용 일몰기간이 2012년 6월로 도래하고 있어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면세유가 폐지 될 경우 농가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 될 뿐만아니라 개방에 따른 경쟁력 제고를 도모해야 시점에서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남<면세유>

○ 특히, 면세유 일몰 기간 연장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연장이 불가피해 사문화 된 조항인데 일몰 연장을 위한 사회적갈등 비용만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농기계은행사업은 농가부채경감과 농작업 대행으로 영세·고령 ·부녀농 등 취약농가의 영농애로를 해소하고자 '08년 10월부터 사업 시작<농기계은행사업>

○ 농협중앙회 자체자금 1조원('10년말 기준 7,50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13년 이후 예상 손실이 연간 600억원 발생 될 것으로 보여 농업인이 호응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곤란 함

- 농기계은행사업 시행 농·축협 대부분이 중앙회의 자금지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수익성을 도모할 경우 이는 농가 부담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음

□ 농기계는 영농을 위한 소비재가 아닌 반드시 필요한 생산재로서, 구입시 가격에 부담을 느껴 융자를 주로 이용하는데, 융자 금리가 3%대로 농업소득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방안으로 농기계 구입 이자율을 낮춰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의욕 고취에 기여 할 필요성이 있음

나. 요구사항

6-1. 농림어업용 면세유 영구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일몰기간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영구화

6-2.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사업 정부 지원 대책 마련

□ 기 투입된 농협 1조원 자금을 정부 차입금으로 전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는 정부 차손보전금으로 지원
□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장기임차시 담보를 농신보로 지원
□ 직영조합에 대한 농기계 보관창고 등 시설비 보조 지원
□ 중고농기계 임대손실 보전

6-3. 농기계구입자금 금리 인하

□ 융자지원 금리 조정 : (현행)융자 금리 3% => (변경) 1% 인하

7. 농어촌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가.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는 GDP 대비 9.5%수준으로 OECD평균인 1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복지는 시혜적 관점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정책 핵심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함

□ 농촌은 도시에 비해 20년 이상 앞선 초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도시근로자의 작업 환경보다 열악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에 노출
  ○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이 도시지역에 집중되어(종합병원 94.3%, 의료인력 75.8%) 농업인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이 열악한 실정
  ○ 농업인의 40%이상이 농부증을 앓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증상을 경감하거나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센터 및 전문병원이 전무
  ○ 또한 국민건강보험은 본인부담률 비중이 50%이상에 이를 정도로 보장성이 취약하고 빈축사, 휴·폐경 농지가 특례적용을 받고 있지 못함

□ 일부 대학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내에 전국의 읍면 지역에 위치한 특수목적고

등학교 출신 학생들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혀 농어촌 지역이라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수학하고 있는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됨

○ 도시지역에 비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읍면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입학지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훼손

됨은 물론 농어촌 일반 고등학생들의 기회가 직간접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음

나. 요구사항

7-1. 농어촌 현실에 맞는 의료체계 개선

□ 농업노동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및 농부증 등의 치료와 연구를 전담하는 국립농업인병원 설치

- 농업인 인구비율, 지리적 편의성을 감안하여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조를 지원하는 형태의 광역단위 국립 농업인병원 설치

□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가방식 개선

- 휴·폐경 농지, 빈 축사 등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부과표준소득에서 특례적용(경감 확대 및 제외)

7-2.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농어촌특별전형 제도 개선

□ 농어촌특별전형 내 특목고 포함 방침 철회

7-3. 농촌형 국민기초생활제도 도입

□ 농촌의 소득평가 및 지역별 최저생계비 도입을 골자로 한 '농촌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7-4. 농촌복지 관련 법안의 일원화

□ '삶의 질 향상 특별법'과 '농어촌 보건복지 특별법'의 통합을 통해 정책집행의 효율성 강화

8. 농업인 노동 및 농작업 재해보험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어업인들은 타산업 종사자들이 질병이나 사고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건강에 대한 안전체계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

○ 현재 국회 내 '농업인 노동재해보상보험법' 제정안 등이 제출 된 상태지만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인데 정부에서 예산 및 형평성 문제로 인해 난색을 표하고 있음(농업인노동재해보장법)

□ 농작물 재해 보험가입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영세 농업인들은 현재까지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보험 가입률이 저조함

○ 현재 30가지 농작물 보험 대상품목이 있지만 재배가 적거나, 생산 비중이 작은 농가는 현재까지 보험정책에서 제외되므로 품목 확대 필요

나. 요구사항

8-1. 산재 수준의 농업인 노동재해보상보험법 도입

○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농업인 노동재해보장보험법은 전업농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요양・휴업・장애・간병・유족 등으로 인한 급여는 각각 기준에 따라 지급됨

8-2.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 확대 및 정부 지원 확대

○ 농작물 재해보험 : (현행) 국고:50%, 지방비:25%, 자부담:25% => (변경) 국고:60%, 지방비:25%, 자부담:15%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태풍,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농산물의 주산지가 점차 사라지며 이에 대하여 보험 가입이 가능한 농산물의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조속히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함

9. 농업계 의견이 반영 된 농협 신경분리 완수

가. 현황 및 문제점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및 부족 자본금 지원 요청서를 정부가 검토하여 예산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경제사업 부문 자본금 배정 규모가 대폭 감소할 우려가 높은 실정임

○ 8월 농식품부의 1차 검토 결과 사업분리시 부족 자본금 규모가 5조 3천억원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경제사업 부문 투자 규모도 5.4조원에서 4.4조원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기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인력·조직 개편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음

○ 현재처럼 시군지부가 유지될 경우, 교육지원·경제 부문 인력에 과다 인건비 지출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되지 않아, 사업개편 이전 경제사업이 지닌 만성 적자 요인을 해소할 수 없음

□ 농협중앙회의 자회사간 업무영역 조정, 방만한 조직 정리 등의 현장지향적인 구조개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경제 자회사 중 일부 자회사가 통폐합될 전망이나 일부에 그치고, 추진 일정도 2012년이 아닌 2013년에나 시작될 예정임

- NH무역과 농협목우촌, 농협유통 등 수출업무가 중복된 자회사들의 통폐합은 농협의 통합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농협중앙회의 자구 노력 및 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임

나. 요구사항

9-1. 농협 신경분리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

□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 방침 발표 이전에, 농협중앙회가 기 보유중인 농협중앙회 자본금에서 6조 1천억원을 경제사업에 최우선 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사업 수행이 가능토록 해야 함

9-2. 농협 시군지부 폐지 및 금융지점화

□ 기존 시군지부는 사업분리 즉시 폐지하여, 은행업만 수행하는 시군 단위 금융지주 지점(출장소)로 전환해야 함

9-3. 사업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회사 통폐합

□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자회사를 통폐합해야 함

○ 자회사들의 산지·소매 단계의 수급 조정 및 올바른 유통조성이 이뤄져야 수출 진흥 및 농식품 소비촉진 영역이 확장되는 만큼 통폐합·조정을 통해 체계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함

10. 농업 금융 경색 완화 및 농업인 세제 개편

가. 현황 및 문제점

□ 시설현대화 사업 및 정책 자금 대출 등에 대한 융자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신보 보증 확대가 필요

○ 시설현대화 사업 등에 대한 규모화 된 자금이 원활히 대출될 수 있도록 농신보의 심사방법을 개선

- 농신보 대위변제율이 3.5%(기보 3.6%, 신보 3.2%)로 양호한 점을 감안할 때, 금융지원(융자)확대가 악성 부채화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음

□ 현재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일반 농지처럼 8년이상 자경농에 한해 그 세를 감면토론 지원하고 있으나 자경이 8년 이하인 농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농지은행>

- 농지 소유에 애착이 강한 농업인이 농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농지를 매도를 하고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농지를 환매하는 것이므로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농업인에게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경영회생지원 사업의 목적과도 배치 됨

□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산물 수입개방, 도농 소득격차의 심화 등으로 농업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목돈 마련 기회와 농가부채를 갚을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인데, 2012년 이자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일몰이 종료됨에 이에 대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농어가목돈마련저축>

- 2011년말까지 가입분 : 비과세, 2012년 가입분 : 일반과세
- 농가(어가 제외)목돈마련저축 이자에 대한 과세 전환시 연간 116억원의 실질 농가 소득 감소
- 이자율 : 저소득 11.5%(3년, 1ha 이하), 저소득 15.1%(5년, 1ha 이하), 일반 7%(3년, 1ha~2ha이하) 일반 8%(5년, 1ha~2ha 이하)

<농업소득 및 농가부채 증가 추이>

(단위:천원,%)

구분	'06	'07	'08	'09	'10
농업소득	12,092	10,406	9,654	9,698	10,098
농업소득률	44.3	39.9	37.4	36.4	37.1
농가부채	28,161	29,946	25,786	26,268	27,210

자료:통계청

□ 농협 조합 등의 예탁금(3천만원 이하) 이자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지원과 농협 등 농어민·서민 금융기관의 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비과세예탁금>

- 그러나 비과세예탁금의 과세 전환시 조합의 저축 경쟁력 상실로 농업자금 조달차질은 물론 조합의 사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되어 이에 따른 농촌 경제 혼란 우려
- 2012년까지 발생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2013년 이후 5%, 2014년 이후 9% 과세
- 비과세 예탁금(한도:2,000만원)은 2ha미만 농민 조합원에게는 이자소득(15.4%)이 전원 면제되고 준조합원은 농특세(1.4%)만 납부하고 있으며 연간 2,084억의 조세가 지원되고 있음

나. 요구사항

10-1. 농신보 심사 시스템 및 지원 체계 개선

□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의 심사에서 농어업 경영체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

○ 농어업인의 경영 및 신용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구 축하고농신보에 농어업금융 전문가 양성·배치

□ 새로운 농어업금융 지원체계 검토

○ 중장기적으로 농신보를 농어업인의 신용보증 활성화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하거나, 민간금융기관의 농어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함

10-2. 농지은행 양도소득세 감면

□ 경영회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농지를 매도·환매하는 농가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면제

10-3. 조합 예탁금 및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 비과세 유지

□ 농어가목돈 마련 및 농가부채 회수 등을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제도를 유지해야 함<농어가목돈마련저축>

□ 농촌경제의 회생을 통한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 및 조합(저축기관)이 은행권과 동등한 업무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비과세를 연장해야 함<비과세예탁금>

한미 FTA 재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한미 FTA 재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 목 차 >

1. 한미 FTA 재협상 어떻게 되었나?

2. 이번 재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1) 처음부터 미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일방적 양보 협상'이었다.
   2) 국민을 속인 밀실협상이었다.
   3) 향후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4) 통상독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3. 한미 FTA 졸속굴욕의 역사, 2006년 협상시작부터 그러했다.
   1) 협상 시작전에 4대 선결조건 수용
   2) 미의회 비준을 위해 쇠고기 퍼주기

4. 정부 통상협상의 구조적 문제
   1) 통상관료에 대한 견제세력, 통상협상결과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다.
   2)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내협상이 없다.
   3)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협상이다.

5. 해결방안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1. 한미 FTA 재협상 어떻게 되었나?

○ 지난주 G20 정상회의 전 타결을 목표로 비공개로 진행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일단 결렬되었음.

- 지난주 11일 한미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갖고, '협상타결을 위해 통상장관 회담을 하였으나 세부적 사안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데 합의를 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에게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최대한 빨리 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이번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자동차 분야에선 우리 쪽이 미국산 수입차에 대한 안전 및 환경기준 완화를 이미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밀실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특히 지난 10일 주한미상공회의소 토머스 도너휴 회장이 미국 기업인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쇠고기 문제도 논의되고 있으며 4분의 3 정도 진행되었다'는 발언에서 나타난 것처럼 도를 넘은 밀실협상을 진행하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쇠고기개방까지 포함한 미국측의 강력한 압력을 수용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질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일단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임.

○ 이 글에서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같은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참고. 한미 FTA 협상 경과

- 2006년 1월 : 미측의 4대 선결조건 수용(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스크린 쿼터 축소 등)
- 2006년 2월 : 협상개시선언
- 2007년 4월 : 정부간 협상타결

- 2007년 6월 : 미측의 요구로 추가협상(미 의회 행정부간 신통상정책 수립) 및 공식 서명
- 2007년 9월 : 국회에 비준동의안 제출
- 2008년 4월 : 미 의회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 쇠고기 굴욕협상 진행
- 2008년 12월 : 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비준동의안 강행처리
- 2010년 6월 : 한미 정상, 추가협상 공식 합의
- 2010년 9월 : 비공식 실무협의
- 2010년 10월 : 통상장관 회담
- 2010년 11월 : 실무급협의(4~7일), 통상장관회의(8~11일)

2. 한미 FTA 재협상, 왜 문제인가?

1) 처음부터 미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일방적 양보 협상'이었다.

○ 이번 한미 FTA재협상은 한마디로 미국이 정한 시한에 따라 미국이 요구한 쟁점 분야만 놓고 비공개로 진행된 협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다시말해, 협상의 목적 자체가 미국측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협상이었다는 것이고, 우리측이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만이 예상되는 협상시작전부터 실패가 예상되는 협상이었다는 것임.

○ 정부는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이익의 균형을 맞춘' 재협상을 제안했어야 함.

- 통상협상 관계자들은 그동안 FTA 협상에서 늘 양국간 '이익의 균형'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에 대해서는 '일방적 양보'만을 위한 협상을 진행함.
- 한미 FTA협정에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자동차 분야의 스냅백(snap-back·관세철폐 환원조처), 래칫(역진방지) 조항 등 독소·불평등 조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의제화하지도 않았음.

2) 국민을 속인 밀실협상이었다.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문제가 실제로는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 따로 다뤄지고 있었음.

- 언론보도[1]에 따르면, 토머스 도너휴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은 10일 아침 국내에 진출한 미국 기업인들을 위한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9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났다고 소개한 뒤 "(이번 재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4분의 3 정도 진행됐고, 마지막 구간만 남았다"고 설명함. 그는 "앞으로 남은 내용은 큰 것이 아니라 사소한 조정이며 이를 마치면 앞으로 나가는 길을 터놓게 된다"며 특히 미국으로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함.
- 또한 도너휴 회장은 조찬간담회 뒤 기자간담회에서 "쇠고기 문제는 협상하지 않고 있다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설명과 충돌한다"고 재확인을 요청하자 "쇠고기는 FTA 의제가 아닌, 사이드바(sidebar·별개) 논의사항"이라며 "(김 본부장은) 기존 협정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쇠고기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함.

○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과 국회를 속인채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며, 도를 넘은 밀실협상의 작태가 만천하에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3) 향후 미국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협정문을 수정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 일단 협상이 결렬되기는 했으나 정부는 이번 협상이 기존 협정문 내용을 고치는 '재협상'인데도, 기존 협정문의 국회 재심의를 피하려고 '추가 협정(협의)서'를 맺는 꼼수를 부림.

---

1) 11월10일자 인터넷 언론, 11일자 한겨레 · 경향신문 등 주요일간지

-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환경 및 안전기준을 완화하려면 기존 협정문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부속서한(구체적 자동차 규제문제)을, 한국의 수출용 완성차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에 상한선을 적용하려면 부속서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등을 고쳐야 함.
- 그러나 한미 통상당국은 협정문에 손을 대지 않기로 함. '전면 재협상론'(독소조항 개정론)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국회 재비준도 피하기 위해서임.

○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요구할 때마다 제2, 제3의 추가협상을 해야 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되었음.

- 이번 자동차 분야의 합의로 인해 향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언제든지 기존 협정문의 일부 조항을 바꾸거나 더하는 제2의, 제3의 '추가 협정서'를 맺을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것임.
- 이미 미국 하원 섬유위원회 소속 의원 25명은 한미 협정문의 섬유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공개 서한을 발표한 바 있다고 함.

4) 통상독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에 '재협상'에 나서면서 미 의회는 물론 자동차 업계, 노동계의 의견을 몇 주간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리측 통상교섭본부는 국내 이해관계자는 물론 국회의 의견조차 듣지 않고 재협상을 밀어붙임.

- 언론보도[2]에 따르면 자동차공업협회가 업계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에 협상 상황을 문의했지만 전혀 설명해주지지 않았다고 함.

○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정부 독단적 협상'은 이번 협상의 대표적인 특징임.

- 정부는 10월 26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통상장관 회담과 관련해 장소는 물론 시간조차 공개하지 않았음.(2008년 쇠고기 협상이 촛불시위로 번지자 김종훈

2) 경향신문 11월9일자, '협회 관계자는 8일 "정부 협상안에 대한 내용 파악이 힘들다" 면서 "FTA 내용에 대한 업계의 유불리를 따져보기 위해 정부에 내용을 문의했지만 전혀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본부장이 30개월 이상 수입 제한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서 추가협상을 벌였을 때는 시간과 장소를 공개한 바 있음)

- 또한 9월부터 실무급, 고위급, 통상장관 회담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해오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통상장관 회담이 열린 8일에야 뒤늦게 협상 브리핑에 나섰으며, 이날 브리핑에서도 김 본부장은 이미 언론에 숱하게 보도된 쟁점들의 일부만을 모호한 어법으로 확인하는 선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짐.
- 국회에도 마찬가지 여서, 8일 오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언론브리핑을 3시간 앞두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협상 진행상황을 간략히 소개[3]한 게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짐.

3. 한미 FTA 졸속굴욕의 역사, 2006년 협상시작부터 그러했다.

1) 협상 시작전에 4대 선결조건 수용

○ 2005년부터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을 본격화하는데, 미측은 한국 정부가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해야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임.

2005. 6	18차 한미재계회의	스크린 쿼터 폐지, 미국산 쇠고기 금수 해제,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 재조정 금지 등 FTA 협상 위한 4개 선결 조건 제시	로버트 포트먼 미USTR대표
2005. 9	미국 워싱턴 한미통상장관회담	FTA협상 시작하려면 먼저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라	로버트 포트먼 미USTR대표
2005. 9	2005년 한미경제현안 정책보고서	한미FTA협상을 시작하려면 스크린쿼터 축소와 함께 농업, 의약품, 자동차, 통신 등의 통상 현안에 중요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	주한미상공회의소와 미한재계회의

○ 이에 따라 정부는 협상을 개시하기도 전에 한미FTA협상에서 주요쟁점사안이

3)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 규정 21조' 는 정부는 협상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와 국민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설명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될 4대 선결조건을 미국 쪽의 요구대로 사전 수용함으로써 협상카드를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음.

-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스크린쿼터 축소, 쇠고기수입재개,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의약품 관련 투명성 제고' 등 한미간 핵심 통상현안으로, 이는 곧 사실상 한미FTA의 핵심적인 쟁점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참고. 정부의 4대 선결조건 수용 과정 >

- 2005년 10월 30일 : 정부 약값 재평가 제도 개정 중단 선언
- 2005년 11월 6일 : 정부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 발표
- 2006년 1월 13일 :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 2006년 1월 16일 : 한덕수 부총리, 스크린쿼터 1백46일에서 73일로 축소 발표

---

2) 미의회 비준을 위해 쇠고기 퍼주기

○ 2005년 미측의 한미 FTA 선결조건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월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수입금지되어 있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금지조치를 해제[4]하였음.

○ 하지만 미측의 선결조건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한미 FTA 미 의회 비준과 연계시키며 완전 수입개방을 요구하였고, 결국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기에 이름.

-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5]에서 한미 FTA 미의회 비준약속[6]을 받아내기 위해 회담 하루 전날 미국의 요구대로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타결하였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한미 FTA는 여전히 미궁속에 빠져있음.

---

4)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 :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뼈 제외)에 대해 수입허용

5) 한미 정상회담 : 2008년 4월 19일, 한미 쇠고기협상 : 2008년 4월11일~18일

6) 2008년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정조사결과(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4월7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제통상분야추진계획을 보고했는데, 보고 문서에 '미 의회가 한미 FTA 미의회 비준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하는 쇠고기 문제의 조기해결 필요, OIE기준에 따른 미산 쇠고기 수입허용 필요' 라고 적시되어 있음.

- 오히려 미측에서 자동차와 쇠고기 개방이 미흡하다며 재협상까지 요구하였고, 결국 지난주 미측과 재협상까지 진행하게 되었음.

○ 결국 한미 FTA와 연계되어 두 번이나 미측의 요구대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부 목표였던 한미 FTA 진전은 이루지 못한채, 주변국(중국, 대만, 일본 등)에 비해 우리 정부만 미국산 쇠고기 개방을 확대함으로서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임.

4. 정부 통상협상의 구조적 문제

1) 통상관료에 대한 견제세력, 통상협상결과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없음.

○ 현재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70%에 육박할 정도로 통상분야는 우리 국민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

- 또한 통상의 영역은 국제법적 지식과 외국어 능력 등을 수반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며, 협상과정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접근성도 어렵고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비밀주의가 관행화되어 있는 영역이기도 함.
- 따라서 국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 과정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비준여부를 판단하고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 조차 통상전문 위원회는 물론이고, 전문위원 한명없는 실정임.

○ 무능한 국회가 통상관료의 독재를 키움.

-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을 체결 · 비준함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조약의 체결과정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뒷받침할 통상절차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다보니 사실상 비준 동의만 묻는 반쪽자리 국회 동의권으로 운영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협상 시작전부터 개시여부를 의회와 협의하는가 하면, 협상과정에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협상 결과에 따르는 피해영향평가보고서, 청문회 등 각종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되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법적절차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음.
- 결국 국회가 협상과정은 전혀 알지 못한채 협상결과만 놓고 '거수기식'투표를 통해 비준여부를 결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2) 국민적 의견수렴과 국내협상이 없다.

○ **과거 정부가 UR협상(1993년), 한중마늘협상(2000년, 2002년), 한칠레 FTA(2003년), 쌀재협상(2004년) 등 농업통상협상을 진행할 때마다, 일방적 피해를 보게되는 농민들은 강력한 저항과 절규로 대응해 왔음.**

○ **특히 한미 FTA 의 경우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은 물론이고 교육, 의료, 금융, 법률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고 타결함에 따라 농민단체, 노동단체 등 시민사회 조직뿐만 아니라 국회와 종교계까지 합세하여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그 갈등 양상은 더욱 심각해졌음.**

-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협상개시결정부터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협상이 전무하였기 때문이었음.

○ **결국 과거 통상협상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협상의 무시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잘 알 수 있음. 피해를 보는 계층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속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음.**

3)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협상이다.

○ **현재 타결 또는 진행중인 전세계 80여개국과의 FTA를 보면 싱가포르, GCC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농산물 수출강국임.**

[표] FTA 추진현황

구분	발효(발효연월) (5개)	협상타결 (3개)	협상진행 (7개)	협상준비 (7개)
국가	칠레(04.4.) EFTA[1](06.3.) 싱가포르(06.9.) ASEAN[2](07.6.) 인도(10.1)	미국 EU 페루	캐나다 GCC[3]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터키, 콜롬비아	일본, 중국, 한-중-일, MERCOSUR[4], SACU[5], 러시아, 이스라엘

주 1.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
2.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0개국
3. GCC(Gulf Cooperation Council: 페르시아만 협력회의):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 6개국
4. MERCOSUR[Merco(Market) + Sur(South)]: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
5. SACU(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등 5개국

※자료: 외교통상부, 「FTA 추진현황 및 기대효과」, 2009. 7.

○ **농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7]에 따르면, 농식품부 스스로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는 대부분 농산물 개방을 통해 자동차 등 공산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전략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외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또한 농식품부는 '2009년 이후 협상개시 검토대상국가도 대부분 농업강국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나, 한미 FTA양허로 추가개방 감당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7) 20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강기갑 의원실) : '장관사무인계인수서' (2008.8.6)

○ **결국 일방적인 농업 희생을 전제로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임.**

5. 해결방안

○ **통상협상 분야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과 검증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통상협상 자체가 전문분야이다 보니 과거 국회는 통상관료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 비준동의시 '거수기'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
- 이제는 이같이 스스로 자초한 국회의 무능함을 벗고,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정,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통상 전문가의 채용 등을 통해 통상협상 분야에 대한 견제기능을 회복해야 함.
- 또한 법률안 제정 및 특별위원회 구성 전이라도 전세계 70여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중인 FTA 등 통상협상에 대해 한시적 특위 구성 등을 통해 검증절차를 가동해야 함.

○ **통상협상과정에 국민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화해야 함.**

- 통상협상을 통해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 통상협상 개시전부터 협의를 통해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히 피해를 보는 산업의 요구가 협상과정은 물론이고, 피해보전대책에도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함.

○ **통상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함.**

- 현재 국회에는 5개의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음. 하지만 법안이 제출된지 2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의 반대[8]와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제정되지 않고 있음.
- 각국과의 FTA 체결 등 갈수록 통상협상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여건에서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조약의 체결 ·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한을 제대로 행사하

8) 17대 국회인 2006년에도 3개의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결국 폐기되었음.

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임.

- 특히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있는 국회의 권리가 법률안의 미비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데도 통상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

○ 농업 등 특정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함.

-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은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협상이었으며 이로 인한 결과는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정도의 농업 피폐화로 귀결되고 있음.
- 특히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보상제도 미비, 낙후된 사회보장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조차 전무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특정분야의 피해를 전제로 한 통상협상은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과연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라는 반문과 그에 따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임.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동향 설명 자료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 동향

2011. 5. 26.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Ⅰ. WTO/DDA 협상 동향

1 협상 진행동향

2 금년 협상전망

3 농업 협상

4 수산보조금 협상

5 수산물 관세 협상

[참고 1] 농업협상 진행경과

[참고 2] 각 협상별 주요 내용

[참고 3] DDA 협상 주요 절차

[참고 4] 농업협상 세부원칙 잔여쟁점 논의내용

[참고 5]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주요내용

[참고 6] 수산보조금 협상관련 의장보고서 주요내용

Ⅱ. FTA 협상 동향

1 FTA 협상 개요

2 한·호주 FTA

3 한·콜롬비아 FTA

4 한·터키 FTA

5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6 한·일 FTA

7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8 한·페루 FTA

9 한·뉴질랜드 FTA

[참고 자료]

Ⅰ. WTO/DDA 협상 동향

1 협상 진행동향

❑ '01. 11월 UR 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07. 7월 세부원칙 초안이 배포된 이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 추가적인 시장접근을 요구하는 **미국**과 이를 거부하는 **주요 개도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 간의 **입장 차이**로 **교착상태** 지속

* **미국**은 협상 출범 당시에 비해 주요 개도국의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크게 신장되었으므로, 이들 국가가 변화된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

❑ '10.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및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조성된 정치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11년 DD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분야별 다자협상 가속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전개**

○ '11. 1월말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개최된 DDA 통상장관회의에서 금년내 DDA 협상 타결에 대한 공감대 재확인

❑ '11년 들어 주요국간 양자협상, 소그룹회의, 고위급회의 등 다양한 형식으로 협상 진행

○ 미·중, 미·인도 양자협의 등 주요국간 양자협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양국간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협상 진전을 못 이룸

❑ **'11. 4. 21일 WTO 사무총장이 DDA 협상분야별 진행상황 보고서를 발표**

○ 지난 10년간 협상 진행상황을 정리하고, 향후 DDA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모든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

- 협상진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비농산물(NAMA) 시장접근 분야임을 지적
- NAMA Sectorals 관련 미국·중국 등 핵심국들간 입장차이가 현재로서는 좁혀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

2 금년 협상전망

❏ 금년도 세부 협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주요 협상국들 간의 입장차를 줄이는 데에도 실패함에 따라 **협상 연내 타결이 불투명해진 상황**

* 금년도 세부 협상목표 : ① 4월까지 수정텍스트 회람 ② 7월까지 협상패키지 합의 ③ 하반기중 각국 양허표 작성

❏ 다만, 대다수 국가들이 **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이므로 **분야별 협상은 계속될 전망**

○ 4.29일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향후 협상 진전방안 등을 논의 예정

* TNC(Trade Negotiation Committee) :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DDA 최고 의사결정기구

3 농업 협상

가 협상 동향

❏ '08.12월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기초로 협상 진행중

❏ '10.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월 협상을 개최, 실무회의·고위급 회의 등에서 세부원칙 잔여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속

○ 각 그룹별 협의 및 양자협의도 적극적으로 진행

❏ 세부원칙 **잔여쟁점별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세부원칙 수정안 회람 대신 **농업의장 보고서가 발표됨**('11.4.21.)

○ 보고서 주요내용은 그 동안 농업협상 진행상황을 정리한 수준으로 민감품목·특별품목·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등 **주요 잔여쟁점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음**

나 주요 쟁점

◆ **세부원칙 잔여쟁점(10개)**

○ **농업의장**은 **시장접근분야 8개, 국내보조 분야 2개** 등 총 10개의 잔여쟁점을 위주로 협상을 진행

* ①특별품목 ②개도국 특별긴급관세 ③관세상한 ④민감품목 ⑤관세단순화 ⑥TRQ 신설 ⑦열대작물 ⑧특혜잠식 ⑨품목특정 블루박스 한도 ⑩면화

○ 그러나, 최근 전체 협상 목표 수준 상향 조정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 상기 쟁점들 외의 쟁점에 대해 다시 협상이 진행될 여지도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주요 농산물이 고관세이면서 실행세율·양허세율 간의 차이가 없는 관세구조인 바, **특별품목,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상한, 민감품목** 등의 쟁점 협상에 중점적으로 대응 중

❑ 특별품목(Special Product)

※ 특별품목 : 일반품목보다 관세 감축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개도국만 허용

○ **지정 가능 품목수**(전체 세번의 12%), **감축 면제 품목수**(5%) 등의 수치에 대해서 수출국과 수입국간 의견 대립

- 수출국들은 현재 규정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나, **개도국그룹(G33, 우리나라 포함)**은 이를 **재논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시 또는 수입 가격 급락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도국만 허용

○ **개도국그룹**은 **발동 기준을 낮추고, 구제조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수출국은 동 조치 남용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

❑ **관세상한(Tariff Cap)**

※ 관세상한 : 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한 결과, 관세가 100%(개도국은 150%)를 초과할 경우 100%(개도국은 150%)를 상한으로 적용, 단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은 예외

○ **수입국그룹**은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이 아닌 **일반품목에 대해서도 일부 관세상한 적용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 또는 추가 TRQ 증량을 주장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

※ 민감품목 : 일반품목보다 관세 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 관세 감축 이행 기간 단축 등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품목

○ 일부 국가는 민감품목 수 추가를 주장하나, 수출국들은 이에 반대

다 향후 대응계획

❑ 새로운 세부원칙 작성 논의 대응을 위해 주요쟁점별 **우리 입장을 재검토**하고, 세부원칙 타결이후 단계도 철저히 대비

○ 품목별 우선순위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해 특별·민감품목 선정, 이행계획서안 작성 등 양허방향에 대해 지속적 검토

❑ **공조그룹(G33, G10)과** 사전협의를 통해 주요 이슈 **논의 대응**

○ 특히, 특별품목 및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논의시 G33과 공조하여 우리측의 이익 반영 필요

※ G33 : 특별품목, SSM에 중점을 두는 개도국 그룹(우리나라, 중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터키,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등 46개국)

※ G10 : 농산물 수입국 그룹(우리나라, 일본, 대만,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모리셔스,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노르웨이 등 9개국)

❑ 협상 동향에 대해 **언론 및 품목 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

4 수산보조금 협상

가 협상 동향

❑ **수산보조금**은 규범협상 그룹에서 협상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등 FFG 주도하에 **수산자원보호를 목적**으로 시작

* FFGs(Fish Friends Groups) : 뉴질랜드, 호주, 칠레,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페루, 미국,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노르웨이, 콜롬비아 등

❑ '07. 11월 규범의장은 수산보조금협정 의장안 발표

○ 어선건조, 어항시설, 어업운영비(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의 대부분 금지**

- 면세유가 출어비의 43%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어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

* '10년 수산보조금 1조 5천4백억원 중 1조 1천억원 정도가 금지대상(면세유 7천 3백억원)

❑ '10. 9월 우리나라는 **면세유**, 어항시설 보조금 등이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제안서 제출,** 10월·12월 회의에서 논의

○ 면세유 등 운영비를 금지범위에서 제외,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하여, 자원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사후 정지토록 함

- 영세 소규모 어업인에 대하여는 선개도국 공히 보조금 허용

❑ Lamy WTO 사무총장이 **금년 4월**까지 새로운 협정문안을 제출토록 요구함에 따라 **강도 높게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 핵심쟁점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에 대하여도 합의가 거의 없어서 규범의장은 수정 협정문안 대신 현황보고서 형식으로 제출

나 주요 쟁점별 논의동향

❑ 협정의 적용범위

○ 해면 포획어업에만 적용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짐

- 양식어업, 내수면 어업에 대하여는 제외될 가능성

❑ 금지보조금의 범위

○ '07년 발표한 규범의장 협정문(안)은 대부분의 보조금을 금지로 분류

- ①선박 건·개조 ②어선의 제3국 이전 ③운영비용(연료, 미끼, 얼음 포함) ④항구 인프라 및 인근 가공시설 ⑤어획물에 대한 가격 보조 ⑥소득 보조 ⑦입어료 ⑧IUU어업 ⑨기타 명백히 남획상태의 어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 미국, 호주, 뉴지, 칠레 등 FFG(Fish Friends Group)는 의장안을 지지

- 우리나라, 일본, 대만, EU, 캐나다 등 5개국 공조그룹은 수산보조금 금지 범위 대폭축소 주장

○ 어선의 제3국 이전, 입어료, IUU어업 지원 보조금은 금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 수렴

※ 선박의 개조 관련, 선박 및 식품안전개선, 환경친화적 어구어법개선, 어업관리 이행에 필요한 보조금은 허용하자는 데는 의견 수렴(어획능력 증가금지 및 어업관리 조건)

❑ 유류 보조금

○ 현재까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으로 유류보조 금지가 대세이기는 하나, 유류관련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 확산

❑ 소규모어업

○ 소규모어업에 대한 예외를 개도국에만 허용할지 또는 선·개도국 모두에게 허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 대립

○ 소규모어업의 기준(사회경제적 기준, 어업형태, 어선길이, 어업수역, 어획량 등)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공해어업

○ 개도국은 공해어업 보조금의 일률적 금지시 공해어업 후발국인 개도국에게 공평하지 않으므로 허용 요구

○ FFG 및 원양어업 선발국들은 공해자원은 공유자원이므로 모든 회원국에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 어업관리제도의 역할

○ 우리나라, 일본, 대만 등은 어업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남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FFG는 어업관리제도의 유용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기는 하나, 과잉어획 및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 유예기간

○ 의장안은 선진국 2년, 개도국 4년의 이행기간을 규정하였으나, 수산보조금 규율의 실질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이행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 평가 및 향후 전망

❏ 규범의장의 협상 현황 보고서는 그동안의 협상과정에서 보여준 **회원국의 입장**을 비교적 **균형있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짐

○ 금지보조금의 범위 등 2007년도 의장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원국간 합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도 적절히 반영됨

❏ 규범 의장은 회원국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자원남획에 따른 경제적 손실 강조 등 수산보조금 협상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수산보조금 협상이 더욱 가속될 가능성이 있음

❏ 5.31일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향후 DDA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인 바, 동 회의에서 DDA 협상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라 대응 방안

❏ **의장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 의장보고서는 DDA 협상 10년간의 결과물이므로 이를 기초로 쟁점별 대응논리 개발

❏ **국내적으로는 향후 협상타결에 대비, 기존의 추진사항 지속 추진**

○ 면세유 특정성 약화 방안 검토 및 국내 수산보조금 지원제도 개편 추진

5 수산물 관세 협상

가 협상 경과

❑ **수산물**은 공산품과 함께 **비농산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협상**에서 **관세감축 논의**

○ 우리나라는 공산품 수출확대와 수산물 민감성 보호라는 협상 목표간 상충으로 인해, 협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의장 4차 수정안('08.12)에 따르면, 관세감축 공식을 적용하여 **일률적인 관세감축**이 이루어지며, 주요 **분야별**로 **무세화** 협상 진행

나 주요 쟁점

❑ 농업협상에 비해 **민감품목 보호수단이 극히 제한된 여건** 하에서, **민감 수산물 보호방안 필요**

○ 선진국 계수를 적용하여 관세감축시, **우리나라 수산물 관세는 평균 약 17%('11)에서 6%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

○ **수산물 분야 무세화 협상**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진행 중이나, **뉴질랜드 등 제안국 측의 참여 압력이 가중**될 전망

다 향후 대응 방향

❑ **일부 민감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감축상의 신축성이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양허안을 작성**하고, 상대국 이의 제기시 **양자협상을 통해** 우리 의사를 반영토록 노력

○ 수산물 분야 무세화 협상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과 공조**하여 **참여 불가 입장으로 대응**

참고 1 농업협상 진행경과

❑ '01. 11월 UR협상 결과의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03.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기본골격 합의에 실패하였으나, '04. 7월말 까지 우선 **기본골격만의 타결을 목표**로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 **'04.8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기본골격 채택**

❑ '05.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향후 DDA 협상일정을 마련**하고, **수출 보조 철폐일시에 합의**함으로써 **DDA 협상진전**의 추동력을 유지

❑ '06.7월 국내보조, 시장접근등 주요 이슈에서 미국과 EU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Lamy 사무총장은 **협상의 잠정 중단**을 선언

❑ '06.11월 협상 재개를 선언, '07.1.27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계기로 WTO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DDA 협상을 본격 재개키로 합의

❑ '07.7월 세부원칙 초안을 배포, '08년 들어 EU·미국·브라질 등 주요국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의 진전을 이룸

* '08.2월 1차 수정안, '08.5월 2차 수정안, '08.7월 3차 수정안

❑ '08.7월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소규모 각료회의를 개최**, 핵심쟁점에 대한 잠정타협안을 도출하였으나 **최종 합의에 실패**

❑ '08.10월부터 잔여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여 논의진전을 모색, '08.12월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제시

❑ '10.3월말 DDA 협상 현황점검(Stock-taking) 회의 개최

❑ '11.4월 각 협상그룹별 의장보고서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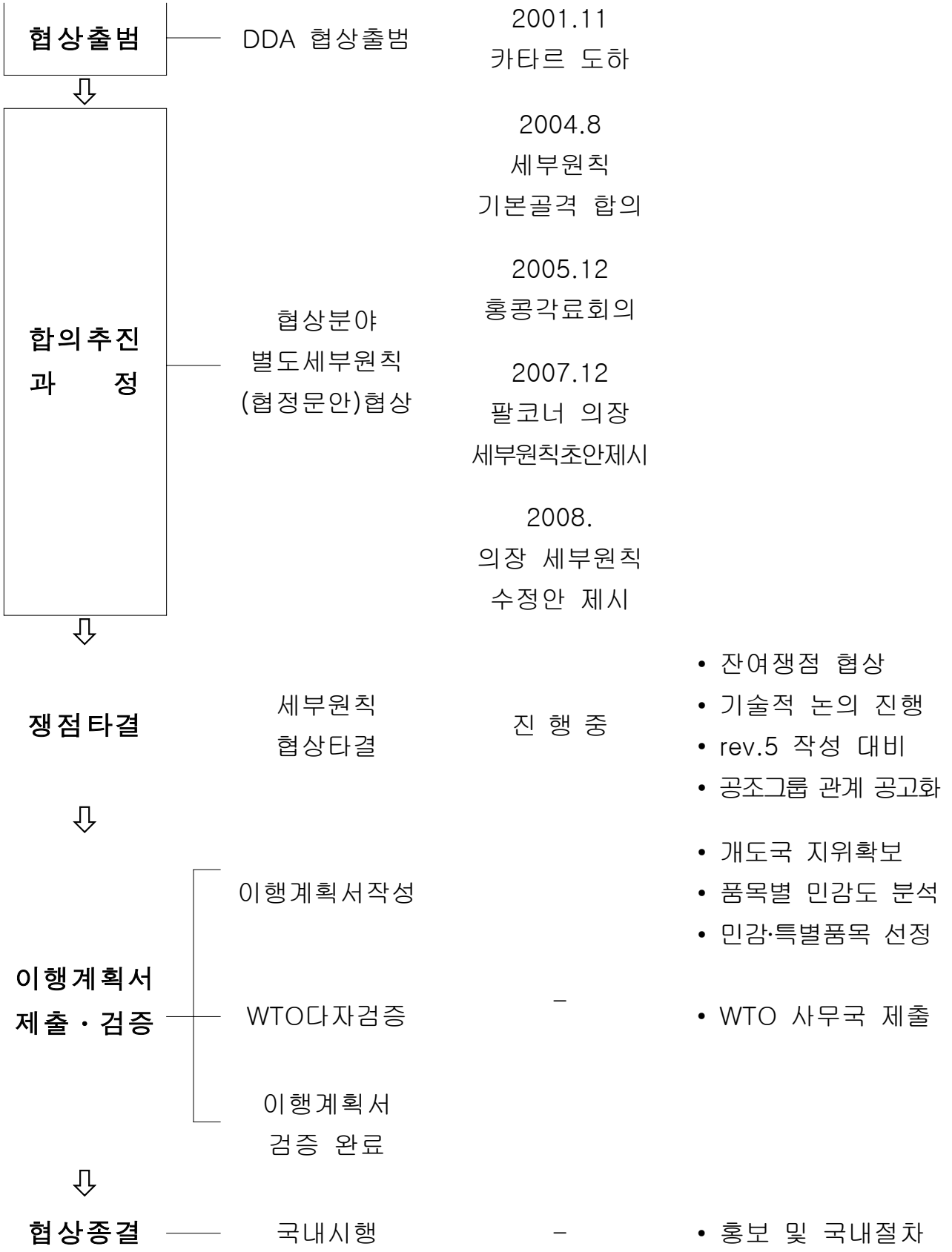
참고 2 각 협상별 주요 내용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농업 | 비농산물 (NAMA) | 서비스 | 규범 | 무역 원활화 | 무역과 환경 | 지적 재산권

협상	분야	쟁점	현황
농업	시장접근	• 관세 감축	(협상 진행중)
	국내보조	• 국내 보조금 감축	(협상 진행중)
	수출경쟁	• 수출 보조금 감축	
NAMA	관세감축방식		합의
	분야별 무세화	• 자발적참여 전제여부	(협상 진행중)
규범	수산보조금	• 금지보조금의 범위	(협상 진행중)

참고 3 DDA 협상 주요 절차



참고 4 농업 협상 세부원칙 잔여쟁점 논의 내용

	4차 수정안	주요국 입장
TRQ 신설	○ 신설불가/[가능시 세번의 1%] [민감품목보다 2% 추가 보상]	○ G-10 : 도입 필요 ○ 수출국 : 기본 반대하나 필요시 충분한 보상 필요
특별품목	○ **Entitlement :12%, Zero cut: 5%** ○ **평균감축률: 11%**	○ **G-33 : 다른 이슈와 타협 산물, 재협상 반대** **- 인니 : SP 수치는 각료 간 결정 필요** ○ **미국** : 수용 불가 ○ **개도 수출국** : 자국 품목 해결 요구
민감품목	○개수: 4%+ 2%(EFTA 국가 및 일본) ○ TRQ증량: 소비량의 4%	○ 일본, 캐나다 : 8%, 6% 필요 ○ 수출국 : 4%, 품목 추가시 보상 수준을 높일 필요
SSM	○**UR 양허관세 초과 : 제한 인정(W/7)** - 120-140 : 33%, 8%P - 140 이상 : 50%, 12%p * Prorating, Cross-check, Seasonality, Duration, Spillover 제약 조건 도입	○ **G-33 : W/7의 여러 조건 수용불가** ○ 수출국 : 발동제한 조건 반드시 필요 - 미국 : 구체적 상황, 대상에 중점 - 브라질 : Normal trade 및 Import surge에 중점 ○ EU :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관세상한	○ 관세상한(100%) 적용 예외 규정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 중 1%] * TRQ증량 등 추가보상(0.5%) 필요 ○ 관세상한(150%) 적용 예외 규정 **-특별품목 및** 민감품목 * 민감품목은 추가 보상 필요(0.33%)	○ G-10 : 도입에 반대하나 Rev.4 및 W/6기초로 논의 가능 ○ 수출국 : NAMA 협상과의 균형을 감안, 도입 필요 - 비민감 1% 예외 보상 수준 (전 민감품목 0.5% 증량) 불충분
관세 단순화	○목표 : 100% 단순화/[90%] ○방식 : Annex N 적용	○ G-10/EU : 90%, 85% 주장 ○ 수출국 : 100% 단순화 주장 ○ EU : Rev.4 및 Annex N과의 불일치 해소 필요
Blue Box상한	○ 미국 : '95-'00년 BB 지급액에 기초, '02년 농업법 품목별 지급비율의 **[110% or 120%]**	○ 미국 : 정치적 이슈라는 주장 ○ 중국 : NAMA와 수평적 이슈 ○ 브라질 : 105%
면화	○ 면화보조 : 일반 AMS보다 더 감축 ○ BB : 일반의 1/3 설정	○ 미국 : 다른 pillar 와 종합 검토 ○ Cotton 4 : 신속 해결 ○ G-20 : Cotton 4 지지
열대작물/ 특혜잠식	○ 열대작물 : 열대작물 list의 65% - 20%이하 : 철폐 - 20% 이상 : 80% 감축 ○ Annex H 품목은 개도국관세 감축기간(10년) 적용	○ 인도 : 동 내용 논의시 초청 받지 못했으므로 동의할 수 없음 ○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모리셔스 : 재협상 곤란

참고 5 농업 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 주요내용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률

○ 현행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별 감축률을 적용**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현행 관세수준**	**감축률**
1구간	0< 양허관세 ≦20%	**50%**	0< 양허관세 ≦30%	**33.3%**
2구간	20< 양허관세 ≦50%	**57%**	30< 양허관세 ≦80%	**38.0%**
3구간	50< 양허관세 ≦75%	**64%**	80< 양허관세 ≦130%	**42.7%**
4구간	양허관세 > 75%	**70%**	양허관세 > 130%	**46.7%**

○ **이행기간**은 선진국 5년(6단계), 개도국 10년(11단계)

○ **평균감축률 설정**

- 선진국은 최소 평균감축률 54%를 적용, 개도국은 최대 평균감축률 36%를 적용

나. 민감품목

□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일반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보상으로 **TRQ를 증량**해야 함

□ **민감품목 개수**는 **전체 관세세번의 4%**(개도국은 5.3%)

○ 민감품목은 관세감축률을 구간별 감축률의 1/2~2/3만큼 적용 하되, **TRQ를 소비량의 3~4%**(개도국은 2~2.7%)만큼 증량해야 함

- TRQ증량은 3년 동안 증량(단, 이행첫해 1/2만큼 증량)

○ 단, **개도국은 TRQ 증량외 이행기간 조정 옵션 선택 가능**

<table>
<tr><th></th><th>개 수</th><th>대 우(관세감축 및 보상방안)</th></tr>
<tr><td>선진국</td><td>전체 세번의 4%</td><td>▸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증량
(소비량대비 %)
<table>
<tr><th rowspan="2">관세 감축</th><th rowspan="2">원칙</th><th colspan="2">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th></tr>
<tr><th>10%이상</th><th>30%이상</th></tr>
<tr><td>일반감축률의 2/3 적용</td><td>3.0%</td><td rowspan="3">0.5%
감소</td><td rowspan="3">1%
감소</td></tr>
<tr><td>일반감축률의 1/2 적용</td><td>3.5%</td></tr>
<tr><td>일반감축률의 1/3 적용</td><td>4.0%</td></tr>
</table></td></tr>
<tr><td>개도국</td><td>전체 세번의 5.3%</td><td>▸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TRQ 증량
(소비량대비 %)
<table>
<tr><th rowspan="2">관세 감축</th><th rowspan="2">원칙</th><th colspan="2">소비량대비 현행 TRQ물량비중</th></tr>
<tr><th>10%이상</th><th>30%이상</th></tr>
<tr><td>일반감축률의 2/3 적용</td><td>2.0%</td><td rowspan="3">0.3%
감소</td><td rowspan="3">0.7%
감소</td></tr>
<tr><td>일반감축률의 1/2 적용</td><td>2.3%</td></tr>
<tr><td>일반감축률의 1/3 적용</td><td>2.7%</td></tr>
</table>
▸ 관세감축을 적게 하는 대신, 이행기간을 단축
※ 단, 3가지 옵션 중 한가지 선택 적용
<table>
<tr><th>관세 감축</th><th>이행기간</th><th>비고(적용범위 한정)</th></tr>
<tr><td>일반감축률의 2/3 적용</td><td>3년</td><td>전체 민감품목의 1/2로 한정</td></tr>
<tr><td>일반감축률의 1/2 적용</td><td>2년</td><td>1/3로 한정</td></tr>
<tr><td>일반감축률의 1/3 적용</td><td>1년</td><td>1/4로 한정</td></tr>
</table>
▸ 관세감축은 구간별 감축공식에 따라 일반감축률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이행기간을 3년 연장</td></tr>
</table>

□ 현행 비TRQ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시 TRQ 신설을 허용하는 문제는 잔여 쟁점으로 남아있음

◈ 의장은 TRQ 신설 불가/가능 옵션을 모두 제시하면서, 최근 논의내용을 기초로 의장이 생각하는 절충안을 별도문서로 제시(TN/AG/W/6 '08.12.6.)

- 신설 가능범위 : 전체 세번의 1% 범위 내에서 신설 허용
- TRQ증량수준 : 일반적인 민감품목보다 소비량의 2% 추가 증량
  (TRQ신설로 기존 교역 저해시, 기존교역량에 소비량 추가)
- 신설 TRQ의 세번과 물량을 세부원칙에 첨부하여 투명성 확보
- 신설 TRQ의 쿼터내 세율은 0%, MFN 방식으로 운영

다. 특별품목(SP, Special Products)

□ **개도국**은 식량안보, 생계유지, 농촌개발 관련 지표를 기초로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음

개 수	대 우(관세감축 및 보상방안)
전체 세번의 12%	▸ **전체 특별품목의 평균 감축률**이 11%가 되도록 함 (단, **전체 세번의 5%에 대해서는 관세감축면제 인정**)

라. 관세상한

□ 관세상한(capping)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관세 구조를 가진 국가에게 큰 부담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한 적용의 예외를 인정(단, 보상 규정)

	선진국	개도국
상한수치	100%	150%
적용제외	▸ **민감품목** - 단, TRQ 추가 증량(소비량의 0.5%) * 비민감품목에 대한 상한 적용 제외문제가 잔여쟁점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해당 없음 (일본, 스위스, 놀웨이, 아이스랜드에 한정)	▸ **민감품목** - 단, TRQ 추가증량(0.33%) ▸ **특별품목**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마. 개도국 긴급수입관세(SSM)

□ **개도국**은 수입량이 일정물량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발동가능 품목수, 발동기준 및 구제조치

품목수	발동 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제한없음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115%이하	양허관세의 25% 또는 25%p 중 높은 것
	115%~135%이하	양허관세의 40% 또는 40%p 중 높은 것
	135% 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50%p 중 높은 것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SSM발동을 제한

○ UR 양허관세 초과 SSM

- 품목수, 발동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등이 잔여쟁점으로 남아있음

◈ 의장은 잔여쟁점에 대한 의견을 별도문서로 제시(TN/AG/W/7 '08.12.6.)

품목수	발동 기준	구제조치(추가관세)
전체 세번의 2.5%	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140%이하	양허관세의 33% 또는 8%p 중 높은 것
	140% 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높은 것

- 발동기간은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연도초과 가능)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 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SSM 발동을 제한

바. 관세단순화

□ 관세 형태의 복잡성이 관세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수출국들의 주장에 따라 관세 단순화가 논의됨

○ 전체 **세번을 단순 종가세로 양허하는 안**과 **최소한 전체 세번의 90%를 종가세로 양허하는 방안**이 병렬적으로 제시

○ 전환시 **AVEs 전환방식**('99~'01년기준)을 이용하되, AVEs가 최근년도 수입단가를 기초로 산출된 Current AVEs에 상응하는 경우에만 전환

○ 개도국은 2년의 이행기간 부여

사. 열대작물(Rev.4 新 147, 148항*)

* EU, 중남미 바나나 수출 11개국, ACP, 미국 등이 바나나 분쟁 타협안(09.12.15)의 일환으로 열대작물 및 특혜잠식에 대해 합의, Rev.4 관련 조항(147, 148)에 대한 수정을 요청(09.12.18)

* 중남미 바나나 수출 11개국 :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 선진국은 Annex G(케언즈 List, UR List)에 나열된 품목 65% 이상에 대해 열대작물 방식(tropical treatment)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

○ 현 양허관세(종가세 혹은 종가세상당치)가 20% 이하이면 관세를 철폐하고, 20%를 초과하면 80%를 감축

○ 특혜잠식 조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5년간 6번 감축

○ 개도국은 능력이 있다고 선언한 경우 Annex G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 감축을 권고

아. 특혜잠식(Rev.4 新 149항*)

* EU 등이 바나나 분쟁 타결로 특혜잠식 조항의 수정 요청('09.12.18)

□ 新 149항

○ Annex H 나열품목은 개도국 관세감축 이행 기간(10년) 적용

○ Annex H 품목 중 미국/EU가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의 특혜 수입물량이 국내소비량(2003~2005년 기준)의 10% 이상일 경우 out-quota 관세감축과 신규 TRQ 물량 설정을 7년에 걸쳐 이행

국내보조분야

< 보조금의 체계>

①무역왜곡보조총액(OTDS)			⑤허용보조 (Green Box: GB)
②감축대상보조 (AMS)	③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DM)	④블루박스 (Blue Box: BB)	

①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②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③ 최소허용보조(DM)) : AMS 성격이나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④ 블루박스(BB) : AMS와 허용보조의 중간 성격의 과도기적 보조로서, 일부제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

⑤ 허용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Overall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 감축대상보조 한도+ 최소허용보조 한도+ 블루박스 한도)**을 추가적으로 감축**

* 각각 개별 보조한도를 감축하면서 합계인 OTDS도 감축하도록 규정

< 감축구간/ 감축률/ 이행기간 >

감축구간(해당국가)	OTDS규모	감축률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600억달러 초과	80%	첫날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선진국의 2/3, 36.7% - 첫날 20% 감축 , 나머지 8년 균등 감축
2구간(미국, 일본)	100억~600억달러	70%		
3구간(기타 국가)	100억달러 미만	55%	첫날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나. 감축대상보조(AMS, Aggregate Measurement of Support)

○ 현행 총 AMS한도를 감축

감축구간(해당국가)	AMS규모	감축율	이행기간	개도국
1구간(EU)	400억달러 초과	70%	첫날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30%(선진국의 2/3) -첫날 3.3% 감축, 나머지는 8년간 균등 감축
2구간(미국,일본)	150억~400억달러	60%		
3구간(기타국가)	150억달러 미만	45%	첫날 7.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 품목특정 AMS 한도 설정 (이행첫날부터 적용)

- 기본적으로 과거 지급실적을 한도로 하나 일부 예외적 규정 설정

선진국	▸'95~'00년 동안 통보된 품목특정 AMS 평균 지급실적 ▸기준기간('95-'00년) 이후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 있는 경우 최근 2년 동안의 통보된 평균 품목특정 AMS 지급실적(i) ▸기준기간 동안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하로 지원한 품목의 경우는 UR 결과의 DM 수준(선진국: 품목 생산액의 5%) (ii)
개도국 (3개 옵션 중 선택)	▸(a)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 통보된 AMS 지급액 - 단, 선진국의 (i), (ii)(품목생산액의 10%)도 함께 적용 ▸(b) '95~'00년 혹은 '95~'04년 평균생산액의 20% ▸(c) 해당년도(in the relevant year) 총 AMS의 20%

다. 최소허용보조(De-minimis)

선진국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생산액의 5%)을 **50% 감축(생산액의 2.5%)**하되, **이행 첫날**에 감축 이행
개도국	▸현행 최소허용보조수준(생산액의 10%)을 **33.3% 감축(생산액의 6.7%)**하되, **3년동안 감축**

라. 블루박스(Blue Box)

(Old BB) 생산제약하의 직접지불
(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면적 및 생산단수에 기초하거나(or),
(i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 수준의 85% 이하이거나,(or)
(iii)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진다.

(New BB)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접지불(비생산시에도 지불)
(i) 동 지불은 고정불변의 면적 및 생산단수에 기초하거나,(or)
(ii) 가축에 대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해 이루어지고,(and)
(iii) 이러한 지불은 고정불변의 생산 수준의 85%이하에 대해 이루어진다.

○ 블루박스 총 한도 및 품목별 상한

- UR시 한도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블루박스 총 한도를 새로이 설정하면서, 품목별 상한도 설정

선진국	▸**총 블루박스 상한** - '95~'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이행첫날부터 적용) ▸**품목특정 블루박스 상한** - '95~'00년에 지급된 블루박스 보조금의 평균 - 블루박스와 AMS 실적이 없는 품목은 전체 블루박스 상한의 5% 범위 내에서, 개별 품목별로는 블루박스 상한의 2.5%를 상한으로 설정
개도국	▸**총 블루박스 상한** - '95-'00년 or '95-'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이행첫날부터 적용) ▸**품목특정 블루박스 상한** - 블루박스와 AMS 실적이 없는 품목은 전체 블루박스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개별 품목별로 블루박스 상한의 10%를 상한으로 설정

※ 단, **품목특정 AMS상한을 블루박스로 전환시**, 품목별 BB한도는 상기 상한을 초과 가능(전환된 AMS상한만큼 BB상한 추가, 전체 BB한도는 유지)하나, 전환된 만큼 품목특정 AMS 감축

※ 한편, 기준기간동안 농업생산액의 25%, AMS의 80%이상을 특정 품목에 지원한 개도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AMS 보조를 BB로 전환시, BB 전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BB로 전환 가능(**우리나라 해당 조항**)

마. 허용보조(Green Box)

<정부 서비스-일반서비스>

○ 현재 농업협정문 일반서비스 항목(7개)에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항목 추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층 및 자원빈곤 생산자를 도울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한 비용은 **AMS에 포함하지 않음**

* 현행 규정은 관리가격(구매가격)과 외부참조가격의 차이를 AMS로 산입

○ 개도국의 경우 **저소득층 및 자원빈곤 생산자로부터 보조된 가격으로 식량을 구매**하거나 식량 구호 제공시에는 구매가격과 외부 참고가격과의 차이를 AMS에 포함하지 않음

<비연계소득보조>

○ 수혜자격은 **고정불변기간**(fixed and unchanging)내의 기준(생산자의 소득, 지위, 생산요소 등)에 의해 결정되도록 요건을 강화하되, **기준기간의 예외적인 변경 인정**

- 기준기간의 예외적 변경요건으로는 생산자의 기대와 생산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을 규정

(구체 변경 요건)

① 변경기간은 상당히 긴 과거연도, ② 수확량이나 지급단가 증가와 비연계, ③ 국내보조 관련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됨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지불>

○ **개도국의 경우 자연재해관련 허용보조조건을 완화**

- 손실이 과거 5개년 평균 생산액 혹은 5개년 중 3개년 평균 생산액의 30%이하인 경우도 지급 가능, 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참여 및 작물·동물의 폐기 등 다양한 재해관련 보조 규정 신설

<투자지원을 통하여 제공되는 구조조정지원>

○ **고정불변 기준기간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 **고정불변 기준기간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변경 가능

수출경쟁분야

가. 수출보조

○ **선진국**은 2013년 말까지 수출보조를 철폐

○ **개도국**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수출보조를 철폐하되, 농업협정 제9.4조에 따른 마케팅비용, 운송비용 등 수출보조는 수출보조 철폐 시한 후 5년간 유지 가능(2021년 철폐)

나. 식량원조

○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도입**

- 모든 식량원조는 **무상공여**로 제공
- 재수출은 금지하나 긴급 식량원조의 경우는 예외 인정
- 수혜국의 동종 또는 대체 품목 생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경우 현물원조를 지양하며, 점차적으로 현금원조로 전환하도록 노력 등

참고 6 수산보조금 협상관련 의장보고서 주요내용

□ 수산보조금 협상 전반에 대한 의장 평가

○ 핵심쟁점에 대한 합의가 거의 없어서 수정 협정문안을 제시할 수 없고 따라서 보고서로 대체함

○ 합의가 어려웠던 주요 이유는,

- 수산보조금 협상의 주요 요소(금지, 예외, 개도국특별대우, 어업관리)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각 국의 제안서를 반영하기 어려웠고,

- 협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 및 개념들이 고도로 기술적이고 WTO에 생소한 것이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음

○ 세계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하고 보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대다수가 동의함

- 그러나 각 국은 자국의 어업활동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국가들이 문제해결 책임을 떠 맡기를 바라고 있음

○ 많은 국가들이 2007년 의장 초안의 일부 요소를 지지했으나 논란이 많았고 접근방식이나 핵심요소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음

- 따라서 2008년 반덤핑과 일반보조금협정에 대한 수정 협정문안을 제시할 때 수산보조금에 대해서는 Roadmap을 제시

- 2009년 Roadmap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가 거의 없었음

○ 2010년 후반기부터 근래까지 많은 제안서가 제출되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이 제시되었으나 합의에 도움이 되지 않음

○ 결국 핵심이슈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없었고 수산보조금 협상은 2008년 Roadmap이 회람될 때와 마찬가지로 교착상태임

□ 세부 쟁점별 협상경과

○ 제3국으로의 어선 이전, 불법어업, 해외입어료 지원 보조금은 금지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의견수렴

○ 선박건조·보수, 어업운영비(면세유 등 연료보조 포함), 어업기반시설, 소득보조, 가격지지 등 보조금의 금지에 대해서는 큰 견해차

《연료보조》

- 운영비 중에서도 연료보조(면세유 포함)가 가장 논쟁이 많았음
- 일부 회원국은 연료보조가 그 규모(연간 60억불)와 어획노력과의 직접적 관계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유해한 보조금이라고 지목함(특히 공해어업)
- 유류보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특정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유류보조금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도 있었음
- 일부 국가는 유류보조가 유류세금정책과 관련된 사안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부과되는 높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금지보조금으로 간주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
- 일부 국가는 WTO 규범이 국내조세정책을 침해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고, 유류보조와 과잉어획능력/과잉어획간 연계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국가도 있었음

《공해어업》

- 개도국들은 공해어업 보조금의 일률적 금지는 원양어업 후발국인 개도국에 공평하지 않으므로 개도국에는 공해어업 보조금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다수의 다른 회원국들은 국제 공유자원인 공해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공해어업 보조금이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회원국에게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소규모어업》

- 소규모어업에 대한 예외를 개도국에만 허용할지 또는 모든 국가에 대해 허용할 지를 두고 의견 대립

《어업관리》

- 일부 국가는 적절한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보조금은 과잉어획능력이나 과잉어획을 유발하지 않으므로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
- 다른 국가들은 어업관리도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보조금에 의해 야기되는 과잉어획능력이나 과잉어획을 막을수 없으므로 포괄적인 보조금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

《기타》

- 선박 건조·보수 보조금의 금지에 대해 대다수가 찬성하나 한 국가는 일률적 금지에 반대
- 어업기반시설, 소득보조, 가격지지의 금지여부 및 규제범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간 견해차 존재
- WTO에 통보하지 않는 수산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간주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지지하였으나 반대하는 국가도 있음

Ⅱ. FTA 협상 동향

1 FTA 협상 개요

❑ 정부는 국가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 중

○ 5개 경제공동체(17개국)와 FTA **발효**

* 발효 현황 :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상품), 인도('10.1)

○ 미국, EU, 페루 등 3개 경제공동체(29개국)과 FTA **타결**

* 미국 : 타결('07.4), 정식서명('07.6.30), 국회 비준안 외통위 통과('09.4.22)

* EU : 실질적 타결('09.7), 가서명('09.10.15), 정식서명('10.10.6), 국회 비준안 통과('11.5.4)

* 페루 : 타결('10.8), 가서명('10.11.15), 정식서명('11.3.21)

❑ 호주·뉴질랜드, 콜롬비아·터키·GCC 등 5개 경제공동체와 **협상 중**

○ 호주·뉴질랜드와 4차례 이상 협상에서 협정문, 양허안 등 논의

○ 콜롬비아와는 '09. 12월 협상 개시 후 총 4차례 협상 개최

○ 터키와는 '10. 4월 협상 개시 후 총 3차례 협상 개최

○ GCC와는 '08.7월 1차 협상 이후 '09. 11월까지 3차례 협상

❑ 중국, 일본, 베트남 등 9개 경제공동체와 **협상 여건조성 중**

* 중국, 일본, 한·중·일, 러시아, 남미공동시장, 이스라엘, 베트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캐나다(중단), 멕시코(중단)

○ 한·중 FTA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10.5.28), 정부간 사전협의 진행 중

* 정부간 사전협의 1차 회의('10. 9. 28~29, 북경), 2차 회의(일정 미정, 서울)

○ 한·중·일 FTA는 '10. 5월부터 2012년까지 산관학 연구 진행 중

○ 일본과는 협상 재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지속

○ 캐나다와는 쇠고기 WTO 분쟁 해결에 따라 협상 재개 유동적

2 한 · 호주 FTA

가. 추진 현황

❏ **'09.3월** 초 VIP 호주 방문 시 **협상개시** 선언 이후 최근('11. 1월)까지 **8차례 협상 진행**

○ '11년 상반기 중 상품분야에서 **쇠고기, 낙농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 핵심품목의 양허수준에 대해 **본격 논의 예정**

❏ **(상품 양허) 호주측**은 최소한 한미 FTA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중이나, **우리**는 협상 이익균형, 국내산업 영향 등을 감안하여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대응

* (한미 FTA 양허내용) 쇠고기 : 15년+ASG, 탈·전지분유 : 현행+TRQ 5,000톤

○ 농수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및 FTA 기대이익 균형 도출에 주력

❏ **(협상 진전)** 우리는 핵심품목의 민감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진전 검토

○ 호주측은 조속한 한-호 FTA 타결을 위한 협상 진전 기대

나. 향후 추진계획

❏ 양측은 차기 수석대표 회의를 10월 개최(잠정), 핵심품목에 대한 의견 접근 가능성 타진

3 한 · 콜롬비아 FTA

가. 추진 현황

❑ '09.12월 한-콜롬비아 FTA 협상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4차례 전체 협상**과 **3차례 회기간 회의** 개최

○ 상품, SPS분야 등은 협상 진전이 다소 미흡하나 서비스/투자분야는 상당 수준 진전

* 민간공동연구('09.3~8월), 공청회('09.10월), 1차 협상('09. 12월, 서울), 2차 협상('10.3월, 보고타), 3차 협상('10. 6월, 서울), 4차 협상('10. 10월, 칼리)

❑ **'11.2.7~9일 회기간 협상(LA)**에서 양측은 2차 상품양허 수정안('10.12월 교환) 및 분과별 통합 협정문을 중심으로 구체 협의 진행

○ **(상품 양허)** 양측 관심품목과 민감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 콜측은 육류, 낙농품, 과일, 화훼 등 농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측은 국내 농수산물분야의 민감성 때문에 양허 개선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대응

○ **(협정문)** 농업섹션 구성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이

나. 향후 추진계획

❑ 양측은 수석 대표간 협의를 7월 이후 개최(잠정), 주요 품목의 양허 수준에 대한 집중적 의견교환 예정

4 한 · 터키 FTA

가. 추진 현황

❑ **'10. 3월, FTA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3차례 협상 진행**

○ 유럽, 중동 연결의 거점 확보 및 경제 전반의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 민간 공동연구('08.9～'09.5),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10.2.19, 외교부)

❑ **'10. 4월, 제1차 협상 개최(터키, 앙카라)**

○ 협상운영을 위한 기본세칙(TOR) 합의 및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분야별 양측 입장 교환

○ 위생 및 검역 조항은 WTO상의 권리와 의무를 따른다는 수준으로 합의

❑ **'10. 7월, 제2차 협상 개최(서울)**

○ **기준세율** 등 협정문 주요 쟁점에 대해 **우리안대로 대부분 합의**

○ **상품양허 수준과 유형에 대한 양측의 시각차 확인**

❑ **'11.3월, 제3차 협상 개최(터키, 앙카라)**

○ 우리와 터키 측의 **FTA에 대한 접근방식(한-EU FTA 연장선 vs. 무역역조의 구조적 개선)** 및 **시장개방 수준** 등에 대한 **입장차 재확인**

-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반영한 양측의 **동등한 양허 주장**
- (터키측) 제조업/농수산업 등 산업발전 차이에 따른 **비대칭적 양허 요구**

나. 향후 추진계획

❑ **제4차 협상은 터키측 입장변화에 따라 개최여부 검토**

○ 농수산물 민감성 반영한 동등한 양허 요구 입장을 견지하고, 터키측 공산품 양허개선 정도에 따라 탄력적 대응

5 한·중 FTA 정부간 사전협의

가. 추진 현황

❑ **민간공동연구**('05.3～'06.11), **산관학 공동연구**('07.3～'10.5.28) 종료 후 **정부간 사전협의** 진행 단계

* 사전협의는 '10년에 2회 개최 계획이었으나, 1차 협의('10.9, 북경)만 개최

○ 산관학 보고서 **농어업 분야 소결론**에서 양국은 패키지 방식을 통해 적절한 방식으로 **민감 분야**를 처리할 것을 권고

* 농업분야 보호 등에 대한 양국간 이견으로 잠정 중단('08.6～'09.12)

❑ 최근 양국 **통상장관 회담**('11.4.11)시 정부간 사전협의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합의(5월말 또는 6월초, 서울에서 개최 예정)

○ 양국 **총리 면담**('11.4.13)시 중국측은 **협상 개시선언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양측 민감분야의 **사전 조율 필요성을 언급**

나.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우리 농수산업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

❑ 본 협상 개시에 대비하여 한중 FTA 종합 대응체제 구축

○ 「한·중 FTA T/F」를 운영('10.7월～)하여 중국의 기 체결 FTA 협정문* 및 생산, 교역통계, 관세 분석 및 단계별 대응책 마련 중

* 아세안, 파키스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폴, 페루, 홍콩, 마카오, 코스타리카(9개)

○ 향후 본 협상개시에 대비, 중국에 전략적으로 제기할 이슈 발굴

○ 품목별 영향추정 및 제도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추진

6 한 · 일 FTA

가. 추진 현황

❏ **'03.10월** 협상 개시 선언 후 **6차례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일측의 소극적 태도로 '08년 초까지 **냉각기** 유지

○ 한·일 정상회담 합의('08.4)에 따라 **협상재개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를 **7차례** 개최하였으나, 큰 진전이 없는 상황

* '04년 한 · 일 FTA 협상 중단 당시 주요 쟁점 사항 : 일측의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 수준, 비관세장벽 개선, 양국간 산업협력 등

❏ 일본의 **농수산물 시장개방 수준,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 양측의 입장 차이 현저

○ **(일본측)** 양허수준이나 비관세장벽 개선 여부는 **정식협상 개시 후 논의 가능**하며, 우선 협상을 재개하자는 입장

○ **(우리측) 일본측의 공식적·전향적 입장 변화**가 있어야만 협상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응중

나. 향후 추진계획

❏ 농산물 시장개방, 비관세장벽, 산업협력 등에 대한 일측의 입장 변화 여부 등을 감안하여 협상의 재개 여부를 판단

7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가. 추진 현황

❑ 3국간 민간 공동연구('03～'09, 7년간) 후 3국 정상회의에서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로 격상 합의**('09.10.10, 북경)

○ 산관학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국장급 준비회의('10.1.26)에서 **2012년까지 공동연구 종료에 노력**하기로 합의

- (진행방식)'10년 3회 개최, (연구범위)3국간 FTA 추진 타당성 및 협정 범위, (보고체계)매년 3국 정상회의에 진전사항 보고 등

○ '10년도 3차례 회의 개최(1차:5월,서울, 2차:9월,동경, 3차:12월,중국)

- 각 회의시 운영세칙 채택, 공동연구결과 발표(1차), 상품 및 협력 분야(2차), 투자·서비스 분야, 내년 일정(3차) 등 논의

❑ **'11년**은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 진행(4회 개최 예정)

○ 4차 회의('11.3월, 제주)에서 상품분야 보고서 논의 및 원산지·SPS·비관세장벽(TBT) 등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계획 확정

나.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분야는 중국이 비교 우위인 점을 감안, 산관학 공동연구 단계부터 **체계적·전략적** 대응으로 민감성 반영 노력

* 한중일 FTA 완전 관세철폐시 GDP 증가효과(민간공동연구): 한국 3.55, 일본 0.37, 중국 0.3

○ '11년 **공동연구 보고서 작성**시 우리측 입장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

○ **일본에 대한 수출, 식품안전, 농수산분야 협력** 등 **공세적 측면**도 균형 있게 접근

8 한 · 페루 FTA

가. 추진 현황

❑ '11. 3. 21(월) **한 · 페루 FTA 정식서명** (서울)

○ '10. 8. 30 제5차 협상에서 최종 타결후 '10.11.15 가서명

❑ 한 · 페루간 농수산물 교역액이 적고 **민감품목**이 **장기 폐지**로 타결되어 **국내 영향**은 **적을 전망**

○ 농산물 **45.9**%(수산물 **16.6**%)에 대해 관세 존속기간 장기화(10년 이상)

* 농수산물 수입('09년) : 6,118만불(오징어 3,053만불, 커피 1,912, 붕장어 410 등)

- **농수산물** 107개 품목(수산 2개 포함)을 **양허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 페루측 관심 품목인 **오징어 10년, 붕장어 7년간 관세 폐지**

❑ 피해 영향분석 결과 수입실적이 많은 오징어, 붕장어를 중심으로 **생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정밀분석 중

❑ 피해 예상품목에 대해 생산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보완대책 강구 중**

* 수산업 어촌종합대책 및 한 · 미 FTA 보완대책 : 12.6조원('04～'13년)

나. 향후 추진계획

❑ 농·수산 관련자 및 단체, 학계 등을 대상 **협상 결과 홍보**

❑ 농어민, 관련단체로부터 주기적인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내대책 지속적 보완 추진**

9 한 · 뉴질랜드 FTA

가. 추진 현황

❑ **'09.3월 초** 대통령 뉴질랜드 방문 시 한·뉴 **FTA 개시 선언 후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

* 민간공동연구('07.2～'08.3), 1차 협상('09.6), 2차 협상('09.9), 3차 협상('09.12), 4차 협상('10.5)

❑ **'10.5월(웰링턴) 제4차 협상**에서는 기 교환한(4.30) 상품 리퀘스트에 대한 입장 교환 및 분야별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논의 진행

○ **뉴측은** 자국의 리퀘스트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를 목표로 하는 표준적인 것이라 주장하며 양측의 관심 품목을 반영한 수정안 교환 제안

* 뉴측은 농수산물 1,950개 품목 중 우리측 양허초안에서 즉시 철폐한 331개 품목을 제외한 1,639개 품목 전부에 대해서 리퀘스트 제시

○ **우리측은** 뉴측 리퀘스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한 논의나 양허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대응

나. 향후 추진계획

❑ 4차 협상 후 **5차 협상 일정**에 대해서는 **미합의**

○ 우리측은 **뉴측의 과도한 요구 수준의 완화** 등 모멘텀이 마련된 후에야 다음 협상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뉴측의 입장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할 계획

참고 1 FTA 추진 현황

구 분	상대국	추 진 상 황	비 고
발효 ; 5개 경제 공동체 (17개국)	칠레	○'99.12. 협상개시→'02.10. 타결 ○'04.4. 발효	
	싱가포르	○'04.1. 협상개시→'04.11. 타결 ○'06.3. 발효	
	EFTA (4개국)	○'05.1. 협상개시→'05.7. 타결 ○'06.9. 발효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아세안 (10개국)	○'05.2. 협상개시→'06.4. 상품타결 ○'07.6. 상품협정 발효 ○'09.5 서비스발효, ○'09.4 투자타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	○'06.3. 협상개시→ ○'08.9. 12차(실질 타결) ○'10.1. 발효	○'09.2월 가서명, 7.2 인도 내각 승인 8.7 정식 서명, 8.26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협상타결 (완료);3개 경제공동체 (29개국)	미국	○'06.6. 협상개시→'07.4. 타결 * '08.7.1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 ○'10.11. 추가협상개시→'10.12. 타결	○18대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08.10.8) - 외통위 통과('09.4.22)
	EU (27개국)	○'07.5. 협상개시, '09.3. 8차, '09.10. 가서명 * 7.13 타결(한-스웨덴 정상회담)○'10.10. 6 정식서명	○유럽의회 승인('11.2.17) ○'11.5.4. 국회 비준안 통과 ○'11.7. 발효 예정
	페루	○'09.3. 1차(서울), '09.5. 2차(리마) ○'09.6. 3차(서울), '09.10 4차(리마) ○'10.8. 30. 5차(리마) 협상타결 ○'10.11. 가서명	○'11년 3.21(월) 정식서명
협상 중 ; 3개 경제 공동체 (3개국)	호주	○'09.5 1차(캔버라), '09.9 2차(서울), '09.11 3차(캔버라), ○'10.3 4차(서울), '10.5 5차(캔버라) ○'10.10.(회기간,캔버라), '11.1(회기간, 서울)	○ 6차 일정 미정
	콜롬비아	○'09.12 1차(서울), '10.3 2차(보고타) ○'10.6.14-18 3차(서울), '10.9.6-10 회기간(워싱턴), '10.10.4-8 4차(칼리), '11.2.7-9 회기간(LA)	
	터키	○'10.4.26-30 1차(앙카라),10.7.19-23 2차(서울), 3차(앙카라)11.3.7-11	
협상중단 또는 준비중 ; 12개 경제 공동체 (24개국)	GCC (6개국)	○'08.7. 1차(서울), '09.3. 2차(리야드) ○'09.7. 3차(서울)	*GCC(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뉴질랜드	○'09.6. 1차(서울), '09.9. 2차(웰링턴) ○'09.12 3차(서울), '10.5 4차(웰링턴)	○ 5차 일정 미정
	캐나다	○'05.7. 협상개시 ○'08.3. 13차(오타와)	○ 14차 회담 일정 미정 - 쇠고기 제소, 한EU FTA 등과 연관
	멕시코	○'07.12. 1차(멕시코시티) ○'08. 6. 2차(서울)	○'06.2월 이후 3차례 SECA 협상 후 '07.7월부터 FTA로 변경, 협상재개
	일본	○'03.12. 협상개시 ○'04.11. 협상중단	○협상 재개를 위한 양국간 실무협의 7차례 개최 ('08.6월, 12월, '09.7월, 12월, '10.9월, 11월, '11.5월)
	중국	○'05~'06년 : 민간공동연구 ○'07.3. 산관학 공동연구(공동5, 전문가3) ○'10.5.28 산관학 종료 ○1차 사전 협의('10. 9. 28~29)	○2차 사전협의 미정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09.10. 산관학 공동연구 격상 합의 ○산관학 1차('10.5.6-7, 서울), 산관학 2차('10.9.1-3, 동경), 산관학 3차('10.12.1-3, 웨이하이), 산관학 4차('11.3.28-4.1, 제주)	
	러시아	○'07.10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 '08.7. 제2차 회의	
	MERCOSUR (4개국)	○'05.5.~'06.11. 민간공동연구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09.7 무역협정(TA) 추진 MOU 체결
	이스라엘	○'09.8.17 민간공동연구 개시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08.12.9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5개국
	베트남	○'10.3.23 공동연구 개시 합의 ○'10.6.23-24 공동연구 1차(서울) ○'10.10.12-13 공동연구 2차(하노이) ○'11.3.16-17 공동연구 3차(서울)	○4차 일정 미정

참고 2 FTA 대상국별 교역 규모('10)

(단위 : 백만불, %)

협상 경과	FTA대상국	전체상품 수출	농림축수산물 수출(비중)	전체상품 수입	농림축수산물 수입(비중)	전체농수산물대비(소계/농수산물수입)
발효 (5개)	칠 레	2,947	4.5(0.15)	4,221	667(15.80)	
	싱가폴	15,244	91(0.60)	7,850	85(1.08)	
	EFTA	3,522	7.6(0.22)	5,699	149(2.61)	
	ASEAN	53,195	719.8(1.35)	44,099	3,422(7.76)	
	인 도	11,435	17(0.15)	5,674	393(6.93)	
	소 계	**86,343**	**839.9(0.97)**	**67,543**	**4,716(6.98)**	**18.29**
타결 (3개)	미 국	49,816	518(1.04)	40,403	5,959(14.75)	
	E U	53,507	332.6(0.62)	38,721	1,955(5.05)	
	페 루	944	0.3(0.03)	1,039	76(7.31)	
	소 계	**103,323**	**850.9(0.82)**	**80,163**	**7,990(9.97)**	**30.98**
협상 진행 중 (5개)	GCC	12,530	246(1.97)	66,441	27.7(0.04)	
	호 주	6,642	82(1.23)	20,456	2,212(10.81)	
	뉴질랜드	918	93.9(10.23)	1,176	846(71.94)	
	콜롬비아	1,389	0.4(0.03)	432	74(17.13)	
	터 키	3,753	7.0(0.19)	516	54(10.47)	
	소 계	**25,205**	**429.3(1.70)**	**89,021**	**3,213.7(3.61)**	**12.46**
협상 중단 (3개)	캐나다	4,102	52.5(1.28)	4,351	1,062(24.41)	
	멕시코	8,864	9.6(0.11)	1,521	103(6.77)	
	일 본	28,176	1882.6(6.68)	64,296	658(1.02)	
	소 계	**41,142**	**1,944.7(4.73)**	**70,168**	**1,823(2.60)**	**7.09**
향후협상 대비 (6개)	중 국	116,838	787.3(0.67)	71,574	4,323(6.04)	
	러시아	7,760	235.6(3.40)	9,899	738(7.46)	
	MERCOSUR	8,952	14.8(0.17)	5,543	2,018(36.41)	
	남아공	1,668	8.6(0.52)	2,272	131(5.77)	
	이스라엘	1,059	15.1(1.43)	769	12(1.56)	
	베트남	9,652	153.1(1.59)	3,331	623(18.70)	
	소 계	**145,929**	**1,214.5(0.83)**	**93,388**	**7,845(8.40)**	**30.48**
총 계		**401,942**	**5,279.3(1.31)**	**400,283**	**25,587.7(6.39)**	

※농수산물 총수입액 25,787백만불 발효국가농산물수입액/농산물총수입액(산출법 : {18.29=4,716(발효국총농산물수입액)/25787(농산물·총수입액)}*100

참고 3 한 · 호주 교역 현황

❑ 대 호주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3,272	3,378	3,812	4.962	4,691	5,171	5,243	6,642
수입	5,916	7,438	9,859	11.309	13.232	18,000	14,756	20,456
무역수지	-2,644	-4,059	-6,047	-6,617	-8,541	-12,829	-9,513	13,814

* 주요 수출 품목: 자동차,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금은 및 백금

* 주요 수입 품목: 석탄, 철광석, 원유, 알루미늄, 천연가스, 쇠고기

❑ 대 호주 농림축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천불)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A)	농산물	20,800	34,800	49,000	62,000	65,037	71,971	68,373
	축산물	3,700	4,900	5,000	5,900	6,178	5,819	4,726
	임산물	200	400	500	600	906	973	1,152
	수산물	6,600	5,000	4,700	5,300	6,410	7,960	7,094
	합 계	31,300	45,100	59,200	73,800	78,531	86,723	81,345
수 입(B)	농산물	665,400	615,100	762,600	683,400	901,967	930,718	1,242,430
	축산물	461,400	661,300	815,200	897,100	825,462	608,960	841,889
	임산물	72,600	83,100	79,000	112,100	119,642	61,098	46,539
	수산물	900	1,200	1,400	1,900	73,808	102,340	3,618
	합 계	1,200,300	1,360,700	1,658,300	1,694,500	1,920,879	1,703,116	2,134,476
무 역 수 지(A-B)		-1,169,000	-1,315,600	-1,599,100	-1,602,700	-1,842,348	-1,616,393	-2,053,131

❑ 대 호주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0)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라면	15,456	원당	638,965
2	커피조제품	8,880	쇠고기	633,949
3	곡류가공품	6,878	밀	253,324
4	비스킷	4,601	소금	114,573
5	쌀	2,940	루핀종자	69,788
6	기타해조류	1,940	사료용근채류	51,937
7	기타수산가공품	1,918	보리가루	48,140
8	코코아조제품	1,713	면	47,395
9	빵	1,686	유채유	39,546
10	발효유	1,623	원목	36,850

참고 4 한 · 콜롬비아 교역 현황

❑ 대 콜롬비아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 출	624	913	1,121	1,091	797	1,389
수 입	137	206	116	143	125	432
무역수지	487	707	1,005	948	672	957

❑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천불)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 출	합 계	124	159	221	213	85	476
	- 농산물	61	72	111	106	64	474
	- 축산물	0	0	4	0	0	0
	- 임산물	0	0	43	91	0	1
	- 수산물	63	87	63	16	21	1
수 입	합 계	32,499	43,860	36,324	47,752	56,823	74,278
	- 농산물	30,764	42,291	34,321	47,037	55,234	72,479
	- 축산물	1,701	1,435	1,910	357	1,105	1,487
	- 임산물	0	39	4	4	0	24
	- 수산물	34	95	89	354	484	288

❑ 농림수산물 주요 수출 품목별 분석

(단위 : 천불)

품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채소주스	0	0	28	42	42	99
김	13	6	13	16	21	0.07
감초엑기스	0	0	1	12	9	19
기타음료	2	2	0	0	3	51
인삼음료	2	0	2	2	3	3

❑ 농림수산물 주요 수입 품목별 분석

(단위 : 천불)

품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커피	15,398	27,319	25,670	31,129	42,327	49,978	65,661
커피조제품	418	279	620	1,905	2,739	2,576	3,497
우황	415	1,701	1,435	1,905	355	1,104	1,486
기타과실류	1,086	604	534	738	746	566	788
사탕수수당	38	1.517	14.420	78	215	555	325

* 기타 과실류 : 페이스트 등 가공품 포함실적임

참고 5 한 · 터키 교역 현황

❑ **(전체 교역)** 양국간 교역액은 세계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08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10년 43억불로 회복 추세

(단위 : 백만불, ( )는 증감률)

구 분	'05	'06	'07	'08	'09	'10
수 출	2,782 (△18.1)	3,036 (△9.1)	4,087 (△34.6)	3,773 (▼7.7)	2,661 (▼29.5)	3,753 (△41.1)
수 입	127 (△22.5)	194 (△52.5)	282 (△44.9)	362 (△28.5)	434 (△20.0)	516 (△18.8)
무역수지	2,655	2,842	3,805	3,411	2,227	3,237
총교역액	**2,909**	**3,230**	**4,369**	**4,135**	**3,095**	**4,269**

❑ **(농수산물 교역)** 지속적 수입증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최근 對 터키 수출은 '08년 이후 감소 추세

○ **주요 수입품 :** 잎담배, 기타 연체동물, 해바라기씨유 수입 증가

○ **주요 수출품 :** 커피조제품, 담배 등이 수출되나, 연도별 변동폭이 큼

(단위 : 천불)

구 분		'05	'06	'07	'08	'09	'10
수 입	**합 계**	**35,568**	**39,350**	**44,035**	**45,177**	**48,517**	**54,190**
	- 농산물	21,424	25,069	27,250	26,849	34,879	36,579
	- 축산물	383	880	2,022	843	401	232
	- 임산물	3,223	3,929	4,307	4,004	3,951	5,073
	- 수산물	10,537	9,471	10,455	13,482	9,286	12,306
수 출	**합 계**	**3,469**	**4,627**	**2,166**	**14,953**	**10,023**	**7,050**
	- 농산물	1,566	1,366	1,707	12,946	8,961	5,572
	- 축산물	626	1,797	28	0	0	10
	- 임산물	1,093	632	230	1,428	546	1,240
	- 수산물	183	832	212	579	517	228

참고 6 한중 교역 현황

❑ 대 중국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69,459	81,895	91,389	86,703	116,838
수입	48,557	63,028	76,930	54,246	71,574
무역수지	**20,902**	**18,867**	**14,459**	**32,457**	**45,264**

❑ 대 중국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합계**	**336**	**452**	**539**	**565**	**787**
	농산물	217	257	303	327	447
	축산물	5	7	14	18	23
	임산물	38	30	32	74	86
	수산물	76	158	190	146	231
수 입	**합계**	**3,236**	**4,173**	**3,627**	**3,676**	**4,323**
	농산물	1,551	2,375	1,950	1,702	1.946
	축산물	93	100	85	42	53
	임산물	555	625	588	1,078	1,228
	수산물	1,037	1,073	1,004	854	1,096
무역수지(A-B)		**-2,900**	**-3,721**	**-3,088**	**-3,111**	**-3,536**

❑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천불)

순 위	수 출		수 입	
1	자당	96,621	문어	152,281
2	커피조제품	43,196	조기	150,927
3	오징어	40,378	쌀	136,181
4	라면	28,349	전분박	117,272
5	혼합조제식료품	24,364	고추	109,183
6	명태	21,127	김치	102,018
7	난초	18,319	기타어류	87,419
8	삼치	18,150	갈치	73,187
9	대구	18,118	기타채소	70,039
10	기타 베이커리 제품	17,901	아귀	69,930

참고 7 한·일본 교역 현황

❑ 대 일본 교역 현황

(단위 : 천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전체	265.3억불	263.7	282.5	217.7	281.8
	농수산물	1,311,035	1,219,621	1,438,441	1,580,425	1,882,642
	농산물	569,827	561,020	668,694	794,067	967,444
	축산물	39,594	40,965	50,624	19,772	24,569
	임산물	41,642	44,249	33,167	32,451	31,146
	수산물	659,972	573,387	685,956	734,134	859,483
수입	전체	519.3억불	562.5	609.6	494.3	643.0
	농수산물	437,244	529,846	531,678	536,161	658,801
	농산물	158,815	201,249	249,877	301,312	343,559
	축산물	44,610	43,403	42,378	10,271	14,219
	임산물	9,294	11,440	14,844	29,515	74,818
	수산물	224,525	273,754	224,579	195,063	226,204
무역수지	전체	△254억불	△299	△327	△276	△361
	농수산물	873,791천불	689,775	906,763	1,044,264	1,223,841

❑ 대 일본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0)

(단위 : 천달러)

순 위	수 출		수 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소주	101,712	명태	41,533
2	눈다랑어	100,346	돔	24,077
3	곡물발효주	96,467	게	22,705
4	김치	82,781	동식물 유지	22,016
5	파프리카	58,277	소오스조제품	15,756
6	설탕과자류	56,412	우렁쉥이	15,641
7	넙치(활어)	53,341	필터담배	14,795
8	라면	39,053	청주	13,691
9	자당	36,358	향미조제품	11,896
10	황다랑어	36,351	갈치	11,707

참고 8 한·페루 교역 동향

❑ 대 페루 전체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연평균 증감(%)
수 출	282,285	358,875	466,161	720,004	641,426	944,438	27.3%
수 입	249,489	675,897	1,039,888	903,894	919,364	1,038,932	33.0%
무역수지	32,796	-317,022	-573,727	-183,890	-277,939	-94,494	

* 자료 : 한국 무역협회(KITA)

❑ 한·페루 농림축수산물 수출입 실적

(단위 : 천불)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
농림축수산물	수출	367	246	116	674	863	871	18.9%
	수입	30,551	49,700	53,047	70,464	61,177	76,578	20.2%
농산물	수출	314	170	114	529	755	848	22.0%
	수입	6,302	12,028	15,125	23,292	20,379	34,446	40.5%
축산물	수출	10	56	-	53	2	0.5	-
	수입	303	632	398	519	173	296	△0.5%
임산물	수출	20	15	-	78	50	1	△45.1%
	수입	10	49	94	337	366	322	100.2%
수산물	수출	22	5	3	13	56	21	△0.9%
	수입	23,937	36,990	37,430	46,316	40,259	41,514	11.6%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 주요 수출입품목('10년 기준)

수출품목	물량(톤)	금액(천불)	수입품목	물량(톤)	금액(천불)
합계	363	810	합계	31,846	74,595
혼합조제식료품	222	417	커피	7,333	32,109
라면	42	108	기타연체동물	6,212	14,066
기타사료용조제품	10	86	오징어	11,742	11,517
곡류조제품	5	44	붕장어	1,566	6,671
커피조제품	15	42	기타 수산물분	2,972	5,029
소주	22	32	어류유지	1,017	2,569
권련	1	27	배합사료	637	868
고등어	26	20	캐비아	187	853
기타음료	19	20	아스파라거스	70	497
커피	1	14	어란	110	416

* 자료 :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참고 9 한·페루 양허 개요

❑ **(수산물)** 가장 민감한 **오징어** 양허기간 장기화에 노력

○ **오징어 관세**(10~22%) : 냉동(22%), 자숙·조미(20%), 건조(10%)는 10년간 관세 폐지

- 활어(10%), 염장(10%), 훈제(20%)는 7년, 통조림(20%)은 5년 양허

○ **붕장어**(10~20%) : 붕장어 전체 세번 7년간 관세 폐지

- 냉동피레트(10%), 냉동(10%), 신선냉장(20%), 피레트·연육·기타신냉(20%), 활어(10%)

❑ **(과채류) 포도, 오렌지**에는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일부 과채류 단기 양허

○ **포도**(45%) : 우리 성출하기(5~10월)는 현행관세 유지, 비출하기(11~4월)는 5년간 관세폐지

○ **오렌지**(50%) : 우리 성출하기(11~4월)는 현행관세 유지, 비출하기(5~10월)에는 10년간 관세폐지

○ **망고**(30%)는 10년간 장기로 관세 폐지

○ **아스파라거스**(20~27%)는 3~5년간 폐지, **바나나**(30%)는 5년간 폐지

* 바나나 : 한·미 5년, 한·EU 5년

❑ 페루의 대세계 주요 수출품목인 7개 품목(18개 세 번)에 대해 **농산물세이프가드 적용**

○ 10년간 폐지+ASG : 닭고기 냉장육(18%), 오리 냉동육(18%), 무당연유(89%), 체다치즈(36%), 녹두(607.5%)·팥(420.8%)

○ 16년간 폐지+ASG : 천연꿀(243%), 맨더린(144%)

❑ 쌀, 쇠고기, 분유,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감귤, 명태, 민어 등 **107개 품목**(HSK 기준 : 농산물 105개, 수산물 2개)은 **양허 제외 또는 현행관세 유지**

참고 10 한 · 뉴질랜드 교역 현황

❑ 대 뉴질랜드 교역현황

(단위 : 천불)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수출	전체	672,981	699,025	824,785	890,761	918,464
	농수산물	53,268	84,445	78,319	90,174	93,675
	농산물	12,014	12,948	14,338	15,620	16,867
	축산물	1,859	3,104	3,309	3,998	4,909
	임산물	18	100	60	95	25
	수산물	39,377	68,293	60,612	70,461	71,873
수입	전체	967,477	1,171,198	1,121,669	879,361	1,175,909
	농수산물	715,682	828,909	863,612	658,897	781,592
	농산물	74,825	92,458	93,320	89,588	82,129
	축산물	293,685	322,609	361,240	231,799	332,159
	임산물	328,956	394,858	392,613	319,463	350,682
	수산물	18,216	18,984	16,439	18,047	16,623
무역수지	전체	-294,496	-472,173	-296,884	11,400	-257,445
	농수산물	-662,414	-744,464	-785,293	-568,723	-687,917

❑ 주요 수출입품목('10)

순위	수출품목	금액(천불)	수입품목	금액(천불)
	합계	76,019	합계	882,314
1	기타어류	26,568	침엽수원목	312,190
2	오징어	27,074	쇠고기	120,425
3	대구	6,012	치즈	77,755
4	단백질류	4,678	펄프	64,255
5	라면	4,441	키위	48,893
6	커피조제품	3,870	기타낙농품	33,943
7	비스킷	996	카세인	25,673
8	빵	841	침엽수제재목	23,402
9	기타음료	783	분유	14,969
10	곡류가공품	756	버터	12,174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2011. 8. 18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2. 추진 경과

Ⅱ. 기존대책의 평가 및 여론수렴 결과

Ⅲ. 추진 전략 및 추진 대책

1. 비전 및 추진 전략

2. 금번 대책의 중점 내용

3. 세부 추진 대책

(1) 직접적 피해보전

(2) 산업별 경쟁력 강화

(3)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4.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한·미 FTA 체결**('07.4월)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07.11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

* '08~'17년간 21.1조원 지원(농업 20.4, 수산업 0.7)

○ 그러나 대책 수립 이후 **3년여**가 **경과**함에 따라 **기존 대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희석**되고

○ 지난해 말에 발생한 **구제역** 등으로 농수축산업의 **여건이 변화**하여, **기존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일부 제기

□ 따라서 그간의 **농수산업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

○ 나아가 이를 통해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과 전략**을 제시

□ 이에 **기존 대책**의 **방향과 내용을 평가**하고 농어업인 **의견수렴**, 농어업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 농어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담은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와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보완대책 TF (주관: 기재부 무역협정본부장)를 구성·운영 중

2 추진 경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가 평가**('10.12~'11.2)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추진 성과와 미비점** 등을 **도출**

◇ **농업인 간담회,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 수렴 ('11.1월~)

□ **[전문가 평가]** 3년간의 **추진성과와 미비점**을 **전문가**(농경연, 해양수산개발원) **참여**를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10.12~'11.2)

○ 축산, 곡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별 **폐지·축소** 또는 **확대·신규 반영** 필요성 점검

* 축산, 곡물, 과일·채소, 유통·수출, 식품, 농업경영, 수산

○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필요성도 검토

□ **[농식품부 평가]**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평가**('11.3월)

□ **[현장점검 및 의견수렴]** 기재부, 농식품부,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주요 지역별 **현장점검** 및 **선도농어업인 대상 간담회** 실시

○ 주요 **권역별 농어업인** 대상 **간담회 8회 실시***

* 강릉('11.1.10), 부산(1.12), 목포(1.18), 호남(3.31), 영남(4.7), 경기(5.17), 충청(5.17), 강원(5.24)

○ 사업 **현장 점검 및 의견 청취**

* 축사시설 현대화(김제) 등 호남지역('11.3.30~31), 채소류 재배단지(창녕) 등 영남지역(4.6~7), 오징어 가공시설(속초) 등 강원지역(5.24) 현장 점검

○ 축산, 수산 등 **업종별 간담회 3회** 실시

* 농업전반('11.6.1), 축산(6.3), 수산(6.8)

Ⅱ. 기존대책의 평가 및 여론수렴 결과

◇ 전반적으로는 기존 대책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 다만 축사·원예·과수 **시설 현대화**,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등은 **당초보다 수요가 증가**

○ 특히 **농어업인은** 소득보전 직불제, 농어업용 면세유 확대 등 **직접적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을 선호**

1 전문가 평가

□ **〔축산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제도개선은 그동안 **국산 축산물 수요증가**에 기여

○ 다만 **축사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수요**가 현재 **지원규모에 비해 증가**

* 기존 대책은 '08~'17년간 1.5조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

□ **〔과수·원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08~'17년간 0.4조원)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어 **수출 증가**

○ 다만, **원예시설 현대화***에 대한 **지원 규모**('08~'17년간 0.3조원)가 **부족**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종자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필요

* 1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92% 수준

□ **〔기타 농업분야〕** 브랜드 경영체 육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 거점 유통센터 설치 사업 등은 **지속 추진** 또는 **확대** 필요

○ **감자유통센터, 채소 계약재배 면적 확대** 등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유도

□ **(수산업)** 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수산업 지원 규모: '08~'17년간 0.7조원(수산물 재해보험, 환경친화 배합사료지원 등)

○ 위생관리·품질제고를 위한 **산지 거점유통센터** 건립, 한·페루 FTA 대책으로 **오징어 가공시설** 건립 등의 **신규 지원 요망**

2 농식품부 평가

□ 그간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축산·원예시설 현대화** 등은 **지원 규모를 늘릴** 필요

* 축산업 생산액(조원): ('00)8.1 → ('05)11.8 → ('09)16.5

* 신선농산물 수출(백만불): ('08)100 → ('10)151

○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감자유통센터, 수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도 **확대**

□ 아울러 FTA 대책의 내실화 및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농어업인 의견 수렴**, 사업 **추진방식 변경** 등을 **제안**

○ **정치권·농업계 등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농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

○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되,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지원을 늘려나가는 방향 전환**을 모색

- 이차보전 전환시 **재정부담은 감소, 지원규모는 증액** 가능

○ **담보 부족**에 따른 농어가 융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개선** 방안 검토

* 농신보 보증거부율('06.7~'08.12): 건수기준 35.1%, 금액기준 42.5%

3 농어민 여론수렴

□ **농어업인**은 대체로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사업보다는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직접적 지원책을 선호**

○ **농업기술개발** 등은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나 단기적인 **FTA 대책으로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현대화 사업, 유통구조 개편** 등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집중 마련해 줄 것을 건의

* 축산업 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보조를 모두 융자로 전환해서라도 지원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음

□ FTA에 따른 **피해보전 및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시

○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

* 지난 5월 국회에서 합의된 소득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80%→85%) 등 추가대책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FTA로 인해 **실직하는 농어민**에 대해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 고용부문에서의 사후관리도 중요하다는 의견

○ 아울러 면세유 공급 및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등 **생산비 감축을 위한 세제지원**도 요청

□ **구제역** 등 **변화된 환경에 따른 대책 마련**도 시급함을 지적

○ 최근 상황에 대하여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정도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

Ⅲ. 추진 전략 및 추진 대책

1 비전 및 추진 전략

□ **(비전)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

○ **FTA**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동력을 뒷받침**

□ **(추진전략)**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 **(재정지원 방식 효율화) 재정의 추가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규모는 확대**

○ **(핵심사업 확충)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을 확충**

○ **(체감사업 우선 지원)**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을 확대

○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병행**

□ **(추진과제)** FTA에 따른 농어민의 **직접적 피해를 보전**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환경 구축**

○ **(직접적 피해보전) 피해보전직불제 강화**로 농어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폐업지원 현실화**로 농어업 **구조조정을 촉진**

○ **(산업경쟁력 강화) 농수축산 시설 인프라 확충**과 **기술개발 지원** 등으로 취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친환경 농어업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뒷받침

FTA 종합대책의 기본 구조

비전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 구축

추진 전략

-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어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 확충
- 인프라구축·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사업 확대
- 농어민의 체감이 높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
-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제도개선 병행 추진

추진 과제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 구축
세부 과제		
• 농수산업 소득보전 및 폐업지원제도 강화 • 제조·서비스업의 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 전직지원 등 고용안정노력 강화	• 농업시설 현대화 등 핵심인프라 구축 • 브랜드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 우수품종 육성·농업기술 확보 • 농수산물 수출확대 지원	• 친환경·자원순환 농업체계 구축 • 농가의 안정적 소득 체계 구축 • 어족자원 보호 및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

◇ 제도개선

- 신용보증제도 개선
- 임차농 보호, 축산업 허가제
- 재해보험 확대

◇ 세제지원

- 면세유 공급 확대 및 기간 연장
- 부가세 영세율 확대
-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2 금번 대책의 중점 내용

◇ **농어민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확대: 총 지원규모 21.1조원 → 22.1조원**

○ **집행이 부진**한 경영이양직불 사업 등은 실제 소요에 맞추어 지원 규모를 **축소 조정**

※ **비준 이전**이라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이미 **'08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 중: '08~'11년간 6조원

◇ 농어업 체질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및 생산비 절감 등 농어민의 경영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병행**하여 **추진**

1 시설현대화 지원 대폭 확대(2.2 → 4.0조원)로 핵심 인프라 구축

○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당초보다 대폭 확대**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100%(1.2만호)를 지원(당초는 5천호 지원)
* 지원규모: 1.5조원 → 3.0조원

○ **(과수·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과수시설 현대화: 0.4조원 → 0.6조원, 원예시설: 0.3조원 → 0.5조원

2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브랜드 육성사업)** 밭작물 및 과실의 **우수 브랜드를 키워 수입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확보

○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 무병**(virus free)**·우량 묘목**의 **공급을 확대**하여 과수 **생산량 증가** 및 **생산비 절감**을 지원

3 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구축

○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 부표, 그물** 등을 **친환경 어구로 바꾸어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장기적 **생산기반**을 **확충**

○ **(자율관리어업 육성) 우수 어촌 공동체**(예: 어촌계 등)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방지** 등을 유도

4 재배작물 다양화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청보리 등 **사료작물의 재배면적을 늘려** 안정적인 **사료공급 기반 확충**

○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과수 생산량과 출하량의 확대**를 지원

5 신용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농어가의 자금 접근성 확대

○ **(농신보 개선)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공급 확대**

- 아울러, **보증심사시**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뿐 아니라 농가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

6 생산비 절감 및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면세유 공급)** 면세유 공급 **일몰기한 연장**('12.6월말→'15.12월말), **공급대상 기계 추가**(현행 39종→41종) 등 유류비 절감지원 확대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한을 연장('11년말→'14년말)하고, 대상 기자재도 확대(현행 129종→134종)

- 아울러, **사후환급 적용대상** 기자재도 **추가** 지정(현행 64종→69종)

○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투자자 출자 유도**

3 세부 추진 대책

(1) 직접적 피해 보전

1 농·축·수산업

추진 방향

◇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득보전직불제도**를 통해 **피해의 대부분을 보전**

◇ **폐업지원제도** 재실시로 농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소득보전직불제도 개편을 통한 FTA 피해 최소화

○ 기존대책에 비해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및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농어민의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 발동요건 : 기준가격 대비 80% 하락 → 85% 하락
  보전비율 : 기준가격과 차액의 80% → 90%
  대상품목 :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 사후지정(모든 품목)

* 소득보전직불금: 생산면적(마리) × (면적당 기준가격 - 당년가격) × 90%
* 기준가격: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85%

○ 동 제도는 **10년간(2021.6.30일까지) 시행**하여 농어가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발동기준	가격이 80%이하로 하락	80% 이하	85% 이하
보전비율	차액의 80%	85%	90%
대상품목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10.12.31일 종료	7년 (2017.12.31일까지)	10년 (2021.6.30일까지)

□ 폐업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

○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가 폐업**할 경우 **3개년 간의 순수익**을 **지원**

* 폐업지원금 = 폐업면적(마리) × 연간 단위면적당(마리당) 순수익 × 3
* 단위면적당 순수입액: 직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 수산업의 경우에는 어선·어구를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이 경우 3개년 수익금 외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를 함께 지급

- **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농어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폐업 농어가**에게는 재취업 시기까지 **안정된 생활기반을 보장**

* 여타 경쟁력강화 지원과 폐업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조치

○ 대상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다만, **지원금 산정방식**을 기존 순수입 기준에서 **순수익 기준으로 변경**하여 현실화

* 순수입=조수입-경영비-자가노력비, 순수익=순수입-토지·자본용역비
* 축사시설 등을 철거하더라도 토지 등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지급액	3개년분 순수입	3개년분 순수익* · 수산업의 경우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추가 지급	
대상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08.12.31일 종료	5년(2016.6.30일까지)	

* 다만, 기존시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년분 순수익을 지급

2 제조·서비스업

추진 방향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 근거법률: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요건 완화, 대상업종 추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

○ FTA 체결에 따른 **수입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

* **융자**: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 **컨설팅**: 컨설팅 비용의 80% 한도에서 지원

- **단기적인 피해보전** 효과뿐 아니라, 경영 **자구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

○ 기존 제도에 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업종을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여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

-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요건**을 업종별로 **별도 규정**(무역위원회 규정)

구 분	기존 제도('07.4월 시행)	'07년 대책	종합대책
지원요건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5%이상 감소**		**20%이상 감소**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 다만, 공공·오락서비스, 비영리조직체(종교단체, 노동조합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농어민·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추진 방향

◇ FTA에 따른 전직지원 서비스 강화 등 **고용안정 지원기능을 확충**

◇ FTA 신속지원팀, 제약업 전담 고용센터 설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농어민·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

○ **(고용촉진지원금 우대)**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

* 현재 취업취약계층에게 1년간 650만원 지원(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는 86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FTA로 전직을 희망하는 농어민·근로자**를 **3단계**에 걸친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으로 포함

*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의욕·능력증진(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 집중 취업알선(저소득층에게는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촌** 등 자치단체 주도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 **(FTA 신속지원팀 운영) 고용센터(현재 47개)내에** 무역조정기업 지정 절차, 각종 지원시책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FTA 신속지원팀'**을 한·미 **FTA 발효시에 맞추어 설치**

○ **(제약업 전담고용센터 지정)** 제조업 중 **피해가 우려되는 제약산업 근로자의 고용지원**을 위해 제약업 전담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한·미 FTA 발효시)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

(2)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 **핵심 인프라 시설** 지원, **유통체계 개선**, **우수 브랜드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화**하여 경쟁력을 제고

◇ **기술개발·수출지원**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육성**

1 농업 핵심 인프라 구축

□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어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

○ **(축사시설현대화)**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정책**수요***에 맞춰 **사업규모**를 **확대**

- 정부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 2.0조원, 이차보전포함)하되, 농협자금(1조원)을 활용하여 **실제 지원규모 대폭 확대**(1.5조→3.0조원)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의 100%인 1.2만호까지 지원확대 (당초 5천호 지원)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비용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비가림시설** 등 과수고품질 시설 **지원규모**를 **확대**

* 사업규모 확대 : 4만 7천 ha → 5만 4천 ha 까지 확대

○ **(시설원예 품질개선)**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후화**(10년이상 노후시설 97%)된 온실 등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증·개축)를 지원, 지원대상을 **전문단지**에서 **일반시설까지 확대**

* '17년까지 원예(채소·화훼) 전문단지 시설현대화 및 단지 증·개축 100개소

** 일반 원예시설 3,000ha 추가지원

□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규모화에 따른 **경영안정 및 수급기능 강화**

○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주요 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설립을 지원

- 센터별 수급조절 기능강화를 위해 **저온저장고** 등 추가지원

* ('07) 15개소 →('13) 25개소 → ('17년) 30개소 지원

○ **(고랭지 감자 거점유통센터 건립)** 감자 **주산지**에 광역단위 **유통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시장안정화 및 감자산업 활성화

□ **소규모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과수, 원예, 밭작물, 축산)를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및 **경영안정 지원**

○ **(과실브랜드 육성지원)** 과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단일화하는 **공동브랜드를 육성**

* '17년까지 과실공동 브랜드 30개 육성, 지원기간 확대('12→'17년)

○ **(밭작물, 원예작물브랜드 육성)** 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밭작물·원예브랜드 육성**

- **브랜드 컨설팅, 농가조직화** 및 **교육지원 등을 중점지원**하여 경영의 효율성 제고

* 밭작물 브랜드 지원 규모를 67개소로 확대 (당초 40개소)
* 원예작물 브랜드: ('08) 6개소 → ('15) 30개소

○ **(축산브랜드 육성지원)**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위생안정성제고를 위해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및 지원**

* 한우 브랜드 비중(%): ('07) 32.6 →('08) 39.3 →('09) 42.4→('10)49.5
* 양돈 브랜드 비중(%): ('07) 57.0 →('08) 59.5 →('09) 62.0→('10)65.0

② 농림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미래성장을 위한 **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 육성**

○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과수재배의 근간인 **무병·우량묘목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 연장****

* 묘포장 140ha, 대목포장 3ha, 중앙모수포 관리센터 8ha

** 무병묘목(Virus Free) 생산 보급에 장시간(8~13년)이 소요되므로 지원기간 연장

○ **(가축개량사업)** 가축의 혈통,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를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 개발**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종자산업 육성지원) 우수품종**의 품질관리, **증식·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금을 지원하여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국내산 종자의 수출경쟁력 강화**

□ **생명공학 기술개발, 농식품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실현 지원

○ **(농림기술개발) 생명공학**을 활용한 **농림 분야 기술의 사업화연구(R&B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확대**

- 현장접목이 가능한 기술을 발굴하고 **산업화 연구지원 확대**

○ **(광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기관, 대학, 식품기업이 집적된 **대단위 첨단 농·식품 클러스터 신규 조성**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단지 조성**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

○ **(농산물 해외시장개척) 30대 수출상품**(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을 선정**하여 수출시장 유형별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

* 농식품 수출 목표: ('07년) 25억불 → ('13년) 40 → ('17년) 60

(3)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

추진 방향

◇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제도 도입** 등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친환경** 농어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환경 구축**

1 농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전업농 중심**으로 **농어업의 구조개선** 촉진

○ **(고령농 경영이양 직불제도)** 65~70세 고령농이 은퇴시(매도 또는 임대시) 최장 10년간(75세까지) 지급(월 250천원/ha)

□ **안정적 소득 기반** 마련

○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 주업농에 대해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 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보전**

* 제도시행에 앞서 농가소득 파악을 위해 '08년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행중

* 1단계 시범사업 완료,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 중, '13년부터 시행 예정

○ **(재해보험)** 농어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하고,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法定里),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음)

②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체계** 마련

○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우수어촌 공동체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어장환경개선 유도**

- 참여공동체수*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규모 확대**

* ('07) 579 → ('08) 659 → ('09) 758 → ('10) 863

○ **(친환경 부표 및 생분해성어구 지원확대)**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 친환경어구**(통발, 자망) 사용 장려

* 친환경 부표 구입 지원기간 연장('12→'15년), 지원 부표수 확대(858→1,680만개)

* 친환경 어구 사용시 기존 어구와의 차액을 지급(국고 70%, 지방비 30%)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자원순환형 농업활성화**

○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집단화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 '08~'17년간 친환경농업지구 756개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7개소 조성

○ **(자원순환형 농업 활성화)** 경종과 축산을 연계·운영하는 자원순환농업 조직체에 **저리 융자금 지원**

□ **재배 작물다양화 및 생산기반 확충**

○ **(조사료 생산확대)** 쌀·보리 대체작물로서 청보리 등 **조사료의 생산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작물 다양화

* 조사료 재배면적 규모를 연간 32만 ha 수준 유지 지원

○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과수 생산 및 출하 확대**를 지원

* 사업규모 확대: 3,000ha → 4,700ha

4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1. 제도개선

추진 방향

◇ **농신보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농어민 **융자 편의 제고**

◇ **최소 임대차 계약기간(3년) 도입 등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방역 시설설치를 의무화**

◇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 품목**을 **지속 확대**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개선

○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융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신보 보증 확대**

-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보증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현재 10억원)하고, **보증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 농신보 업무규정 중 예외보증 대상에 시설현대화 사업 포함

**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위주의 심사에서 농업 경영체의 기술력 및 성장잠재력 등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

□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제도 마련

○ 임차농지의 증가에 따라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보장** 등을 위한 **임대차 관련 규정 정비** 필요

* 임차농지 비율('10년): 47.9%, 임차농가 비율('10년): 62.2%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 **임대차계약 해지의 제한, 유휴농지의 대리경작 신청 제도** 등 도입

* '11년 중 「농지법」을 개정하여 '12년 시행

□ **축산업 허가제 도입** 및 **방역체계 강화**

○ 일정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12년부터 허가제** 도입

- **가축사육업**은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도입**

  * 12년 기업농 → '13년 전업농 → '14년 준전업농 → '15년 소규모 농가

○ 허가제 도입과 연계하여 **구제역** 등 질병에 대비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12년)**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지속 확대**

○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실손보상하는 보험**제도의 보험대상 **품목 및 범위 지속 확대**

- 자연재해 외의 피해(예: 병충해 등)에 대한 **보장범위 확대**

* 농작물: ('01) 2개 품목→ ('03) 6 → ('07) 10 → ('09) 20 → ('10) 25 → ('11) 30

· (대상품목)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단감, 떫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 매실,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오이, 대추 등

* 축산물: ('97) 1개 품목 → ('02) 4 → ('07) 11 → ('10) 14 → ('11) 15

· (대상품목)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

* 양식수산업: ('11) 1개품목 시행, 4개품목 시범사업 → ('13) 10개 품목

· (대상품목) 넙치(시행), 전복, 조피볼락, 굴, 김

2. 세제지원

추진 방향

◇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 및 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농어업 생산비 절감** 도모

○ **한·EU 대책시** 마련한 **세제지원안**(목장용지 양도세 면제, 영농상속공제 확대 등)도 **금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

□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 2012.6.30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15.12.31일까지 연장**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 '11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 **면세유 공급대상 농어업 기종을 2개 추가**(현행 39종→ 41종)

* 추가기자재: 농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화식(火食)사료용)

* '11년 중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을 개정

□ **(부가세 영세율)** '11.12.31일 일몰이 도래하는 배합사료·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14.12.31일까지 연장**

○ 한·EU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동 제도는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향후 10년간 유지**할 계획

* '11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12년부터 시행

○ **영세율 적용대상 기자재 5종 추가**(현행 129종→ 134종)

* 추가기자재: 동력이앙기 부속작업기(벼직파기, 측조시비기, 중경제초기, 약제살포기, 자동써레)

* '11년 중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을 개정

□ **(부가세 사후환급 확대)** 농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기자재 5종을**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현행 총 64종→69종)

* 한·EU FTA 대책시 축산기자재 10개를 추가한 바 있으며(54종→64종, '11.5월 개정 완료), 금번 대책에서 5개 기자재를 다시 추가

* 추가기자재: 농산물 수확용 상자, 젓갈용 숙성용기, 화훼재배용 배지, 화훼재배용 화분,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 '11년 중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을 개정

□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창투조합 등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와 관련된 세제혜택**(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부여방안 **검토**

* '11년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참고> 한·EU FTA 대책시 세제지원

◇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990㎡를 한도로 양도세 감면**(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11.7.25일)

◇ **(축사의 감가상각 연수 단축)** 가축 배설물에 따른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됨을 감안하여 축사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현행 40년에서 **20년으로 단축**

*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11.2월)

◇ **(영농상속공제액 상향 조정) 농어가**의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

○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를 포함할 경우 **총 15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영농상속이 가능

* '11년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12년부터 시행

참고 1 FTA 국내보완대책('07.11월) 주요 내용

□ **농수축산분야에 10년간('08~'17년) 총 21.1조원 지원**

□ **품목별 경쟁력 강화: 7.1조원**

○ 축산·원예 등 품목별 특성에 따라 **생산-가공-유통 단계별 취약부문을 보완**하는 방안 추진

- (**축산**) 축사시설 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4.7조원)
- (**원예**) 작물브랜드 육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등(2.3조원)
- (**기타**) 밭작물브랜드 육성, 원양어선 설비 현대화 등(0.1조원)

□ **근본적 체질 강화: 12.7조원**

○ 농·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및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방안 마련

- 농어업인 교육훈련 추진, 농식품·수산 가공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확대, 재해보험, 지역관광 활성화 등

□ **직접적 피해보전: 1.3조원**

○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적 피해**에 대해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통해 **소득 보전**

- (**소득보전직불제**) 수입증가로 단위면적당 당년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차액의 85%** 보전

  * 기준조수입 = (직전 5개년 조수입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80%

- (**폐업지원제**)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3개년분 순수익(조수입-생산비) 지급

※ 국산 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

참고 2 한·EU 보완대책('10.11월) 주요 내용

□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2조 1,700억원 규모의 **추가대책** 마련('10.11.17)

① 축산분야

- **(재정지원) 10년간('11~'20) 2.0조원*을 추가지원**하여 축사시설현대화, 백신지원을 통한 질병근절, 유통구조 개선 등

  * 10개 연구기관이 추정한 한·EU FTA 발효후 **15년간 농수산업 분야 예상 생산액 감소분** (2조원)과 동일한 수준

- **(세제지원)** 영농상속공제액 상향(2억원→5억원), 축산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품목 확대(12개→22개) 등 **축산업 가업상속**과 **경영안정 뒷받침**을 위한 **세제지원을 병행**

- **(제도개선)** 이력관리체계 확대,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등 **8개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 **'13년까지 완료**

② 화장품·의료기기 분야

- **(재정지원) 5년간('11~'15) 1,700억원을 지원**하여 **R&D 투자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화장품)** 기술격차 단축을 위해 신소재·신기술 개발지원, 국가별 피부정보 은행 구축, 종합지원센터 운영, 해외진출 전략개발지원 등

  ** **(의료기기)** 부가가치가 높은 치료재료, IT융합 첨단 의료기기 분야(25개 품목) 기술개발 지원, 국내시험인증기반 강화, 해외마케팅지원 등

- **(제도개선)** 화장품분야 10개*, 의료기기분야 5개** 등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13년까지 완료**

  * **(화장품)** 국제화장품품질관리기준 도입, 사용기간표시 의무화 등

  ** **(의료기기)**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 자가 품질관리제도 도입 등

참고 3 **여야정 합의 한·EU FTA 추가대책 주요 내용**

□ 당초 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과제의 지원 확대

○ 소득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보전비율 상향 및 시행기간 연장

	당초안	수정안
발동기준	▪ 수입증가로 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80% 이하로 하락한 경우	▪ 85% 이하로 하락한 경우
보전비율	▪ 당해연도 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85% 보전	▪ 90% 보전
시행기간	▪ 7년	▪ 10년

□ 새로 추가한 대책

○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폐업을 전제**로 양도하는 경우 **990㎡를 한도로 양도세 감면**(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 **배합사료·영농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시행기간을 **10년간 유지**

○ **FTA이행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금**을 **5년간 1조원 지원**

○ **구제역 사업으로 전용된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향후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12년 예산에 반영**

※ 기타: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SSM**(Super Supermarket, 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를 강화**(여야간 합의 사항)

* SSM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전구역을 확대(500m→ 1km)하고, 일몰기한을 연장(3년→5년)

한·미, 한 · EU 협상결과 양허표

품 목	한 · 미 FTA	한 · EU FTA
쌀	양허 제외	좌동
고추(270%)	신선 · 건조 · 고춧가루 : 15년 철폐 + SG 18년 냉동고추 : 15년 철폐	현행유지 15년 철폐
마늘(360%)	통/깐/일시저장/건조마늘 : 15년 철폐 + SG 18년 냉동마늘 : 15년 철폐	현행유지
양파(135%)	신선 · 건조양파 : 15년 철폐 + SG 18년 냉동양파 : 12년 철폐	현행유지 좌동
파(27%)	건조 파 : 7년 철폐, 쪽파 : 즉시 철폐	좌동
무(30%)	10년 철폐(건조 : 7년)	좌동
배추(27%)	신선/냉장 : 5년	좌동
연뿌리(27%)	설탕 저장처리 : 5년	좌동
양배추(30%)	즉시 철폐(건조 : 10년)	좌동
당근(30%)	5년 철폐(건조/일시저장 : 10년)	좌동, 건조 7, 일시 10
참깨, 기름(630%)	15년 철폐+SG 18년	18년 철폐
생강(377.3%)	신선: 15년 철폐+SG 18년	18년 철폐
사과(45%)	후지: 20년 철폐+23년 SG, 기타: 10년 철폐+10년 SG	좌동
배(45%)	동양배: 20년 철폐, 기타: 10년 철폐	좌동
포도(45%)	계절관세, 5.1~10.15 : 17년 10.16~4.30 : 24%시작→5년	좌동
오렌지(50%)	9월-2월 : 현행+TRQ (2.5천톤, 3%↑) 3월-8월 : 30%에서 시작→7년	좌동(단, TRQ 20-60톤)
감귤(144%)	15년 철폐	온주 : 현행, 맨더린 : 15년
복숭아/단감(45%)	10년 철폐	좌동
키위(45%)	15년 철폐	좌동
수박 · 멜론(45%)	12년 철폐	좌동
딸기(30-45%)	신선(45%) : 9년 철폐, 냉동(30%) : 5년 철폐	초본 10/나무 12, 좌동
토마토(8-45%)	신선 · 냉장(45%) : 7년, 기타 : 5년 철폐	좌동, 주스/소스(30%) : 5년 케찹(8%) : 즉시
쇠 고 기	쇠고기(40%) : 15년 철폐+SG SG : 1년차 27만톤, 15년차 35만톤(매년 6천톤↑) 족 · 꼬리(18%) : 15년 철폐	좌동, SG : 1년 9,900, 15년1.3만톤 (매년 2%↑)
돼지고기	냉장삼겹/갈비/목살(22.5%) : 10년 철폐+SG SG : 8 천~14천톤(6%↑) 냉장(기타 22.5%), 냉동육(25%) : 2016.1.1	냉동삼겹(25%) : 10년 냉장삼겹/갈비/목살(22.5%): 10년+SG 기타 냉동(25%), 기타 냉장(22.5%): 5년

기 타 자 료

1. 추진공문 사본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워크숍개최에 따른 회의장 협조 의뢰

1.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발족식 및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회의장(마이크 설치 포함) 협조를 의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6. 16(목) 10:30~

나. 장 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3층 회의실

다. 행사명 :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발족식 및 워크숍

라. 구성원 : 10명

- 대표 : 김용필 의원
- 간사 : 박상무 의원
- 회원 : 강철민, 이준우, 이종현, 송덕빈, 이진환 의원, 김호 단국대 교수, 안승원 공주대 교수,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마. 목 적 : 충남농업의 여건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함.

바. 기타 참석자 : 연구회에 관심있는 공무원, 언론인 등.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유) 강철민 의원, 이준우 의원, 이종현 의원, 송덕빈 의원, 이진환 의원, 김호 교수, 안승원 교수, 김양중 연구원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발족식 및 워크숍 개최 알림

1.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발족식 및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6. 16(목) 10:30~

나. 장 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3층 회의실

다. 행사명 :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발족식 및 워크숍

라. 초청인 : 예산군 농업인단체 대표 4인

마. 기타 참석자 : 연구회에 관심있는 공무원, 언론인 등.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유) 서산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 당진군농업경영인연합회장, 보령시농업경영인연합회장, 홍성군농업기술센타소장, 아산시농업기술센타소장, 부여군농업기술센타소장, 공주시농업기술센타소장, 논산시농업기술센타소장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순회 간담회에 따른 회의장 협조 의뢰

1. 귀 농업경영인연합회 및 농업기술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가 주관하는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회의장(마이크 설치 포함) 협조를 의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7. 13(수)~7. 25(월) 10:30~12:00예정(붙임 참조)

나. 장 소 : 센타 회의실 또는 단체 회관 등(붙임 참조)

다. 행사명 :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농업인단체 등과의 간담회

라. 구성원 : 10명

- 대표 : 김용필 의원
- 간사 : 박상무 의원
- 회원 : 강철민, 이준우, 이종현, 송덕빈, 이진환 의원, 김호 단국대 교수, 안승원 공주대 교수,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마. 목 적 : 충남농업의 여건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함.

바. 기타 참석자 : 연구회에 관심있는 농업인단체 대표 등.

붙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순회간담회 추진계획 1부.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유) 시·군 농업인 단체 대표 125인(천안 8, 공주 19, 보령 6, 아산 5, 서산 9, 논산 3, 계룡 2, 금산 5, 연기 8, 부여 8, 서천 6, 청양 13, 홍성 5, 예산 13, 태안 7, 당진 8)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주관 순회 간담회 초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는 지난 2011. 6. 16 발족식과 1차 공청회를 갖은 바 있으며, 이번에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귀 단체를 초청하오니 참석하여 고견을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7. 13(수)~7. 25(월) 10:30~12:00예정(붙임 참조)

나. 장 소 : 센타 회의실 또는 단체 회관 등(붙임 참조)

다. 행사명 :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농업인단체 등과의 간담회

라. 구성원 : 10명

- 대표 : 김용필 의원
- 간사 : 박상무 의원
- 회원 : 강철민, 이준우, 이종현, 송덕빈, 이진환 의원, 김호 단국대 교수, 안승원 공주대 교수,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마. 목 적 : 충남농업의 여건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함.

바. 기타 참석자 : 연구회에 관심있는 농업인단체 대표 등.

붙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순회간담회 추진계획 1부.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유) 강철민 의원, 이준우 의원, 이종현 의원, 송덕빈 의원, 이진환 의원, 김호 교수, 안승원 교수, 김양중 연구원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주관 시·군 순회 간담회 개최 알림

1.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는 지난 2011. 6. 16 발족식과 1차 공청회를 갖은 바 있으며, 이번에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7. 13(수)~7. 25(월) 10:30~12:00예정(붙임 참조)

나. 장 소 : 센타 회의실 또는 단체 회관 등(붙임 참조)

다. 행사명 :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농업인단체 등과의 간담회

라. 참석자 : 연구회에 관심있는 농업인단체 대표 등.

붙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순회간담회 추진계획 1부.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충남농업기술원예산국화시험장장
(경유)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간담회에 따른 회의장 협조 의뢰

1. 귀 예산국화시험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가 주관하는 도 농업인단체 등과의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회의장(마이크 설치 포함) 협조를 의뢰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9. 5(월) 13:30~16:30(붙임 참조)

나. 장 소 : 국화시험장 회의실(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7-52)

다. 행사명 :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도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라. 참석자 : 도 농업인단체 대표, 연구회에 관심있는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 등.

마. 연구회 구성 : 대표 김용필 의원, 간사 박상무 의원, 회원 강철민·이준우·이종현·송덕빈·이진환 의원, 김호 단국대 교수, 안승원 공주대 교수,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바. 목 적 : 충남농업의 여건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함.

붙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주관 간담회 추진계획 1부.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유) 농업경영인충남도연합회장 유근준, 여성농업인충남도연합회장 신영숙, 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 전국새농민회충남도회 최덕환, 신지식농업인회 남기중, 농가주부모임충남도연합회장 김명수, 농촌지도자충남도연합회장 이관우, 충남도 4-H연합회장 가상현, 충남도농업발전연구회 노승호, 생활개선회 충남도연합회장 이영희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주관 간담회 초청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는 지난 2011. 6. 16 발족식과 1차 공청회를 갖은 바 있으며, 7. 13~7. 25 기간동안에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번에 도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귀 단체를 초청하오니 참석하여 고견을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9. 5(월) 13:30~16:30(붙임 참조)

나. 장 소 : 국화시험장 회의실(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7-52)

다. 행사명 :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도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라. 참석자 : 도 농업인단체 대표, 연구회에 관심있는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 등.

마. 연구회 구성 : 대표 김용필 의원, 간사 박상무 의원, 회원 강철민·이준우·이종현·송덕빈·이진환 의원, 김호 단국대 교수, 안승원 공주대 교수,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바. 목 적 : 충남농업의 여건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함.

붙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주관 간담회 추진계획 1부.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유) 강철민 의원, 이준우 의원, 이종현 의원, 송덕빈 의원, 이진환 의원, 김호 교수, 안승원 교수, 김양중 연구원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주관 도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알림

1.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는 지난 2011. 6. 16 발족식과 1차 공청회를 갖은 바 있으며, 7. 13~7. 25 기간동안에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번에 도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9. 5(월) 13:30~16:30(붙임 참조)

나. 장 소 : 국화시험장 회의실(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37-52)

다. 행사명 :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도 농업인단체와의 간담회

라. 참석자 : 도 농업인단체 대표, 연구회에 관심있는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 등.

붙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간담회 추진계획 1부.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유) 강철민 의원, 안승원 교수, 이준우 의원, 이종현 의원, 송덕빈 의원, 이진환 의원, 김호 교수, 김양중 연구원, 유근준 회장

제목 연구회 주관 현장방문 추진계획 및 연구회원 변동 내역 알림

1.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는 지난 2011. 6. 16 발족식과 1차 공청회를 갖은 바 있으며, 7. 13~7. 25 기간동안에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 9. 5 도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사직에 따른 연구회원 변동 내역을 알립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9. 29(목), 9. 30(금)-희망자

나.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 행사명 : 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장

라. 대 상 : 연구회원 10명, 기타 방문 지원 직원 등.

마. 연구회원 변동내역

- 당초 : 박상무 의원(사유-의원 사직)
- 변경 : 유근준 (사)한국농민회충남도연합회장

붙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현장방문 추진계획 및 연구회 구성현황 각 1매.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충청남도의회의장(총무담당관)

(경유)

제목 연구회 주관 현장방문 추진에 따른 차량 배차 협조 요청

1. 충청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남도의회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는 지난 2011. 6. 16 발족식과 1차 공청회를 갖은 바 있으며, 7. 13~7. 25 기간동안에 시·군 농업인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 9. 5 도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번에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구역량을 제고하고자 현장방문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차량 배차를 협조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9. 29(목) 08:00~17:30

나.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 행사명 : 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장

라. 대 상 : 연구회원 10명, 기타 현장방문 지원 직원 4명 등.

붙임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 현장방문 추진계획 1부. 끝.

충청남도의회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수신자 받는 곳 참조

(경유) 안승원 교수, 강철민 의원, 이준우 의원, 이종현 의원, 송덕빈 의원, 이진환 의원, 김호 교수, 김양중 박사, 농경연 유근준 회장님

제목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 작성계획 회의개최 알림

1. 회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그동안 연구회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연구회 활동기간이 2011. 11. 30 종료되고,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보고서를 2011. 12. 31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연구활동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일 시 : 2011. 12. 8(목) 18:30~20:00

나. 장 소 : 은행나무집(아산시 방축동 22-3, 아산시 실내수영장 옆, 041-541-5292)

다. 안 건 : 작성계획안 토의 등

라. 대 상 : 연구회원 10명, 연구모임 지원 직원 1명

마. 조치계획 : 작성계획안 토의내용을 토대로 보고서 작성, 의회 제출

붙임 보고서 작성계획안 및 연구회 구성현황 각 1매. 끝.

「FTA대응충남농업전략연구회 연구활동보고서」작성계획안

Ⅰ. 목차

Ⅱ. 서문(연구활동보고서를 내면서)

Ⅲ. 연구모임등록신청서(연구활동계획서, 사업계획)

Ⅳ. 연구활동보고서

1. 발족식 및 제1차 워크숍(6.16)
2. 시군농업인단체 대표 순회 간담회(7.13~7.25)
3. 도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9.5)
4. 현장방문(9.29)
5.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11.16)

Ⅴ. 참고자료(수록할 자료)

1. 한중FTA관련자료(발족식시 김양중연구원 발표자료)
2. 시군 순회간담회 자료
3. 도농업인단체대표 간담회 자료(한농.전농 자료)
4. DDA.FTA 농수산분야 협상동향 자료(11.4.28, 5.26)
5. 기안문서
6. 사진(가급적 배제)
7. FTA환경하에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11.8.18)
8. 보도자료
9. 한·미, 한·EU 협상 양허기준
10.

※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① 12. 15까지, 보고서 구성, 자료 추가, 삭제 등,

② 보고서작성 협의(연구모임 활동 최종 마무리)

2. 현장방문 계획

문 서 번 호	농경위-
보 존 기 간	5년
보 고 일 자	'11. 9. .

수 석 전문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 원 장	의 장	결 재

전문위원 :

- 2011. 9. 29 -
FTA硏究會·農經委 現場訪問 計劃

○ **방 문 지** :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장**
○ **일 시** : 9. 29(木) 10:00 ~ 18:00
○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체육문화센타
○ **방문인원** : 14명(의원 7·회원 3, 직원 4)

忠 淸 南 道 議 會
(農水産經濟委員會)

2011. 9. 29 현장방문 계획

○ 농촌의 농업여건 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FTA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가 농수산경제위원회 합동으로

-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지를 방문하여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함.

Ⅰ 개 요

○ **방 문 지** :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장**
○ **일 시** : 9. 29(木) 10:00 ~ 18:00
○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체육문화센타
- 유기농 박람회, 경기 G Food Show, 유기농테마존 등
○ **방문인원** : 14명(의원 7·회원 3, 직원 4)
- 참석예상 : 김용필·강철민·이종현·이준우·김문권· 조길행·
조이환 의원, 안승원 교수·김양중 연구원, 유근준 회장
※ 불참자 : 송덕빈·이진환·유병돈·이광열 의원

Ⅱ 현장방문 주요일정

10:00	(60) 이동	11:00	(60) 이동	12:00	(10) 이동	12:10~13:00	(10) 이동
의회출발	→	천안IC부근 합류	→	행사장 부근 도착	→	오 찬 (꼬리곰탕)	→

· · 031)555-7892/푸주옥, 지금동 50

13:10~15:30	(60) 이동	15:30~16:30	(60) 이동	17:30~18:00
행사장 참관	→	천안IC부근 분산	→	의회도착 (해산)

2011 IFOAM 세계유기농대회 행사개요

❖ **유기농업의 확대 및 환경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다양한, 유용한, 가까운, 쉽고 즐거운 유기적 특성 반영

❖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협력모델 구축을 통한 역량제고**
- 효율적인 주최 및 운영으로 국내외의 관심과 참여 제고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1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 주　　제 : “유기농은 생명이다! (Organic is Life!)"

○ 개최기간 : 2011. 9.26.(월) ~ 10.5.(수) / 10일간

○ 개최장소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및 청소년수련관(주행사장), 남양주 제2청사, 유기농 박물관, 양평 세미원

○ 목표인원 : 20만명 내외(외국인 110개국 1,100명 예상)

○ 행사계획

- 주 행 사 : 본 대회 학술회의 및 개·폐막식, IFOAM 총회, 사전학술회의(8개 품목), 유기농투어
- 부대행사 :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유기농마켓 페스티벌, G-푸드쇼, 전국 떡 명장 대회, 음악회, 농자재 전시회 등

❑ 주 행사계획

1 본 대회(OWC) : ‘11. 9.29.(목) ~ 10.1.(토) / 3일간

○ 장　　소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남양주 제2청사

○ 참 가 자 : 발표연구자, 소비자, 학계, 농민 등

○ 주　　제 : 10개 분야

- 사회가치분야 : 마케팅, 교역, 유기농은 생명이다.
- 과학연구분야 : 작물, 토양, 가축

○ 발　　표 : 약 400여편, 200편은 포스트세션

2 사전학술회의 : '11. 9.26.(월) ~ 9.27.(화)

○ 장 소 : 8개 주제별 분산개최

○ 주 제 : 본 대회전 각 지자체에서 특정품목을 주제로 컨퍼런스 진행

- 유기수산(울진), 유기종자(괴산/흙살림), 유기차(제주도), 유기주류(양평), 유기인삼(포천), 유기섬유(남양주), 유기화장품(남양주), 도시농업(道)

3 IFOAM 총회 : '11.10.3.(수) ~ 10.5.(일)

○ 장 소 : 남양주 유기농 박물관

○ 내 용 : 차기 개최지 선정, 세계이사 선출, 전 세계 유기농 정책사항 결정

4 유기농투어 : '11.9.24. ~ 10. 9.

○ 프리·포스트투어 : 중국 베이징·상하이 일원, 일본 간또·간사이일원

○ 바이오투어 : 유기농마을투어(홍성,양평,남양주), DMZ평화투어(파주), 템플스테이(봉선사 등) 체험 등

❑ 부대 행사계획 : '11.9.28.(수)~10.2.(일) /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1 친환경유기농박람회 및 G-Food Show

○ 규 모 : 총 380부스 내외

- 국내 유기농관련 주제전시, 각 지자체, 기업·기관, IFOAM 해외부스, 후원사부스
- 인터넷 라운지, 비즈니스 라운지 등

○ 행사구성 및 주요 프로그램

- 경기도 G마크농산물 및 우수농산물 홍보
- IFOAM협회의 각 회원국들의 다양한 활동 홍보 및 비즈니스 교류 진행
- 유기농 관련 제품 홍보 및 유기농 신기술 안내, 홍보

② 유기농 마켓 페스티벌

○ 규　모 : 150부스(MQ텐트 3×3m)

○ 주요프로그램 : 유기농산물 및 식품, 관련 가공식품을 체험·판매·시식 등 전통 유기농 장터 한마당

③ 정오의 음악회 등 공연

○ 장　소 : 체육문화센터 내 야외음악당

○ 규　모 : 대회 참가자 및 일반인

○ 주요프로그램 : 한국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전통공연, 사전 신청된 참가국 문화공연

④ 유기농테마공원 등 체험·관람시설 조성

○ 볼거리 및 체험·학습공간을 제공하여 농업에 대한 이해 및 친숙도를 높이는 쉼터 조성

- 전통민속놀이 체험, 축산체험, 카페테리아 등 각종 이벤트 진행

1 행사장 조감도

2 주요 행사장 사용계획

연번	사용계획	위 치	전시면적	비 고
1	2011세계유기농박람회	보조경기장	2,800㎡	돔형텐트
2	G-Food Show	나대지	2,800㎡	돔형텐트
3	슬로우푸드 미각체험	미니축구경기장	750㎡	MQ텐트(5X5m.30동 기준)
4	마켓페스티벌	주차장,인라인장	840㎡	MQ텐트(3X3m) 140동
5	주제광장	나대지	8,300㎡	조경공사
6	오가닉스포츠	종합운동장	14,716㎡	
7	이벤트공간	야외음악당	1,780㎡	시설물 활용
8	휴게공간	보조경기장	936㎡	자바라텐트(3X6m.52동 기준)
9	식당(푸드코트)	나대지	1,200㎡	Alu Hall 텐트
10	운영본부	나대지	1,500㎡	Alu Hall 텐트
11	서비스시설	야외음악당주차장	250㎡	MQ텐트(5X5m) 16동
12	IFAOM 총회	유기농박물관	5,015㎡	시설물 활용
13	OWC 본회의	남양주 제2청사	978㎡	시설물 활용
14	개·폐회식/공식만찬	실내체육관		시설물 활용

3. 행사・토론회 참석자료

관계부처 합동 한·미, 한·EU FTA 대전-충남 지역 설명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11년 4월 6(水) 14:00 ~ 17:20 (3시간 20분)**

○ 장 소 : 대전시청 본관 3층 대강당

○ 주 최 : 관계부처 합동*,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동주최
* **기재부**, 외교부, 지경부, 농식품부 등 4개 부처

○ 주 관 : 중진공 대전본부, 대전광역시(경제산업국), 충청남도(경제통상실)

○ 대 상 : 지자체 간부 공무원, 유관기관 임원, 지역 주요 기업인, 농축어업인 등

▢ 프로그램 구성

○ 주 제 : **한·미, 한・EU FTA 의의와 성공적 활용을 위한 정책**

○ 진행순서 : 인사말씀, 주제발표(3개 session), 종합토론 성과보고

○ 사 회 : 대전광역시 경제산업국 신태동 경제정책과장

진 행 순 서 및 주 요 내 용		소요	일정	참여기관
홍보 동영상 상영 (행사시작 10분전)		'10	13:50~14:00	기획재정부
인사말씀 - 한/미, 한/EU FTA 체결의의, 기대효과, 성공제언		'10	14:00~14:10	기획재정부 대전광역시
발표				
session 1	**한/미, 한/EU FTA 분야별 주요 협정내용** (상품, 서비스, 원산지통관, 투자 등)	'30	14:10~14:40	외교통상부 (고경석 FTA이행총괄팀장)
session 2	**한/미, 한/EU FTA 산업별 영향 및 효과**	'60	14:40~15:40	산업연구원 (김도훈 박사)
	한/미, 한/EU FTA 성공을 위한 정부정책 - FTA 활용 기업지원제도, - FTA 국내 보완대책			기획재정부 (백승주 총괄기획과장) 농림수산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과장)
휴 식(10분)				
session 3	**한/미, 한/EU FTA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 한/미, 한/EU FTA 대전지역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 한/미, 한/EU FTA 충남지역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50	15:50~16:40	대전발전연구원 (김기희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산업연 김도훈박사, 김기희 책임연구원, 김양중 책임연구원, 기획재정부 백승주과장, 중진공 전홍기센터장, 지역신문 경제부 부장, 외교부, 농림부 등)		'40	16:40~17:20	산업연구원 김도훈 박사

2011년 충남지역 「DDA/FTA 농수산협상 지역포럼」 계획

DDA, FTA 등 농수산분야 협상에 대한 효과적인 협상전략 수립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농식품부 주최 지역포럼 행사계획임

Ⅰ 포럼개요

○ 때 · 곳 : 2011. 5.26(목) 14:00~17:00, 충남발전연구원(1층 회의실)

○ 참석인원 : 15명

○ 주 최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

※ 협조 :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Ⅱ 참석대상자 현황

○ 학계 전문가 : 2명(충남대 · 공주산업과학대학 교수)

○ 유관기관 관계자 : 8명

- 농림수산식품부 : 2명
- 충남도 : 2명(친환경농산과장, 축산과장)
- 충남발전연구원 : 1명
- FAO 한국협회 : 1명
- 충청남도 의회 : 1명
- 언론기관(연합뉴스) : 1명

○ 농어민단체 : 5명

- 농어민단체 : 3명(한농연, 수산경영인회, 전국한우협회 충남지회장)
- 생산자단체 : 2명(농협충남지역본부 부본부장, 천안배원예농협장)

〈 **주제발표자 및 토론참석자** 〉 **: 현황 [붙임 1]**

- 주제발표자(3) : 농식품부(2),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양중(1)
- 토론참여자(12) 역할 : 주제발표 청취, DDA/FTA 관련 토론참여 등

Ⅲ 세부 진행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참석자 인사 및 소개	사회 : FAO 한국협회
14:11~14:20	10’	○ 인사말씀	좌장 : FAO한국협회 부회장
14:21~14:35	15’	○ 제1주제 발표**(DDA 농수산협상동향)**	다자협상과장
14:36~14:50	15’	○ 제2주제 발표**(FTA 농수산협상동향)**	지역무역협정과장
14:51~15:10	20’	○ 제3주제 발표**(충남지역 대응전략)**	충남발전연구원
15:11~15:30	20’	○ 휴 식	
15:31~17:00	90’	○ 자유토론	참석자 전원
17:01~17:30	30’	○ 이 동	
17:31~19:00	90’	○ 만 찬	참석자 전원

Ⅳ 협조사항

○ 참석기관별 역할 분담사항

- 주관기관 : 포럼 개최·운영 전반적 사항, 포럼 개최결과 보고
- 충청남도 : 주제발표자·참석대상자 섭외 및 추천
- 충남발전연구원 : 주제발표, 행사장·만찬장 준비

○ 주제발표자(충발연) : 원고는 18일까지 주관기관(FAO) 송부

○ 포럼자료 배부(FAO) : 23일한 포럼 참석자 E-mail로 제공

○ 행사장준비(충발연) : 좌석배치[붙임 2], 현수막[붙임 3], 명패, 다과 등

※ 소요된 비용 청구서와 증빙자료는 FAO에 송부

○ 만 찬 장 : 제일농장(☏041-855-3590), 메뉴(한정식)

○ 후속조치 : 개최결과 보고(FAO), 보도자료 제공(충청남도)

[붙임 1]

충남지역 포럼 참석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전화번호(E-Mail)
FAO 한국협회	부회장(좌장)	최 용 규	010-9133-0690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과장	조 일 환	02-500-1878
〃	지역무역협정과	문 태 섭	02-500-1898
충 청 남 도	친환경농산과장	이 건 호	016-406-9587 lgun30@korea.kr
〃	축 산 과 장	박 영 진	010-9684-9116 jin3430@korea.kr
충청남도 의회	의 원	김 용 필	010-3379-0162 refarmm@hanmail.net
충 남 대 학 교	교 수	문 희 철	010-9558-0222 hc moon@cnu.ac.kr
공주산업과학대학	〃	이 종 상	011-1781-1100 leejs@kongju.ac.kr
충남발전연구원	책 임 연 구 원	김 양 중	010-3348-5152 kyj0509@cdi.re.kr
연 합 뉴 스	부 장	이 은 파	010-3720-9260 sw21@yna.co.kr
농협충남지역본부	경제사업부본부장	이 정 모	010-3116-5551 yhs3635@naver.com
한국농업경영인	정 책 부 회 장	정 재 송	010-8818-2479 kaff0400@chol.com
수 산 경 영 인 회	사 무 처 장	최 원 진	010-3407-9848 chwj9848@hanmail.net
한우협회충남지회	지 회 장	김 충 완	019-428-8323 cow9626@hanmail.net
천안배원예농협	조 합 장	박 성 규	016-474-2823 psk1201@hanmail.net

생방송 TJB, 좋은세상 열린토론회(1차) 참석

○ 일　시 : 2011년 7월 20일(수) 11:05~12:10
○ 장　소 : TJB 대전방송국 스튜디오
○ 주　관 : TJB
○ 주　제 : 「FTA 시대, 충남농업의 활로는?」
○ 참석 패널
- 송인암(주재,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용필(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강사용(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 유근준(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충남도연합회장)

생방송 TJB, 좋은세상 열린토론회(2차) 참석

○ 일　시 : 2011년 11월 23일(수) 11:05~12:10
○ 장　소 : TJB 대전방송국 스튜디오
○ 주　관 : TJB
○ 주　제 : 「한・미 FTA, 충남농업 무너지나?」
○ 참석 패널
- 송인암(주재, 대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김용필(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채호규(충청남도 농수산국장)
- 권용대(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김봉균(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농협개혁위원장)

공주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출강

○ 일　시 : 2011년 11월 30(수), 09:30~10:50
○ 대　상 : 제18기 54명
○ 제　목 : 충남농정의 미래 -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 강　사 : 김용필 의원

4. 보도자료 등

디뉴 NEWS 24' 2011년 06월 16일 (목) 15:46:56 ssb6608@korea.kr

“충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출범”

- 이론이 아닌 농업 현장 속에서 실질 대안 마련이 급선무 -

충남도의회가 16일 충남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최근 FTA 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를 발족(대표, 김용필 도의원)하고 1차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연구회는 충남농업의 여건을 분석하여 농업시장 개방 후의 지원정책과 대안을 연구하고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원 박상무·강철민·김용필 도의원 이준우·이종현·송덕빈·이진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인으로는 김호 단국대 교수, 안승원 공주대 교수, 김양중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등 관련 대학과 연구원, 농업인 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현 의원(당진2, 한나라)은 FTA 체결로 인한 농업인 피해에 대한 정부의 통계가 농업현장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지방적 차원에서 실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무 의원(서산2, 선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파격적인 중장기 대책이 나와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중 연구원은 한중 FTA 피해규모가 한미 FTA보다 3~10배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승원 교수는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영국, 일본, 이스라엘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호 교수는 피해액 산출이 품목별로 산출하여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용필 대표는 “충청남도의회「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는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충남 농업의 분야별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여 작목별로 피해가 최소화 되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틈새 농업을 찾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용필 의원)이 출범식을 갖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FTA 보완대책 발표, 농업계 반발·우려 확산

◇ 한·미 FTA 비준을 두고 농어업분야 피해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FTA 보완대책에 농업계 반발이 고조, 이에 대한 농업계의 입장을 정리

□ 최근(8.19, 金) 정부는

○ 제21차 FTA 국내대책위원회에서 '07년 수립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피해대책'을 일부 보완한 'FTA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히며

- 이번 추가대책이 농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07년 한·미 FTA 체결 후 수립된 국내대책에 농수산업의 환경변화를 반영, 수정·보완한 것이라 설명

《 종합대책 주요내용 》

▸ 시설현대화 자금지원 및 융자보증금 한도 확대
- 재정지원 : 당초 2조 2,000억원 → 변경 4조원(축산 3조원/ 과수 5,000억원/ 원예 5,000억원)
- 융자보증한도 : 당초 10억 → 변경 39억원

▸ 원활한 농산물 수급을 위한 과수·고랭지·감자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기준가격 80% → 90% 완화, 보전비율도 80% → 90% 조정

▸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 '15.12.31까지 연장, 공급대상도 현행 39종외 농용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 3종을 추가

□ 그러나, 정부의 추가 피해대책을 두고 농업계에서는

○ 농민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면세유 영구화, 피해보전직불제 지급요건 완화 등의 추가대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실한 대책이라며 반발이 고조, 향후 한·미 FTA 비준에 난항이 예상

-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정부에 면세유 영구화 등의 내용이 FTA추가 대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결국 제외되고 말았다"며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투쟁을 예고

□ 농업계의 우려

재정지원 확 대	▸ 정부대책의 핵심내용은 FTA발효 후 농업생산감소 누적액이 2조원 이상 늘어날 것을 예상, 총 지원 규모를 기존 21조 1,000억원에서 22조 1,000억원으로 증액한다는 것 ▸ 그러나, 농업계는 정부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개별 경영체 보조를 축소하고 단계적 융자사업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 보조축소를 상쇄할 세부지원대책(자부담경감 및 융자금리 인하)이 없다면 농가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 우려를 표명
직접피해 보 전	▸ 농업계는 정부대책 中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자 이전대책과 다를 바 없다며 냉담한 반응 ▸ 특히, 피해보전직불제 관련 내용은 지난 5월 한·EU FTA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여·야·정 합의로 법률개정안에 반영, 6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항으로 -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농민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등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세제지원	▸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도, 농업계는 '농어업 면세유'는 일몰기한이 사실상 사문화돼 농어업인들이 면세유 영구화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 일몰 시한을 연장하는 정부대책은 농어업분야에 대한 'FTA 피해대책'으로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 ▸ 또한, 배합사료·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도 한·EU FTA 여·야·정 합의 내용을 재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지를 의심

⇨ **연이은 FTA 비준을 두고, 정부대책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고조, 우리 道에서도 FTA 비준에 따른 道內 농어업분야 충격 대비필요**

뉴시스 [2011-09-29 16:08:11] yreporter@newsis.com

“충남도의회 FTA대응연구모임, 유기농업 벤치마킹”

【대전=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와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대표 김용필)’는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현장을 방문, 유기농업 벤치마킹에 나섰다.

FTA대응연구모임은 ‘유기농은 생명’이라는 테마로 개최되는 세계유기농대회장에서 재배 방법과 체험, 마케팅을 배우는 등 충남도 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 유기농업 아이디어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판매부스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각 지자체의 유기농 관련 주제전시와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및 G-Food Show', 유기농 마켓 페스티벌, 유기농테마공원 등을 참관했다.

세계유기농대회는 IFOAM(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이 ‘77년 이후 3년마다 대륙별로 개최하는데 전 세계 108개국이 참여하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김용필 연구모임 대표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유기농의 대표격인 행사장을 찾아 상호 의견교환과 체험을 통해 충남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강철민 농경위 위원장도 "충남도의 유기농업 확대 및 친환경농업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강철민)와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연구회(대표 김용필)’는 29일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현장을 방문, 유기농업 벤치마킹에 나섰다. 사진은 의원들이 충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판매부스를 찾아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이다.

서산·태안군 지역 간담회(2011.7.13)

당진군 지역 간담회(2011.7.14)

예산·홍성군 지역 간담회(2011.7.18)

천안·아산시 지역 간담회(2011.7.19)

부여·청양군 지역 간담회(2011.7.20)

보령·서천군 지역 간담회(2011.7.21)

공주·연기군 지역 간담회(2011.7.22)

논산·계룡·금산군 지역 간담회(2011.7.25)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연구모임명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회
대 표 자	김용필 의원
연구과제명	FTA 대응 충남 농업의 대안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충남농촌의 농업여건 분석 및 농업시장 개방후의 지원 정책 및 대안을 연구하여 도정에 반영하기 위함
연구방법	- 충남 농촌과 농업을 분석 - 농업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워크숍 - 농업 경쟁력 강화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연구 사례집을 발간, 배포하여 연구성과 공유
연구내용 요약	- 발족식 및 한·중 FTA를 중심으로한 워크숍 - 시·군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순회간담회 - 도 농업인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장 현장방문 - FTA 등 정부의 농수산물 수입개방정책에 따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강화 촉구 건의안 발의 - 정부의 FTA 추진에 따른 농어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 피해산업 보전대책 강화 재촉구 결의안
기타사항	

※ 붙 임 : 연구활동 세부결과 보고서 15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30일

FTA 대응 충남농업전략 연구모임 대표의원 김용필(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